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지경

공동연구원 이상호

N

Y

P

T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이성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대학 신규졸업자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졸업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은 생존에 대한 공포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기를 연기하거나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여 취업경쟁에 우위를 점하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을 확보한다거나 졸업 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제도적 무중력 상태'의 경험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우리사회의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자리할 만큼 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대학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졸업유예 현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와 관련한 논의는 청년 고용의 측면이나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또는 20대 청년의 특성 등의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정책적 대응을 위한 관심은 부족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와 관련한 그 간의 논의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문제로 접근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졸업유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과정과 사유로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서 빚어지는 우리사회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제기만이 넘치는 상황에서 발간되는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의 보고서는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초석으로 하여 대학생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이 단단하게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사회문제로 주목될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학 졸업유예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선택의 매커니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졸업유예와 관련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고찰을 통하여 졸업유예의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졸업유예자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 경험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졸업유예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졸업유예당사자 뿐만 아니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수집된 실태자료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 및 정책 개입 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 가지의 정책 시사점 및 정책 개입 점(①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 및 층위 확대와 중간 경계 상태, ②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는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제와 비용 부과, ③아무도 돌보지 않는 위험한 심리·정서 상태)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을 ‘정책목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정책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전략목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수와 졸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의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①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의 단계적·입체적 접근, ②자율적 비선택의 방향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개선, ③졸업유예자 취업지원의 강화, ④졸업유예자 심리·정서지원의 확대·강화)과 각 방향에 따른 네 가지 전략 목표, 그리고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대학생, 졸업유예, 졸업유예자, 실태, 정책방안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졸업유예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와 문제제기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과 실태 파악,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측면에서 불거지는 졸업유예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졸업유예 및 졸업유예자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법령과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졸업유예제도 도입 및 운영현황을 2014년~2015년 국정감사자료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양적·질적 분석의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졸업유예 관련 이슈 및 쟁점을 정책연구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음. 아울러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의 규정을 고찰하고, 해외의 졸업유예제도 및 관련 정책 대응 사례를 온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분석함.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연구 추진의 각 단계별 졸업유예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학계, 정책, 현장(청년단체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하였음. 특히 현실 밀착도 높은 정책연구로 연구를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계획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졸업유예자와 졸업유예 유경험 졸업자 등 20대 청년 당사자들과의 연속된 간담회를 가졌으며, 자문회의를 통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 활동가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

○ 2차 자료 분석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원자료 분석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졸업유예자 규모를 추정하고, 졸업유예의 경험 여부 및 졸업유예의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

- 교육부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자료와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의 연계 자료 생성 및 분석
교육부에서 제공 받은 '2015년 졸업유예 현황' 자료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고 각 대학에서 공시하는 대학의 일반 현황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구축하여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내용 및 방식이 졸업유예자의 수와 졸업유예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실태조사 실시

- 2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대학생 졸업유예의 원인 및 선택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여건의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졸업유예 당사자 이외 졸업유예 현상을 둘러싼 이해 주체들, 즉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관계자, 그리고 대졸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총 1,002명의 졸업유예 대학생의 설문조사 자료 및 총 38명의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졸업유예자 15명, 기업인사담당자 4명, 대학 졸업유예 담당자 5명, 3~4학년 재학생 14명)자료를 분석함.

○ 콜로키움

졸업유예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오늘의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주제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총 2회(1차: 졸업유예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2차: 일본의 졸업유예제도 사례)의 콜로키움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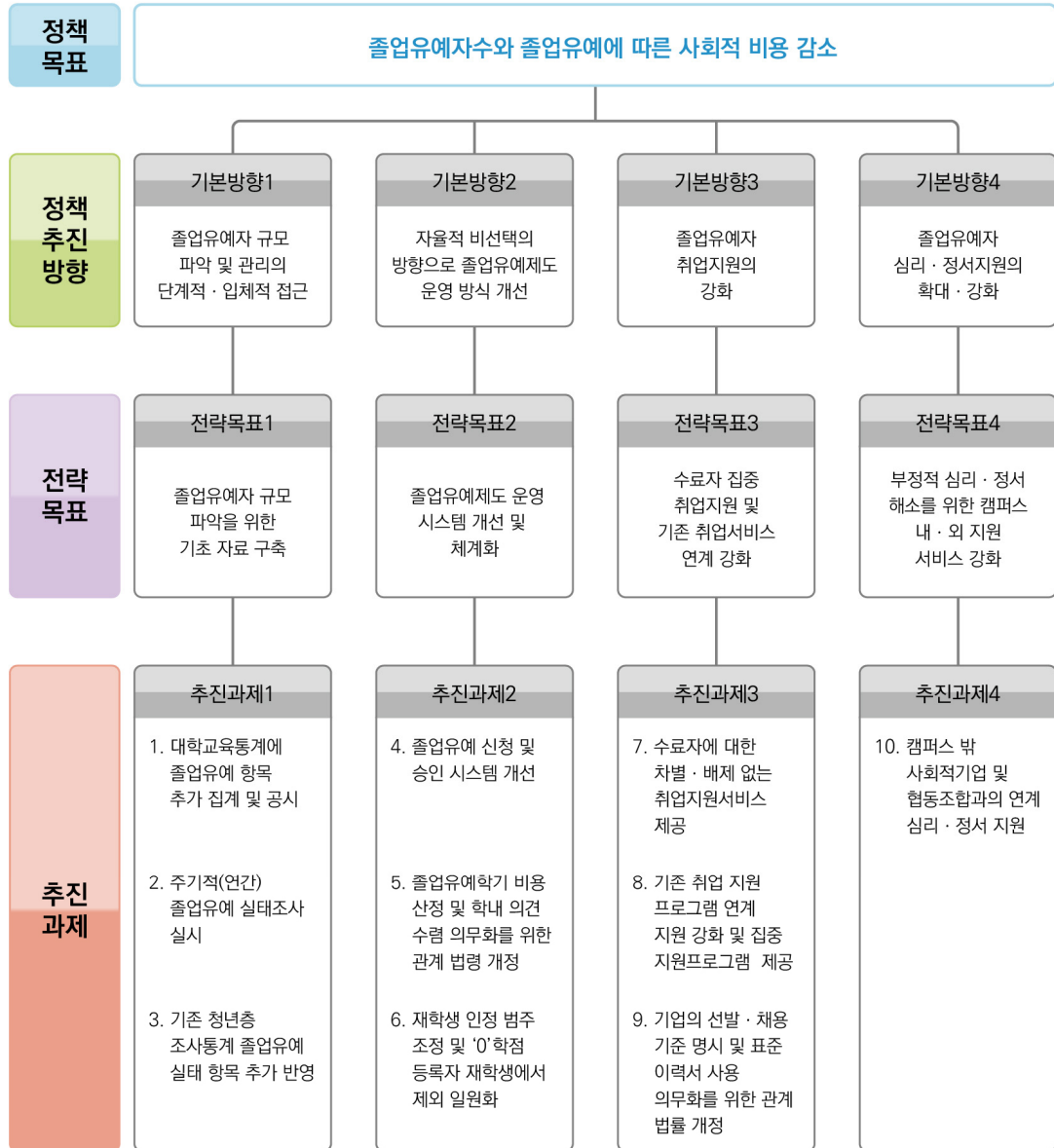
○ 정책실무협의회

졸업유예 실태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관계부처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총 5회 개최함.

3. 주요결과

분석 자료		주요 결과
문헌 자료 분석	문헌고찰	• 졸업시기만 연기한 졸업요건 충족자가 가장 좁은 범주의 졸업유예자, 가장 넓게는 복수전공자 및 취업준비로 4학년 휴학생까지 포함될 수 있음. • 취업난 속에서 개인의 전략적 선택, 심리적 안정감의 선택으로 졸업유예 설명 • 졸업유예 관련 이슈는 ①규모 확대, ②제도 변화, ③이해 주체들 간의 시각 차
	대학 학칙 수집 · 분석	• 194개 일반 대학, 각기 다른 용어와 내용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해외사례 수집 · 분석	•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와 유사한 졸업유예 현상 발견, 대만에서 졸업유예자수 집계 및 규모 감소를 위한 정부 및 대학차원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
2차 자료 분석	GOMS 원자료 분석	• 졸업유예자 규모 적게는 2만7천 여 명, 많게는 10만4천 여 명으로 추정 • 청년실업률과 졸업유예자 규모는 시계열적 같은 변화 추이 • 대학선택의 자율의지와 분명한 취업목표만이 졸업유예 선택의 가능성을 낮춤. • 졸업유예 유경험자들이 졸업 후 월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교육부 자료 분석	• 졸업생취업률이 낮고, 전임교원총원률이 높은 대규모 대학 졸업유예 많이 발생. • 서울 · 수도권지역의 의무수강제도 운영 대학, 1인당 평균 납부 금액 가장 많음.
설문 조사 및 FGI 자료 분석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사유	• 여학생 부정적 심리 · 정서, 저소득층 좌절 심리 매우 높은 수준임. • 휴학기간 포함 졸업까지 소요기간 고려 전략적으로 졸업유예 선택 •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은 졸업요건충족자의 졸업유예와 밀접한 관련 있음. • 졸업유예사유는 취업경쟁우위와 심리적 안정감 · 소속감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 단, 복수전공자, 자연/이공계열 전공자 취업경쟁우위 사유로 선택 가능성 높음.
	의무수강 및 비용부과 실태	•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전환은 졸업유예자 감소 효과 미미, 사회적 비용 증대 • 의무수강자 절반이상 학점 없는 강의 신청으로 교육기능 없는 도구적 학점 이수 •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의무수강 영향력 보통수준, 도움정도나 필요성은 낮음. • 1인당 납부비용 평균 23.7만원, 절반 이상이 부모가 비용 총당으로 부담 전가 • 서울지역 등록금 높은 사립대학의 저소득 여학생이 부과 비용 장벽인식 집단
	졸업유예 학기 생활	• 졸업유예자 절반정도가 구직 활동,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 현실 직업세계 인식, 경쟁자들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 인식, 자신감 상실이 가장 큰 어려움. • 연령수준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활동 목적의 졸업 유예자가 구직 가능활동 가능성 높음. •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주요 어려움은 심리 · 정서적 문제로 압축됨. • 졸업유예자 35%가 졸업유예기간 연장 유계획, 평균 2.3학기 연장 희망 • 부모지원 받는 서울소재대학 남학생 연장 가능성 높으며, 특히 학자금대출금 많고 경제적 부담 수준 높은 국립대 남학생 졸업유예기간 장기화 가능성 높음.
	이해 주체간 인식 차	• 모호한 채용전형의 기준, 불완전 정보, 전형방식과 취지에 대한 오인과 오해로 불필요한 과잉 스펙 쌓기와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 학사규정의 기본 원칙 준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 부재가 갈등 양산 •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3~4학년생과 졸업유예자 사이의 갈등이나 인식 차 없음.

4.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



【그림 1】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의 기본 체계

목 차

제 I 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7
1) 연구내용의 구성	7
2) 연구방법의 구성	9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8
1) 연구 추진체계	18
2) 연구 추진 절차	19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1.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	23
1) 관계법령에 따른 개념 및 범주	23
2. 졸업유예에 관한 두 가지 관점	26
1) 경제학적 접근: 개인의 합리적 선택	26
2) 사회·심리학적 접근: '제도적 무중력 상태'의 회피	28
3.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	31
1) 졸업유예자 규모 및 층위의 확대	32
2)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 무비용에서 비용 부과로의 전환	34
3) 졸업유예 관련 주체들 간의 시각차: 학생 vs 대학 vs 기업	37
 제 III 장 졸업유예제 운영 및 관련 정책 현황	 41
1.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43
1) 도입 배경	43
2) 운영 현황	45

2. 졸업유예제 관련 법률 및 규정	47
1) 현행 관련 법률 및 개정 발의 법안	47
2)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규정 현황 분석	51
3. 해외 졸업유예 현황 및 정책 사례	58
1) 중국 및 대만의 졸업유예	58
2) 일본의 졸업유예	64
3) 유럽 복지국가 및 미국의 졸업 지연	67
제Ⅳ장 졸업유예제 규모 추정 및 영향요인: 2차 자료 분석	69
1.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71
1) 자료 및 추정 방법	71
2) 규모 추정 결과	72
2.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에의 영향	77
1) 분석 변수 및 모형	77
2) 졸업유예 경험의 결정요인	83
3) 졸업유예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93
3. 대학별 졸업유예자 규모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105
1) 분석 자료 및 방법	105
2) 졸업유예자 수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106
제Ⅴ장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실태 : 실태조사 자료 분석	111
1. 조사개요	113
1) 실태조사 추진 과정	113
2) 설문조사	115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Discussion)	120

2.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	128
1) 졸업유예자의 특성	129
2) 졸업유예 선택 사유 및 과정	134
3) 졸업유예 유형 및 주된 사유의 결정 요인	149
3.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153
1) 의무수강 실태 및 필요성 인식	153
2) 비용부과 실태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159
3) 비용부과 유용성 평가 및 경제적 부담수준의 영향 요인	169
4.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173
1)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	174
2)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182
3)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186
5.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193
1) 기업관련 인식 및 기업 인사담당자들과의 인식 차	193
2) 대학관련 인식 및 대학 졸업유예담당자들과의 인식 차	204
3) 재학생관련 인식 및 3~4학년 재학생들과의 인식 차	213
제VI장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	219
1.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논의	221
1) 주요 결과의 요약	221
2) 정책 시사점 및 개입 점의 발견	226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설정	232
1) 정책 목표	232
2)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 목표	233

3. 정책 추진과제의 도출	238
1)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238
2) 졸업유예제도 운영 시스템 개선 및 체계화	242
3) 수료자 집중 취업지원 및 기존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249
4) 부정적 심리·정서 해소를 위한 캠퍼스 내·외 지원 서비스 확대	254
 참고문헌	 259
 부록(설문지)	 269

표 목 차

〈표 Ⅰ-1〉 연구 내용의 구성	9
〈표 Ⅰ-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추진 내용	11
〈표 Ⅰ-3〉 2차 자료 분석 내용 및 방법	12
〈표 Ⅰ-4〉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내용 및 방법	16
〈표 Ⅰ-5〉 콜로키움 추진 내용	16
〈표 Ⅰ-6〉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17
〈표 Ⅱ-1〉 졸업유예자 수	32
〈표 Ⅱ-2〉 2014년 졸업유예자수 규모별 대학 분포	33
〈표 Ⅱ-3〉 재학생 수 1만 명이상 대학 47개교의 졸업유예 신청자 수	33
〈표 Ⅲ-1〉 각 대학의 졸업유예제 도입 시기	44
〈표 Ⅲ-2〉 대학의 졸업유예제 실시 및 수강 의무화 여부 현황	46
〈표 Ⅲ-3〉 졸업유예 승인 후 단계에서의 운영 현황	46
〈표 Ⅲ-4〉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시행령 제4조(학칙)	48
〈표 Ⅲ-5〉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50
〈표 Ⅲ-6〉 졸업유예제 운영 여부 및 근거규정 유무	52
〈표 Ⅲ-7〉 졸업유예제 운영대학의 근거 규정	53
〈표 Ⅲ-8〉 졸업유예관련 대학의 규정 용어	54
〈표 Ⅲ-9〉 졸업유예제 운영학교의 졸업유예 허용 기간	54
〈표 Ⅲ-10〉 의무수강제 실시 대학의 등록금 부과기준	56
〈표 Ⅲ-11〉 의무수강제 비실시 대학의 등록금 부과기준	57
〈표 Ⅲ-12〉 대만 일반대학의 최근 5년간 졸업유예자수(2011년~2015년)	61
〈표 Ⅲ-13〉 대만의 대학 졸업유예 학잡비(등록금) 부과 기준: 공대 졸업유예생 예시 ..	64
〈표 Ⅳ-1〉 각 연도별 졸업유예자 규모	74
〈표 Ⅳ-2〉 졸업유예 영향 요인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82
〈표 Ⅳ-3-1〉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의 1	84

〈표 IV-3-2〉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87
〈표 IV-3-3〉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도별 모형(정의 1)	90
〈표 IV-4-1〉 대학 졸업유예-대학진학 자의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94
〈표 IV-4-2〉 대학 졸업유예-취업목표의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96
〈표 IV-5-1〉 대학 졸업유예-대학진학 자의식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 ..	101
〈표 IV-5-2〉 대학 졸업유예-취업목표 의식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	103
〈표 IV-6〉 대학특성별 졸업유예자수 비교	107
〈표 IV-7〉 졸업유예자 수 결정요인 : Multiple Regression Model	108
〈표 IV-8〉 졸업유예자 비용 부담의 결정요인 : Multiple Regression Model ...	110
〈표 V-1〉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작성 근거	118
〈표 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졸업유예자	123
〈표 V-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기업인사담당자	124
〈표 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관계자	124
〈표 V-5〉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3~4학년 재학생	125
〈표 V-6〉 초점집단면접조사 집단별 주요 조사 내용	127
〈표 V-7〉 졸업유예자 배경 특성	130
〈표 V-8〉 졸업유예자의 5가지 심리·정서 특성: 성별 비교	132
〈표 V-9〉 졸업유예자의 5가지 심리·정서 특성: 부모 월소득수준별 비교	133
〈표 V-10〉 졸업유예 선택 사유: 각 사유별 선택 시 영향 정도	138
〈표 V-11〉 졸업유예자 특성별 주된 졸업유예 사유 비교 : 차이 검증	141
〈표 V-12〉 졸업유예 선택 시 권유 및 추천인 유무	142
〈표 V-13〉 졸업유예 선택 시 권유 및 추천인 유형	143
〈표 V-14〉 졸업유예 선택 시 구체적 계획 유무	145
〈표 V-15〉 졸업유예 기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1순위	147
〈표 V-16〉 졸업유예 유형 결정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149

〈표 V-17〉 졸업유예 주된 사유 각각의 영향요인: Multiple Regression Model	151
〈표 V-18〉 취업경쟁우위 확보 사유 우선 집단 결정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152
〈표 V-19〉 졸업유예 유형별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155
〈표 V-20〉 소속 대학 특성별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및 허용 학기	155
〈표 V-21〉 졸업유예자 수강 과목: 복수응답 비율	157
〈표 V-22〉 의무수강제도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9
〈표 V-23〉 대학 특성별 졸업유예 시 비용부과 여부	160
〈표 V-24〉 소속 대학의 설립주체별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2016년 1학기 기준	163
〈표 V-25〉 의무수강제도 운영 여부별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2016년 1학기 기준	164
〈표 V-26〉 비용 부과 유용성 평가 영향 요인: Ordered Logit Model	170
〈표 V-27〉 졸업유예 비용의 경제적 부담 수준 영향 요인: Ordered Logit Model	172
〈표 V-28〉 졸업유예 기간 활용 유 계획자 구직활동 여부	175
〈표 V-29〉 졸업유예 유형별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 1순위	176
〈표 V-30〉 졸업유예 유형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1순위 응답	177
〈표 V-31〉 주된 졸업유예 사유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1순위 응답	178
〈표 V-32〉 졸업유예학기 구직 활동여부 영향 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181
〈표 V-33〉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배경 특성별 차이	185
〈표 V-34〉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배경 특성별 차이	187
〈표 V-35〉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학기	188
〈표 V-36〉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결정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190
〈표 V-37〉 졸업유예기간 연장 희망 학기 수 결정요인: Count Model	192
〈표 V-38〉 기업관련 졸업유예자 인식: 배경 특성별 차이	195

〈표 V-39〉 대학관련 졸업유예자 인식: 대학특성 및 제도운영 특성별 차이	206
〈표 V-40〉 졸업유예 학기 시간 활용 계획별 도서관 이용 시간:	
대학 안과 밖 비교	214
〈표 V-41〉 같은 대학 재학생관련 졸업유예자 인식: 대학특성별 차이	215
〈표 VI-1〉 주요결과의 요약	225
〈표 VI-2〉 일본 대학의 졸업유예 승인기준 예시	244
〈표 VI-3〉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247
〈표 VI-4〉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개요	251
〈표 VI-5〉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4
〈표 VI-6〉 제안 정책추진과제 요약	25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졸업유예를 둘러싼 다 주체	13
【그림 Ⅰ-2】 연구 추진체계	18
【그림 Ⅰ-3】 연구 추진 절차	19
【그림 Ⅱ-1】 ‘재학생’으로 인정 졸업유예 범주의 시대적 변화	25
【그림 Ⅱ-2】 졸업유예자 개념 및 범주	25
【그림 Ⅱ-3】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단계	27
【그림 Ⅱ-4】 대학의 졸업유예 운영 방식의 변화	34
【그림 Ⅱ-5】 졸업유예 관련 주체들 간의 시각차	39
【그림 Ⅲ-1】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의 근거규정 분석 과정	51
【그림 Ⅲ-2】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의 의무수강제 유무	55
【그림 Ⅲ-3】 의무수강제 실시 대학의 최소 의무수강 학점	55
【그림 Ⅲ-4】 중국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사유	59
【그림 Ⅲ-5】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 활동 일정	66
【그림 Ⅳ-1】 GOMS에서 파악된 졸업유예자의 규모	75
【그림 Ⅳ-2】 졸업유예율과 청년실업률 시계열 변화의 관련성	76
【그림 Ⅳ-3】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의 흐름도	80
【그림 Ⅳ-4】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계 효과	92
【그림 Ⅳ-5】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계효과	98
【그림 Ⅳ-6】 분석 자료의 생성 과정	106
【그림 V-1】 실태조사 추진 과정	114
【그림 V-2】 최종 표본의 구성	116
【그림 V-3】 조사도구 개발 과정 및 자료수집 방법	117
【그림 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121
【그림 V-5】 성별 불안감 및 긍정미래관 비교	133
【그림 V-6】 부모소득수준별 긍정미래관 비교	134

【그림 V-7】	졸업유예선택의 주된 사유: 하위 측정 항목 값 비교	140
【그림 V-8】	졸업유예 기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 1순위 응답 기준	146
【그림 V-9】	졸업유예 유형별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153
【그림 V-10】	의무수강제도 운영여부 및 신청 최소 학점 분포	156
【그림 V-11】	졸업유예 시 비용부과 여부: 대학 설립주체 및 소재지별 비교 ..	161
【그림 V-12】	졸업유예 신청 시 부과 비용의 산정 기준: 소속 대학의 설립주체별 비교	162
【그림 V-13】	졸업유예 비용 부담 금액 및 비용 마련의 주된 방법	165
【그림 V-14】	졸업유예 비용 마련 방법에 따른 부과 금액의 경제적 부담 정도 ..	166
【그림 V-15】	부담 금액 수준별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비용 부과 영향력 평가	166
【그림 V-16】	비용 마련 방법별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비용 부과 영향력 평가	167
【그림 V-17】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별 걱정 비용에 대한 인식	168
【그림 V-18】	졸업유예 신청 시 비용부과 사유에 대한 인식	169
【그림 V-19】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 여부	174
【그림 V-20】	졸업유예기간 비구직 사유: 1순위 응답	180
【그림 V-21】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183
【그림 V-22】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186
【그림 V-23】	기업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	194
【그림 V-24】	대학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	204
【그림 V-25】	재학생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	214
【그림 VI-1】	정책 추진의 네 가지 방향	233
【그림 VI-2】	대만교육부 졸업유예자수 집계 온라인 DB 및 공시 통계표	239

【그림 VI-3】 대학교육통계에 졸업유예 항목 추가 추진 단계	240
【그림 VI-4】 졸업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시스템 체계화	243
【그림 VI-5】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 및 관련 업무 매뉴얼	253
【그림 VI-6】 토닥토닥협동조합 사례	255
【그림 VI-7】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의 기본 체계	257

제 I 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제 I 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4년(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2.10. 검색)이나,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더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5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0.4개월이 소요되어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한다. 대부분 2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는 남성 대졸자의 졸업소요기간이 6년 2.2개월, 여성 대졸자의 졸업소요기간이 4년 3.6개월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남녀 모두 정규 수업연한에 비해 최소 한 학기 정도가 졸업까지 더 소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15.07.23.).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데에는 재학 중 휴학 등의 사유와 더불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졸업유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도 안민석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에 9학기 이상 초과 등록한 학생의 수가 총 12만 명에 달하며, 같은 해 유기홍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서는 전국 대학의 졸업유예자 수가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안민석, 2015.03.22.; 유기홍, 2015.09.05.).

자료의 제한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의 초과등록자와 졸업유예자의 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으나, 이들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를 정규수업연한 내에 완료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수가 대략 12만 명이며, 졸업학점과 요건은 채웠으나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이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표면적인 이유는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 1. 의 일부 내용은 「2016년 고용패널학술대회(2016.05.27.)」의 “졸업유예의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의 ‘I. 서론’의 내용으로 발표된 바 있음.

노동시장 고용 여건의 악화이다. 지난해 발표된 대졸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신규구인배수는 0.05로, 즉 대졸 구직자 100명에 대한 구인자의 수는 5명 수준¹⁾ 밖에 안 될 정도로 신규졸업자들의 구직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배진한, 2015.06.22., pp.7~8).

대졸 신규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낮은 원인은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인 변화, 다시 말해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15세~29세 청년층의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 일자리는 총 13만 5700개가 줄었으며, 그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을 필요로 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교육 서비스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등의 산업 및 교육 전문가,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금융 및 보험사무직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배진한, 2015.06.22., pp.8~10).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4년제 신규 대졸자들에게 할애되는 일자리의 양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의 취업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분절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대졸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는데 필요한 시간 확보와 노동시장 진입의 유리한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 졸업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년실업률의 상승과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졸업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은 생존에 대한 공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졸업 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제도적 무중력” 상태 또는 “제도적 중력감의 상실” 상태(엄기호·하지연, 2015, p.29)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졸업을 앞 둔 시점에 증폭이 되고 있고, 그 불안정한 ‘제도적 무중력’ 상태의 경험을 회피하면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공부 중’인 상태로 조금 더 머물고자 하는 심리·정서의 기제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졸업유예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부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고려한 정책과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 신규구인배수: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 등록 자료에서 신규구인자수를 신규구직자수로 나눈 수(배진한, 2015.6.22., p.8 [그림 7]의 주)

졸업유예의 문제가 청년정책의 이슈에서 조차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졸업유예 현상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같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슈들에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보다는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도입과 운영이 법령에 기초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수립·추진된 것이 아닌데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시 말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대학 신규졸업자 실업대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후 대학의 학칙 또는 지침에 기초한 자체운영 제도로써 졸업유예 제도가 도입·운영되기 시작(주간동아, 2016.03.30.; 경향신문, 2013.12.11.)하였기 때문에 제도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문제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유예제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고, 졸업을 앞둔 학생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개인들의 졸업유예의 선택이 사회구조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선택임과 동시에 그 선택을 한 이들의 규모가 사회문제로 주목될 만큼 큰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다면, 졸업유예를 둘러싼 문제들은 사회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미 노동시장 고용 여건의 악화라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급속하게 증가한 졸업유예자의 수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그 규모는 청년실업률 및 청년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 이상 졸업유예의 문제를 대학의 자체운영 제도라는 이유로 청년관련 정책이나 고등교육정책에서 제외시키며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라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최근 잇달아 변경되고 있는 대학들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이다. 왜냐하면 최근 대학들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졸업유예제의 운영 방식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즉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대학평가 지표에 맞추어 급격하게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졸업유예 신청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들이 졸업유예제도의 운영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졸업유예제 운영에 따른 재학생수의 증가가 전임교원충원률, 장학금지급률, 재학생충원률 등 대학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실정에 보다 유리한 지표를 확보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지표의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을 학칙개정 등을 통해 바꾸는 것이다.

최근 대학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며 그에 대한 수강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졸업유예 선택과 졸업유예자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없으며, 각 대학들의 실정이 매우 달라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은 청년층 고용 여건의 악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구조 환경 하에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한 번도 다음 단계가 정해지지 않았던 적이 없는, 즉 제도권 밖에 놓였던 경험이 없는 다수의 청년들이 갖는 극심한 생존경쟁과 그 과정 속에서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드러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졸업유예와 관련한 논의들은 청년 고용실태의 측면이나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드러난 20대 청년세대의 집단적 특성 등 각각의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논의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졸업유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과정과 사유로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곤란함과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빚어지는 우리사회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졸업유예를 둘러싸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사유와 원인 그리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 선택이 갖는 우리사회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졸업유예 실태의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근거기반의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증 분석의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대학의 졸업유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2014년부터 교육부가 대학 단위로 졸업유예자의 수, 학점 의무이수 여부, 수강료 금액 등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한 ‘졸업유예 현황’ 자료가 유일하며, 간접적으로 대학

제학 중 졸업유예 경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청년세대 대상 연구의 실태조사 자료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2차 자료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졸업유예의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와 문제제기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졸업유예의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용할 수 있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졸업유예자 규모와 졸업유예 경험의 영향력을 추정하고,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졸업유예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원인과 과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졸업유예 당사자뿐만 아니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졸업유예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1) 연구내용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졸업유예가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과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한 20대 청년세대의 심리·정서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이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졸업유예의 원인과 선택의 매커니즘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졸업유예를 둘러싼 문제들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의 내용을 크게 여섯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 I 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졸업유예의 실태를 파악하고,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드러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는 본 연구가 어떠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갖는가를 기술하였다. 또 연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체계와 절차를 통하여 연구를 추진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드러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와 연구의 기본 틀을 설정하기 위한 개념 및 범주를 고찰하고, 기존의 논의들 속에서 나타난 졸업유예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경제학적 관점과 사회·심리적 접근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졸업유예 현상과 실태를 논의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이슈와 쟁점사항으로 정리·요약하고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대학의 졸업유예제의 도입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관련 법률 및 졸업유예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법안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졸업유예제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등교육제도가 아닌, 대학의 학칙 등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졸업유예제 관련 규정의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졸업유예의 현상이 해외 선진 국가에서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졸업유예제 운영 사례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이제까지 드러난 졸업유예의 실태와 이슈들에 대한 원인과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2차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10년에서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졸업유예자 규모를 추정하고,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졸업유예의 경험이 졸업 후 취업확률과 월소득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에 조사한 대학별 ‘졸업유예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의 특성과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이 대학별 졸업유예자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비용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2차 자료 분석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졸업유예 선택의 과정과 주요 원인 그리고 정책지원의 욕구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로 구성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졸업유예자의 특성과 졸업유예 선택사유,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과 비용부담 실태,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연장 계획, 그리고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간의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이루어진 정책 현황 분석과 제Ⅳ장의 2차 자료 분석의 결과, 그리고 제Ⅴ장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개입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졸업유예를 고민하거나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I-1 연구 내용의 구성

구분	해당 장	내용
서론	제 I 장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구성 •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II 장	•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 • 졸업유예에 관한 두 가지 관점 •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
졸업유예제 운영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제 III 장	•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 졸업유예제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 해외 선진국가의 졸업유예제 운영 사례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및 영향 요인: 2차 자료 분석	제 IV 장	•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 졸업유예 결정 요인 분석 • 졸업유예의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학별 졸업유예자 수의 영향 요인 • 졸업유예자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졸업유예자 특성별 유예 원인 및 정책지원 욕구: 실태조사 분석	제 V 장	•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 •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연장 계획 • 졸업유예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졸업유예 대응 정책 지원 방안	제 VI 장	• 정책시사점 및 개입 점 • 정책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 추진 전략 및 과제

2) 연구방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의 원인과 선택의 매커니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졸업유예를 둘러싼 문제들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된 연구의 내용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 콜로키움,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추진 목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

졸업유예와 졸업유예자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법령과 관련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대학의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은 2014년~2015년 국정감사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으며, 양적·질적 분석의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졸업유예에 관한 기존 문제제기에서의 관점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와 쟁점을 정책연구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아울러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규정을 고찰하고, 해외 선진국가의 졸업유예제 운영 사례를 문헌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연구의 단계별 추진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졸업유예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학계, 정책, 현장(청년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특히 현실 밀착도 높은 정책연구로서 연구를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계획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졸업유예자와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졸업자 등 20대 청년 당사자들과의 연속된 간담회를 가졌으며, 자문회의를 통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 활동가 등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청취하였다.

또한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의 도구 개발과정에서 설문지 구성과 개발된 문항 초안에 대하여 조사연구 전문가, 졸업유예를 주제로 실증분석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대학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집중 자문과 및 이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한 반복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정책방향의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의 도출 단계에서도 각 내용의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학 안에서 졸업유예자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에 설치된 기구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대학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표 1-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자문진	개최 시기
1차	졸업유예 상태 대학생 간담회	4년제 대학 졸업유예생	3월 11일
2차	졸업유예 경험 졸업자 간담회	4년제 대학 졸업자	3월 17일
3차	청년정책 활동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청년활동가	3월 24일
4차	실태조사 설문초안 집중 검토	각 분야(조사, 졸업유예, 대학연구) 전문가	6월 27일
5차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 검토	청년고용정책 전문가 및 대학관계자	10월 04일

(3) 2차 자료 분석

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원자료 분석

졸업유예자의 수가 사회문제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졸업유예의 선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에 어떠한 요인을 미치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공개하고 있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자료를 사용하여 졸업유예자 규모를 추정하고, 졸업유예의 경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프로빗 모델(Probit Model)로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졸업유예의 경험이 취업확률이나 월 소득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프로빗 모델(Probit Model)과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 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표 I-3 2차 자료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자료	분석내용	분석 모델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GOMS)	•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 졸업유예 결정요인 • 졸업유예 경험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 졸업유예 경험이 취업 후 월소득에 미치는 영향	• 시계열 규모 추정 • Probit Model • Probit Model • Heckman's Selection Model
교육부 2015년 졸업유예현황 +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 연계 구축 자료	• 대학특성별 졸업유예자 수 비교 • 대학별 졸업유예자수 결정요인 • 졸업유예자 납부 비용의 결정요인	• t-test 및 GLM-test • Multiple Regression Model • Multiple Regression Model

② 교육부 졸업유예제도 운영대학 자료와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의 연계 생성 및 분석

교육부가 수집한 98개 졸업유예제도 운영 4년제 대학의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내용 및 방식이 졸업유예자의 수와 졸업유예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별로 동일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한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순수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제공 받은 ‘2015년 졸업유예현황’ 원자료와 ‘대학알리미’²⁾에서 제공하고 각 대학에서 공시하는 대학의 일반현황 행정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의 현상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사항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실태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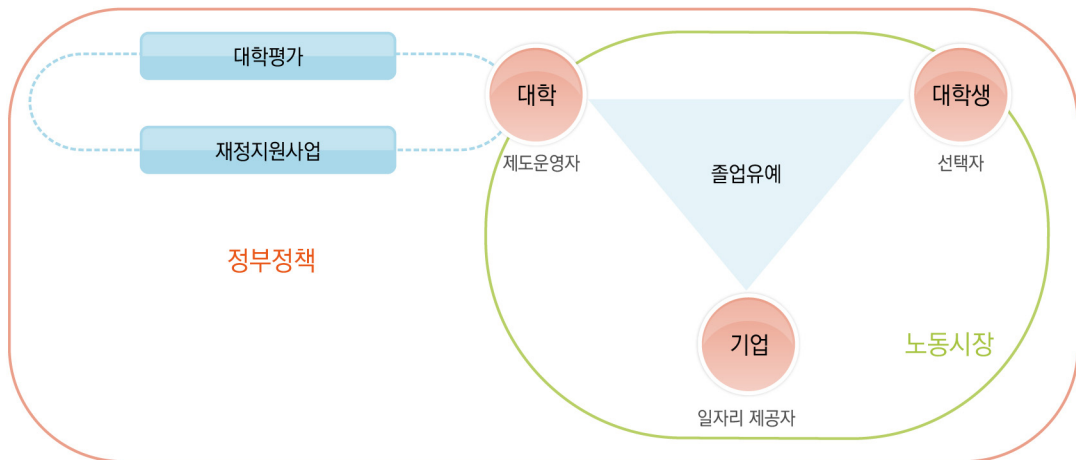
① 실태조사 자료의 수집

2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대학생 졸업유예의 원인 및 선택과정 등 그 실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졸업유예를 선택해야하는 여건의 완화 등 구체적인

2) 대학알리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출처: <http://www.academyinfo.go.kr/> 2016.05.03.검색)

정책 지원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와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졸업유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한된 시간 및 예산 제약 하에서 졸업유예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졸업유예 당사자 이외 졸업유예 현상을 둘러싼 다 주체, 즉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관계자, 그리고 대졸자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까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포함하였다. 단, 졸업유예를 둘러싼 또 다른 주체인 정부(환경 및 여건조성자)는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입장과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I-1】 졸업유예를 둘러싼 다 주체

졸업유예 현상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실태에 대한 파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 밀착도 높은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각기 별개의 실태조사 방법으로 연계성 없이 병렬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즉 졸업유예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와 설문조사가 유기적 연계성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진행과정에서 포착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문항을 개발·포함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 수집이 80%이상 진행된 시점에 대략적인 응답결과를 검토 한 후, 이해관계 주체들의 시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인사담당자, 대학관계자, 3~4학년 재학생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추진하였다.

○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 고
참여자 섭외과정	조사 전문 업체의 온라인 DB활용 및 모집	
참여자 수	• 총 38명 - 졸업유예자 :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유예자 15명(서울 지역 상위권대학 5명, 서울 이외 지역 국립대 및 사립대 각 5명) - 기업 인사담당자 : 4명(대기업 2명, 공기업 2명) - 대학 졸업유예 담당자: 5명(서울 지역 상위권대학 재직자 2명, 서울 이외 지역 국립대 재직자 1명, 서울 이외 지역 사립대 재직자 2명) - 3~4학년 재학생 : 4년제 일반 대학 3~4학년 재학생 14명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6명, 서울 이외 지역 대학 8명)	
집단면접조사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및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 병행	
집단면접조사 시기	• 졸업유예자: 6월 • 기업인사담당자, 대학 졸업유예담당자, 3~4학년재학생: 7월~8월	순차적으로 진행
소요 시간 및 횟수	1시간 ~2시간 30분 정도 소요 1~2회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면담 및 진행자	연구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졸업유예자 모집단의 표본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할당표집을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하고, 표본 할당의 기준은 선행연구와 2차 자료 분석의 결과에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특성(대학소재지, 성별)을 고려하여 5:5의 비율로 표집하였다.

조사기간 7월~8월의 제한된 시간 내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졸업유예자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사 대상자가 20대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Web기반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당초 목표 표본 수를 최소 600명, 최대 1,0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 확보된 표본 수는 1,002명이다. 수집된 최종 표본은 서울지역 대학 소속자와 서울 이외 지역 소속자의 비율이 4.7:5.3정도이고, 남성과 여성이 4.6:5.4로 정확한 5:5 비율은 아니지만, 계획했던 할당 비율에 근사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 설문조사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대학의 졸업유예자(수료자 포함)				
표집 틀	존재하는 표집틀이 없으므로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할당표집 활용				
표본 수	• 최종 표본수: 1,002명				
	(단위: 명)				
	구분	전체	남	여	
	서울지역 대학	470	194	276	
	서울 이외 지역 대학	532	264	268	
계	1,002	458명	544명		
표집방법	• 표집방법: 비확률표집의 할당 표집 • 조사방법: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시기	2016년 7월 ~ 8월				

②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와 이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자료는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주제 및 내용에 따라 기업인사담당자, 대학관계자, 3~4학년재학생 집단의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의 자료는 기술통계분석과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확인되고 새롭게 발견된 실태의 영향 요인 또는 정책방향의 설계 및 정책과제의 일차적 목표 집단을 설정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실증적 기반 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제에 따라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그리고 카운트 모델 등을 활용한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는 전사 후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자료의 내용의 구성에 맞추어 내용분석 되었으며, 결과가 갖는 논리의 함의와 구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표 I-4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내용 및 방법

주요 분석 내용	주요 분석 자료		분석 방법	
	공통	주제별 FGI 추가	공통	주제별 실증 모델
• 졸업유예자 특성	졸업유예자 설문조사 및 FGI자료			—
• 졸업유예 선택 사유		• 3~4학년재학생 • 기업인사담당자		• Principal Component • Multiple Regression • Logistic Regression
•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 대학담당자	• 기술통계 분석 • χ^2 -test	• Ordered Logit
• 졸업유예학기 생활			• t-test, GLM-test	• Logistic Regression
•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 내용분석	• Logistic Regression • Count Model
•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 기업인사담당자 • 대학담당자 • 3~4학년재학생		—

(5) 기타 연구방법

○ 콜로키움

사회문제로서 드러난 졸업유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오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주제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콜로키움을 총 2회 기획·개최하였다.

표 I-5 콜로키움 추진 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졸업유예’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오찬호박사	4월 6일
2회	일본의 졸업유예제도	강영배교수	4월 27일

첫 번째 콜로키움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연구와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졸업유예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관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해외 선진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고등교육체계를 갖는 일본의 졸업유예제 운영 사례를 통해 우리와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 정책실무협의회

졸업유예의 실태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을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관계부처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1-6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연구내용의 구성 및 추진 방향의 설정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3월 3일
2차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	교육부	3월 8일
3차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및 졸업유예자 수 실증분석 결과 검토 및 정책도출을 위한 방향	고용노동부, 교육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6월 14일
4차	2016년 대학 졸업유예 현황	교육부	9월 8일
5차	제안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고용노동부, 교육부,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통계청, 국회	11월~12월

첫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본 연구가 2014년과 2015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이제까지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 가진 협의회에서는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교육부가 자체 조사한 ‘졸업유예현황’ 자료 사용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협의하였으며, 졸업유예제와 관련한 대학의 학사운영제도 및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한 교육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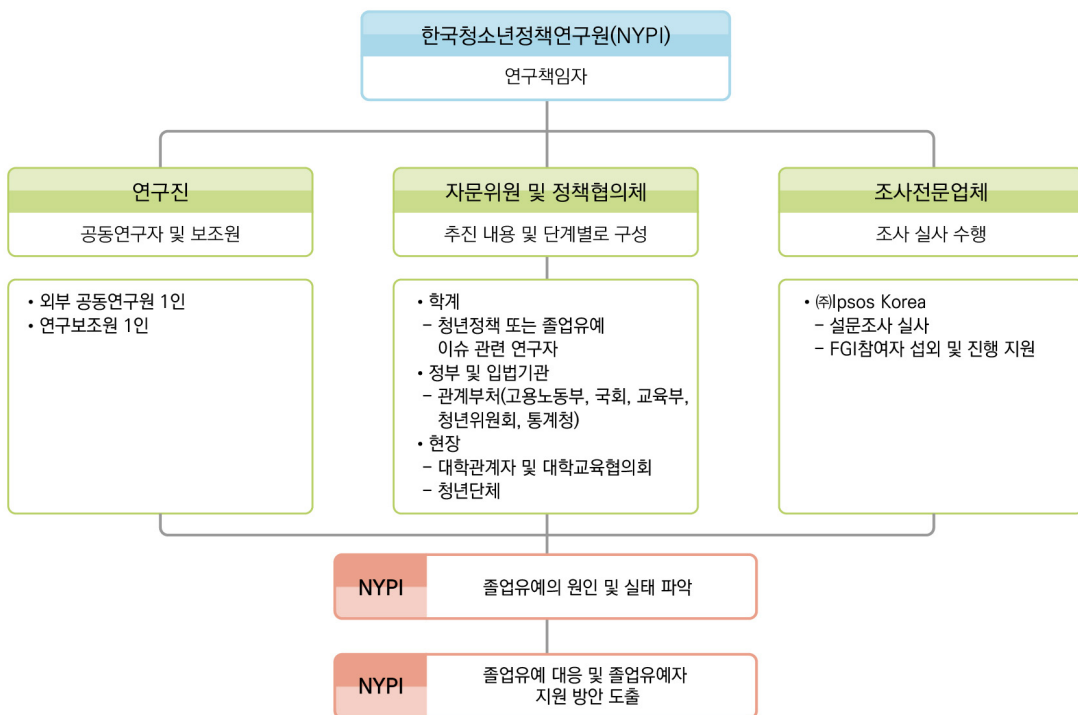
세 번째 협의회에서는 문헌자료 및 2차 자료 분석 결과로 도출된 졸업유예자 규모와 졸업유예자

수의 영향요인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도출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네 번째 협의회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교육부가 수집한 ‘대학 졸업유예 현황’ 자료를 제공 받고, 8월 시점까지 수집·분석된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후 12월 까지 도출된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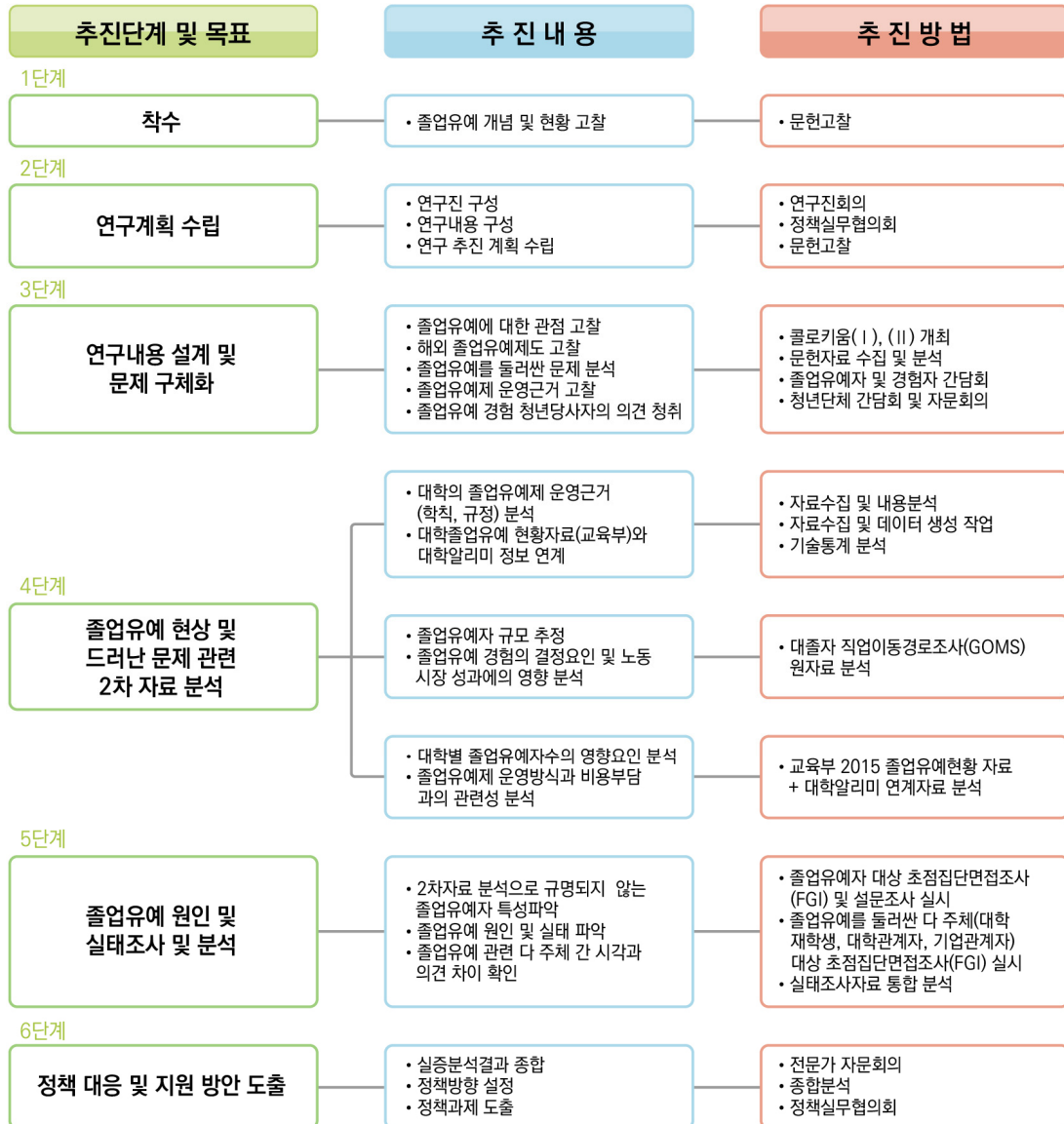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예산 제약 하에서, 계획된 연구내용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충실하게 실행하고, 동시에 현실 밀착도 높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I-2】 연구 추진체계

이와 같은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계획된 절차에 따라 계획된 연구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2) 연구 추진 절차



【그림 1-3】 연구 추진 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
2. 졸업유예에 관한 두 가지 관점
3.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들이 일정기간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졸업유예는 수업연한 내 졸업학점 미이수로 초과등록, 학점 외 요건 미충족, 장기 휴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려는 경우가 가장 좁은 범주의 졸업유예자로 정의되고, 졸업유예제도 폐지나 비운영 대학을 고려할 경우, 졸업학점 이수 후 학점 외 요건을 채우지 않은 수료자까지 좁은 범주의 졸업유예자로 포함될 수 있음.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졸업을 미루는 초과등록자와 장기 휴학생의 경우, 재학생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넓은 범주의 졸업유예자로 포함될 수 있음.

1) 관계법령에 따른 개념 및 범주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자 일정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졸업유예제’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연기를 대학에 신청해 승인받는 제도(강경연·박숙경·이제경, 2015, p.32; 유기홍, 2015, p.88;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01.30.; 안민석, 2014.04.04.)로 설명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졸업유예는 수업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갖추고 단지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졸업시기의 연기”부터 수업연한 내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초과등록” 방식까지 다양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 이 장 2. 의 일부 내용은 「2016년 고용패널학술대회(2016.05.27.)」의 “졸업유예의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의 ‘II. 선행연구’ 부분의 내용으로 발표된 바 있음.

대학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6년으로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는 의학·한의학·치의학·수의학 및 약학을 제외한다면 모두 4년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2.11. 검색). 한 해에 두 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8학기까지가 수업연한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졸업유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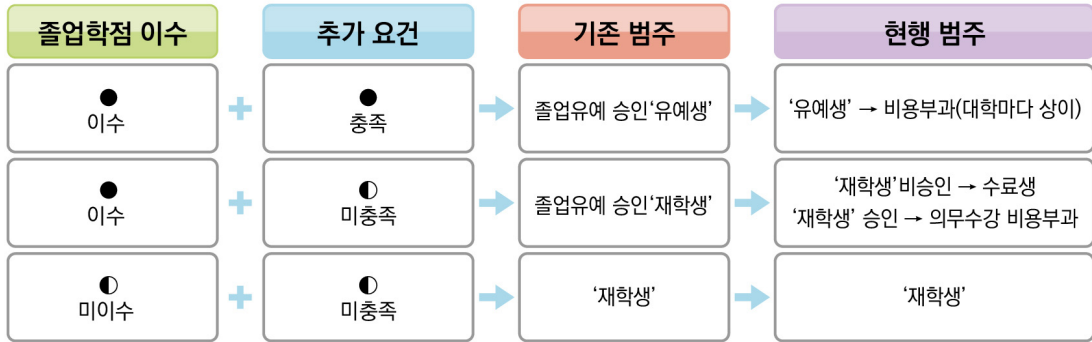
8학기를 마치는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졸업연기를 신청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은 각 대학의 '졸업유예' 승인 기준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위해 취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것이다. 즉 졸업학점 이수과 비교과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바로 졸업이 가능하지만,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필요한 학점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이수를 늦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점 이수 이외 대학별로 정해져 있는 졸업 요건, 즉 졸업논문이나 어학점수, 또는 자격증 취득 및 제출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졸업학점의 이수를 미루는 두 번째 방식은 학점 이수가 부족하여 추가 학기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학생들은 '재학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학점 외 비교과졸업요건을 채우지 않는 방식의 경우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이 아닌 '수료생'으로 구분하고 있다(서혁, 2015.06.30., p.80)³⁾.

과거 대학들이 기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이들이 학점 이외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만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01.30.)하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각 대학들은 졸업유예자 의무수강과 비용부과 등의 방식으로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졸업유예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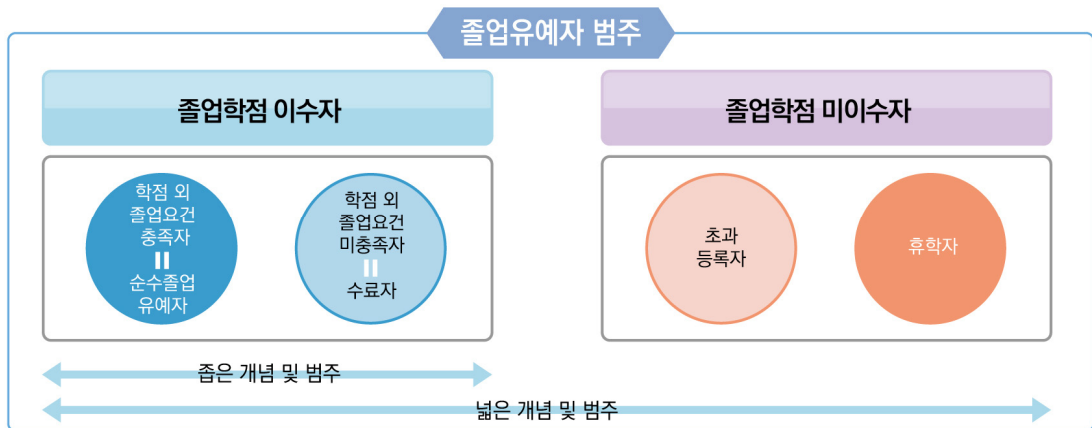
한편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이들 모두 재학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졸업유예의 원인이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단순히 재학생으로 간주하고 졸업유예의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이화여대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채플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0학점 등록제'를 폐지하고,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정규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해 수료를 인정하는 '학사학위과정 수료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학칙 개정(머니투데이, 2015.01.05.).



【그림 II-1】 '재학생'으로 인정 졸업유예 범주의 시대적 변화

다시 말해, 극심한 취업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거나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복수전공을 한다거나 일명 스펙을 쌓거나 하는 등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초과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졸업학점 이수를 하지 않고 초과 등록을 선택하는 이들도 넓은 범주의 졸업유예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현실의 내용에 반영하여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4학년생들도 졸업유예자의 넓은 범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2】 졸업유예자 개념 및 범주

2. 졸업유예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졸업유예 현상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개인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고, 사회·심리적 관점에서는 태어난 후 대학졸업 시점까지 삶의 다음 단계가 정교하게 표준화된 사회에서 자란 이들이 졸업 후 ‘제도적 무중력 상태’에 놓이는 것에 대한 공포, 노력의 성과가 드러나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로 설명함.
- 경제학적 관점만을 취한다면 그 간 졸업유예를 둘러싸고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줄어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심리적 관점만을 취한다면 졸업유예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적인 근본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근본 원인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당사자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관점을 모두 취하여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접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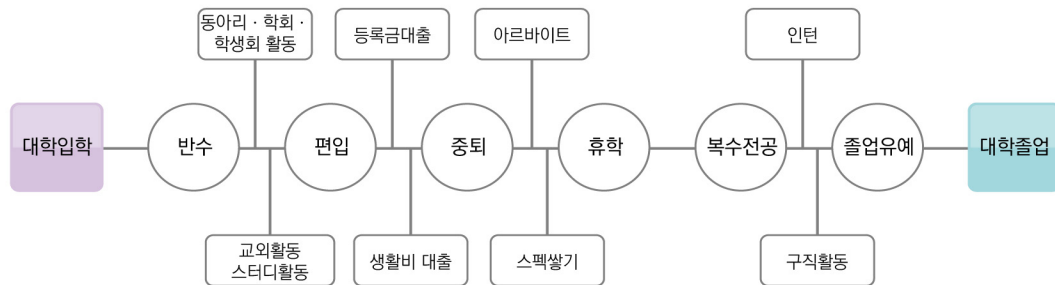
1) 경제학적 접근: 개인의 합리적 선택

이제까지 졸업유예의 현상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던 소수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노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행위가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여건에 대응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 또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상황에 반응하는 민감도의 차이와 개인 및 재학 대학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고용여건의 지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선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양정승(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상승과 같은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의 악화는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선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졸업유예를 선택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또 다른 실증분석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0대 청년의 실태를 분석한 김지경·정연순(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타 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 비해 졸업유예 가능성도 높고, 졸업유예의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다. 이에 더하여 졸업유예

기간이 재학기간 중 휴학, 복수전공, 인턴, 취업스터디와 같은 경험들의 연장선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졸업유예 경험의 선택뿐만 아니라 유예기간도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조절과정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p. 220 [그림 V-3] 발체.

【그림 II-3】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단계

한편 졸업유예에서 확장된 범주로 재학 중 초과등록의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이재성(2015)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양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취업여부 자체에는 재학기간을 연장하는 초과등록의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첫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여부, 대기업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질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졸업유예자가 졸업 후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가 더 좋다는 결과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졸업유예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양정승(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의 졸업유예 경험 여부에 따른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선택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졸업유예를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높다. 또 졸업유예효과를 검증한 김태훈(2014)의 연구에서도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과 대기업 취업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에 고려해보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 악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졸업유예 선택의 증가 및 졸업유예자 규모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졸업유예기간 동안 어학점수의 획득, 자격증 획득, 인턴경험 등 일명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졸업유예 선택과 졸업유예

기간의 연장은 취업에 따른 기대수익의 수준을 높여 노동시장 진입 시기 연기로의 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졸업유예의 가능성과 졸업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취업에 따른 기대수익 수준이 높은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생들의 졸업시기와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지연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유예를 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학생들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만 설명하거나 간주한다면, 졸업유예를 둘러싸고 드러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줄어든다. 이제까지 정부가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에는 졸업유예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의 영향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가 대학 신규 졸업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의 악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현상과 문제가 분명하고, 그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극심한 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개인의 선택인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졸업유예가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들이 사회구조의 모순이 드러나는 선택이며 그 선택이 문제를 키우는 선택이라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간 졸업유예의 현상과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앞서 논의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졸업유예의 선택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므로 정책적 대응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나 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증폭시키는 선택으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미 졸업유예를 선택을 한 이들의 규모는 더 이상 ‘개인의 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할 수 없을 만큼 ‘큰 덩어리’로 커졌음을 주지해야 한다.

2) 사회·심리학적 접근: ‘제도적 무중력 상태’의 회피

앞의 경제학적 접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의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에 대응하는 개인의 합리적 또는 전략적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선택이 단순히 취업 여건만을 고려한 결정인가?

경제학적 접근 방식과는 달리, 사회·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은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당사자들, 즉 20대 청년들이 성장해온 과정에서 현상의 원인을 찾는다. 다시 말해, 사회·심리학적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태어난 후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삶의 다음 단계가 정교하게 표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이며, 그러한 세대가 갖는 기본적인 심리·정서적 특성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그 시각에서 본다면, 졸업유예는 직면해야 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졸업 후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한시적이라도 피해보고자 하는데 따른 선택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9학기 이상 등록하여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13명의 4년제 대학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한 강경연·박숙경·이제경(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졸업유예를 결정한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졸업유예를 결정하는데 있어 스펙 향상에 대한 기대보다 소속감에 대한 기대가 더 크며, 졸업유예 현상을 일반화하여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언론 보도된 졸업예정자의 ‘졸업유예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 졸업예정자 669명에게 졸업을 미루려는 사유를 복수응답 받은 결과에 따르면, 73.7%가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29.4%가 ‘무소속 상태로 남는 게 두려워서’ 등으로 나타난바 있다(이데일리, 2016.01.06.). 또 같은 취업포털에서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부족한 스펙을 쌓을 수 있어서’(53.2%), ‘인턴 등 졸업예정자로 한정된 기회가 많아서’(46.6%), ‘기업에서 졸업생을 기피해서’(43.1%)의 사유와 함께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31.9%)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머니투데이, 2015.01.02.).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자가 취업시장에서 불리하다거나 기업들이 신규 채용 시, 졸업자를 기피한다는 것을 마치 확고한 사실로 믿는 데에는 졸업을 앞 둔 이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엄기호·하지현(2015)은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가 기업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를 대학생들이 쉽게 확신하고, 그것이 졸업유예의 주요 결정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재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 중이라는 상태가 “우리사회에서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시켜주는 프리패스”가 되어버린 탓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머무르는 유예 결정을 합리화하는데 가장 쉬운 사유가 ‘공부 중’이며, 이는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유예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엄기호·하지현, 2015, p.22~p.23).

졸업 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기저로 깔리는 것은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이 태어나면서 대학 졸업을 앞 둔 시점까지 제도권 밖에서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상태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기호·하지현(2015)은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은 대학생들이 “제도적으로 무중력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제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제도적 중력 감의 상실”로 하루하루 무언가를 할지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이다(엄기호·하지현, 2015, p.29).

그렇다면, 제도권 하의 어딘가에 소속되기만 한다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들의 소속감은 과연 충족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 아닌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닌 20대 청년들이 원하는 소속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나 조직에 존재함으로써 인식되는 소속감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성과가 드러나는 소속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어딘가에 속하는 소속감이라면, 신규 대졸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은 선택하지 않고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유예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소속감이 단순히 어딘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가 드러나는 소속감”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제도권의 경쟁 교육체계 하에서 성장하면서 학교 급이 바뀔 때마다 입학하는 학교를 성과로 인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가에 따라 구별 짓고 차별하는 방식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화되고 강화된 것이다⁴⁾.

따라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즉 “제도적 무중력 상태”에 대한 공포심은 단순히 소속된 곳이 있는지의 여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경쟁 체제 하에서 ‘내가 쌓아왔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그곳을 대체하여 대학에서 ‘내가 쌓아왔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빚어지는 공포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부재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우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만 우리사회에 드러나는 졸업유예의 문제를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또한 이제까지 졸업유예에 관한 논의와 문제제기에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 즉 사실(fact)에만 집중하였을 뿐, 그 현상의 이면에 가려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이유도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말하는 “소속감 상실”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데 있다.

4) 제1차 콜로키움(졸업유예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2016.04.06.)에서의 논의 내용임.

취업난의 상황에서 기성세대들이 20대 청년들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아 취업을 못한다’거나 ‘눈이 높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질타하는 말들에 대해 청년들이 ‘노오력’이라는 말로 조롱(조한혜정·엄기호 외, 2016, p.20)하며 답하는 현상의 경우 또한 청년 취업난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기성세대들의 말 속에 부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 특히 졸업으로 인한 “제도적 무중력 상태”에 대한 공포감이 기저에 있고, 그 제도적 무중력은 단순히 어느 곳에 소속되지 않은데 따른 무중력 감이 아닌, 타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성과가 드러나는 소속감”을 가질 때 해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의 “소속감”을 대체할 수 있는 졸업 후 취업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와 관련한 이상의 두 가지 관점, 즉 경제학적 관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졸업유예의 원인과 선택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중요한 원인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과연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요인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졸업유예 현상을 완화하고 졸업유예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2014년 국정감사자료 기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 있는 초과등록자는 약 12만 명, 졸업유예제도 운영 대학에서 집계한 순수 졸업유예자는 당해 연도 졸업생의 7~9% 수준인 2만 5천명이며, 파악되지 않거나 집계되지 않는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그 층위가 확대되고 있음.
- 졸업유예자수의 증가와 대학평가의 영향으로 대학들이 졸업유예제도를 폐지하거나 무비용·비수강만으로도 인정해주던 재학생 신분을 의무수강·비용부과로 전환하면서 갈등과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졸업유예의 원인과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 졸업유예 당사자와 이해 주체들 간의 시각차가 매우 크며, 갈등 현상의 일부 단면에만 집중된 언론의 보도가 이해 주체들 간의 편견과 오해를 키우고 있음.

1) 졸업유예자 규모 및 층위의 확대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졸업유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데에는 청년들의 취업여건의 악화 속에서 졸업을 유예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음을 우리사회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또 졸업유예를 경험한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자료, 즉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정규 8학기를 초과하여 졸업을 연기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 추이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5년 안민석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전국의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가 총 12만 여명(안민석, 2015.03.2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이 수치에는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추가등록 한 재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과대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 졸업유예자 수

(단위: 명)

연도	졸업유예자 수		졸업생 수	졸업생수 대비 졸업유예자 비율
	전체	대학당		
2013년	27,962	241	319,082	8.8%
2014년	25,246	258	321,994	7.8%

자료: 유기홍(2015.09.05.), 국정감사 보도자료 p.2 〈표1〉 발췌.

같은 해 유기홍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년제 대학 졸업유예 실시 현황’ 자료에서는 전국 대학에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이들이 2만 5천여 명이고, 대학 당 평균 260여명의 졸업유예자가 존재하며, 한 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7%~9% 정도가 졸업유예를 하는 것으로 산출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패널조사’의 응답대상자 9,560여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 경험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졸업한 이들의 8.1%가 졸업유예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지경, 2015, p.6).

또한 유기홍의원의 같은 국정감사자료에서 2014년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 98개 대학의 졸업유예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졸업유예제를 실시하는 대학 내에서 졸업유예자 규모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명 미만부터 1,000 이상까지 그 범위가 상당하며, 34.7%에 해당하는 34개 대학에서 대학 당 평균 졸업유예자 수(258여명)를 상회하는 규모의 졸업유예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 2014년 졸업유예자수 규모별 대학 분포

(단위: 교, %)

구분	계	0명	50명 미만	50명~100명	100명~250명	250명~500명	500명~1,000명	1,000명 이상
대학 수	98	5	26	12	21	19	11	4
비율	100.0	5.1	26.5	12.2	21.4	19.4	11.2	4.1

출처: 유기홍(2015.09.05.), 국정감사 보도자료 p3 <표2>.

한편 2014년 국정감사자료로 안민석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2014년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서 재학생 1만 명이상 규모 47개교의 졸업유예 신청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서 졸업유예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보면, 2011년 8,270명이던 47개교의 졸업유예자수는 2013년 14,975명으로 81.0%나 증가하였다.

표 II-3 재학생 수 1만 명이상 대학 47개교의 졸업유예 신청자 수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월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율
졸업유예 신청자 수	8,270	11,568	14,975	12,169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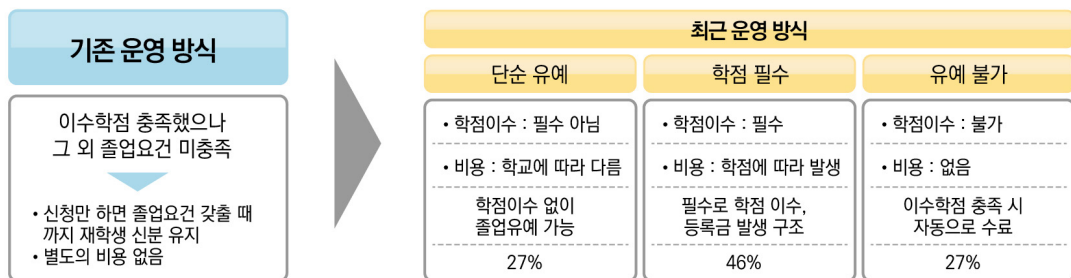
출처: 안민석(2015.04.04.), ‘취업준비생들 두 번 올리는 일선 대학들, 졸업유예 대가로 비용 청구 보도자료, 안민석의원 홈페이지(<http://www.osan.21.or.kr/bbs>)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검색·발췌(2016.02.10. 검색).

이상과 같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일부 대학의 자료만으로도 졸업유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가 한 해 전국대학에서 졸업자의 8% 내외의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으며, 대학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여 졸업유예자의 층위와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실제 졸업유예자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층위와 범주의 확대를 고려한 2차 자료(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GOMS) 분석을 통하여 2010년 이후 최근 4년 간 연도별 졸업유예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 무비용에서 비용 부과로의 전환

졸업유예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졸업유예제를 둘러싼 또 다른 이슈는 대학들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으로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운영하던 졸업유예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졸업유예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전적 또는 행정적으로 졸업유예 신청 승인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서 대학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⁵⁾.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5.01.30.), '남고 싶은 학생 돈 내라는 학교' 2015년 학교별 졸업유예제도 점검결과보고서 p.2 내용 발췌·재구성.

【그림 II-4】 대학의 졸업유예 운영 방식의 변화

5) 2015년부터 서울여대는 학칙 개정으로 '졸업유예제를 폐지'하였으며(송대시보, 2015.08.04., p.1), 이화여대는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무조건 학사학위 수료로 처리되는 '과정수료제'를 신설하였음(경향신문, 2015.01.05.)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였던 대학이 학칙 개정을 통해 아예 졸업유예제를 폐지하여 졸업유예의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점 이외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졸업유예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졸업학점 이수자들을 모두 ‘수료생’으로 분류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졸업유예제를 시행하는 가장 다수의 대학들이 취한 방식으로, 기존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운영 방식에서 수강을 필수로 하여 학점이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록비용 및 수강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⁶⁾.

그렇다면 대학들은 졸업유예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왜 갑작스럽게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뒤의 제Ⅲ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졸업유예제 도입 시기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교육부가 2014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를 조정하고 2015년부터 실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확정하면서 기존의 평가지표에서 비중이 컸던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비율을 낮추는 대신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교육비환원율 등의 지표를 포함하는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재정지원 평가사업의 취업률 지표에는 졸업유예자 수의 증가가 취업률 지표 산출에 유리하게 작용되었으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전임교원확보율’의 지표에는 재학생 수로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대학들이 졸업유예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을 바꾼 것이다(대학교육연구소, 2014.03.30.; 2015.02.02.).

그러나 이 또한 대학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상이하여,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재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학생정원충원율이 낮은 대학에서는 재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하기도 하고, 취업률이 낮은 대학 또는 취업률이 낮은 일부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졸업유예를 권하기도 하는 상황⁷⁾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세 가지 방식 이외, 졸업의 필수 요건이었던 사항들을 졸업요건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강대의 경우 졸업을 위해 영어성적의 제출이 필수였으나,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졸업시기를 미루는 학생들이 증가하자 영어성적표 제출을 졸업요건에서 제외하였음(유스라인(U's Line) 2015.01.05.).

7) 제2차 콜로키움(2016.04.27.)에서 사례로 논의된 내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학과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제기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 구조적인 원인으로 취업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현하게 된 졸업유예제를 단순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사제도로써 방치하기 보다는 고등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정책과 대학 사이의 이해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피해와 부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정부가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은 다수의 대학들이 졸업유예를 승인하면서 수강을 의무화하고 대체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5년 유기홍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에 따른 수강비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비용 부과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졸업유예제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법령으로 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대학마다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졸업유예에 따른 등록비와 수강료 징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졸업유예 수강비 징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규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학점 당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전자의 경우로 시행하는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대학에 따라 최소 3만5천원에서 최대 23만 2천원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유기홍, 2015.09.05., p.4)⁸⁾.

이처럼 졸업유예자 수 증가에 따라 각 대학은 졸업유예 신청 대상자 범위의 축소 및 의무수강제와 그에 따른 비용의 부과 방식으로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정작 졸업유예자 수의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실제 전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동시에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

8)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 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나. 4학점~6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다. 7학점~9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생략)(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2.02.검색)

4년제 일반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의 근거인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의 ‘2015년 졸업유예현황’ 자료와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를 연계하여 대학별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이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졸업유예 관련 주체들 간의 시각차: 학생 vs 대학 vs 기업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그 간 제기된 문제와 이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졸업유예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당사자들과 이해 주체들 간의 입장차와 시각의 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졸업유예자 이외 졸업유예와 관련한 주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졸업유예자가 소속된 ‘대학’과 같은 대학 1학년~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대졸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여건의 악화로 팽팽한 일자리의 취업경쟁이 날로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요구하거나 선발하는 기준은 수업연한 내에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획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기 전, 자신의 상대적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에서 졸업자 채용, 특히 취업 공백기가 긴 졸업자 채용을 기피한다는 인식이 대학생들 사이에 확고한 사실인 것처럼 강화되면서 졸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의 인사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58.3%가 취업공백기가 긴 지원자 채용이 부담스러우며, 57.2%는 취업공백기가 서류 전형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매일경제뉴스, 2015.09.14.; 파이낸셜뉴스, 2015.09.11)는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갖는 졸업생 취업이 불리한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지 졸업 후 취업공백으로 보지 않고, 졸업을 미루고 유예한 기간 또한 취업공백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공백기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의 71.8%가 서류 전형에는 영향이 없으며, 96.1%가 면접 전형 시 지원자에게 공백의 사유를 질문으로 확인하여 답변에 따라 감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일경제뉴스, 2015.09.14.; 한국경제, 2016.01.21.). 즉, 기업에서는 졸업을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시간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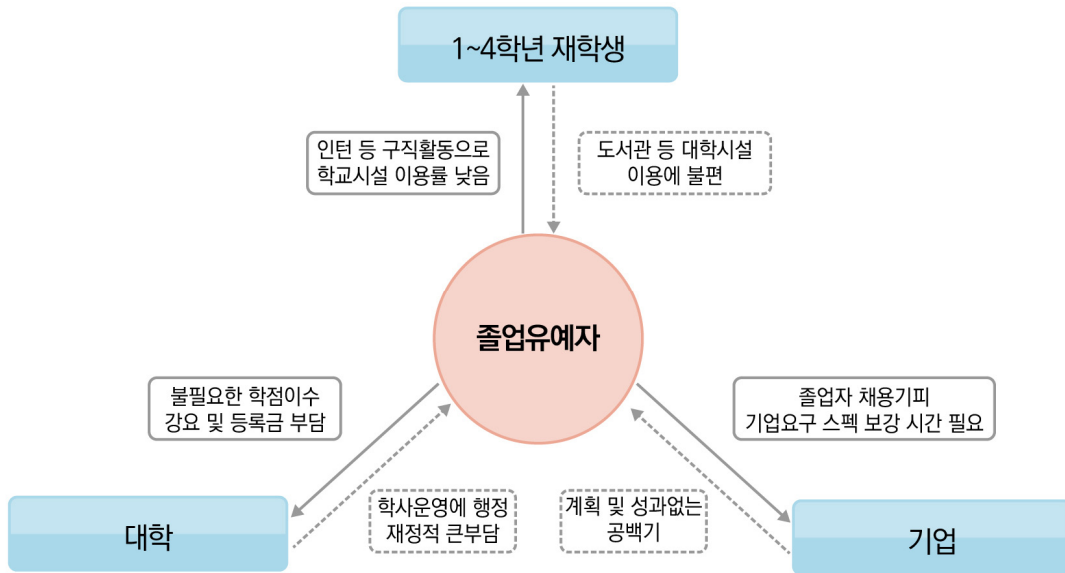
보냈다가,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졸업유예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들의 졸업유예기간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취업준비기간”이 아닌 “취업공백기”로 보여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한 상태에서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데에는 졸업과 동시에 재학생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지원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종 공모전과 인턴십 등이 대체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취업정보를 재학상태에서 학교라는 거점을 통해 제공받기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헤럴드경제, 2016.03.10.). 학교를 떠나서는 취업지원센터와 같은 교내 전담부서의 공식적인 정보나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이 학교만큼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수, 선·후배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재학생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⁹⁾

또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과 기업 입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 대학의 도서관과 시설물 이용이 필요하나, 졸업을 하게 되면 이들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졸업유예제를 이용하여 대학에 남기를 희망하는 것이다(헤럴드경제, 2016.03.10.; 주간동아, 2016.03.30.).

이에 대해 대학은 졸업유예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재학생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행정적인 비용과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점이수를 의무화 하고, 등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아예 졸업유예제를 폐지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학생들을 ‘수료생’으로 분류하는 대학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졸업유예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지역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도서관 사용에 대한 별도의 ‘자릿값’ 비용을 10만원(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5만원(성균관대, 중앙대), 3만원+예치금 15만원(이화여대) 등의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의 대학들(부산대, 경성대, 동아대)도 5만원~10만원 상당의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헤럴드경제, 2016.03.10.; 부산일보, 2016.01.31.).

9) 졸업유예자 간담회(2016.03.11., 2016.03.17.)에서의 논의 내용



【그림 II-5】 졸업유예 관련 주체들 간의 시각차

이와 같이 그 간 졸업유예를 통한 재학생의 수 증가에 따른 대학의 대응 방안은 대체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취해져 왔다. 대학의 관계자들은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유행처럼 번지는 졸업유예를 완화시켜 학사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여지책의 진입장벽”(주간동아, 2016.03.30.)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1학년~4학년 재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장시간·장기간 도서관을 점유하고 있는 일명 ‘화석선배’¹⁰⁾로 인하여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성토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졸업유예 현상 및 졸업유예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불필요한 편견과 오해로 갈등만 커지는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주체 간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는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들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표면적 현상에 대한 대응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논의와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화석선배’는 졸업유예나 휴학 등으로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는 고학번의 선배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 취업난과 함께 캠퍼스에 오래 머무는 ‘NG(No Graduation)족’ 등이 화두가 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데일리, 2015.03.23.)

제 Ⅲ 장

졸업유예제 운영 및 관련 정책 현황

1.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2. 졸업유예제 관련 법률 및 규정
3. 해외 졸업유예 현황 및 정책 사례

제 III 장

졸업유예제 운영 및 관련 정책 현황*

1. 졸업유예제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졸업유예제도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1998년 외환위기로 신규 대졸자 실업률 급증이라는 경제·사회의 여건이 졸업유예제도 도입의 단초가 되었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방식이 졸업유예제도 운영 확산의 계기가 되었음.
- 졸업유예제도 운영 대학은 증가해 왔으며, 최근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과 비용을 부과하는 대학들이 급증하였으며,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신청과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졸업유예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남.
- 제도 도입 시에는 실업률에, 제도 도입 확대기에는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졸업유예자는 도움이 되는 존재였으나,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오늘의 졸업유예자는 대학에서 부담이되는 존재가 되고 있음.

1) 도입 배경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졸업유예제도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교육정책 또는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졸업유예제도를 도입하고 학칙 또는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떠한 필요와 목적으로 각 대학에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도입될 당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졸업유예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도입·운영된 것이 아니다보니, 최근 2~3년 동안 국정감사자료로 제출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정부에서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이나 졸업유예생의 규모 등을 파악하거나 수집한 자료 또한 찾기 어렵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에 따른 문제들을 심층보도 한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면, 졸업유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졸업유예’라는 용어는 1998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하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 중 실업자의 수가 20만 명에 이르자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하고자 당시 국방부·교육부·노동부 등의 관계부처가 모인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서 대학 졸업 후 실업상태로 편입되는 이들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입대 대기자의 징집과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에 한해 수강료를 내고 졸업을 유예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후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된 유예대상자 선정과 조건 기준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중반부터 졸업유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경향신문, 2013.12.11.).

이와 같은 내용에 기초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는 졸업유예제도는 20여 년 전, 경제위기 및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응급조치로 논의되고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로만 논의되다 보니 정부정책의 제도적 틀 또는 표준지침을 마련된 후 시행되지 못하였고, 대학에서 우선 시행토록 한 것이다 보니 현행과 같이 대학별 운영 방식과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졸업유예제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방침’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자료(대학교육연구소, 2015.02.02.)를 살펴보면, 각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도입한 시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중반이지만, 시행 대학이 증가한 시기는 2000년대 후반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대학의 졸업유예제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2008년~2012년 사이에 도입한 대학(51.4%)이 그 이전에 도입한 대학(38.2%)보다 더 많다.

표 III-1 각 대학의 졸업유예제 도입 시기

구분	2007년 이전	2008년~2012년	2013년 이후	합계
대학 수	42	57	11	110
비율(%)	38.2	51.8	10.0	100.0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15.02.02.), ‘졸업유예제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방침’ 정보공개 청구 결과, p.2.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학졸업자들의 실업문제가 1998년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구조적인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당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취업률’ 지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비중이 컸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졸업생 수를 줄임으로써 취업률 평가를 잘 받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대학교육연구소, 2015.02.02.).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규 대졸자 실업률이라는 경제·사회의 여건이 졸업유예제도 도입의 단초가 되었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방식이 졸업유예제도 운영 확산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운영 현황

현재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국정감사자료가 유일하다. 다시 말해, 2014년 안민석의원이 제출 받아 공개한 ‘2011~2014년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및 2015년에 공개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 같은 해 유기홍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개한 ‘4년제 대학 졸업유예 실시 현황’자료가 제한적이거나 졸업유예제 운영과 졸업유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유기홍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2013년 62.7%(185개 대학 중 116교)에서 2014년 71.0%(138개 대학 중 98교)로 증가하였으며,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면서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강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대학의 비율도 같은 기간 34.5%(40교)에서 62.2%(61교)로 급증하였다(유기홍, 2015.09.05., pp.2-3)¹¹⁾.

4년제 대학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나, 전반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였고, 졸업유예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제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강을 의무화 하는 대학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이 비용부과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의 입장에서든 기존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았던 졸업유예 신청이 금전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선택으로 변화되었음을 체감한다.

11) 2013년 자료는 189개 4년제 대학 중 185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2014년 6월 2일 기준으로 수집·분석한 것이며, 2014년 자료는 190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2015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수집·분석한 것임(유기홍 2015.09.02., p.2).

표 III-2 대학의 졸업유예제 실시 및 수강 의무화 여부 현황

(단위: 교, %)

연도	졸업유예제 실시 여부			실시 대학 수강 의무화 여부			
	실시	미실시	계	불가	선택	필수	계
2013년	116 (62.7)	69 (37.3)	185 (100.0)	4 (3.4)	72 (62.1)	40 (34.5)	116 (100.0)
2014년	98 (71.0)	40 (29.0)	138 (100.0)	-	37 (37.8)	61 (62.2%)	98 (100.0)

자료: 유기홍(2015.09.05.),국정감사 보도자료 pp.2~3 <표1> 및 p.3 <표3>의 내용 발췌·재구성.

졸업유예 신청 단계에서 비용이 부과된다면, 등록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졸업유예제가 운영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안민석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117교)의 14.5% 인 17개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자의 기숙사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2개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민석, 2015.03.22.).

표 III-3 졸업유예 승인 후 단계에서의 운영 현황

(단위: 교)

전체	졸업유예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가능 여부		졸업유예자의 기숙사 이용 신청 가능 여부	
졸업유예 시행 117교	○	115교	○	100교
	×	2교	×	17교

자료: 안민석(2015.03.22.),국정감사 보도자료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의 내용 발췌·재구성.

이와 같은 결과는 대졸자 실업률을 낮추는데 활용되었던 졸업유예제도 도입 초기나 졸업유예자 수가 졸업생 취업률 산정에 도움이 되어 제도 도입이 확대된 시점과는 달리, 현재 대학은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했을 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변화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결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놓인 대학, 그리고 대학의 제도 운영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졸업유예생의 존재가 당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 ‘보탬이 되는’ 집단에서 어느새 불필요한 “잉여(surplus)”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졸업유예제 관련 법률 및 규정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졸업유예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임. 19대 국회에서 졸업유예자에 대한 비용부과를 하거나 졸업유예자수가 많은 대학이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의 학칙과 규정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졸업유예제도 운영규정을 갖는 대학이 93.7%, 이들 대학 중 학칙으로 규정하는 대학은 80.7%이며, 제도 운영 대학의 47.2%가 두 학기의 졸업유예를 허용하고, 대학들은 졸업연기(38.2%), 졸업유예(30.5%), 졸업유보(22.9%), 졸업연장(2.8%)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졸업유예제도 운영 대학의 64.6%가 의무수강제도를 실시, 실시 대학의 80%가 최소 1학점을 의무이수 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7.0%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1) 현행 관련 법률 및 개정 발의 법안

졸업유예와 관련한 법적 규정사항은 대학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고등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제Ⅱ장의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 상태를 정의하고 졸업유예자의 범주를 정의하는 기준은 동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업연한’에 기초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업연한을 6년으로 정하는 의·약학계열 등을 제외한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은 4년이며, 학기로는 8학기이다.

수업연한 이외 졸업유예와 관련되는 학교의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졸업유예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유예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관련된 재학연한을 제2호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졸업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 시기만을 연기하는 이들을 수료자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3호에, 졸업유예를 신청한 이들이 학기 등록과 의무수강제와 관련된 내용을 7호에, 등록비 및 의무수강에 따른 비용 부과와 관련된 내용이 13호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총장은 졸업유예와 관련한 사항들을 학교의 규칙으로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4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시행령 제4조(학칙)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위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6.05.20. 검색)

한편, 2014년~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의무수강료 징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13호에서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의 징수를 학교 규칙으로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뿐, 그 금액을 최소 또는 최대 얼마로 산정해야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동 규칙 제4조 제7항에 수업연한이 지난 초과등록자에 대한 등록금 부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졸업학점의 이수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학생들 중 졸업시기만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그 외 대학이 요구하는 졸업요건(영어점수, 논문, 자격증 등)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이하 내용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6.05.20. 검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62.2%(유기홍, 2015.09.05.)가 의무수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학들이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수의 학교들에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 즉 초과등록자의 학점 등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는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그 외 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업유예 신청 학생에 대해 대학이 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졸업유예를 허가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 또는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안민석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1916705, 2015.09.02.)한 바 있다.

발의 법안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유예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졸업유예자와 그들이 속한 대학에 대한 불이익, 예컨대 대학 평가 시 졸업유예자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졸업유예자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습권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안민석, 2015.09.02.).

표 III-5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 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年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② ~ ⑩ (생략) <신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 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9대 국회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법안, 2015.09.02.)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증가로 인하여 대학이 재정적 부담이 있고 졸업유예자에게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을 재학생의 등록금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재학생의 학생복지가 부실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졸업유예자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대학의 지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안민석의원의 대표발의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개정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정재룡, 2015.11).

또한 대학평가 시, 졸업유예자수로 인하여 학생이나 대학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학별 졸업유예자의 수가 각종 평가지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발의 법안과 그에 대한 국회 소위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보면, 졸업유예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개정이든 대학의 자율이든 한 걸음 나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의 학칙 등 규정을 수집하고, 대학별 졸업유예제 운영의 근거 규정의 내용을 자료화하여 졸업유예제 허용 기간, 의무수강제 실시여부, 최소 의무이수 학점, 수강료 부과기준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각 대학의 졸업유예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규정 현황 분석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과 관련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가 유일하다. 이들 자료를 통해 졸업유예자의 규모가 최근 3~4년 동안 급증하였고, 대학의 제도 운영의 방식에 따라 드러난 문제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는 전국 190여개의 4년제 일반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일부대학에 한정되어 파악된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를 대상으로¹²⁾,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졸업유예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분석하였다. 아울러 학칙이나 관련 규정에는 졸업유예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학사 게시판 등에 졸업유예 신청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분류·분석하였다.



【그림 III-1】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의 근거규정 분석 과정

12) 대학알리미에 4년제 일반대학으로 분류되는 학교는 191개교이고,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지 않은 학교 중 2015년 교육부 졸업유예현황 조사 시, 자료를 제출한 3개교를 합하여 총 194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음.

(1) 근거 규정의 유무, 형태 그리고 용어

먼저, 194개교를 졸업유예제가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고, 운영하는 경우 학칙 등 근거 규정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분류한 기준은 대학홈페이지에 공시된 학칙 또는 학사운영 관련 규정에서 졸업유예제 운영의 관련 내용이 전무하고 졸업유예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표 III-6 졸업유예제 운영 여부 및 근거규정 유무

(단위: 개교, %)

제도운영 \ 규정유무	있음		없음 ^{주)}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운 영 함	135	(93.7)	9	(6.3)	144	(74.2)
운영안함	0	(0.0)	50	(100.0)	50	(25.8)
			신학 대학 : 29(58.0) 비신학대학 : 21(42.0)			
합 계					194	(100.0)

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졸업유예 신청 안내문은 있으나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표 III-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4개교 중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144개교로 전체의 74.2%,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50개교로 25.8%로,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의 3/4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영을 하지 않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대학의 특성별로 재분류를 해보면,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의 비율이 29개교로 58.0%이고, 일반대학이 21개교로 42.0%를 구성한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44개 대학 중에는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을 발견하지 못한 9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유예 신청 안내가 있는 것을 근거로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으로 분류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학칙이나 학사운영 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을 갖추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졸업유예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 Ⅲ-7>은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 144개교 중 운영의 근거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135개교만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제 운영의 근거를 어떠한 규정 형태로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135개교 중 109개교(80.7%)가 학칙에 졸업유예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6개교(19.3%)가 학사운영규정 또는 그 외 규정의 형태로 근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7 졸업유예제 운영대학의 근거 규정

구 분 \ 근거규정	학칙		규정		전체
	학칙	시행세칙	학사운영규정	그 외 규정	
빈 도(개교)	91	18	15	11	135 ^{주)}
	109		26		
비 율(%)	(67.4)	(13.3)	(11.1)	(8.2)	(100.0)
	(80.7)		(19.3)		

주)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 144개교 중 근거규정이 없는 9개교 제외

졸업유예제 운영 근거를 갖는 135개교의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학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동시에 졸업유예제를 운영함에 있어 접근하는 방식과 초점에 있어 시각의 차이 또한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별로 졸업유예와 관련된 규정에서 어떠한 용어를 크게 ‘졸업’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재학’에 두는 경우로 나누고 그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재분류·분석하였다.

<표 Ⅲ-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에 초점을 두고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총 144개교 중 136개교(94.4%)로 절대 다수이고, 재학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대학은 7개교(4.9%)로 적은 수로 나타났다.

졸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대학들은 ‘졸업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학이 55개교(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 44개교(30.5%)가 ‘졸업유예’, 33개교(22.9%)가 ‘졸업유보’, 4개교(2.8%)가 ‘졸업연장’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재학에 초점을 둔 경우는 ‘계속수학’의 용어를 사용하는 대학의 수가 4개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의 차이는 대학별 자체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개념과 정의를 공유하고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III-8 졸업유예관련 대학의 규정 용어

구 분	규정용어	졸업 초점				재학 초점				기타	계
		졸업 유예	졸업 연기	졸업 유보	졸업 연장	계속 수학	수업 연한 초과자	재학기간연장	학업 계속자		
빈 도(개교)		44	55	33	4	4	1	1	1	1	144
		136				7					
비 율(%)		(30.5)	(38.2)	(22.9)	(2.8)	(2.8)	(0.7)	(0.7)	(0.7)	(0.7)	(100.0)
		94.4				4.9					

(2) 졸업유예 허용 기간 및 의무수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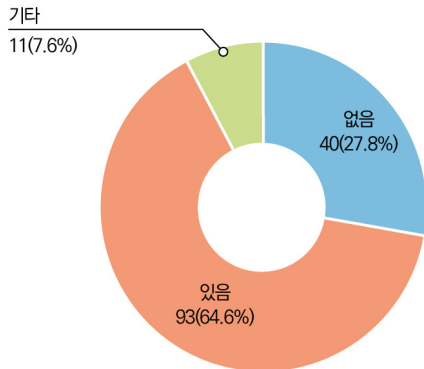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졸업유예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졸업유예 허용기간을 살펴보았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44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68개교(47.2%)가 2회, 즉 두 학기 정도 허용하고 있으며, 22개교(15.3%)가 4학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11개교(7.6%)가 재학연한 내에서 졸업유예를 허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유예가 일부 대학에서 허용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최대 이슈이자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졸업유예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학점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수강제의 실시이며, 그에 따른 비용부과 및 징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목하여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의 학칙이나 관련 규정 등에서 이를 적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III-9 졸업유예제 운영학교의 졸업유예 허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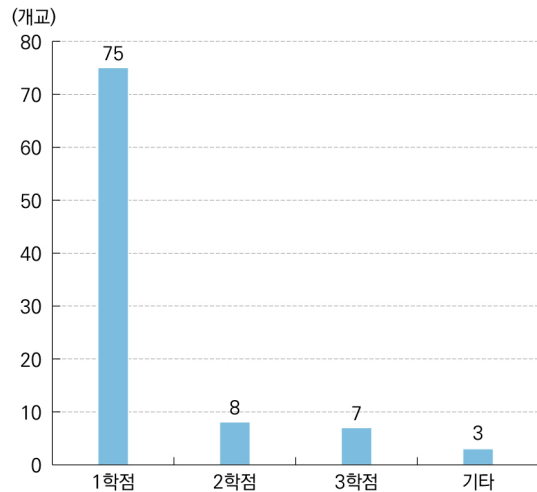
구 분	학 기	1회	2회	3회	4회	재학연한 내	기타	계
빈 도(개교)		2	68	1	22	11	40	144
비 율(%)		(1.4)	(47.2)	(0.7)	(15.3)	(7.6)	(27.8)	(100.0)

[그림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44개교 중 93개교(64.6%)가 의무수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40개교(27.8%)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무적으로 수강·이수해야하는 최소 학점은 1학점 이상이 75개교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2】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의 의무수강제 유무



【그림 Ⅲ-3】

의무수강제 실시 대학의 최소 의무수강 학점

이는 대학들이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에 따른 등록금 부과기준을 졸업학점을 미충족하여 초과 등록해야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다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을 학생들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과하게 부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다른 재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사용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개정안의 재검토를 제안한 국회의 검토 의견(정재룡, 2015.11) 또한 그러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실증적 근거를 보완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무수강제가 졸업유예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고,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서 졸업유예 기간 동안 대학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대학 시설물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표 III-10>과 <표 III-11>은 의무수강제 실시 여부에 따라 대학을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수강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III-10>의 의무수강제를 실시하는 대학 93개교의 경우 대체로 학점별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3개교(57.0%)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기초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등록금으로 부과하거나(8개교), 오히려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9개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0 의무수강제 실시 대학의 등록금 부과기준

등록방법 \ 구분		내용	빈도(개교)	비율(%)
학점별 등록	1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 교육부령)	53	57.0
	2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11학점: 등록금의 2/3, 12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1	1.1
	3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12학점: 등록금의 2/3, 13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1	1.1
	4	1~3학점: 등록금의 6/5, 4~6학점: 등록금의 2/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2	2.2
	5	1번 내용과 같으나 0학점 등록시 일정금액 납부	4	4.3
정액등록		일정금액 납부	1	1.1
등록금대비 일정 비율등록		학점당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로 납부	8	8.6
장학금 지급		일정학점내 장학금 지급 또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	9	9.6
없음		등록금 없음	0	0.0
기타			14	15.0
합 계			93	100.0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만, 의무수강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40개교의 등록금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표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점이수를 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하는 강의에 대한 수강료는 의무수강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40개교 중 10개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학도 7개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1 의무수강제 비실시 대학의 등록금 부과기준

등록방법	구분	내용	빈도(개교)	비율(%)
학점별 등록	1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 교육부령)	10	25.0
	2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11학점: 등록금의 2/3, 12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0	0.0
	3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12학점: 등록금의 2/3, 13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0	0.0
	4	1~3학점: 등록금의 6/5, 4~6학점: 등록금의 2/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0	0.0
	5	1번 내용과 같으나 0학점 등록시 일정금액 납부	8	20.0
정액등록		일정금액 납부	2	5.0
등록금대비 일정 비율등록		학점 당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로 납부	8	20.0
장학금 지급		일정 학점 내 장학금 지급 또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	1	2.5
없음		등록금 없음	7	17.5
기타			4	10.0
합 계			40	100.0

3. 해외 졸업유예 현황 및 정책 사례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학생 졸업유예 현상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서구의 선진국가들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유럽지역 선진국가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을 단축하고자 보조금과 수업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화된 재학기간에 대응하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졸업유예 현상은 중국과 대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최근 들어 주목하기 시작한 단계이고, 대만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계임. 대만교육부는 졸업유예자수를 교육부 통계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013년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들의 졸업유예 상황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취업 내정 취소 사례에 한하여 몇몇 대학에서 일시적 긴급조치로 '취업지원특별등록제도'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으나, 대학생으로 남고 싶거나 졸업예정 신입사원 자격을 얻고 싶다는 사유로는 졸업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음.

1) 중국 및 대만의 졸업유예

(1) 중국의 졸업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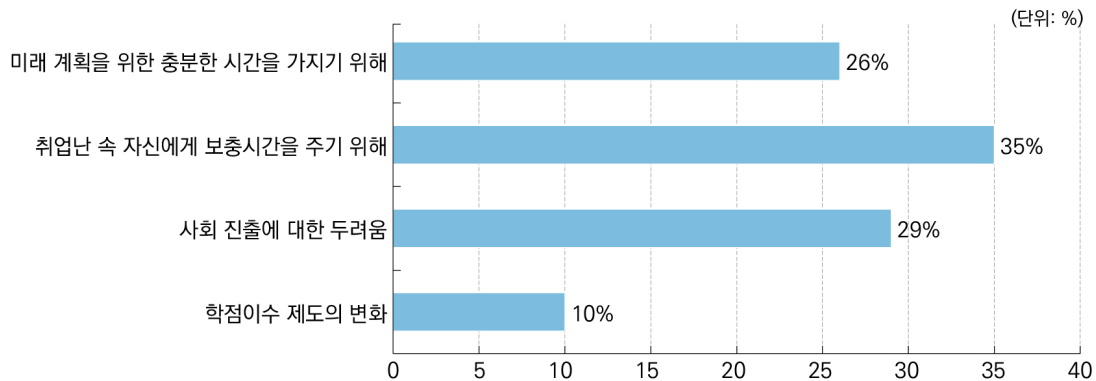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서구 선진국 또는 우리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수집 가능한 해외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졸업유예와 관련한 자료는 매우 드물고 찾아보기 어려우나,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졸업유예와 유사한 현상은 중국과 대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유예와 같은 현상이 포착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졸업유예자 수에 대한 통계를 대만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1년 동안 인턴, 외국어,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중국국제방송, 2016.03.21.), “졸업연기”라는 단어가 인기 검색어가 될 정도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인민대학교(Renmin University of China)의 경우,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 해 신청자가 많은 학과 중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졸업연기를 신청한 사례도 있다(중국국제방송, 2016.03.21.; 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 2016.04.08.).

중국 동북전력대학 54 선샤인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사유는 ‘취업난 속에 있는 자신에게 보충의 시간을 주기 위해’(35.0%),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29.0%), ‘미래 계획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26.0%), ‘학점 이수 제도의 변화’(10.0%) 때문이다(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 2016.04.08.).

이들 사유를 살펴보면, 졸업유예를 통하여 취업난으로 인하여 보다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을 갖고,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소속감 없는 상태로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사유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http://54shine.nedu.edu.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10&id=9718>, 2016.04.08. 검색).

【그림 III-4】 중국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사유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유예를 선택 사유에 따라 자발적인 졸업시기의 연기와 비자발적인 연기로 구분하고 있다. 비자발적인 연기는 주로 성적이 부족하여 재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나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졸업 요건인 논문을 완성 못하거나 제출한 논문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자발적으로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자발적인 연기는 학생들이 창업이나 대학원준비, 더 좋은 직업을 찾는 시간 등을 갖기 위해 졸업 연기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 2016.04.08.).

비자발적인 사유로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 중국에서는 졸업유예가 마치 ‘유급’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나, 자발적인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졸업유예의 선택이 인생의 ‘낙오’나 ‘오점’이 아닌, 일종의 ‘패션’과 같이 유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경로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졸업유예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중국국제방송, 2016.03.21.),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시간과 인생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졸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 2016.04.08.)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증가하는 자발적 졸업유예에 대한 중국사회의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졸업유예가 목적의식 없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등록금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학생의 시간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만을 가중시킨다(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 2016.04.08.)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중국의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졸업유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졸업유예가 하나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의 시급한 규범화가 필요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졸업유예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교육학사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연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인생계획과 직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며, 졸업유예의 결정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고, 졸업유예에 대한 엄격한 신청과 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중국동북전력대학교포털, 2016.04.08.).

이와 같은 중국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미 적지 않은 수의 졸업유예자가 존재하고, 그 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국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대만의 졸업유예

우리나라와 중국이 졸업유예자의 증가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대만은 이미 졸업유예자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졸업유예 학생의 수를 매년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차원에서 졸업유예 현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책, 즉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들의 졸업유예 상황과 대응 전략”을 교육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대만입법원 의안관계문서, 2013.06.19.).

대만 정부가 졸업유예에 대한 대응 정책을 빠르게 수립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난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 남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일부러 낙제 학점을 요구한다거나 대학원 진학으로 물리는 등의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대만自由時報, 2012.08.13a.; 대만自由時報, 2012.08.13b.). 2015년 기준 대만의 대학 졸업유예자수는 45,322명으로 2015년 졸업생수 대비 18.1%로 높은 수준이다(대만교육부통계국 DB, 2016.06.30.인출).

대만의 대학생들이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 Li-Min Lin(2009)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졸업유예 증가 현상의 원인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늦은 연령에 군에 입대할수록 복무기간이 짧은 대만의 병역제도의 특성 상 대학생들이 입대를 미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졸업유예를 선택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① 취업난으로 인한 취업 실패와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 ②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학력 스펙(대학원 진학,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쌓는 시간 확보, ③ 재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수혜기간의 연장, ④ 졸업유예 풍조의 형성의 영향과 같은 원인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증가 원인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와 차이가 없다.

표 III-12 대만 일반대학의 최근 5년간 졸업유예자수(2011년~2015년)

(단위: 명, %)

년 도	졸업생 합계	졸업유예자 수	졸업유예자 비율
2011	102,133	20,424	16.7%
2012	101,443	20,441	16.8%
2013	98,956	20,290	17.0%
2014	100,576	20,227	16.7%
2015	100,097	22,120	18.1%

자료: 대만교육부통계국 DB자료(<http://depart.moe.edu.tw/ED4500/Default.aspx>, 2016.06.30. 인출)에서 일반대학만 선별(특수대, 전문대 제외)하여 산출.

졸업유예 증가에 대한 대만 정부의 대응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2013년 대만 교육부는 졸업유예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이 학생들의 비학습적 졸업시기 연기의 사유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남은 학기에 최대 학점을 수강할지라도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3학년 때 미리 통보와 경고를 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하며, 비합리적인 학과 설립으로 인한 학생의 졸업유예는 대학이 책임을 지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더불어 국립대학교 평가지표에 ‘학생 졸업유예’를 반영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대만自由時報, 2013.06.01.).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대만 교육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즉 ① 학생들의 학습효과 및 학습의 질 향상, ② 자원배분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③ 대학원 입학시험의 개혁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효과 및 학습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세부 정책으로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개선을 유도하며, 각 대학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결과 및 이행 수준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졸업유예자의 범위를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로 정의하는 대만의 경우, 우수 명문대학에서 졸업학점 미달의 사유로 재학기간이 연장되고 졸업시기를 미루는 비율(70.4%)이 다른 사유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대만입법원 의안관계문서, 2013.06.19.)¹³⁾, 대만 교육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효과와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자원배분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한 세부 정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국립대학 평가지표에 “졸업유예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학의 조치 및 성과”를 포함시키고, 사립대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제외하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학잡비(學雜費)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⁴⁾. 세 번째, ‘대학원 입학시험의 개혁’은 고학력에 대한 선호와 취업경쟁 회피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대학원 입학 전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만입법원 의안관계문서, 2013.06.19.).

교육부의 정책에 이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책도 크게 세 가지, 즉 ① 교수-학습시스템의 강화, ② 학사관리시스템의 개선, ③ 학내 자원배분의 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교수-학습시스

13) 대만 전국 대학의 58.1%(43개교)를 차지하는 우수대학(명문대학)·교육장려 우수학교의 졸업유예 사유별 비중: ①졸업학점 미달(70.4%), ②복수전공, 이중전공, 자율전공 등에 따른 학점 미달(9.1%: 국립대학 14.25%), ③해외교환학생(1.6%), ④외국어/자격증 검정 또는 졸업관련 기준 미통과(2.4%), ⑤시험 준비, 경제적 요인, 커리어계획(16.4%: 사립대학의 경우 22.06%)(대만입법원 의안관계문서, 2013.06.19., p.85(표2))

14) 학잡비(學雜費): 수강료 및 그 외 비용을 포함. 우리나라의 등록금과 같음.

템의 강화'에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경기·시합, 전시회 등 실습으로 인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점 부족 시 미리 학생들에게 경로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환학생을 위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계절학기의 개설, 편입·전과·교포 학생 지도 강화, 멘토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학사관리시스템의 개선'에는 수강신청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졸업예심 제도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의 공개 및 투명화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세 번째 '자원배분의 조정'으로는 자발적인 졸업유예를 줄이기 위하여 졸업유예 학생에게 학잡비(學雜費)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유예 상태에서 교환학생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대만입법원 의안관계문서, 2013.06.19.).

대학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취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대만이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의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대학들이 비용을 부과하는 절차로 시행됨과 동시에 다른 학사관리 및 지원 정책들도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졸업유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비용부터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만에서는 대학들이 졸업유예 학생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명확한 목적과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가령, 대만 국립중앙대학교(National Central University)의 “2015년도 학부 졸업유예생 학잡비 수취(收取)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졸업유예생에게 학잡비를 받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대만 교육부의 졸업유예 대응 정책, 즉 졸업유예생 대상 학잡비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졸업유예생 신분으로 출국하는 학생들에게 부과 징수, 2014년부터 국립대학평가지표에 '학생졸업유예률'을 포함 등의 내용에 따른다는 이유이다. 두 번째는 대학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인 미래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목적 없이 쉽게 졸업연기가 가능하다면 취업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제때 졸업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이다. 세 번째는 학교의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졸업유예 학생 수는 제외하며, 학잡비의 용도는 교육관련 비용, 즉 행정, 시설, 장학금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증가하는 졸업유예생의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원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대만 국립중앙대학교, 2015).

표 III-13 대만의 대학 졸업유예 학잡비(등록금) 부과 기준: 공대 졸업유예생 예시

교육부 졸업유예 대책	10학점 이상 신청자	9학점 이하 신청자
시행 전 (2013년)	17,490(학비)+11,170(잡비) = NT\$ 28,660	1,100(학점비)*9 = NT\$ 9,990
시행 후 (2015년)	17,490(학비)+11,170(잡비) = NT\$ 28,660	1,100(학점비)*9+11,170(잡비)*9/10 = NT\$20,043

자료: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2015년 학부 졸업유예생 학잡비 수취 설명회” 예시 자료에서 발췌·재구성
(<http://pdc.adm.ncu.edu.tw/postM/post/reg1030505.pdf>, 2016.08.10., 검색 및 인출).

대만 교육부의 졸업유예 대책에 따라 각 대학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부과하는 비용은 졸업유예 대책 이전에 비해 증액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학점을 기준으로 부담 내용이 달라지는데, 졸업유예 신청 학기에 10학점 이상 수강할 경우 그 이전과 같이 학비 전액과 그 외 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더 증액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학점 이하의 학점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신청 학점에 대한 수강료만 부과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에는 신청학점 수강료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등록 시 부과되는 잡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졸업유예 현상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원인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비단 대만과 우리나라의 유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만정부가 졸업유예 현상에 대해 어떻게 관찰해 왔고,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 개입을 하였는가에 있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학들이 어떠한 근거와 체계성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가에 있다.

2) 일본의 졸업유예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중국 및 대만의 경우와 같이, 취업난으로 대학졸업의 시기를 연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국가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학들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한해 몇몇 대학에서 “취업지원특별제적(등록)제도(就職支援特別在籍制度)” 또는 “졸업연기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일본인사부, 2010.08.02.; 아사히신문, 2010.03.31.; 강영배, 2016.04.27.). 다시 말해, 일본의 졸업유예제도는 영구적인 제도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재학 중 이미 취업 내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이며, “일시적 특례조치”로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여 운영한 것이다. 아사히신문과 카와이학원(朝日新聞・河合塾)이 공동으로 일본의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ひらく日本の大学』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13개 대학의 13%인 86개교가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도입비율(17%)이 높다(아사히신문・카와이학원, 2012; 아사히신문, 2016.08.10.검색).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나 중국 및 대만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취업 내정 취소 등 본인의 책임 사유가 아닌 이유로 취직할 수 없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1년 한도로 재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사히신문・카와이학원, 2012, p.6).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 대학의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일본 『학교기본법(學校基本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수업연한, 즉 입학 이후 8년 기간 내에 『대학설치기준(大學設置基準)』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기업 측의 책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학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또한 1년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일본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2016.08.11. 검색; 일본 중앙대학(中央大學)홈페이지, 2016.08.11. 검색).

“졸업연기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각 대학에서는 심사를 통해 졸업연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학생으로 남고 싶다’거나, ‘취업 시 신입사원 자격을 얻고 싶다’ 등 단순한 유예(moratorium) 사유로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사 과정을 거쳐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추가적인 학점 이수할 수 없으나, 취업을 위한 면접지도나 논문지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학점이수를 할 수 없어 신청학점이 “0”학점이기 때문에 8학점 이하 등록 시 수업료의 1/2 감면을 적용받아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강영배, 2016.04.27.; 일본 중앙대학(中央大學)홈페이지, 2016.08.11. 검색).

한편, 일본의 대학들이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신규대졸자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이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인력채용방식 때문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정기채용”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일괄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재학 중에 채용시험 또는 면접 전형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내정한다. 대략 내정되는 시기는 4학년 봄에서 여름 정도이기 때문에 내정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처가 확정된 상태에서 남은 졸업학점과 요건을 채운 후 기다렸다가 졸업과 동시에 내정된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

하게 된다(일본 아사히신문, 2010.03.31.; 강영배, 2016.04.27.; 일본인사부 신졸채용(新卒採用) 홈페이지, 2016.08.11. 검색).

이러한 채용 관행으로 인하여 졸업 후 채용 전형을 거쳐 입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학생들은 3학년 6월경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업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채용전형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자 점점 빠른 시기에 신규인력을 내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적 우수인재의 내정이 학생들의 구직활동 시기를 조기화하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기 졸업자에 대한 취업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강영배, 2016.04.27.; 일본인사부 신졸채용(新卒採用) 홈페이지, 2016.08.11. 검색).

이와 더불어 최근 일각에서는 “신규대졸자일괄채용제도”가 구식이며,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호하여 기졸업자에게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것과 재학 중 조기 취업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 경기 불황과 같은 경기부침에 따라 채용 환경이 좌우되는 부담을 학생들이 짊어지는 왜곡된 상황 등 신규대졸자일괄채용제도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일본인사부 신졸채용(新卒採用) 홈페이지, 2016.08.11. 검색).



출처: 일본 아사히신문(2010.03.31., <http://www.asahi.com/edu/university/shushoku/TKY201003310319.html>).
 자료: 강영배(2016.04.27.). 일본의 대학졸업연기(유예)제도, 콜로키움(II) 발표 자료.

【그림 III-5】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 활동 일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졸업유예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갑작스런 고용 위축뿐만 아니라, 일본 특유의 채용 관행이 결합되어 나타난 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만정부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방안을 수립하고 개입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차원에서 파악한 바도 없으며, 문부과학성에서도 공식적으로 졸업유예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10년 일본의 공명당(公明党)은 기업의 “신규졸업자 지상주의” 채용 경향이 기 졸업자나 통신교육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닫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규졸업자의 범주를 “졸업 후 3년까지”로 완화하여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제도화로 이끌지는 못한 상태이다(일본 공명신문(公明新聞), 2010.08.13.).

3) 유럽 복지국가 및 미국의 졸업 지연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은 이미 일부 유럽 복지국가에서 만연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는 30세 이상 졸업생이 전체 졸업생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men·Francesco, 2012.04, p.4). 그러나 유럽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졸업연기 현상은 학생들이 돈을 벌거나 여행을 위해서 또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한 이유로 학업 중간에 빈번하게 휴학을 하는데 따른 결과이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학생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것과는 근본 원인이 다르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졸업시기 지연을 우리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졸업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취한 정책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졸업유예 현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때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대학 졸업시기 지연, 즉 대학 재학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재학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에서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는 독일의 경우 영국의 정책을 도입하여 졸업에 소요되는 총 학기 수를 줄이고자 기존의 4년 학사과정을 6학기 3년 제도로 바꾸는 정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까지 평균 4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The Local de, 2014.07.28.).

독일에 더하여 덴마크의 경우, 무료 학비 이외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일정금액의 보조금(월 약 \$1,000)을 지급한다.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만큼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게 되어 졸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학생들의 졸업이 지연될수록 정부의 지원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인력 공급이 적어 세수 감소 등 이중적으로 국가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일명 “제때 졸업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했던 보조금을 삭감하고 졸업에 소요되는 총 연수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으나, 그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학생들의 계속 학습을 저해하며, 정부가 학습의 질이 아닌 경제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The Atlantic, 2015.06.11.).

한편 대학 졸업에 값비싼 학비를 지불해야하는 미국의 경우, 유럽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대학의 학사운영제도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졸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학 졸업학점은 120학점인데, 한 학기에 통상 12학점을 수강하고, 매 12학점을 수강할 때 8학기 동안 96학점 밖에 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5년 과정으로 초과 수강 한 뒤 졸업을 하게 된다. 또 대부분의 재정 지원도 한 학기에 최대 12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미국의 대학생들은 다른 선택사항이 없이 졸업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다(The Atlantic, 2016.02.17.). 초과 학기로 인한 재학기간 연장의 문제보다 더욱 큰 것은 초과 학기에 따른 비싼 학비의 부담이나,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한 자료도 찾지를 못하였다.

제 IV 장

졸업유예제 규모 추정 및 영향요인: 2차 자료 분석

1.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2.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에의 영향
3. 대학별 졸업유예자 규모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제 IV 장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및 영향요인 : 2차 자료 분석*

1. 졸업유예자 규모 추정**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4개년 결합자료(Pooled Data)를 사용하여 수업연한 초과등록자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가장 적게는 2만7천여명, 가장 많게는 7만6천여명(당해 연도 졸업자의 9.8%~27.1%) 정도이며,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 4학년 시기에 휴학경험이 있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4만8천여명~10만4천여명(당해년도 졸업자의 17.3%~36.9%)에 이릅니다.
- 실제 대졸자의 졸업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을 졸업유예 결정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에서의 실업률과 졸업유예자 규모의 시계열변화를 살펴보면, 실업률의 등락과 졸업유예자 규모의 등락이 동일한 패턴을 보임.

1) 자료 및 추정 방법

지금까지 국회 및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졸업유예자의 규모에 대한 실태 파악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Ⅱ장에서 제시했듯이 졸업유예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을 토대로 졸업유예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척도의 조작적 정의가 타당하게 개념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절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가 분석·집필하였음.

** 1.의 일부 내용은 「2016년 고용패널학술대회(2016.05.27.)」에서 “졸업유예의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제공하고 있는 2010-2013년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GOMS2010- GOMS2013)이다. 이 자료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의 신규 졸업자 3~4%를 매년 추적하여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을 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 Survey)로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연구사업비로 수행되며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32704)이다(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2016.05.23. 검색).

이 자료의 각 연도 조사대상은 전년도 8월 졸업자까지 포함하므로,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2009년 8월 졸업자부터 2013년 2월 졸업자가 분석대상이 된다. 조사의 모집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에서 학교별로 30%씩 확률추출된 약 1만 8천 명 정도의 표본인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의 현상이 주로 4년제 일반대학과 관련한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 졸업자, 교육대학 졸업자, 그리고 35세 이상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4개년 결합자료(Pooled Data)의 형태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관측치는 45,989개이고, 이에 대해서는 <표 IV-2>의 기술통계량에 제시하였다.

제Ⅱ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의 규모는 졸업학점 이수여부, 졸업 요건 충족여부, 그리고 초과등록 및 휴학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졸업유예자의 개념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정의하여 이에 따라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GOMS 자료는 졸업유예자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을 조사항목에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선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좁은 또는 넓은 개념 및 범주(「그림 Ⅱ-2」 졸업유예자 개념 및 범주' 참조)에 기초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좁은 또는 넓은 개념 및 범주에 기초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추정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 즉 조작적 정의의 설정 방식에 따라 졸업유예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실제 측정 과정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 규모 추정 결과

졸업유예자의 규모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졸업유예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보다 상위 수준에서 졸업유예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앞서 제Ⅱ장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의 정의는 개념적 수준에서의 정의, 대학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정의, 그리고 기존의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범주를 따르는 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가용할 수 있는 GOMS 자료에서는 졸업유예의 정의와 관련하여 초과등록 여부, 4학년 휴학여부, 휴학 사유 등의 몇 가지 제한적인 정보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적 수준의 정의 및 행정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의를 할 수 밖에 없다¹⁵⁾.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여기에서 분석하는 졸업유예는 선행연구들(양정승, 2015; 이재성, 2015)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GOMS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8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를 졸업유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양정승(2015)의 연구에서는 4학년 1학기 이후 휴학자 중 휴학사유가 ‘취업준비’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졸업유예자에 포함하였고, 복수전공자의 경우 총 이수학기가 10학기를 초과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분류하였다. 반면 이재성(2015)의 연구에서는 8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를 넓은 의미의 졸업유예로 사용하는 한편, 이중에서 휴학사유가 자격증 및 고시준비, 대학원 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하였다. 즉, 양정승(2015)의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의 범주가 ‘초과등록자 $\cup$ 취업준비 목적의 4학년 휴학자’이고, 이재성(2015)의 연구에서는 ‘초과등록자 $\cap$ 취업 등 목적의 4학년 휴학자’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가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과 연결된 경우 반드시 취업목적의 휴학으로 응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학년 휴학자의 휴학사유를 이재성(2015)의 연구를 참조하되,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수전공자의 경우 각 전공별로 이수학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준점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10학기 이상자로 특정하기 보다는 분석표본에서 포함하는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초과등록과 4년 휴학자(자격증 및 고시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의 조합은 <표 IV-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15) 추후 공개된 GOMS2014 자료에는 졸업유예 등록 여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졸업 유예의 측정이 가능할 것임.

표 IV-1 각 연도별 졸업유예자 규모

(a) 복수전공 포함

(단위: 명, %)

	초과 등록	4년 휴학	GOMS 2010		GOMS 2011		GOMS 2012		GOMS 2013	
			명	(%)	명	(%)	명	(%)	명	(%)
A	○	○	8,315	(3.3)	10,176	(3.9)	14,421	(5.1)	5,889	(2.1)
B	○	×	35,124	(14.0)	41,399	(15.9)	61,634	(22.0)	31,836	(11.6)
C	×	○	30,417	(12.2)	33,822	(13.0)	27,496	(9.8)	25,735	(9.4)
D	×	×	176,210	(70.5)	174,999	(67.2)	176,960	(63.1)	210,605	(76.8)
정의 1 : A+B			43,439	(17.4)	51,575	(19.8)	76,055	(27.1)	37,725	(13.8)
정의 2 : A+B+C			73,856	(29.5)	85,397	(32.8)	103,551	(36.9)	63,460	(23.2)
합계			250,066	(100.0)	260,396	(100.0)	280,511	(100.0)	274,065	(100.0)

(b) 복수전공 제외

(단위: 명, %)

	초과 등록	4년 휴학	GOMS 2010		GOMS 2011		GOMS 2012		GOMS 2013	
			명	(%)	명	(%)	명	(%)	명	(%)
A	○	○	5,542	(2.2)	6,761	(2.6)	10,493	(3.7)	4,082	(1.5)
B	○	×	23,140	(9.3)	27,177	(10.4)	46,934	(16.7)	22,778	(8.3)
C	×	○	23,659	(9.5)	26,577	(10.2)	21,911	(7.8)	20,656	(7.5)
D	×	×	197,725	(79.1)	199,881	(76.8)	201,173	(71.7)	226,549	(82.7)
정의 1 : A+B			28,682	(11.5)	33,938	(13.0)	57,427	(20.5)	26,860	(9.8)
정의 2 : A+B+C			52,341	(20.9)	60,515	(23.2)	79,338	(28.3)	47,516	(17.3)
합계			250,066	(100.0)	260,396	(100.0)	280,511	(100.0)	274,065	(100.0)

주: 각 연도 가중치 사용,

A =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 중 4학년 1학기 이후 휴학사유가 취업준비인 경우

B =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 전체

C = 초과등록은 하지 않고 4학년 1학기 이후 휴학사유가 취업준비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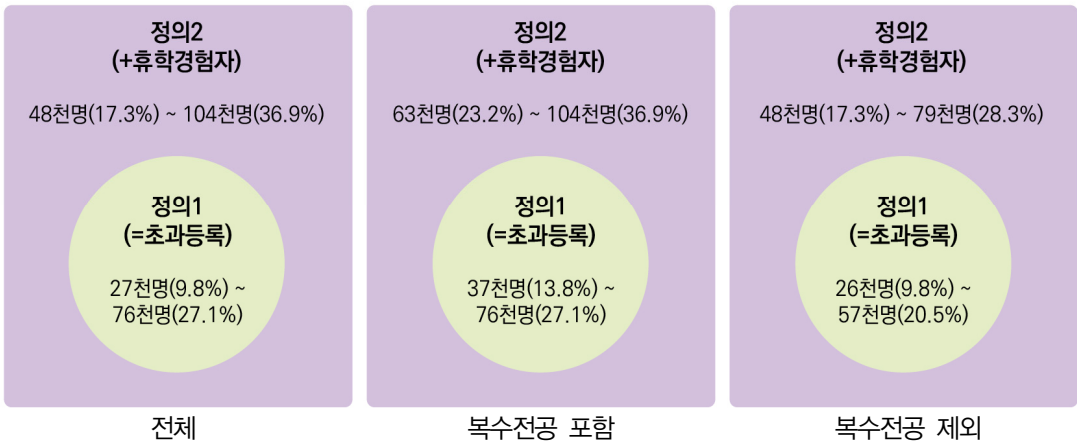
D = 초과등록도 하지 않고, 4학년 1학기 이후 휴학도 하지 않은 경우

정의1(A+B) =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에 4학년 1학기 이후 취업준비의 사유로 휴학한자를 합한 경우

정의2(A+B+C) =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에 4학년 1학기 이후 취업준비사유와 자격증 및 고시준비의 사유로 휴학한 자를 합한 경우

이재성(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초과등록자와 취업 등 목적의 4학년 휴학자의 교집합, 즉 <표 IV-1>의 'A' 집단으로 졸업유예의 범위를 최소화할 경우, 각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연도별 졸업유예자의 비중은 2.1%(2013년)~5.1%(2012년)사이에 분포한다. 그러나 이 숫자가 이상적 개념의 졸업유예자 규모의 최소추정치를 잘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사용된 척도의 제약이 너무나 뚜렷하다. 두 연구 모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를 졸업유예로 정의하는 것은 공통분모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정의 1'(표 IV-1의 A+B)로 사용한다. 그리고 초과등록 외에 4년 휴학자(자격증 및 고시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를 포함한 경우를 '정의 2'(표 IV-1의 A+B+C)로 사용한다. 다만 4년 휴학자의 휴학사유를 굳이 취업목적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휴학사유가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대학원 준비', '경제적 이유'등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스펙쌓기 혹은 학자금 상환 부담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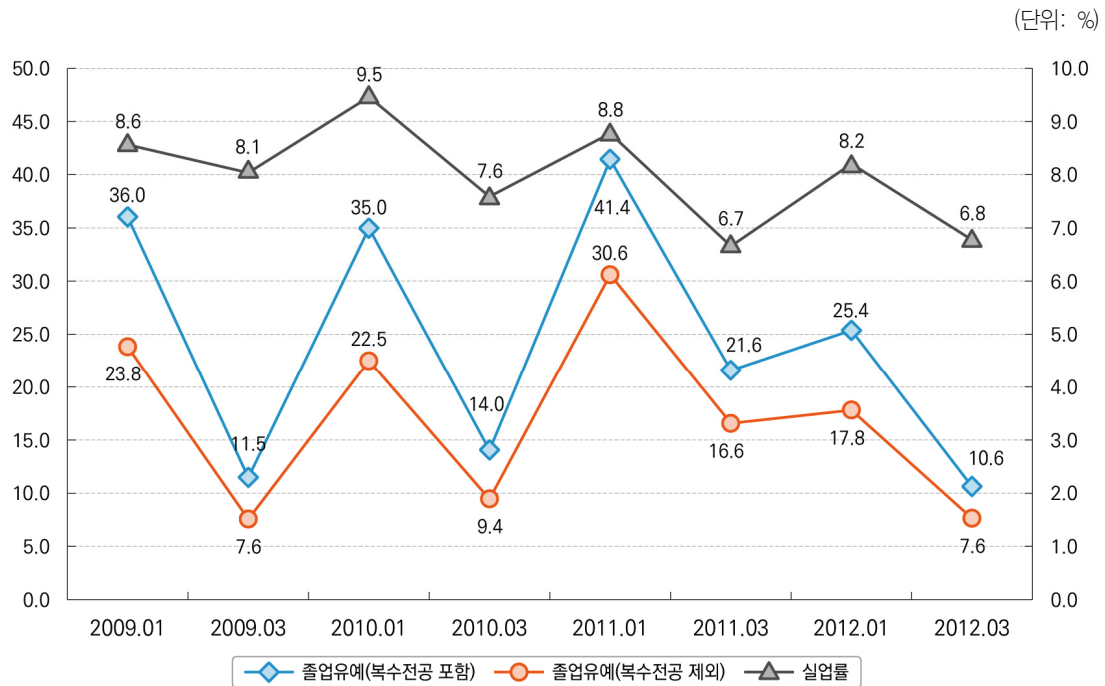
<표 IV-1>의 분석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함의는 복수전공 여부를 고려했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졸업유예자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복수전공자를 일괄적으로 졸업유예자에서 제외할 경우, 각 연도별로 15천~20천명 정도 졸업유예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복수전공자를 일괄적으로 제외할 경우 오히려 과소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분석에서는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분석결과를 모두 제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그림 IV-1] GOMS에서 파악된 졸업유예자의 규모

[그림 IV-1]은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했을 때의 졸업유예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요약한 것이다. 정의 1을 적용했을 때의 졸업유예자 규모는 9.8%(2013년 복수전공자 제외, 27천명)~27.1%(2012년 복수전공자 포함, 76천명) 정도이며, 정의 2를 적용했을 때의 규모는 17.3%(2013년 복수전공자 제외, 48천명)~36.9%(2012년 복수전공자 포함, 104천명) 정도에 위치한다. 이러한 규모는 국정감사에서 파악된 2만 5천명 ~ 12만명 규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치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림 IV-2]과 같이 각 연도 졸업자의 실제 졸업년월(각 연도 1분기와 3분기) 6개월 이전의 실업률, 즉 졸업유예 결정 시점에서의 실업률과 함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IV-2】 졸업유예율과 청년실업률 시계열 변화의 관련성

[그림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수전공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졸업유예 결정 시점에서의 실업률 등락 그 자체는 졸업유예가 현저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가을학기 졸업자예정자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기보다는 실업률이 높은 2월 졸업자예정자들의 졸업유예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것이 추세적인 실업률 변동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경우 2010년 1분기 실업률이 9.5%에서 2011년 1분기에 8.8%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010년 1분기 졸업유예율은 35%에서 2011년 1분기 졸업유예율은 41.4%로 증가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학이 졸업유예를 제도화하면서 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 자료만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실증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졸업유예를 외부 고용상황의 악화와 같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학교 제도의 변화,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에의 영향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규모추정과 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여, 4년제 대졸자들의 졸업유예 경험의 결정요인을 프로빗모형(Probit Model)로 분석한 결과, 다른 특성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대학선택과정에서의 자신의 의지 및 취업목표만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밝혀짐.
- 졸업유예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모형(Probi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명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으나, 헤크만의 선택편의교정모형(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월소득 수준에는 뚜렷한 취업목표와 졸업유예 유경험자들에 비해 다른 이들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졸업유예의 선택은 노동시장 진입 후 근로소득에 있어 낮은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1) 분석 변수 및 모형

(1) 분석모형

졸업유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개인 및 가족배경, 대학 및 전공, 거시경제적 요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가족배경은 다시 개인의 인적특성 및 가족배경,

심리적 요인, 그리고 스펙쌓기 혹은 취업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대학 및 전공 특성은 대학서열을 포함하는 전공계열 및 지역적 특성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 혹은 경기효과의 요인 역시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식 1)과 같다. (식 1)에서 졸업유예 여부가 D와 같은 더미변수(졸업유예자 = 1, 비졸업유예자 = 0)로 정의될 때,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X는 각 요소들을 구성하는 k개의 세부 변인들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은 형태의 모형은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 1) \quad D = X_k \gamma_k + e, \quad \text{단, } X_k = X_1 \gamma_1 + X_2 \gamma_2 + \dots + X_n \gamma_n$$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도 이들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졸업유예의 경험이 졸업 후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해서는 (식 1)과 같이 졸업 후 조사시점 당시에서의 취업 여부(취업 = 1, 미취업은 = 0)에 대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임금모형의 경우 졸업유예 여부에 따라 취업확률에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식 2-1) 및 (식 2-2)와 같이 월소득(y)에 미치는 영향은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 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다¹⁶⁾.

$$(식\ 2-1) \quad Z_i^* = w_i \alpha + u_i, \quad Z_i = 1 \text{ if } Z_i^* > 0, \quad Z_i = 0 \text{ if } Z_i^* \leq 0$$

$$(식\ 2-2) \quad y_i = D_i \beta + Z_i \delta + X_i \gamma + e_i$$

(2) 변수의 구성

졸업유예의 결정 및 졸업유예의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변수를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6) 분석 모형식은 Heckman,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의 문헌을 참고하여 수정 사용하였음.

첫째 범주로는 대학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대학의 특성으로는 대학설립주체를 기준으로 한 국공립 여부,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 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소재지는 다양한 층위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초광역권 6개 범주(경인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 수도권 여부, 서울 여부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공계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교육통계에서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공학계, 예체능계, 의약계열 등으로 구분되는데, 다른 변수들과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인문계 여부만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수직적·수평적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의 서열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양정승, 2014)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 일간지에서 평가·발표한 ‘2015년 대학평가 종합점수’ 상위 30개 대학¹⁷⁾을 구분하고, 상위 30개 대학 내에서 상위대학과 차상위 대학 간의 졸업 유예를 둘러싼 행태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위 10위, 20위, 30위 각각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둘째 범주로는 졸업유예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거나 졸업유예 결정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의 재학 중 경험 또는 성과와 관련된 변수들이다. 여기에는 획득한 졸업학점을 비롯하여 일명 스펙 쌓기로 분류되는 다양한 활동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포함하며,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어학연수, 어학시험, 편입, 복수/부전공 등 주로 전공 및 비전공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인턴 경험 등은 직접적인 일자리 경험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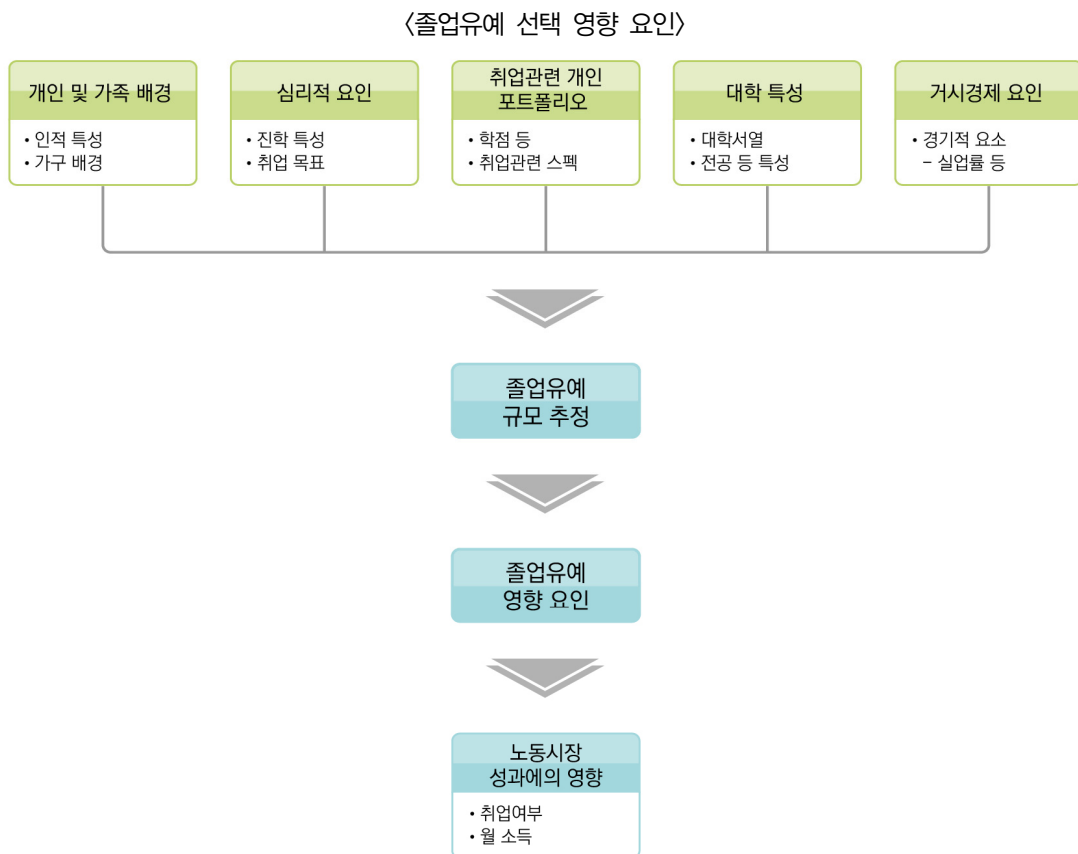
스펙 쌓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과 같은 경제적 여건 또한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만일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한 이들이 조기 취업을 통해 가급적 빨리 상환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면, 졸업유예와 학자금 대출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이 여의치 않아 취업 자체가 어렵거나, 취업을 했을지라도 학자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졸업유예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한편, 고시 또는 공시생인 경우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변수에 포함시켰다.

셋째 범주로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앞서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졸업 후 직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17) 중앙일보 2015년 대학종합평가 사이트(<http://univ.joongang.co.kr/university/totalRankingReport.asp>; 2015.04.18. 검색)

심리·정서적 기제 또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자료인 GOMS자료에는 신규 대졸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측정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학 선택 및 취업목표 설정 등과 관련된 문항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내용을 간접지표로 구성하였다.

예컨대 대학 선택의 이유가 성적이나 주변의 지인의 권유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뚜렷한 주관에서 비롯된 경우 대학 생활 역시도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대학선택 이유 중 '2.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뚜렷한 자기의식에 대리지표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다고 응답(j1 문항)한 경우 역시 취업현실에 대한 자기의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3】 졸업유예 경험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의 흐름도

한편 양정승(2014)의 연구에서는 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 상황(2008-2012년)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외부 경기효과가 다른 시점에서도 일관된 영향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률 및 실업률의 자료를 본 연구의 GOMS 자료에 추가·결합하여 분석하였다. 한 가지, 선행연구에서는 졸업유예 결정 직전 시점의 전국 고용률 및 실업률 변수를 결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졸업시점 이전 6개월 경 전체 및 청년층(15-29세) 각각에 대해 16개 광역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를 각각 결합함으로써, 외부 경기충격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일관된 통계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학력(부모 중 한분이 전문대학 이상인 더미)과 부모님의 현재소득(1.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미만, 2. 100-300만원미만, 3. 300-500만원 미만, 4. 500만원 이상)과 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개인의 성, 연령, 혼인여부 등과 같은 인적 특성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변수 구성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GOMS 자료를 사용하여 졸업유예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할 시, 시점 차이에 따른 편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양정승, 2014)의 지적¹⁸⁾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표본의 포함 및 제외를 하는 방식을 통해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개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여부와 부호의 방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IV-2>에 제시하였다.

18) 졸업유예로 인해 원래보다 6개월의 졸업연기기가 발생하므로 GOMS2010 표본 중 2009년 8월 졸업유예자와 GOMS2013 표본 중 2013년 2월 비졸업유예자 표본은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임. 본 연구에서 비교집단 설정에서 발생하는 편의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2013년 2월 비졸업유예자와 2009년 8월 졸업유예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표본감소와 비교집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수값의 부호의 변화와 통계적 유의성에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표 IV-3-2>의 모형7 결과 참조.

표 IV-2 졸업유에 영향 요인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설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학 특성	국공립대 여부	45,989	0.259	0.438	0	1
	기준=서울	기준=서울	기준=서울			
	경인권	45,989	0.153	0.360	0	1
	충청권	45,989	0.171	0.376	0	1
	호남권	45,989	0.100	0.300	0	1
	대경권	45,989	0.112	0.315	0	1
	동남권	45,989	0.128	0.334	0	1
	기타	45,989	0.059	0.236	0	1
	서울더미	45,989	0.277	0.447	0	1
	인문계더미	45,989	0.140	0.347	0	1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45,989	0.145	0.352	0	1
	20위권 이내	45,989	0.157	0.363	0	1
	30위권 이내	45,989	0.107	0.309	0	1
개인 포트폴 리오	편입더미	45,989	0.062	0.242	0	1
	해외연수	45,989	0.212	0.409	0	1
	영어시험점수	45,989	0.476	0.499	0	1
	복수/연계전공	45,989	0.218	0.413	0	1
	졸업평점(100점환산)	45,381	81.597	8.772	0	100
	훈련여부	45,989	0.154	0.361	0	1
	자격증소지	45,989	0.624	0.484	0	1
	고시/공시준비	45,989	0.207	0.405	0	1
	정부취업프로그램참여	45,989	0.184	0.387	0	1
심리 요인	대학선택주관	45,989	0.392	0.488	0	1
	재학중취업목표	45,989	0.535	0.499	0	1
경기 요인	전체고용률	45,989	58.9	2.558	50.5	67
	전체실업률	45,989	3.5	1.108	1.3	6.1
	청년고용률	45,989	40.3	3.989	28.1	46.2
	청년실업률	45,989	7.6	1.485	3.5	11.6
가족 배경	부모중1명 대학이상	45,989	0.443	0.497	0.000	1
	기준 = 100만원미만					
	100-300만원 미만	45,989	0.310	0.462	0.000	1
	300-500만원 미만	45,989	0.374	0.484	0.000	1
	500만원 이상	45,989	0.210	0.408	0.000	1
인적 특성	여성	45,989	0.443	0.497	0	1
	미혼더미	45,989	0.948	0.221	0	1
	연령	45,989	26.841	1.971	15.75	34
시간 더미	기준=2010년					
	2011년	45,989	0.254	0.435	0	1
	2012년	45,989	0.250	0.433	0	1
	2013년 더미	45,989	0.249	0.433	0	1

주: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원자료의 사례수 및 통계량임.

2) 졸업유예 경험의 결정요인

<표 IV-3-1>부터 <표 IV-3-3>까지의 결과들은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표에서 (a)는 분석표본에서 복수전공을 포함한 결과이고, (b)는 복수전공을 제외한 결과이다. 개별 계수의 크기 자체는 표본의 변동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 더미변수의 경우 순위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의 결과는 복수전공을 포함한 각 표의 (a)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이다.

우선 모형1 - 모형5는 설명변수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모형1은 개인특성+대학특성+가족배경 변수+연도더미를 투입한 것으로, <표 IV-3-1>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개인특성, 대학특성, 가족배경 변수들을 각각 별도로 투입하더라도 유의미한 계수값의 변화 혹은 통계적 유의성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2는 지역별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이며, 모형 3과 4는 취업과 관련된 스펙 혹은 재학 중 경험들 중에서 대학생활과 관련된 요인들과 직접적인 취업준비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리하여 투입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5(표 IV-3-2의 좌측 첫번째 열)는 심리적 요인인 대학선택에서의 자기의지와 취업목표를 재학중에 설정여부를 추가한 결과이다.

인적특성 변수의 경우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기준더미인 서울의 졸업유예가 확연하게 높음이 확인되었다. 모형 1에서 졸업유예 선택가능성은 광역권 기준으로 모든 변수가 유의했으나 지역별 실업률이나 고용률 변수를 투입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 및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표 IV-3-1>에서는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만 투입하였으나,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을 투입하더라도 역시 0.01% 유의수준에서 동일한 방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실업률을 제외하고 고용률만을 투입할 경우에도 역시 음(-)의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다만 실업률과 고용률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여기에서는 실업률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356**	(17.000)	0.336**	(16.097)	0.387**	(17.304)	0.397**	(17.663)
	미혼 더미	0.152**	(4.207)	0.156**	(4.334)	0.114**	(3.132)	0.115**	(3.153)
	연령	0.207**	(37.156)	0.198**	(35.581)	0.218**	(34.890)	0.220**	(34.902)
대학 특성	국공립대학	0.177**	(8.813)	0.181**	(9.007)	0.206**	(9.980)	0.212**	(10.260)
	기준=서울								
	경인권	-0.231**	(-9.450)	-0.166**	(-6.484)	-0.158**	(-6.231)	-0.161**	(-6.326)
	충청권	-0.352**	(-13.174)	-0.257**	(-7.332)	-0.187**	(-6.615)	-0.186**	(-6.545)
	호남권	-0.464**	(-13.488)	-0.385**	(-6.168)	-0.297**	(-8.180)	-0.289**	(-7.946)
	대경권	-0.107**	(-3.745)	-0.074+	(-1.845)	-0.048	(-1.619)	-0.047	(-1.578)
	동남권	-0.258**	(-8.975)	-0.262**	(-5.437)	-0.213**	(-7.200)	-0.211**	(-7.126)
	기타	-0.336**	(-8.600)	-0.145**	(-2.766)	-0.084*	(-1.968)	-0.079+	(-1.852)
	인문계열	0.109**	(5.085)	0.105**	(4.919)	-0.001	(-0.030)	0.008	(0.356)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498**	(20.958)	0.497**	(20.882)	0.460**	(18.892)	0.462**	(18.828)	
20위권 이내	0.298**	(13.287)	0.238**	(10.391)	0.198**	(8.408)	0.202**	(8.576)	
30위권 이내	0.169**	(6.618)	0.200**	(7.722)	0.202**	(7.675)	0.202**	(7.641)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116**	(7.202)	0.111**	(6.891)	0.106**	(6.383)	0.105**	(6.310)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140**	(5.080)	0.143**	(5.175)	0.144**	(5.100)	0.148**	(5.239)
	300-500만원 미만	0.164**	(6.121)	0.162**	(6.009)	0.165**	(5.962)	0.169**	(6.098)
	500만원 이상	0.269**	(9.347)	0.269**	(9.327)	0.259**	(8.730)	0.263**	(8.848)
경기 상황	청년 실업률			0.097**	(14.735)	0.096**	(15.225)	0.096**	(15.133)
	청년 고용률			-0.004	(-0.879)				
취업 스펙	편입더미					0.808**	(20.275)	0.806**	(20.153)
	해외연수					0.003	(0.146)	0.003	(0.158)
	어학시험여부					0.116**	(6.972)	0.120**	(7.190)
	복수/연계전공					0.306**	(16.306)	0.319**	(16.896)
	졸업평점(100점환산)					-0.015**	(-16.624)	-0.015**	(-16.227)
	훈련여부							-0.038*	(-2.490)
	자격증소지							0.076**	(4.620)
	고시/공시준비							0.068**	(3.463)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25	(1.248)	
심리 요인	대학선택 주관								
	취업목표 설정								
연도 더미	2010년								
	2011년	0.082**	(4.023)	0.094**	(4.590)	0.090**	(4.317)	0.053*	(2.212)
	2012년	0.399**	(19.503)	0.464**	(22.261)	0.477**	(22.430)	0.434**	(17.828)
	2013년	-0.069**	(-2.967)	0.001	(0.053)	0.019	(0.757)	-0.021	(-0.787)
	상수	-7.106**	(-40.826)	-7.540**	(-26.803)	-8.188**	(-31.461)	-8.922**	(-33.657)
	사례 수	45,989		45,989		45,381		45,38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제 IV 장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 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전공계열이 인문계인 경우에도 역시 졸업유예 비중이 높았다. 대학서열의 경우 10위권 이내 > 20위권 이내 > 30위권 이내 > 그 외 대학 순으로 졸업유예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0위 이내의 대학 다수가 서울소재 대학교이고, 특히 10위권 이내의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소재 대학임을 고려한다면, 대학서열효과와 지역효과는 적어도 졸업유예 측면에서는 각각의 분리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 역시 졸업유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상황이 나을수록 졸업유예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생활에서의 개인의 재학 중 경험 혹은 스펙쌓기 활동들은 일부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졸업유예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편입, 어학시험, 복수/연계전공, 자격증취득, 고시/공시 준비와 같은 활동들은 졸업유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경력은 졸업유예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3-2>의 모형 5 ~모형 8까지는 설명변수들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졸업유예의 정의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비교집단을 달리할 때 어떤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모형 5는 정의 1(표 IV-1의 A+B, 즉 초과등록)을 적용한 경우이며, 모형4에 심리적 요인이 추가된 것이다.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자기주관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한 경우 졸업유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학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의지가 뚜렷한 경우 개인의 인적특성이나 가족배경, 대학특성, 소재지, 개인의 스펙쌓기 등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조차도 졸업유예를 선택할 확률이 낮으며, 취업목표가 뚜렷한 경우에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6은 정의 2(표 IV-1의 A+B+C, 즉 초과등록 + 4년 휴학)를 적용한 경우이다. 분석결과 대체로 개별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및 계수값의 크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변수의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즉 자격증소지자와 고시/공시준비자의 경우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오히려 졸업유예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7(모형 5에 대응)과 모형 8(모형 6에 대응)은 양정승(2015)에서 접근한 것과 같이 비교집단의 설정에서 발생하는 편의 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2013. 2월 비졸업유예자와 2009. 8월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분석결과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감소와 비교집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수값의 부호의 변화와 통계적 유의성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표 IV-3-2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a) 복수전공 포함

	변수명	모형 5(정의 1)		모형 6(정의 2)		모형 7(정의 1)		모형 8(정의 2)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397**	(17.654)	0.502**	(23.723)	0.311**	(12.922)	0.413**	(18.346)
	미혼 더미	0.113**	(3.108)	0.171**	(5.087)	0.118**	(3.009)	0.160**	(4.396)
	연령	0.219**	(34.775)	0.260**	(42.397)	0.196**	(29.422)	0.231**	(35.966)
대학 특성	국립대학	0.209**	(10.109)	0.131**	(6.938)	0.194**	(8.525)	0.105**	(5.107)
	기준=서울								
	경인권	-0.161**	(-6.344)	-0.139**	(-5.874)	-0.190**	(-6.856)	-0.152**	(-5.900)
	충청권	-0.183**	(-6.445)	-0.224**	(-8.548)	-0.230**	(-7.476)	-0.265**	(-9.390)
	호남권	-0.286**	(-7.859)	-0.200**	(-6.387)	-0.359**	(-9.169)	-0.265**	(-7.812)
	대경권	-0.046	(-1.537)	-0.055*	(-2.028)	-0.072*	(-2.218)	-0.077*	(-2.575)
	동남권	-0.210**	(-7.064)	-0.129**	(-4.834)	-0.201**	(-6.192)	-0.102**	(-3.520)
	기타	-0.078+	(-1.839)	-0.087*	(-2.302)	-0.200**	(-4.182)	-0.193**	(-4.606)
	인문계열	0.01	(0.448)	0.006	(0.275)	0.012	(0.462)	0.013	(0.544)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이내	0.463**	(18.867)	0.400**	(16.942)	0.469**	(17.307)	0.406**	(15.616)
	20위권이내	0.202**	(8.563)	0.220**	(10.154)	0.221**	(8.546)	0.233**	(9.828)
	30위권이내	0.200**	(7.570)	0.196**	(8.089)	0.178**	(6.189)	0.175**	(6.653)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104**	(6.289)	0.052**	(3.439)	0.106**	(5.847)	0.051**	(3.051)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148**	(5.210)	0.122**	(4.689)	0.162**	(5.347)	0.134**	(4.872)
	300-500만원 미만	0.169**	(6.116)	0.204**	(7.993)	0.179**	(6.060)	0.210**	(7.851)
	500만원 이상	0.262**	(8.801)	0.244**	(8.876)	0.275**	(8.618)	0.253**	(8.666)
경기 상황	청년 실업률	0.096**	(15.130)	0.072**	(12.537)	0.033**	(4.799)	0.009	(1.391)
	청년 고용률								
취업 스펙	편입더미	0.801**	(19.995)	0.836**	(23.118)	0.789**	(17.498)	0.807**	(20.478)
	해외연수	0.006	(0.308)	0.209**	(11.377)	0.015	(0.699)	0.236**	(11.968)
	어학시험여부	0.115**	(6.878)	0.195**	(12.858)	0.130**	(7.151)	0.200**	(12.093)
	복수/연계전공	0.315**	(16.656)	0.211**	(11.992)	0.305**	(14.866)	0.191**	(10.057)
	졸업평점(100점환산)	-0.015**	(-15.993)	-0.012**	(-13.885)	-0.014**	(-14.470)	-0.011**	(-12.341)
	훈련여부	-0.033*	(-2.159)	-0.050**	(-3.586)	-0.026	(-1.485)	-0.052**	(-3.352)
	자격증소지	0.081**	(4.906)	-0.030*	(-1.983)	0.085**	(4.713)	-0.033*	(-2.002)
	고시/공시준비	0.078**	(3.873)	-0.170**	(-9.566)	0.066**	(3.001)	-0.173**	(-8.892)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22	(1.107)	0.049**	(2.658)	0	(-0.006)	0.028	(1.414)
심리 요인	대학선택 주관	-0.066**	(-4.029)	-0.114**	(-7.656)	-0.070**	(-3.887)	-0.110**	(-6.774)
	취업목표 설정	-0.041*	(-2.537)	-0.085**	(-5.687)	-0.045*	(-2.528)	-0.085**	(-5.266)
연도 더미	2010년								
	2011년	0.059*	(2.427)	0.045*	(2.080)	0.430**	(15.932)	0.323**	(13.749)
	2012년	0.441**	(18.015)	0.272**	(12.054)	0.773**	(28.085)	0.510**	(21.085)
	2013년	-0.011	(-0.399)	-0.085**	(-3.477)	1.140**	(31.598)	1.058**	(32.513)
	상수	-8.859**	(-33.407)	-9.331**	(-37.273)	-8.034**	(-28.365)	-8.263**	(-31.227)
	사례 수	45,381		45,381		36,640		36,993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b) 복수전공 제외

	변수명	모형 5(정의 1)		모형 6(정의 2)		모형 7(정의 1)		모형 8(정의 2)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361**	(13.794)	0.471**	(19.591)	0.281**	(10.000)	0.386**	(14.962)
	미혼 더미	0.102*	(2.408)	0.151**	(3.972)	0.102*	(2.280)	0.137**	(3.358)
	연령	0.219**	(30.642)	0.260**	(38.152)	0.196**	(25.745)	0.232**	(31.884)
대학 특성	국공립대학	0.211**	(9.166)	0.127**	(6.106)	0.193**	(7.642)	0.101**	(4.430)
	기준=서울								
	경인권	-0.104**	(-3.430)	-0.086**	(-3.098)	-0.128**	(-3.845)	-0.087**	(-2.878)
	충청권	-0.163**	(-4.936)	-0.174**	(-5.790)	-0.216**	(-6.054)	-0.218**	(-6.733)
	호남권	-0.246**	(-5.804)	-0.135**	(-3.747)	-0.315**	(-6.914)	-0.197**	(-5.046)
	대경권	-0.001	(-0.037)	-0.016	(-0.496)	-0.038	(-0.985)	-0.045	(-1.290)
	동남권	-0.173**	(-5.144)	-0.090**	(-2.997)	-0.160**	(-4.370)	-0.061+	(-1.868)
	기타	-0.077	(-1.571)	-0.057	(-1.344)	-0.197**	(-3.564)	-0.155**	(-3.288)
	인문계열	0.005	(0.170)	-0.021	(-0.729)	-0.009	(-0.279)	-0.028	(-0.926)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459**	(15.505)	0.406**	(14.416)	0.464**	(14.100)	0.411**	(13.229)
	20위권 이내	0.178**	(6.369)	0.207**	(8.168)	0.208**	(6.776)	0.228**	(8.234)
	30위권 이내	0.211**	(7.160)	0.211**	(7.842)	0.199**	(6.177)	0.199**	(6.818)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088**	(4.546)	0.041*	(2.346)	0.092**	(4.336)	0.040*	(2.103)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154**	(4.712)	0.126**	(4.250)	0.175**	(4.980)	0.142**	(4.515)
	300-500만원 미만	0.179**	(5.587)	0.211**	(7.261)	0.197**	(5.742)	0.225**	(7.319)
경기 상황	500만원 이상	0.252**	(7.229)	0.229**	(7.200)	0.272**	(7.270)	0.247**	(7.291)
	청년 실업률	0.099**	(13.496)	0.075**	(11.430)	0.035**	(4.367)	0.009	(1.268)
취업 스펙	청년 고용률								
	편입더미	0.836**	(17.778)	0.831**	(20.253)	0.840**	(15.807)	0.812**	(18.161)
	해외연수	-0.001	(-0.051)	0.199**	(9.122)	0.011	(0.416)	0.230**	(9.833)
	어학시험여부	0.107**	(5.500)	0.186**	(10.664)	0.116**	(5.498)	0.187**	(9.847)
	복수/연계전공								
	졸업평점(100점환산)	-0.015**	(-14.235)	-0.012**	(-12.479)	-0.015**	(-13.015)	-0.012**	(-11.270)
	훈련여부	-0.02	(-1.098)	-0.045**	(-2.762)	-0.006	(-0.294)	-0.046*	(-2.530)
	자격증소지	0.087**	(4.575)	-0.033+	(-1.877)	0.090**	(4.332)	-0.037*	(-1.973)
	고시/공시준비	0.092**	(3.782)	-0.199**	(-9.492)	0.084**	(3.182)	-0.184**	(-8.086)
심리 요인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21	(0.850)	0.051*	(2.340)	-0.001	(-0.030)	0.026	(1.150)
	대학선택 주관	-0.050**	(-2.603)	-0.105**	(-6.186)	-0.054**	(-2.595)	-0.104**	(-5.586)
연도 더미	취업목표 설정	-0.048*	(-2.559)	-0.088**	(-5.190)	-0.058**	(-2.821)	-0.092**	(-4.982)
	2010년								
	2011년	0.072*	(2.515)	0.056*	(2.203)	0.443**	(13.657)	0.320**	(11.652)
	2012년	0.490**	(17.078)	0.291**	(11.179)	0.823**	(25.237)	0.518**	(18.502)
	2013년	0.006	(0.196)	-0.092**	(-3.253)	1.162**	(27.409)	1.054**	(28.149)
	상수	-8.975**	(-29.470)	-9.261**	(-32.969)	-8.220**	(-25.020)	-8.229**	(-27.401)
	사례 수	35,445		35,445		28,283		28,569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모형 9부터 모형 12까지는 각 조사차수별 모형을 분리 추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인적특성, 경기상황, 대학서열 및 특성, 취업스펙, 심리적 요인 관련 변수들은 일부 예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호의 변화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 더미 변수 및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일부 연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거나 부호가 바뀌는 등의 효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졸업유예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는 차수별로도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4]과 같이 모형5에 분석된 요인들의 한계효과를 비교해보면, 대학선택과 취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자기 주관의 변수만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표 IV-3-3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도별 모형(정의 1)

(a) 복수전공 포함

	변수명	모형 9 (GOMS 2010년)		모형 10 (GOMS 2011)		모형 11 (GOMS 2012)		모형 12 (GOMS 2013)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444**	(9.752)	0.398**	(9.833)	0.307**	(7.604)	0.507**	(9.880)
	미혼 더미	0.083	(1.179)	0.136*	(2.132)	0.226**	(3.172)	-0.005	(-0.052)
	연령	0.217**	(17.931)	0.192**	(18.407)	0.293**	(26.270)	0.162**	(11.112)
대학 특성	국공립대학	0.364**	(8.444)	0.195**	(4.749)	0.183**	(4.838)	0.144**	(3.116)
	기준=서울								
	경인권	-0.238**	(-4.848)	-0.281**	(-6.074)	-0.098+	(-1.939)	-0.048	(-0.746)
	충청권	-0.344**	(-5.892)	-0.173**	(-3.207)	-0.096+	(-1.837)	-0.094	(-1.365)
	호남권	-0.430**	(-5.800)	-0.409**	(-5.975)	-0.133*	(-2.050)	-0.157+	(-1.771)
	대경권	-0.318**	(-5.322)	0.074	(1.293)	-0.002	(-0.041)	0.027	(0.381)
	동남권	-0.297**	(-4.975)	-0.471**	(-8.043)	0.002	(0.041)	-0.168*	(-2.378)
	기타	-0.109	(-1.289)	-0.007	(-0.091)	0.058	(0.684)	-0.148	(-1.608)
	인문계열	0.031	(0.671)	0.07	(1.638)	-0.073+	(-1.688)	0.011	(0.212)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537**	(11.320)	0.456**	(10.186)	0.373**	(7.513)	0.495**	(8.819)
	20위권 이내	0.302**	(6.528)	0.213**	(4.744)	0.098*	(2.181)	0.193**	(3.450)
	30위권 이내	0.343**	(6.427)	0.215**	(4.245)	0.120*	(2.471)	0.232**	(3.811)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199**	(5.966)	0.139**	(4.477)	0.062*	(1.964)	0.039	(1.023)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043	(0.741)	-0.098+	(-1.774)	0.362**	(7.672)	0.006	(0.074)
	300-500만원 미만	0.079	(1.376)	-0.045	(-0.837)	0.355**	(7.863)	-0.006	(-0.080)
	500만원 이상	0.243**	(4.002)	0.073	(1.276)	0.394**	(7.790)	0.065	(0.838)
	청년 실업률	0.140**	(8.010)	0.145**	(11.990)	0.087**	(7.519)	0.094**	(6.149)
취업 스펙	편입더미	0.645**	(8.961)	0.639**	(9.046)	1.107**	(12.484)	0.923**	(8.955)
	해외연수	0.080*	(2.146)	0.014	(0.412)	-0.041	(-1.099)	-0.036	(-0.715)
	어학시험여부	0.083*	(2.496)	0.132**	(4.267)	0.130**	(4.204)	0.134**	(3.308)
	복수/연계전공	0.372**	(10.080)	0.290**	(8.467)	0.272**	(7.343)	0.321**	(7.085)
	졸업평점(100점환산)	-0.022**	(-11.864)	-0.017**	(-9.546)	-0.010**	(-6.293)	-0.014**	(-6.209)
	훈련여부	-0.027	(-1.365)	-0.058	(-1.541)	-0.043	(-1.042)	-0.048	(-0.850)
	자격증소지	0.073*	(2.139)	0.076*	(2.418)	0.105**	(3.447)	0.084*	(2.267)
	고시/공시준비	0.093*	(2.366)	0.085*	(2.284)	0.037	(0.955)	0.122*	(2.568)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152**	(3.375)	0.118**	(3.218)	-0.097**	(-2.758)	0.038	(0.762)
심리 요인	대학선택 주관	-0.02	(-0.593)	-0.058+	(-1.876)	-0.097**	(-3.164)	-0.056	(-1.482)
	취업목표 설정	0.005	(0.140)	-0.043	(-1.383)	-0.084**	(-2.763)	-0.037	(-0.992)
	상수	-8.501**	(-16.408)	-7.749**	(-17.368)	-11.323**	(-23.131)	-7.430**	(-11.878)
	사례 수	11,273		11,668		11,343		11,097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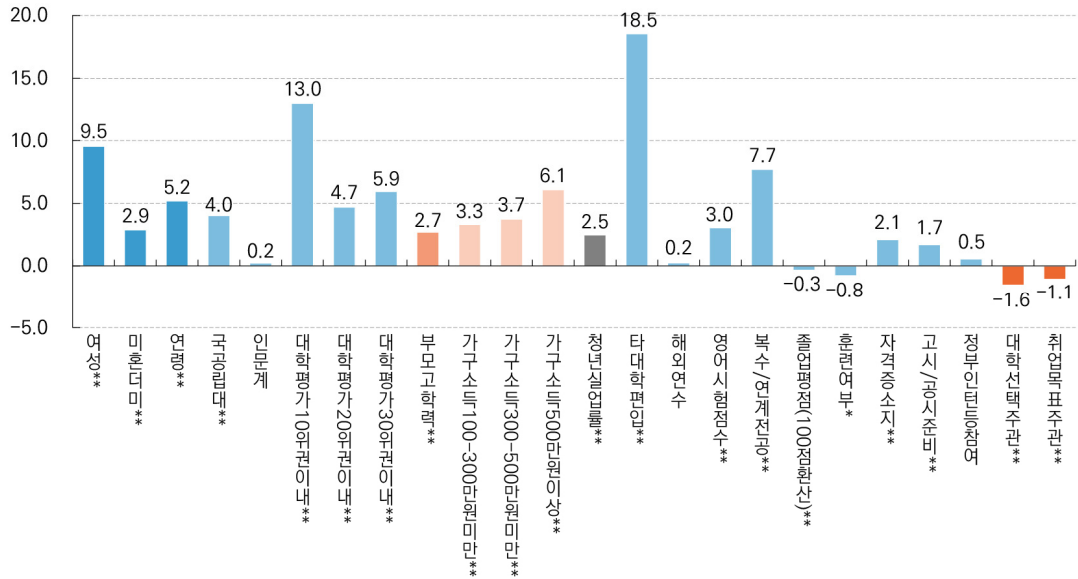
(b) 복수전공 제외

	변수명	모형 9 (GOMS 2010년)		모형 10 (GOMS 2011)		모형 11 (GOMS 2012)		모형 12 (GOMS 2013)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377**	(7.031)	0.365**	(7.562)	0.294**	(6.369)	0.460**	(7.918)
	미혼 더미	0.139+	(1.650)	0.092	(1.267)	0.220**	(2.691)	-0.052	(-0.497)
	연령	0.213**	(15.282)	0.190**	(15.750)	0.300**	(23.569)	0.156**	(9.827)
대학 특성	국공립대학	0.376**	(7.662)	0.215**	(4.680)	0.174**	(4.204)	0.147**	(2.891)
	기준=서울								
	경인권	-0.195**	(-3.340)	-0.233**	(-4.138)	-0.03	(-0.511)	0.008	(0.105)
	충청권	-0.371**	(-5.329)	-0.163*	(-2.558)	-0.071	(-1.189)	-0.046	(-0.591)
	호남권	-0.453**	(-5.189)	-0.345**	(-4.266)	-0.109	(-1.456)	-0.099	(-0.993)
	대경권	-0.310**	(-4.335)	0.102	(1.458)	0.063	(0.983)	0.069	(0.840)
	동남권	-0.327**	(-4.795)	-0.464**	(-6.979)	0.061	(1.009)	-0.101	(-1.286)
	기타	-0.072	(-0.769)	0.009	(0.100)	0.026	(0.271)	-0.169	(-1.568)
	인문계열	0.037	(0.567)	0.004	(0.062)	-0.085	(-1.490)	0.082	(1.236)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532**	(9.305)	0.415**	(7.574)	0.388**	(6.463)	0.511**	(7.641)
	20위권 이내	0.330**	(5.973)	0.138*	(2.519)	0.078	(1.502)	0.185**	(2.807)
	30위권 이내	0.383**	(6.281)	0.243**	(4.253)	0.130*	(2.427)	0.234**	(3.489)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166**	(4.213)	0.140**	(3.813)	0.052	(1.443)	0.028	(0.660)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026	(-0.391)	-0.076	(-1.172)	0.372**	(6.909)	0.015	(0.174)
	300-500만원 미만	-0.005	(-0.072)	-0.026	(-0.414)	0.396**	(7.670)	-0.013	(-0.154)
	500만원 이상	0.154*	(2.169)	0.06	(0.880)	0.408**	(6.990)	0.08	(0.881)
	청년 실업률	0.153**	(7.427)	0.158**	(11.021)	0.087**	(6.572)	0.094**	(5.487)
취업 스펙	편입더미	0.628**	(7.381)	0.710**	(8.373)	1.169**	(11.528)	0.879**	(7.976)
	해외연수	0.074	(1.643)	0.017	(0.392)	-0.043	(-0.972)	-0.057	(-0.954)
	어학시험여부	0.076+	(1.933)	0.124**	(3.393)	0.131**	(3.684)	0.112*	(2.466)
	복수/연계전공								
	졸업평점(100점환산)	-0.024**	(-11.085)	-0.017**	(-8.196)	-0.011**	(-6.338)	-0.012**	(-4.813)
	훈련여부	-0.02	(-0.832)	-0.016	(-0.351)	-0.019	(-0.393)	-0.071	(-1.089)
	자격증소지	0.081*	(2.063)	0.092*	(2.525)	0.083*	(2.397)	0.115**	(2.718)
	고시/공시준비	0.124*	(2.556)	0.145**	(3.156)	0.035	(0.769)	0.087	(1.566)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188**	(3.422)	0.119**	(2.681)	-0.105**	(-2.578)	0.056	(0.979)
심리 요인	대학선택 주관	-0.025	(-0.655)	-0.02	(-0.542)	-0.074*	(-2.122)	-0.056	(-1.289)
	취업목표 설정	0.021	(0.538)	-0.076*	(-2.098)	-0.086*	(-2.476)	-0.035	(-0.813)
	상수	-8,380**	(-14.014)	-8,097**	(-15.480)	-11,572**	(-20.555)	-7,185**	(-10.384)
	사례 수	8,601		8,836		9,006		9,002	

주1: + p<0.10,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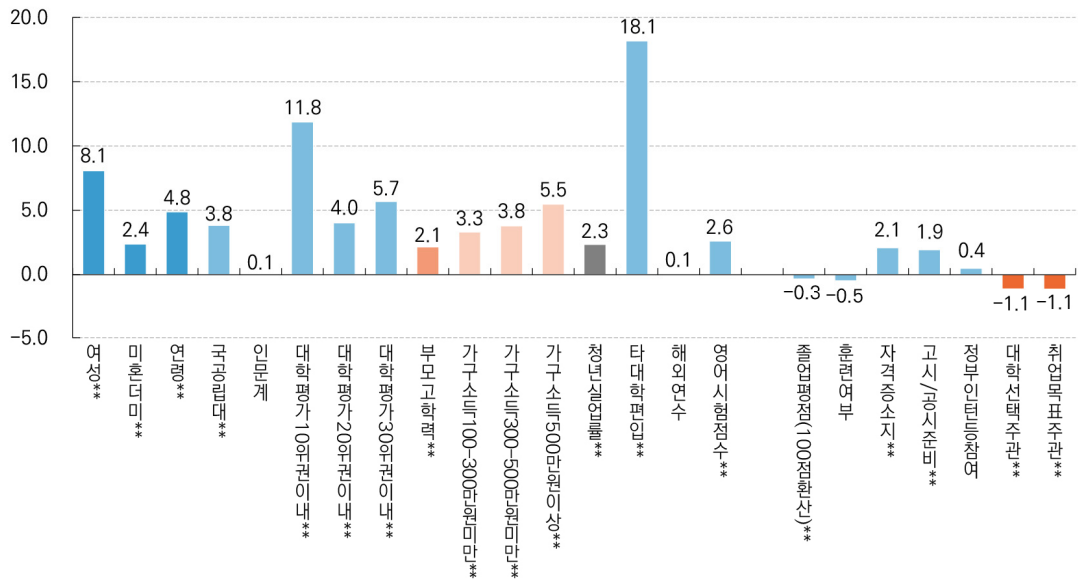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a) 복수전공 포함



주: + p<0.10, * p<0.05, ** p<0.01

(b) 복수전공 제외



주: + p<0.10, * p<0.05, ** p<0.01

【그림 IV-4】 대학 졸업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계 효과

3) 졸업유예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졸업유예의 결정요인 분석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IV-4-1>은 졸업유예자를 대학진학 과정에서의 자의식이 뚜렷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 <표 IV-4-2>는 졸업유예자를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IV-4-1>과 <표 IV-4-2> 모두 모형 1은 졸업유예 효과만을 추정한 것이며, 모형 2부터는 통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졸업유예의 유형별 취업가능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 IV-5]는 이상의 요인들에 대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우선,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졸업유예 결정모형에서 대다수의 변수들이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것과는 달리, 취업확률 모형에서는 다수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 특성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나 혼인상태는 취업확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더미들 역시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대학서열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함에 따라 오히려 취업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의 학력 및 가구소득 수준은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취업률이 대학졸업 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점에서의 취업상태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졸업유예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장 진입으로의 진입에 덜 쫓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학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스펙이나 포트폴리오는 상반된 영향을 보였다. 졸업평점은 졸업유예 가능성을 낮추지만 취업확률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이나 편입 등도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학연수나 해외연수, 교육훈련, 자격증 등은 취업확률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유예 여부는 취업확률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만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와 진학의식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졸업유예를 하면서 진학의식이 없는 경우가 10% 유의수준 하에서 취업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표 IV-4-2>에 제시되어 있듯이 취업목표는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졸업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았다.

표 IV-4-1 대학 졸업유예-대학진학 자의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a) 복수전공 포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졸업 유예		0.013	(0.722)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56+	(1.767)	0.056+	(1.774)	0.059+	(1.835)	0.061+	(1.893)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05	(0.181)	0.004	(0.139)	-0.002	(-0.055)	0.006	(0.191)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36	(1.273)	0.033	(1.180)	0.037	(1.317)	0.041	(1.449)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076**	(-4.310)	-0.076**	(-4.322)	-0.076**	(-4.326)	-0.090**	(-4.980)	-0.044*	(-2.392)
	미혼 더미	-0.04	(-1.293)	-0.041	(-1.326)	-0.038	(-1.201)	-0.029	(-0.911)	-0.005	(-0.163)
	연령	0.030**	(6.481)	0.030**	(6.384)	0.027**	(5.759)	0.031**	(6.306)	0.048**	(9.613)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85**	(-4.878)	-0.087**	(-4.987)	-0.086**	(-4.939)	-0.072**	(-4.054)	-0.048**	(-2.724)
	기준=서울										
	경인권	0.038+	(1.673)	0.038+	(1.667)	0.044+	(1.900)	0.038	(1.625)	0.005	(0.209)
	충청권	-0.01	(-0.419)	-0.009	(-0.374)	0	(0.004)	-0.03	(-1.230)	-0.042+	(-1.679)
	호남권	-0.097**	(-3.533)	-0.095**	(-3.479)	-0.088**	(-3.092)	-0.125**	(-4.335)	-0.135**	(-4.649)
	대경권	-0.028	(-1.092)	-0.028	(-1.078)	-0.027	(-1.039)	-0.050+	(-1.891)	-0.056*	(-2.099)
	동남권	-0.022	(-0.860)	-0.022	(-0.874)	-0.027	(-1.074)	-0.049+	(-1.907)	-0.068**	(-2.631)
	기타	-0.004	(-0.131)	-0.004	(-0.118)	0.013	(0.387)	-0.02	(-0.559)	-0.035	(-0.998)
	인문계열	-0.100**	(-5.215)	-0.101**	(-5.256)	-0.100**	(-5.191)	-0.117**	(-5.888)	-0.131**	(-6.532)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03	(-1.310)	-0.03	(-1.298)	-0.022	(-0.930)	-0.001	(-0.040)	0.056*	(2.330)
	20위권 이내	0	(0.005)	0	(0.003)	-0.002	(-0.097)	0.009	(0.426)	0.041+	(1.938)
	30위권 이내	0.057*	(2.482)	0.057*	(2.450)	0.065**	(2.797)	0.071**	(3.021)	0.084**	(3.554)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068**	(-4.770)	-0.068**	(-4.758)	-0.058**	(-4.028)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100**	(-4.091)	-0.094**	(-3.819)	-0.090**	(-3.615)
	300-500만원 미만					-0.090**	(-3.772)	-0.089**	(-3.680)	-0.089**	(-3.627)
	500만원 이상					-0.066*	(-2.549)	-0.066*	(-2.508)	-0.068*	(-2.554)
취업 스펙	청년 실업률					0.011*	(2.133)	0.010+	(1.801)	0.008	(1.419)
	편입더미							0.089**	(3.098)	0.115**	(3.977)
	해외연수							-0.125**	(-7.106)	-0.070**	(-3.932)
	어학시험여부							-0.146**	(-10.114)	-0.156**	(-10.633)
	복수/연계전공							0.042*	(2.479)	0.061**	(3.511)
	졸업평점(100점환산)							0.004**	(5.595)	0.005**	(6.075)
	훈련여부									-0.117**	(-8.611)
	자격증소지									-0.154**	(-10.650)
	고시/공시준비									0.464**	(27.643)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27	(-1.495)
	상수	-0.494**	(-3.547)	-0.505**	(-3.493)	-0.423**	(-2.786)	-0.775**	(-3.839)	-1.762**	(-8.259)
	사례 수	45,989		45,989		45,989		45,381		45,381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b) 복수전공 제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졸업 유예		0.009	(0.417)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62+	(1,652)	0.063+	(1,671)	0.068+	(1,787)	0.075+	(1,956)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14	(0,409)	0.015	(0,430)	0.008	(0,235)	0.016	(0,467)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43	(1,299)	0.042	(1,272)	0.044	(1,316)	0.051	(1,521)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068**	(-3,392)	-0.068**	(-3,384)	-0.068**	(-3,408)	-0.077**	(-3,771)	-0.028	(-1,358)
	미혼 더미	-0.056	(-1,575)	-0.057	(-1,602)	-0.054	(-1,519)	-0.047	(-1,303)	-0.026	(-0,698)
	연령	0.036**	(6,918)	0.035**	(6,834)	0.032**	(6,220)	0.035**	(6,392)	0.054**	(9,571)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79**	(-4,159)	-0.082**	(-4,270)	-0.080**	(-4,190)	-0.069**	(-3,541)	-0.050**	(-2,582)
	기준=서울										
	경인권	0.052+	(1,944)	0.051+	(1,928)	0.060*	(2,204)	0.054*	(1,979)	0.023	(0,826)
	충청권	0.025	(0,930)	0.025	(0,949)	0.035	(1,265)	0.003	(0,093)	-0.011	(-0,372)
	호남권	-0.063*	(-1,998)	-0.062*	(-1,965)	-0.053	(-1,618)	-0.090**	(-2,726)	-0.102**	(-3,063)
	대경권	-0.007	(-0,241)	-0.007	(-0,250)	-0.006	(-0,204)	-0.032	(-1,047)	-0.035	(-1,117)
	동남권	-0.002	(-0,076)	-0.003	(-0,106)	-0.011	(-0,386)	-0.036	(-1,260)	-0.057*	(-1,972)
	기타	0.01	(0,276)	0.01	(0,274)	0.032	(0,840)	-0.001	(-0,036)	-0.015	(-0,390)
	인문계열	-0.154**	(-6,220)	-0.154**	(-6,215)	-0.153**	(-6,168)	-0.158**	(-6,264)	-0.158**	(-6,234)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064*	(-2,327)	-0.064*	(-2,320)	-0.053+	(-1,923)	-0.026	(-0,915)	0.034	(1,173)
	20위권 이내	-0.02	(-0,865)	-0.021	(-0,867)	-0.025	(-1,023)	-0.007	(-0,297)	0.026	(1,071)
	30위권 이내	0.056*	(2,197)	0.055*	(2,164)	0.065*	(2,552)	0.069**	(2,679)	0.085**	(3,281)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083**	(-5,172)	-0.084**	(-5,156)	-0.072**	(-4,387)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079**	(-2,873)	-0.074**	(-2,679)	-0.071*	(-2,533)
	300-500만원 미만					-0.062*	(-2,314)	-0.061*	(-2,245)	-0.060*	(-2,192)
	500만원 이상					-0.041	(-1,391)	-0.04	(-1,351)	-0.04	(-1,336)
취업 스펙	청년 실업률					0.015*	(2,445)	0.013*	(2,097)	0.011+	(1,729)
	편입더미							0.070*	(2,229)	0.103**	(3,247)
	해외연수							-0.130**	(-6,319)	-0.077**	(-3,675)
	어학시험여부							-0.147**	(-8,955)	-0.156**	(-9,406)
	복수/연계전공										
	졸업평점(100점환산)							0.004**	(4,042)	0.004**	(4,338)
	훈련여부									-0.120**	(-7,572)
	자격증소지									-0.157**	(-9,760)
	고시/공시준비									0.475**	(24,271)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11	(-0,531)
	상수	-0.645**	(-4,130)	-0.664**	(-4,086)	-0.622**	(-3,637)	-0.803**	(-3,565)	-1.839**	(-7,676)
사례 수		35,947		35,947		35,947		35,445		35,445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표 IV-4-2 대학 졸업유예-취업목표의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a) 복수전공 포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0.013	(0.722)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78**	(-2.601)	-0.080**	(-2.649)	-0.080**	(-2.633)	-0.124**	(-4.036)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23	(-0.994)	-0.025	(-1.070)	-0.025	(-1.061)	-0.016	(-0.654)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76**	(-3.203)	-0.080**	(-3.353)	-0.082**	(-3.358)	-0.127**	(-5.136)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076**	(-4.310)	-0.077**	(-4.410)	-0.078**	(-4.420)	-0.091**	(-5.001)	-0.042*	(-2.256)
	미혼 더미	-0.04	(-1.293)	-0.042	(-1.339)	-0.038	(-1.215)	-0.029	(-0.917)	-0.006	(-0.178)
	연령	0.030**	(6.481)	0.030**	(6.396)	0.027**	(5.748)	0.031**	(6.306)	0.048**	(9.695)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85**	(-4.878)	-0.084**	(-4.857)	-0.084**	(-4.812)	-0.069**	(-3.905)	-0.045*	(-2.512)
	기준=서울										
	경인권	0.038+	(1.673)	0.038+	(1.682)	0.045+	(1.931)	0.038	(1.634)	0.004	(0.182)
	충청권	-0.01	(-0.419)	-0.008	(-0.331)	0.002	(0.074)	-0.029	(-1.193)	-0.039	(-1.574)
	호남권	-0.097**	(-3.533)	-0.095**	(-3.468)	-0.087**	(-3.056)	-0.125**	(-4.327)	-0.133**	(-4.551)
	대경권	-0.028	(-1.092)	-0.028	(-1.072)	-0.027	(-1.025)	-0.050+	(-1.907)	-0.056*	(-2.092)
	동남권	-0.022	(-0.860)	-0.017	(-0.667)	-0.022	(-0.867)	-0.045+	(-1.732)	-0.061*	(-2.333)
	기타	-0.004	(-0.131)	-0.003	(-0.094)	0.015	(0.445)	-0.018	(-0.505)	-0.031	(-0.875)
	인문계열	-0.100**	(-5.215)	-0.097**	(-5.046)	-0.096**	(-4.977)	-0.112**	(-5.606)	-0.124**	(-6.145)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03	(-1.310)	-0.03	(-1.312)	-0.022	(-0.931)	-0.001	(-0.034)	0.057*	(2.365)
	20위권 이내	0	(0.005)	-0.002	(-0.092)	-0.004	(-0.206)	0.007	(0.342)	0.040+	(1.866)
	30위권 이내	0.057*	(2.482)	0.056*	(2.420)	0.065**	(2.779)	0.071**	(3.006)	0.083**	(3.516)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069**	(-4.852)	-0.070**	(-4.829)	-0.060**	(-4.158)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101**	(-4.122)	-0.095**	(-3.850)	-0.091**	(-3.659)
	300-500만원 미만					-0.090**	(-3.778)	-0.089**	(-3.681)	-0.089**	(-3.623)
	500만원 이상					-0.068**	(-2.600)	-0.067*	(-2.545)	-0.070**	(-2.639)
취업 스펙	청년 실업률					0.012*	(2.252)	0.010+	(1.923)	0.009	(1.585)
	편입더미							0.094**	(3.288)	0.121**	(4.212)
	해외연수							-0.125**	(-7.130)	-0.068**	(-3.815)
	어학시험여부							-0.148**	(-10.196)	-0.159**	(-10.834)
	복수/연계전공							0.038*	(2.192)	0.055**	(3.165)
	졸업평점(100점환산)							0.004**	(5.155)	0.004**	(5.540)
	훈련여부									-0.109**	(-7.981)
	자격증소지									-0.142**	(-9.805)
	고시/공시준비									0.489**	(28.659)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32+	(-1.790)
상수		-0.494**	(-3.547)	-0.439**	(-3.041)	-0.357*	(-2.359)	-0.689**	(-3.420)	-1.753**	(-8.243)
사례 수		45,989		45,989		45,989		45,381		45,381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b) 복수전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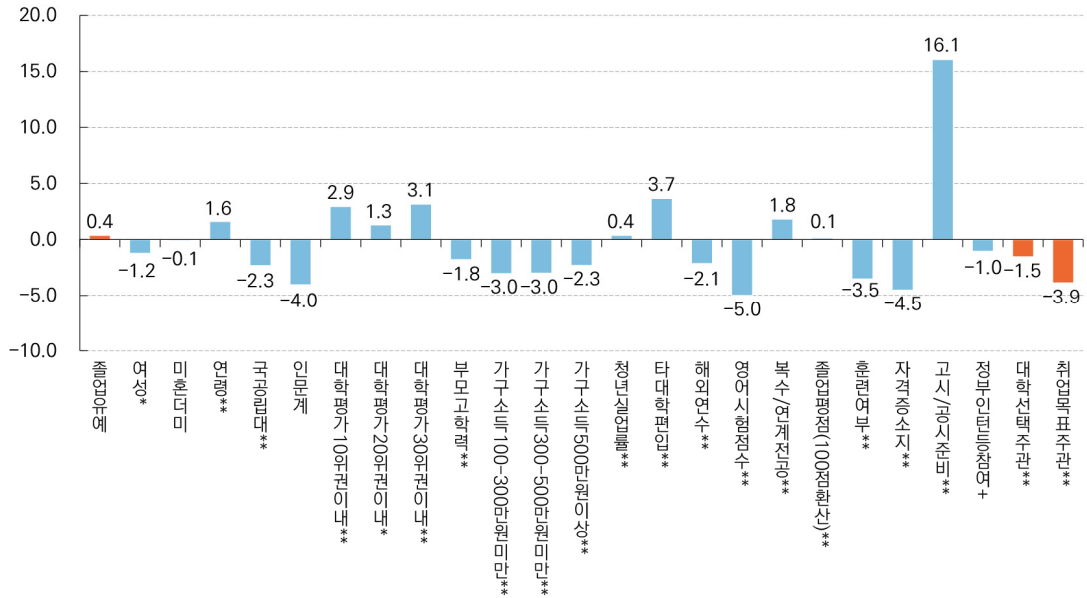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0.009	(0.417)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32)	(-0.887)	(0.034)	(-0.951)	(0.038)	(-1.032)	-0.079*	(-2.135)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02)	(-0.055)	(0.002)	(-0.075)	(0.005)	(-0.169)	0.005	(0.179)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48+	(-1.671)	-0.051+	(-1.773)	-0.059*	(-2.020)	-0.102**	(-3.450)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068**	(-3.392)	-0.069**	(-3.440)	-0.069**	(-3.467)	-0.078**	(-3.802)	(0.026)	(-1.260)
	미혼 더미	(0.056)	(-1.575)	(0.057)	(-1.614)	(0.055)	(-1.534)	(0.048)	(-1.316)	(0.027)	(-0.727)
	연령	0.036**	(6.918)	0.035**	(6.859)	0.032**	(6.229)	0.035**	(6.402)	0.054**	(9.663)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79**	(-4.159)	-0.079**	(-4.149)	-0.078**	(-4.070)	-0.066**	(-3.392)	-0.046*	(-2.369)
	기준=서울										
	경인권	0.052+	(1.944)	0.051+	(1.926)	0.060*	(2.210)	0.054*	(1.974)	0.022	(0.783)
	충청권	0.025	(0.930)	0.026	(0.971)	0.036	(1.302)	0.003	(0.118)	(0.009)	(-0.303)
	호남권	-0.063*	(-1.998)	-0.062*	(-1.963)	(0.052)	(-1.601)	-0.090**	(-2.721)	-0.099**	(-2.989)
	대경권	(0.007)	(-0.241)	(0.007)	(-0.234)	(0.006)	(-0.183)	(0.032)	(-1.045)	(0.034)	(-1.092)
	동남권	(0.002)	(-0.076)	0.001	(0.042)	(0.007)	(-0.237)	(0.032)	(-1.114)	-0.050+	(-1.719)
	기타	0.010	(0.276)	0.011	(0.306)	0.034	(0.892)	0.001	(0.021)	(0.011)	(-0.272)
	인문계열	-0.154**	(-6.220)	-0.150**	(-6.053)	-0.149**	(-5.998)	-0.153**	(-6.080)	-0.151**	(-5.937)
	기준 = 30위권 밖										
	10위권 이내	-0.064*	(-2.327)	-0.064*	(-2.329)	-0.053+	(-1.923)	(0.025)	(-0.907)	0.034	(1.204)
	20위권 이내	(0.020)	(-0.865)	(0.021)	(-0.898)	(0.026)	(-1.065)	(0.008)	(-0.328)	0.026	(1.048)
	30위권 이내	0.056*	(2.197)	0.055*	(2.147)	0.065*	(2.541)	0.069**	(2.675)	0.085**	(3.250)
가족 배경	부모 고학력 더미					-0.085**	(-5.244)	-0.085**	(-5.227)	-0.074**	(-4.513)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0.079**	(-2.891)	-0.075**	(-2.699)	-0.072*	(-2.568)
	300-500만원 미만					-0.062*	(-2.309)	-0.061*	(-2.234)	-0.060*	(-2.173)
	500만원 이상					(0.042)	(-1.416)	(0.041)	(-1.374)	(0.042)	(-1.391)
취업 스펙	청년 실업률					0.015*	(2.519)	0.013*	(2.178)	0.011+	(1.850)
	편입더미							0.076*	(2.400)	0.111**	(3.483)
	해외연수							-0.131**	(-6.362)	-0.076**	(-3.624)
	어학시험여부							-0.148**	(-9.028)	-0.159**	(-9.586)
	복수/연계전공										
	졸업평점(100점환산)							0.003**	(3.687)	0.003**	(3.886)
	훈련여부									-0.113**	(-7.100)
	자격증소지									-0.147**	(-9.097)
	고시/공시준비									0.498**	(25.012)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16)	(-0.790)
	상수	-0.645**	(-4.130)	-0.615**	(-3.792)	-0.572**	(-3.352)	-0.732**	(-3.258)	-1.836**	(-7.686)
사례 수		35,947		35,947		35,947		35,445		35,445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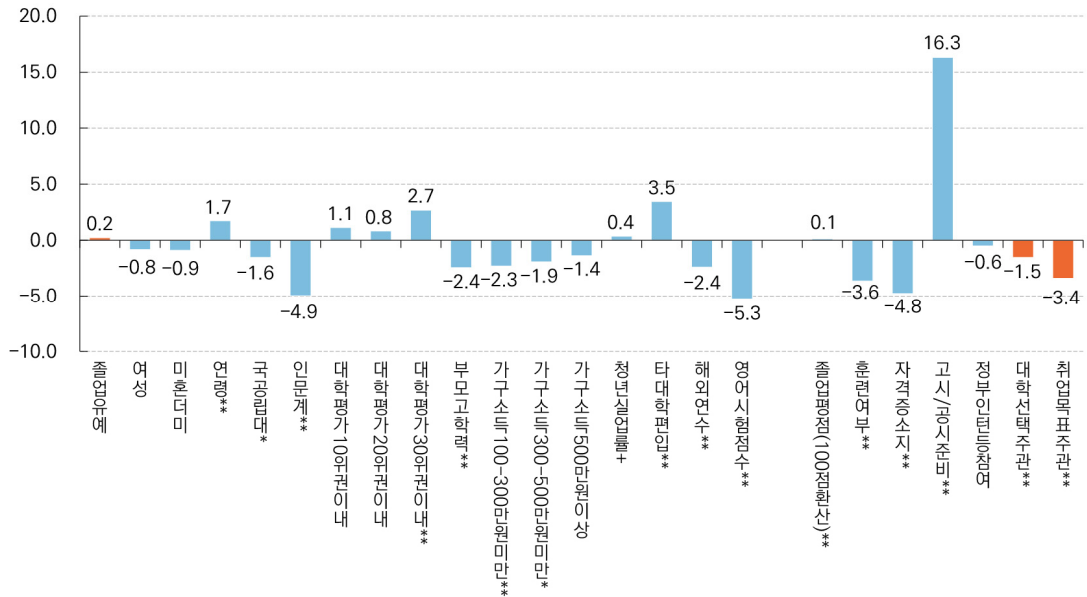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a) 복수전공 포함



주: + $p<0.10$, * $p<0.05$, ** $p<0.01$

(b) 복수전공 제외



주: + $p<0.10$, * $p<0.05$, ** $p<0.01$

【그림 IV-5】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계효과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로소득에는 졸업유예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표 IV-5-1>과 <표 IV-5-2>는 취업확률 모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졸업유예 유형에 따른 취업한 일자리의 (로그)월평균소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것이다. 통제변수들은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취업여부에 있어서 선택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¹⁹⁾.

<표 IV-5-1>의 모형 5를 기준으로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취업확률 모형과 달리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이 높다. 개인특성 중 여성은 남성보다 미혼은 기혼보다 소득이 낮았고, 상대적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으로는 국공립대가 사립대 출신보다 22.5% 정도 월평균소득이 높은 반면, 인문계는 7.8%정도의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소재지별 월소득차이는 서울(기준 더미) 대비 경인권 -6.0% > 동남권 -6.6% > 대경권 -8.8% > 충청권 -10.6% > 호남권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개인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산업 및 직업, 사업체 종류 및 규모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의 차이는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서열 효과 역시 기준더미(30위권 밖)보다 10위권 이내 15.4% > 20위권 이내 10.1% > 30위권 이내 7.3%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스펙 중에서는 앞서 졸업유예 및 취업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았던 해외연수가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학시험, 복수전공, 졸업평점 역시도 월평균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대학편입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낙인효과 혹은 차별에 기인한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자격증, 고시/공시 준비,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은 대부분 월평균 소득에는 통계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자는 인적특성만을 통제했을 때 비유예자보다 월평균소득이 7.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우선 졸업유예를 대학진학에서의 자의식 정도에 따라 세분한 경우 졸업유예자이면서 대학선택을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소득이 높았다. 즉 동일한 졸업유예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대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실과 타협(성적, 학교명성에 맞추거나 부모, 선생님 등 지인의 권유에 따른 경우)한 경우에 역설적이게도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19)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 모형(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Model)의 1단계 프로비트(Probit) 추정모형에서의 투입변수들 대부분은 앞서 취업확률 모형에서 적용된 것으로 결과의 제시는 생략하였음.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졸업유예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선택에서 현실에 타협한 경우 졸업유예자보다 2-2.5% 정도의 높은 월평균소득을 얻는다는 점도 흥미롭다.

취업목표 여부에 따라 졸업유예자를 세분한 경우 훨씬 뚜렷한 결과가 나타난다. 졸업유예자이면서 취업목표가 뚜렷한 경우를 기준으로, 졸업유예를 하지 않았지만 취업목표가 뚜렷한 경우가 2.4%(<표 IV-5-2>의 모형 5)정도 더 낮은 소득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 졸업유예이면서 취업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5.7%, 졸업유예도 하지 않으면서 취업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7.2% 더 낮은 소득을 얻었다.

마지막 집단, 즉 졸업유예도 하지 않으면서 취업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집단은 개인의 인적특성만을 통제한 경우(<표 IV-5-2>의 모형 2), 최대 15.3%나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졸업유예를 학교의 서열이나 지역, 개인의 다양한 취업 포트폴리오 형성과정에서 귀결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하나의 단계로 보았을 때,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향후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에도 노동시장 성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5-1 대학 졸업유예-대학진학 자의식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

(a) 복수전공 포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졸업 유예		0.073**	(10.344)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46**	(3.581)	0.044**	(3.539)	0.044**	(3.570)	0.043**	(3.428)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69**	(-5.793)	-0.019	(-1.594)	-0.012	(-1.041)	-0.016	(-1.341)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25*	(-2.201)	0.019+	(1.710)	0.022*	(2.021)	0.019+	(1.731)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156**	(-19.505)	-0.155**	(-19.538)	-0.168**	(-21.224)	-0.175**	(-21.984)	-0.183**	(-22.796)
	미혼 더미	-0.069**	(-5.318)	-0.070**	(-5.440)	-0.077**	(-5.919)	-0.083**	(-6.469)	-0.081**	(-6.333)
	연령	0.045**	(20.033)	0.045**	(19.857)	0.037**	(16.277)	0.037**	(15.801)	0.035**	(14.834)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25**	(3.514)	0.026**	(3.731)	0.022**	(3.175)
	기준=서울										
	경인권					-0.071**	(-7.871)	-0.063**	(-6.993)	-0.060**	(-6.593)
	충청권					-0.122**	(-12.661)	-0.106**	(-10.569)	-0.106**	(-10.517)
	호남권					-0.124**	(-10.132)	-0.107**	(-8.578)	-0.109**	(-8.674)
	대경권					-0.095**	(-9.059)	-0.087**	(-8.249)	-0.088**	(-8.265)
	동남권					-0.071**	(-7.021)	-0.067**	(-6.667)	-0.066**	(-6.515)
	기타					-0.170**	(-12.302)	-0.152**	(-10.496)	-0.152**	(-10.552)
	인문계열					-0.070**	(-8.478)	-0.087**	(-10.495)	-0.082**	(-9.793)
	기준 = 30위권 밖										
가족 배경	10위권 이내					0.164**	(16.508)	0.158**	(15.827)	0.154**	(15.481)
	20위권 이내					0.119**	(13.935)	0.104**	(12.141)	0.101**	(11.802)
	30위권 이내					0.076**	(8.454)	0.072**	(8.060)	0.073**	(8.114)
	부모 고학력 더미					0.004	(0.638)	-0.002	(-0.271)	-0.001	(-0.243)
	100만원 미만										
가족 배경	100-300만원 미만					-0.045**	(-4.965)	-0.044**	(-4.858)	-0.044**	(-4.850)
	300-500만원 미만					0.001	(0.073)	-0.002	(-0.206)	-0.002	(-0.177)
	500만원 이상					0.059**	(5.676)	0.051**	(4.937)	0.051**	(4.995)
	청년 실업률							0.050**	(3.335)	0.049**	(3.314)
취업 스펙	편입더미							-0.074**	(-8.823)	-0.083**	(-9.796)
	해외연수							0.055**	(7.698)	0.052**	(7.229)
	어학시험여부							0.026**	(3.115)	0.014+	(1.711)
	복수/연계전공							0.002**	(5.276)	0.002**	(4.459)
	졸업평점(100점환산)							0.008**	(3.119)	0.008**	(3.206)
	훈련여부									0.009	(1.500)
	자격증소지									-0.045**	(-6.188)
	고시/공시준비									-0.103**	(-11.262)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08	(0.942)
	상수	4.404**	(66.640)	4.462**	(65.531)	4.666**	(66.303)	4.451**	(47.101)	4.778**	(48.348)
사례 수		44,787		44,787		44,787		44,787		44,787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b) 복수전공 제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졸업 유예		0.072**	(8.404)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53**	(3.361)	0.048**	(3.167)	0.048**	(3.184)	0.045**	(2.984)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61**	(-4.263)	-0.018	(-1.284)	-0.014	(-0.976)	-0.018	(-1.272)
졸업유예 × * 진학의식 ×				-0.021	(-1.551)	0.017	(1.282)	0.019	(1.424)	0.015	(1.114)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165**	(-18.014)	-0.164**	(-17.947)	-0.169**	(-18.675)	-0.173**	(-18.962)	-0.182**	(-19.716)
	미혼 더미	-0.065**	(-4.827)	-0.066**	(-4.921)	-0.070**	(-5.313)	-0.078**	(-5.866)	-0.075**	(-5.703)
	연령	0.045**	(17.997)	0.045**	(17.860)	0.038**	(14.773)	0.038**	(14.445)	0.036**	(13.433)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23**	(3.068)	0.024**	(3.136)	0.020**	(2.650)
	기준=서울										
	경인권					-0.061**	(-5.646)	-0.055**	(-5.118)	-0.052**	(-4.773)
	충청권					-0.114**	(-10.195)	-0.102**	(-8.756)	-0.101**	(-8.661)
	호남권					-0.114**	(-8.116)	-0.101**	(-7.007)	-0.102**	(-7.087)
	대경권					-0.095**	(-7.593)	-0.087**	(-6.925)	-0.085**	(-6.972)
	동남권					-0.063**	(-5.628)	-0.063**	(-5.612)	-0.061**	(-5.440)
	기타					-0.169**	(-11.469)	-0.153**	(-9.972)	-0.153**	(-10.017)
	인문계열					-0.096**	(-8.811)	-0.108**	(-9.868)	-0.104**	(-9.401)
	기준 = 30위권 밖										
가족 배경	10위권이내					0.166**	(13.451)	0.158**	(12.752)	0.154**	(12.426)
	20위권이내					0.116**	(11.666)	0.101**	(10.111)	0.099**	(9.877)
	30위권이내					0.083**	(8.289)	0.077**	(7.683)	0.077**	(7.732)
	부모 고학력 더미					-0.003	(-0.415)	-0.007	(-1.121)	-0.007	(-1.130)
	100만원 미만										
가족 배경	100-300만원 미만					-0.044**	(-4.240)	-0.043**	(-4.154)	-0.043**	(-4.133)
	300-500만원 미만					0.004	(0.359)	0.001	(0.082)	0.001	(0.074)
	500만원 이상					0.060**	(4.984)	0.052**	(4.366)	0.052**	(4.355)
	청년 실업률							0.007**	(2.702)	0.008**	(2.779)
취업 스펙	편입더미							0.055**	(3.361)	0.053**	(3.274)
	해외연수							-0.076**	(-7.801)	-0.085**	(-8.625)
	어학시험여부							0.055**	(6.791)	0.051**	(6.256)
	복수/연계전공										
	졸업평점(100점환산)							0.002**	(4.818)	0.002**	(4.103)
	훈련여부									0.007	(1.088)
	자격증소지									-0.044**	(-5.439)
정부 프로그램	고시/공시준비									-0.108**	(-10.053)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02	(0.195)
	상수	4.381**	(59.320)	4.431**	(58.073)	4.615**	(57.849)	4.396**	(41.211)	4.746**	(42.227)
사례 수		34,962		34,962		34,962		34,962		34,962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표 IV-5-2 대학 졸업유예-취업목표 의식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

(a) 복수전공 포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졸업 유예		0.073**	(10.344)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92**	(-7.282)	-0.072**	(-5.986)	-0.065**	(-5.470)	-0.056**	(-4.712)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77**	(-8.697)	-0.027**	(-3.160)	-0.022*	(-2.558)	-0.024**	(-2.843)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153**	(-16.967)	-0.090**	(-10.153)	-0.079**	(-8.945)	-0.072**	(-8.110)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156**	(-19.505)	-0.156**	(-19.596)	-0.168**	(-21.249)	-0.175**	(-21.886)	-0.182**	(-22.618)
	미혼 더미	-0.069**	(-5.318)	-0.070**	(-5.441)	-0.077**	(-5.933)	-0.082**	(-6.469)	-0.081**	(-6.330)
	연령	0.045**	(20.033)	0.045**	(20.147)	0.038**	(16.519)	0.037**	(16.015)	0.035**	(15.104)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26**	(3.669)	0.027**	(3.882)	0.024**	(3.402)
	기준=서울										
	경인권					-0.070**	(-7.833)	-0.063**	(-6.956)	-0.060**	(-6.595)
	충청권					-0.120**	(-12.492)	-0.104**	(-10.415)	-0.104**	(-10.414)
	호남권					-0.122**	(-10.022)	-0.105**	(-8.466)	-0.107**	(-8.582)
	대경권					-0.095**	(-9.004)	-0.087**	(-8.194)	-0.087**	(-8.213)
	동남권					-0.063**	(-6.300)	-0.061**	(-6.060)	-0.061**	(-6.024)
	기타					-0.166**	(-11.993)	-0.148**	(-10.187)	-0.149**	(-10.282)
	인문계열					-0.064**	(-7.717)	-0.081**	(-9.678)	-0.077**	(-9.174)
	기준 = 30위권 밖										
가족 배경	10위권 이내					0.164**	(16.396)	0.158**	(15.759)	0.155**	(15.446)
	20위권 이내					0.117**	(13.801)	0.103**	(12.037)	0.101**	(11.745)
	30위권 이내					0.075**	(8.348)	0.072**	(7.987)	0.072**	(8.051)
	부모 고학력 더미					0.002	(0.293)	-0.003	(-0.552)	-0.003	(-0.489)
	100만원 미만										
가족 배경	100-300만원 미만					-0.045**	(-4.925)	-0.044**	(-4.809)	-0.044**	(-4.807)
	300-500만원 미만					0.001	(0.128)	-0.001	(-0.148)	-0.001	(-0.146)
	500만원 이상					0.058**	(5.627)	0.050**	(4.915)	0.051**	(4.978)
	청년 실업률							0.054**	(3.638)	0.054**	(3.599)
취업 스펙	편입더미							-0.074**	(-8.816)	-0.082**	(-9.716)
	해외연수							0.052**	(7.334)	0.050**	(7.050)
	어학시험여부							0.021*	(2.508)	0.011	(1.371)
	복수/연계전공							0.002**	(4.449)	0.002**	(3.796)
	졸업평점(100점환산)							0.008**	(3.402)	0.008**	(3.421)
	훈련여부									0.013*	(2.144)
	자격증소지									-0.040**	(-5.495)
	고시/공시준비									-0.093**	(-10.197)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06	(0.698)
	상수	3,922**	(8.095)	4,505**	(66,256)	4,701**	(66,934)	4,499**	(47,686)	4,780**	(48,493)
사례 수		44,787		44,787		44,787		44,787		44,787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b) 복수전공 제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졸업 유예		0.072**	(8.404)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83**	(-5.422)	-0.063**	(-4.313)	-0.057**	(-3.913)	-0.048**	(-3.281)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074**	(-6.859)	-0.028**	(-2.717)	-0.024*	(-2.318)	-0.027*	(-2.564)
졸업유예 × * 취업목표 ×				-0.148**	(-13.589)	-0.089**	(-8.440)	-0.081**	(-7.614)	-0.073**	(-6.887)
개인 특성	여성 더미	-0.165**	(-18.014)	-0.164**	(-17.959)	-0.169**	(-18.679)	-0.172**	(-18.902)	-0.180**	(-19.596)
	미혼 더미	-0.065**	(-4.827)	-0.066**	(-4.949)	-0.071**	(-5.351)	-0.078**	(-5.888)	-0.075**	(-5.722)
	연령	0.045**	(17.997)	0.045**	(18.021)	0.039**	(14.933)	0.039**	(14.592)	0.036**	(13.639)
대학 특성	국립대학					0.024**	(3.239)	0.025**	(3.325)	0.022**	(2.885)
	기준=서울										
	경인권					-0.062**	(-5.671)	-0.056**	(-5.127)	-0.052**	(-4.799)
	충청권					-0.113**	(-10.059)	-0.100**	(-8.621)	-0.099**	(-8.570)
	호남권					-0.112**	(-8.017)	-0.099**	(-6.905)	-0.100**	(-7.002)
	대경권					-0.093**	(-7.524)	-0.086**	(-6.856)	-0.087**	(-6.903)
	동남권					-0.057**	(-5.052)	-0.057**	(-5.097)	-0.057**	(-5.032)
	기타					-0.165**	(-11.183)	-0.149**	(-9.692)	-0.149**	(-9.778)
	인문계열					-0.089**	(-8.158)	-0.102**	(-9.243)	-0.099**	(-8.937)
	기준 = 30위권 밖										
가족 배경	10위권이내					0.166**	(13.365)	0.159**	(12.711)	0.155**	(12.416)
	20위권이내					0.116**	(11.677)	0.101**	(10.128)	0.099**	(9.920)
	30위권이내					0.082**	(8.141)	0.076**	(7.589)	0.077**	(7.654)
	부모 고학력 더미					-0.005	(-0.700)	-0.009	(-1.368)	-0.009	(-1.339)
	100만원 미만										
가족 배경	100-300만원 미만					-0.044**	(-4.234)	-0.043**	(-4.134)	-0.043**	(-4.120)
	300-500만원 미만					0.004	(0.387)	0.001	(0.124)	0.001	(0.090)
	500만원 이상					0.059**	(4.926)	0.051**	(4.333)	0.051**	(4.324)
	청년 실업률							0.008**	(2.896)	0.008**	(2.915)
취업 스펙	편입더미							0.059**	(3.628)	0.058**	(3.525)
	해외연수							-0.076**	(-7.796)	-0.084**	(-8.570)
	어학시험여부							0.052**	(6.395)	0.049**	(6.054)
	복수/연계전공										
	졸업평점(100점환산)							0.002**	(4.114)	0.002**	(3.542)
	훈련여부									0.011	(1.598)
	자격증소지									-0.040**	(-4.856)
정부 프로그램	고시/공시준비									-0.099**	(-9.200)
	정부취업프로그램 참여									-0.001	(-0.054)
	상수	4.381**	(59.320)	4.482**	(58.691)	4.654**	(58.436)	4.447**	(41.731)	4.751**	(42.384)
사례 수		34,962		34,962		34,962		34,962		34,962	

주1: + p<0.10, * p<0.05, ** p<0.01

주2: t-통계량은 Robust S.E.로부터 도출된 수치임.

주3: 연도 더미는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생략

3. 대학별 졸업유예자 규모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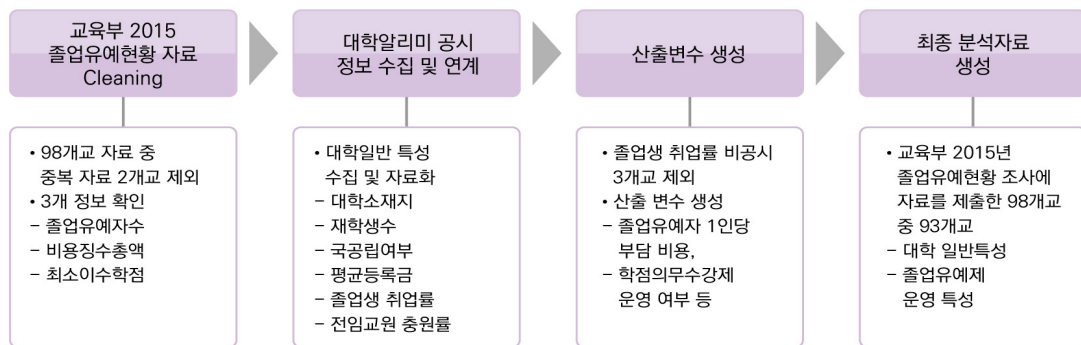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졸업유예제도 운영 98개교 자료(2015년 졸업유예현황 자료)의 세 가지 정보 (①졸업유예자수, ②총 징수금액, ③의무이수 최소학점 정보)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이들 대학의 일반 특성 정보(①소재지, ②재학생수, ③국·공립여부, ④2015년 평균등록금, ⑤졸업생 취업률, ⑥전임교원 총원률 등)를 연계하여 분석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졸업유예 운영대학의 졸업유예자 규모 및 1인당 비용 부과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함.
- 대학별 졸업유예자 수에는 재학생수와, 전임교원총원률이 정(+)의 영향을, 졸업생취업률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배들의 취업률이 낮을 경우 졸업을 앞둔 후배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졸업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선택은 전임교원총원률이 높은 대규모 대학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졸업유예자 1인당 평균 부담 비용에는 서울 및 수도권소재, 의무수강제 운영, 졸업유예 총 징수금액이 모두 정(+)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의무수강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유예에 따른 비용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1) 분석 자료 및 방법

앞서 GOMS자료를 사용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요인 및 졸업유예의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하나의 덩어리로 드러난 졸업유예 집단의 형성과 그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분석에서는 졸업유예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체임과 동시에 졸업유예를 둘러싼 쟁점의 한 가운데 있는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 등은 자료의 제한으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자체 조사한 ‘2015년 졸업유예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학별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자의 비용 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교육부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더하여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각 대학의 정보를 추출하여 연계한 자료를 생성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는데, 왜냐하면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2015 졸업유예현황’에는 교육부 조사 당시 자료를 제출한 대학 중 졸업유예제를 운영하고 있는 98개교의 ①졸업유예자 수, ②총 징수금액, ③의무이수 최소 학점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IV-6】 분석 자료의 생성 과정

그와 같은 자료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98개 대학의 공시 자료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①대학소재지, ②재학생수, ③국공립여부, ④2015년 평균등록금, ⑤졸업생 취업률, ⑥전임교원 총원률 등)를 추출하여 연계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후 졸업유예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조합하여 졸업유예자 1인당 부담 비용과 학점의무수강제 운영 여부 등 산출변수를 생성하였으며, 98개 대학 중 교육부 자료에 중복되어 있던 2개교와 공시된 졸업생 취업률 정보가 없는 3개교가 제외된 총 93개교를 최종 분석 자료로 구축·생성하였다. 이 자료에 포함된 분석 변수들은 크게 두 가지, 즉 대학알리미를 통해 수집된 대학의 일반특성 변수와 교육부에서 제공받은 졸업유예현황 자료를 통해 생성한 졸업유예제도 운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졸업유예자 수와 졸업유예자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은 다중회귀분석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2) 졸업유예자 수 및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졸업유예자의 수가 대학의 특성과 제도 운영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특성에 따른 평균 졸업유예자 수를 산출하고 각 특성의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과 GLM-검증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표 IV-6>분석 대상 93개교의 2015년 평균 졸업유예자의 수는 270.9명이며, 대학의 소재지와 재학생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6 대학특성별 졸업유예자수 비교

(단위: 개교, %, 명, 학점, 만원)

특성 ^{주)}			전체	평균 졸업유예자수 (표준편차)	t-test/ GLM-test
			빈도 (비율)		
전체			93 (100.0)	270.9(344.2)	
대학 일반 특성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17 (18.3)	183.7(214.4)	1.16*
		그 외 지역	76 (81.7)	290.4(365.2)	
	재학생 규모	5천명 미만	26 (27.9)	63.0(77.2)	27.6***
		5천~1만명 미만	42 (45.2)	200(177.5)	
		1만명 이상	25 (26.9)	606(470.6)	
		평균(표준편차)	7,839.2 (4,469.5)	—	
	설립주체	국·공립	22 (23.7)	357.6(404.0)	0.17
		사립	71 (76.3)	244.1(321.9)	
	연평균 등록금	500만원 미만	20 (21.5)	389.2(410.7)	2.10
		500~700만원 미만	38 (40.9)	276.6(403.7)	
		700만원 이상	35 (37.6)	197.1(187.0)	
		평균(표준편차)	6,380.0 (1,415.1)	—	
	졸업생 취업률	50%미만	32 (34.4)	356.2(384.4)	1.64
		50%이상	61 (65.6)	226.1(315.2)	
		평균(표준편차)	52.7 (1.2)	—	
	전임교원 총원률	70%미만	32 (34.4)	283.5(330.6)	0.25
		70%이상	61 (65.6)	364.3(353.6)	
		평균(표준편차)	81.1 (3.5)	—	
졸업 유예 제도 운영 특성	졸업유예 시 의무수강	없음	36 (38.7)	360.3(400.1)	1.89
		있음	57 (61.3)	214.4(293.5)	
	의무수강 최소 학점	평균(표준편차)	0.7 (0.7)	—	
	졸업유예 시 납입 비용	없음	16 (17.2)	216.8(265.1)	0.69
		있음	77 (82.8)	282.1(358.8)	
	졸업유예자 1인당 납입액	평균(표준편차)	30.9 (37.0)	—	
	졸업유예자 총 납입액	평균(표준편차)	5,895.8 (1,135.1)	—	

주: 2015년 기준 자료임.

*** p<.001, ** p<.01, * p<.05

선행연구와 앞서 GOMS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서울지역 대학에서 졸업유예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재학생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졸업유예자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의 경우 평균 63명으로 100명 미만의 수준을 보이나, 재학생 수가 1만명 미만의 규모의 대학의 경우 평균 200명이며, 재학생 1만명 이상의 큰 규모의 대학들은 평균 606명에 이르러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들 중 서울지역의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의 대학들에서 졸업유예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유예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소재지와 재학생 규모가 대학의 졸업유예자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가? 또 대학의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특성은 졸업유예자의 수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별 졸업유예자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모델로 분석하였다.

표 IV-7 졸업유예자 수 결정요인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대학 일반특성	소재지(서울 및 수도권)	18.55 (105.17)
	대학설립주체(국·공립)	-224.14 (194.68)
	로그 총 재학생수	294.18 (48.69)***
	연평균 등록금	-0.087 (0.06)
	졸업생 취업률	-5.83 (2.75)*
	전임교원 총원률	2.57 (1.19)*
졸업유예 제도운영특성	의무수강여부(의무)	-76.70 (61.41)
	상수	-1546.79 (451.11)**
	N	93
	F	7.89***
	Adj. R ²	0.34

*** p<.001, ** p<.01, * p<.05

분석 결과, 재학생 수와 전임교원 충원률이 졸업유예자의 수에 정(+)의 영향을, 졸업생 취업률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에 비해 졸업유예자 수가 많고, 대학의 전임교원의 수가 많아 충원률이 높을수록 졸업유예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반면, 대학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의 수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배들의 취업률이 낮을 경우 졸업을 앞둔 후배들이 이를 준거로 삼아 졸업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선택은 전임교원의 충원률이 높은 대규모 대학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졸업유예자 수에 이어 다음에서는 졸업유예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슈이자 갈등으로 드러난 쟁점사항인 비용부담의 결정요인을 대학별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징수한 총금액과, 졸업유예자 1인당 납부 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유예자의 수 결정요인의 분석과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의 소재지와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의무수강제의 운영은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징수한 총금액과 졸업유예자 1인당 평균 납부 금액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추가적으로 재학생 수가 많은 대학들이 총 징수금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할 시, 감당해야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졸업유예 신청을 허가하면서 학점 이수를 의무화 하는 의무수강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IV-8 졸업유예자 비용 부담의 결정요인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대학 총 징수 금액	졸업유예자 1인당 평균 납부 금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대학 일반특성	소재지(서울 및 수도권)	3.13 (1.35)*	1.89 (0.81)*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75 (2.87)	0.42 (1.71)
	로그 총 재학생수	1.67 (0.76)*	0.59 (0.45)
	연평균 등록금	-4.10 (5.11)	-1.17 (3.05)
	졸업생 취업률	0.06 (0.03)	0.04 (0.02)
	전임교원 총원률	0.01 (0.02)	0.01 (0.01)
졸업유예 제도운영특성	의무수강여부(의무)	1.99 (0.82)*	1.21 (0.49)*
	졸업유예자수	0.00 (0.01)	-0.00 (0.00)
상수		23.54 (41.43)	5.81 (24.73)
N		93	93
F		3.55**	2.78**
Adj. R ²		0.18	0.13

** p<.01, * p<.05

제 V 장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실태 : 실태조사 자료 분석

1. 조사개요
2.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
3.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4.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5.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제 V 장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실태 : 실태조사 분석*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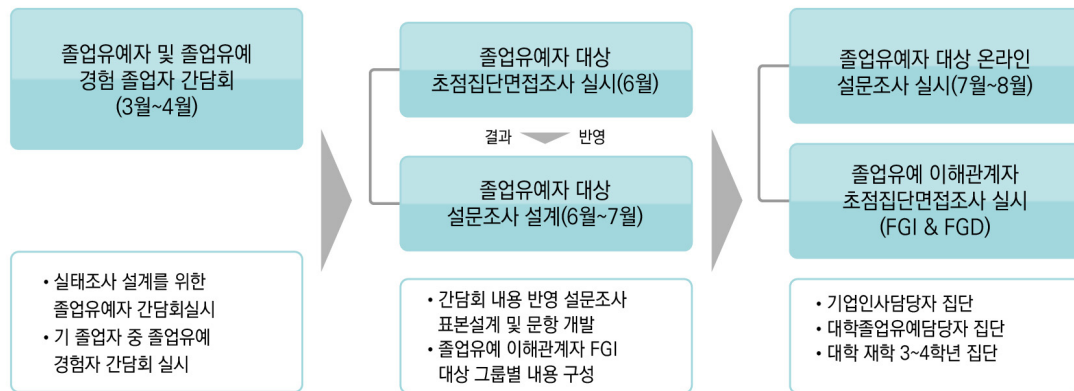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졸업유예의 원인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하고자,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졸업유예자 및 졸업유예 경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 졸업유예 당사자집단 초점집단면접조사 →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 → 기업인사담당자, 대학담당자, 3~4학년재학생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유기적 연계성을 갖는 단계적 추진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전국 4년제 일반대학에서 2016년 6월 시점 현재, 졸업학점미수 및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한 자와 학점 외 요건을 채우지 않은 수료자 1,002명이 졸업유예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수집되었으며, 이들이 응답한 ①개인특성과, ②졸업유예 사유 및 목적, ③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내용, ④졸업유예학기의 생활, ⑤이해주체에 대한 인식과 지원욕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졸업유예자의 특성과 실태가 분석되었음.
- 총 38명이 참여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는 크게 졸업유예 당사자, 기업인사담당자, 대학담당자, 대학3~4학년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은 참여자들의 특성과 수를 고려하여 다시 7개의 세부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구성한 후 하위집단별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1) 실태조사 추진 과정

앞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 경험의 영향 요인 및 그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학별 졸업유예자 수와 졸업유예자 비용 부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 분석만으로는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원인과 실태, 그리고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학의 제도 운영과의 관련성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로 구성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집필하였음.



【그림 V-1】 실태조사 추진 과정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이제까지 졸업유예의 현상과 졸업유예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는 실태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본 연구가 갖는 시간 및 예산 제약 하에서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현실 밀착도 높은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졸업유예자와 졸업유예 경험을 갖는 기 졸업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실태조사의 첫 번째 단계인 간담회에서는 현 시점의 졸업유예자와 졸업 전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이들의 생생한 직접 경험과 주변 친구들을 통한 간접 경험의 내용을 청취하고, 이로써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사회·구조 및 대학의 제도적 환경,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특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간담회에서 파악된 내용은 졸업유예자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는데 반영되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원인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기계적으로 양분하여 병렬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졸업유예자 집단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문항으로 개발하여 설문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 체감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실마리를 얻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추진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과정에서 얻은 실태관련 정보들을 구조화된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동시에 초점집단면접조사 진행 기간에 개발된 설문조사의 조사표 초안을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졸업유예자들이 검토하고 수정·보완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의

조사표 작성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실감 높은 조사내용을 설계하고 문항을 구성하는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계된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를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하고, 자료 수집하는 기간에 졸업유예 현상의 주요 이해 주체들, 즉 기업과 대학관계자 그리고 대학 3~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졸업유예자들이 기업, 대학, 그리고 같은 학교 재학 후배들에게 갖는 인식에 대한 이들 집단의 의견을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된 본 연구의 실태조사의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 및 주요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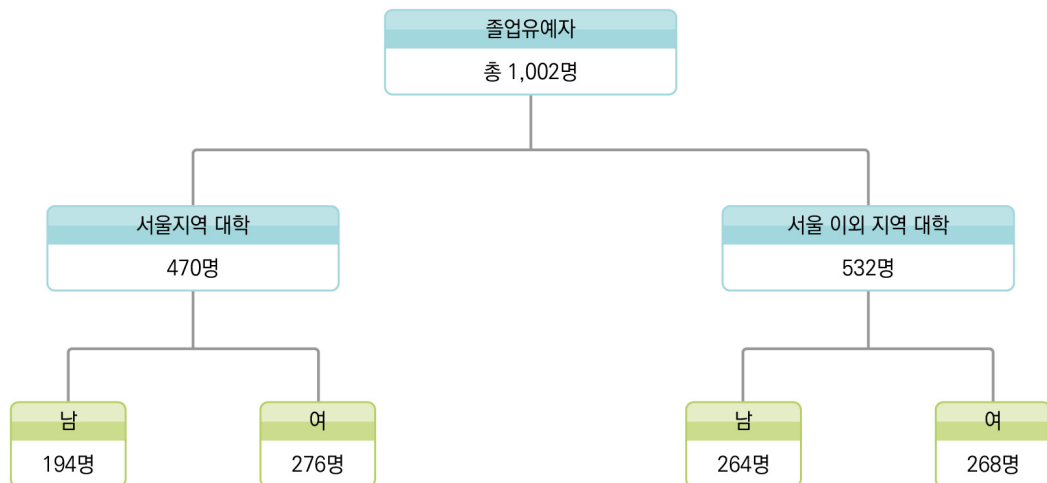
2) 설문조사

(1) 표본 구성

본 연구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²⁰⁾에서 2016년 6월 시점 현재,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자이다.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본 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자는 졸업학점 이수 및 학점 이외 졸업요건(논문, 어학점수, 자격증, 봉사활동 등)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한 자와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학점 이외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일명 수료자이다. 조사대상자에 수료자를 포함한 이유는 졸업유예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예 운영하지 않는 대학들에서는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이수를 연기하는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 범주에 편입되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졸업유예자에 대한 표집 틀(sampling frame)은 존재하지 않아 표본 추출에 있어 체계적 확률표집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2차 자료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의 소재지(서울지역 5: 서울 이외 지역 5)와 졸업유예자의 성별(남4: 여6)에 대한 대략적인 할당 비율만을 준거로 표본 수를 할당하고 [그림 V-2]와 같이 수집하였다.

20) 2016년 6월 현재,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kr/> 2016.06.20 검색)’에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191개 4년제 일반대학(공립 17개교, 국립 29개교, 사립 161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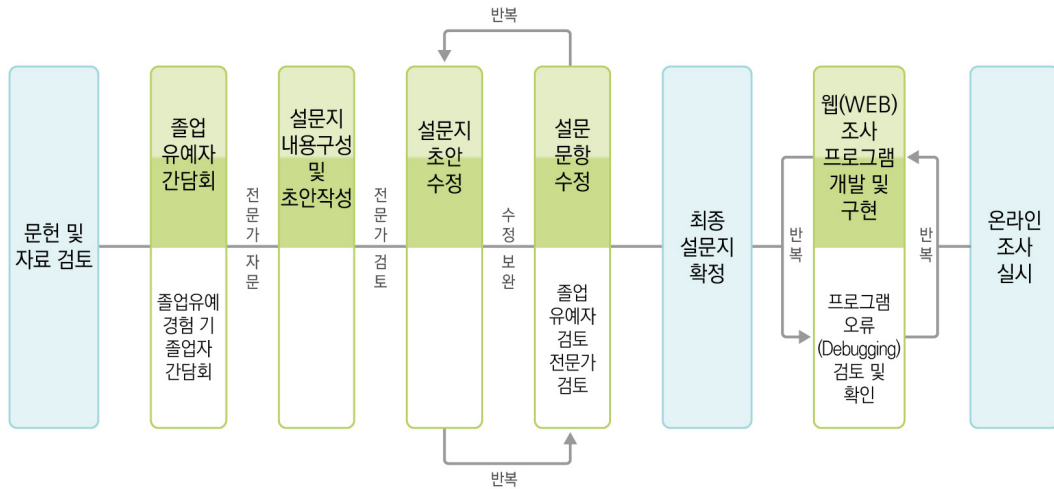
【그림 V-2】 최종 표본의 구성

(2) 조사 도구 및 방법

① 조사도구의 개발 및 자료수집 방법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도구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대학생 졸업유예와 관련한 문헌자료의 고찰에 기초하여 구성되었고, 기존 20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2차 자료의 설문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문항이 초안으로 작성되었다. 작성된 조사표 초안은 대학생 졸업유예 연구 유경험자, 조사연구 전문가, 대학연구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1차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수정된 조사표는 자문위원들의 반복 검토와 졸업유예자 집단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15명의 참여자들의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2차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후, 자문위원들의 검토 확인을 거쳐 최종 조사표가 확정되었다.

완성된 최종 조사표는 웹(Web)기반 온라인 조사의 구현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며, 조사 응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debugging)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되었다. 이로써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개발된 조사표와 웹 프로그램으로 2016년 6월~8월 동안 양적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V-3】 조사도구 개발 과정 및 자료수집 방법

개발된 웹 프로그램에는 조사표에 포함되지 않은 4개의 문항(출생년도, 학력, 대학, 졸업유예 상태)이 도구적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들 문항은 온라인 조사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이들이 본 연구의 설문 조사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사전 판별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 첫 번째 출생년도는 현행 청년정책 연령 범주인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이들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기 위한 거름망이고, 두 번째 학력은 현재 4년제 대학에 소속된 이들만을 거르기 위함이며, 세 번째 대학은 2016년 6월 기준 ‘대학알리미’에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일반대학 소속자를 조사대상자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또 네 번째 졸업유예상태 문항은 대학마다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졸업연기’, ‘졸업유보’, ‘졸업연장’, ‘연한초과’, ‘미졸업 초과학기 등록’ 상태에 있는 이들이 용어로 인하여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판별된 1,009명이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였으나, 응답 자료 중 7명의 자료에서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문항의 문항 간 또는 항목 간 응답 값의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에 다각적으로 검토 후 논의를 거쳐 7명의 자료를 제외한 1,002명의 자료만을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로 최종 확정하였다.

②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작성 근거

설문문항은 대학 졸업유예를 선택한 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어떠한 원인과 사유에 의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소속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와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을 비롯하여 졸업유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졸업유예 당사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①개인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소속대학 특성, 대학재학 중 경험, 심리·정서특성), ②졸업유예 사유 및 목적, ③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내용(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의무수강제도 운영 및 비용 부과, 의무수강제도와 비용부과에 관한 인식 등), ④졸업유예학기의 생활(구직활동, 생활의 어려움, 졸업유예기간 연장), ⑤이해주체에 대한 인식과 지원욕구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응답편의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 조사표에 6가지 영역(①배경문항, ②사유 및 목적, ③소속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④현재 생활, ⑤심리·정서, ⑥주체 간 시각차 인식 및 지원 욕구)으로 구분되어 반영되었다. 각 문항은 연구진이 작성하거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개발된 문항을 발췌 또는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으며, 문항 작성의 근거와 함께 <표 V-1>에 제시하였다.

표 V-1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작성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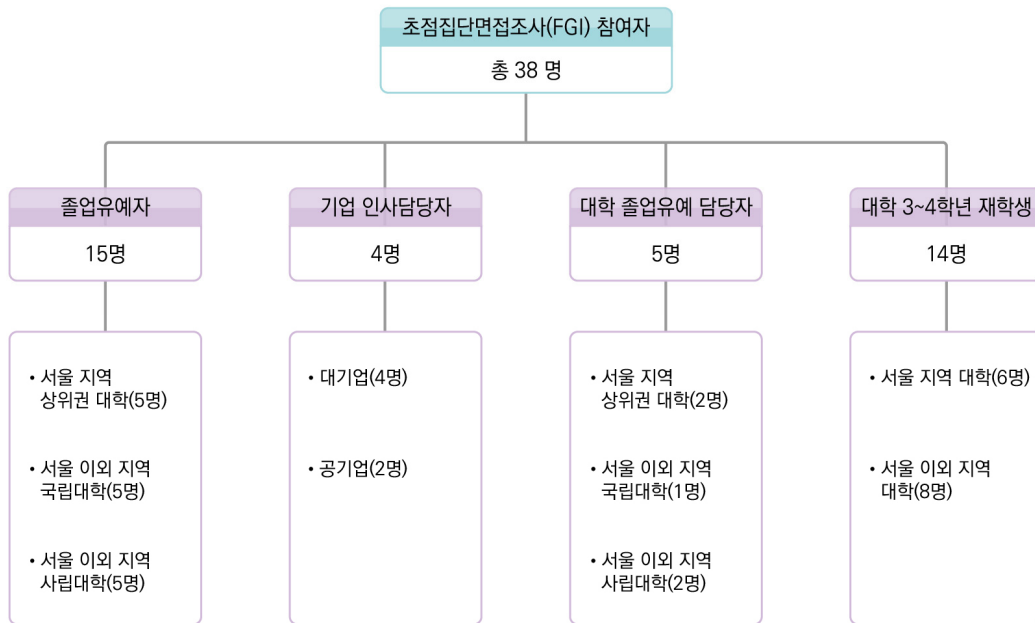
구분	문항내용	문항번호	출처
배경 문항	• 졸업연기자 여부 • 학점 외 졸업요건 충족, 미충족 상태 • 출생연도 • 성별 • 군복무 경험 • 소속대학 • 소속대학 소재지 • 국·공립, 사립 • 입학/편입연도 • 전공계열 • 군복무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경험 • 휴학을 하게 된 주된 사유 • 휴학했던 총 학기 • 복수전공 여부	SQ1 SQ1-1 SQ2 SQ3 SQ3-1 SQ4 SQ4-1 SQ4-2 SQ4-3 SQ5 SQ6 SQ6-1 SQ6-2 SQ7	• 연구진 작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번호	출처
	• 복수전공자의 수업연한 • 학자금 대출 여부 • 학자금 대출 종류와 대출금 및 상환금액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 학기 • 졸업유예를 신청하기 직전학기의 등록금액 • 부모님의 대략적인 월평균 소득	SQ7-1 SQ8 SQ8-1 SQ8-2 SQ9 SQ10	
사유 및 목적	• 졸업유예 선택사유(17) • 졸업유예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 유무 • 구체적인 계획 • 졸업유예 권유 또는 추천한 사람 유무 • 졸업유예 권유 또는 추천자	문1 문2 문2-1 문3 문3-1	• 졸업유예자 간담회, 콜로키움(Ⅱ) 논의 내용, FGI 내용 기초로 연구진 작성
소속 대학의 졸업 유예 제도 운영 방식	• 소속대학의 공식적인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 졸업유예 허용 학기 • 현재 졸업유예 상태 • 소속대학의 의무수강제도 여부 • 의무수강 최소학점 • 이번 학기(2016년 1학기) 신청 학점 • 졸업유예 시 선택한 강의 • 졸업유예 선택 시 의무수강제도의 장벽으로써 영향력 • 의무수강제도 필요 정도 • 의무수강제도 도움 정도 • 소속대학에서 졸업유예자가 희망하는 개설강의 수강여부 • 소속대학은 졸업유예 신청비 비용 부과 여부 • 졸업유예 신청 시 지불 비용의 금액 • 비용 충당 방법 • 소속대학의 졸업유예 신청 시 부과 비용 산정 기준 • 졸업유예 등록금 부과가 졸업유예 선택 망설임 정도 • 졸업유예 등록금이 경제적 부담 정도 • 소속대학의 졸업유예 등록금 부과 하는 주된 사유 • 졸업유예자에게 부과하는 한 학기 적정 비용 • 졸업유예자에게 도서관 이용료 부과 여부 • 도서관 이용료 부과 방식 • 졸업유예자에게 장학금 지급 여부 •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최대한도 • 졸업유예자에게 제한하거나 우선시 하는 것 • 졸업유예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여부	문6 문6-1 문6-2 문7 문7-1 문7-2 문7-3 문7-4 문7-5 문7-6 문7-7 문8 문8-1 문8-2 문8-3 문8-4 문8-5 문8-6 문8-7 문9 문9-1 문10 문10-1 문11 문12	• 문헌고찰, 졸업유예자 간담회 및 FGI 내용 기초로 연구진 작성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하고자 졸업유예를 둘러싼 다 주체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는 크게 네 집단(①졸업유예 당사자 집단, ②대출 신규 채용을 담당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집단, ③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담당자 집단, ④3~4학년 재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었고, 참여자의 수는 총 38명이다.



【그림 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실감 높은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및 문항 작성을 위하여 졸업유예자 집단에 대한 초점 집단면접조사가 순서 상 가장 먼저 실시되었으며, 선행연구와 2차 자료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참여자를 소속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은 상위권 대학²¹⁾,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다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총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동수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각각의 하위집단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졸업유예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경우 제한된 기간과 시간에

21) 중앙일보 2015년 대학종합평가 결과(<http://univ.joongang.co.kr/university/totalRankingReport.asp>; 2015.04.18, 검색) 기준, 1위~30위 대학 중 서울 지역 소재 대학을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으로 간주함.

대응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동수로 모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집단별 최소 참여자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먼저 기업 인사담당자 집단의 경우,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 4명(대기업 2명, 공기업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여자 모두는 신규 인력채용 업무의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 또한 대학의 졸업유예 담당자의 경우도 소속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대학과 서울 이외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이외 지역은 다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구분한 후, 대학에서의 학사업무 경험이 최소 3년 이상 되며 졸업유예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 총 5명으로 구성하였다.

졸업유예자와 대학의 졸업유예 담당자의 구분을 서울지역 여부와 국·공립대 여부로 나누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선행연구와 2차 자료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졸업유예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에서 발생하는 인원수가 많고,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에 대응하는 졸업유예제도의 변화 방식이 이들 세분화된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4학년 재학생들의 경우, 그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서울 지역 여부만을 구분하여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시간 순서 상, ‘①졸업유예자 집단 → ②기업 인사담당자 → ③대학 졸업유예담당자 → ④ 3~4학년 재학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집단별 참여자의 구체적인 구성과 특성 그리고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다.

(2) 집단별 참여자의 구성

① 졸업유예자 집단

세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졸업유예자 집단의 참여자 구성을 살펴보면, 23세부터 28세까지 연령대의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열 전공자들이 고루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 중 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2016년 1학기에 졸업유예를 신청하여 첫 번째 졸업유예학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며, 참여자 중 3명을 제외한 이들 모두가 졸업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 대학에 졸업유예가 운영되지 않는 3명의 참여자 중 2명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소속자이고, 1명은 서울 이외 지역 사립대학 소속자이다.

표 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졸업유예자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전공 계열	졸업유예 학기	소속대학 졸업유예 제도유무
A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A1	남	26	사회	1학기	있음
		A2	남	28	공학	1학기	있음
		A3	남	26	인문	1학기	없음
		A4	여	24	공학	1학기	없음
		A5	여	25	사회	3학기	있음
B	서울 이외 지역 국립대학	B1	남	26	인문	1학기	있음
		B2	여	25	자연	1학기	있음
		B3	남	25	사회	1학기	있음
		B4	남	24	인문	1학기	있음
		B5	여	24	공학	1학기	있음
C	서울 이외 지역 사립대학	C1	여	23	인문	1학기	있음
		C2	여	25	인문	1학기	없음
		C3	남	28	사회	2학기	있음
		C4	남	26	공학	1학기	있음
		C5	남	25	인문	1학기	있음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집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한 명 더 많고, 사회계열 2명, 공학계열 2명, 인문계열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이외 지역 국립대학 집단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보다 한 명 더 많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2명, 자연과 사회 그리고 공학이 각각 1명씩 구성되었다. 서울이외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보다 한 명 더 많으며,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3명,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1명씩 구성되었다.

② 기업 인사담당자 집단

총 4명으로 구성된 기업 인사담당자 집단의 참여자 구성은 남성이 2명, 여성이 2명이며, 업무경력 3년의 20대 후반 연령대부터 업무경력 20년의 40대 후반 연령대까지 다양하며, 대학생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인사담당자 2명과 공기업 인사담당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중 일부는 현재 근무하는 곳 이외 다른 업종의 대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인사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의 대졸 신규 채용의 전형이나 요건의 변화, 그리고 지원자들의 특성 변화 등에 관한

흐름의 시각을 갖춘 인사 분야 전문가이다. 그와 같은 참여자들의 전문성으로 현재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 즉 금융이나 제조 또는 공공서비스와 같은 분야 이외 건설, 방송통신 업종 등 대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기업의 시각을 포착할 수 있었다.

표 V-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기업인사담당자

구분			성별	연령대	업종	사업체 유형
D	기업인사담당자	D1	여	30대	금융기관	대기업
		D2	여	20대	제조업	대기업
		D3	남	30대	공공서비스	공기업
		D4	남	40대	공공서비스	공기업

③ 대학 졸업유예담당자 집단

대학에서 졸업유예는 학사제도 운영 조직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대학 졸업유예담당자들은 모두 학사업무 담당자이다. 이들은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연령대이며, 참여자 중 2명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에서, 1명은 서울 이외 지역 국립대학, 2명은 서울 이외 지역 사립대학 근무자이다. 이들이 소속된 대학들은 현재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였다가 최근에 폐지하고 수료제도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소재지나 설립주체에 따른 차이에 더하여 제도 폐지의 과정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빚어지는 대학 안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졸업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표 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관계자

구분			성별	연령대	대학소재지	대학유형	담당업무
E	대학관계자	E1	여	30대	서울	사립	학사
		E2	여	30대	서울	사립	학사
		E3	여	50대	청주	국립	학사
		E4	남	40대	대구	사립	학사
		E5	남	50대	대전	사립	학사

④ 3~4학년 재학생 집단

서울 지역 대학과 서울 이외 지역 대학으로 나누어 구성한 재학생들은 총 14명이며, 남녀 각 7명의 동수로 구성되었다.

표 V-5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3~4학년 재학생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대학소재지	전공 계열	학년
F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F1	남	25	서울	사회	4
		F2	남	28	서울	사회	4
		F3	여	23	서울	사회	4
		F4	여	25	서울	사회	4
		F5	여	21	서울	인문	3
		F6	남	26	서울	자연	4
G	서울 이외 지역 대학	G1	여	25	강원	공학	4
		G2	남	23	충남	자연	3
		G3	남	26	전북	공학	4
		G4	여	25	충북	예체능	4
		G5	남	26	부산	자연	4
		G6	여	23	강원	인문	4
		G7	남	22	경기	사회	4
		G8	여	25	충남	인문	4

참여자 중 2명만이 3학년이고 그 외는 모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1세부터 28세까지의 연령대에 해당한다.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참여자들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4명,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자들이 각각 1명씩 구성되었고, 서울 이외 지역 대학 재학생들은 지역과 전공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집단별 면접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졸업유예자를 비롯한 네 개 집단의 초점집단면접조사는 기본적으로 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및 동의 내용에 대한 서명 확인, 윤리적 연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모두 준수하였다. 이에 더하여 면접조사 착수 직전 참여자들이 구두와 서면 상으로 동의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들이 조사 참여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하는 윤리적 연구의 원칙을 빠짐없이 준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집단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짧게는 1시간 가량, 길게는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진행되었다. 집단에 따라 질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더불어 논의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심화될 수 있도록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과 FGD(Focus Group Discussion)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였다.

졸업유예자 집단의 면접조사 내용은,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및 문항 작성을 위한 현실감 있는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 졸업유예자의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포착하는데 있어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면접조사의 질문 내용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대학 생활 경험, 졸업유예 사유 및 목적,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심리·정서 상태, 기업, 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식)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기업 인사담당자 집단의 면접조사 내용은 졸업유예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및 자료 등에서 언급되어온 사실과 졸업유예자와 기업의 인식차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형 및 방식의 변화와 졸업자 채용을 기피하고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졸업 후 장기간의 취업준비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채용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인턴이나 공모전 등에서도 재학생을 선호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대학의 졸업유예 담당자 집단의 면접조사 내용은 대학의 졸업유예자 현황과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속 대학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증감하는지와 그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식,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이 갖는 졸업유예자에 대한 시각을 현황과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졸업유예제도의 운영의무수강

제와 비용부과 방식, 졸업유예자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나 제한,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변경 계획 등과 관련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3~4학년 재학생 집단의 면접조사 내용은 졸업유예 선배 또는 동년배를 바라보는 재학생의 시각과 언론에서 졸업유예자 증가로 발생하는 학내 재학생들과의 갈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졸업유예자에 대한 시각 또는 인식, 졸업유예자 증가로 인한 학내 시설 사용 등과 같은 물리적 불편함과 심리·정서적 부담감, 재학 대학에서 운영하는 졸업유예제도에 내용의 인지 수준, 졸업유예자에 대한 비용부과와 의무수강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리고 졸업유예 신청 계획 유무 및 사유 등이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V-6 초점집단면접조사 집단별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면접 내용	
졸업유예자 집단	• 대학 생활 경험 • 현재 졸업유예학기 생활 • 심리·정서적 상태	• 졸업유예 사유 및 목적 •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 제도 운영 방식 • 기업, 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식
기업 인사담당자 집단	• 대졸 채용 및 인사업무 담당 경험 및 경력 • 신입사원 선발·채용의 절차 및 내용 • 기 졸업자 채용 기피 또는 선호 사유 • 선발·채용 시, 졸업유예의 부정적인 영향 • 기 졸업 취업준비자와 졸업예정 유예자의 미취업 기간이 각기 다르게 인식되는지	•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와 기 졸업자의 비중 • 지원자 특성 및 전형 방식의 변화 • 취업준비 기간 선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 여부 및 전형의 어떤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 인턴, 기업주최 공모전 참가자격을 재학생에 한정 하는지 여부 및 제한 사유
대학 졸업유예 담당자 집단	• 현 재직 대학에서의 근무 및 학사업무 경력 •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자 증감 추이 •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내용 • 졸업유예 비용, 부과 근거 및 산정방식 • 졸업유예자 증가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시각	• 현 재직 대학에서의 졸업유예제 관련 업무 경험 •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자 증감에 따른 대응 방식 • 졸업유예자 의무수강제 실시 여부, 이유, 목적, 방식 • 졸업유예자 대상 지원 및 제한(시설이용 등) 내용 •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변경 계획 유무 등
3~4학년 재학생 집단	• 재학 대학에 졸업유예자 수에 대한 인식 • 졸업유예자로 인한 학내 시설 사용의 불편점 • 졸업유예자 선배나 동기로부터 얻는 도움 • 졸업유예자에 대한 비용부과와 의무수강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졸업유예 선배, 동기에 대한 시각 • 졸업유예자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편함 또는 부담감 • 재학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내용 인지 수준 • 졸업유예 신청 계획 유무 및 그 사유

2.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선택 사유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본 연구 졸업유예자는 59.9%가 졸업요건 충족자이고, 40.1%는 학점 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졸업요건 미 충족자이며, 평균연령 24.1세이고 75.0%가 첫 번째 졸업유예학기 상태라는 배경특성을 가짐. 이들의 심리·정서특성 5가지(①자존감, ②진로성숙도, ③자기비하, ④불안감, ⑤긍정미래관)를 비교해 보면, 성별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여학생들이 졸업유예를 발생시키는 노동시장 여건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심리적 영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정적 심리·정서를 완화하는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모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졸업유예자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없이 좌절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함.
- 졸업유예는 하나의 절대적인 사유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여건과 사회적 인식, 심리적 안정감 등의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선택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의 사유(①취업경쟁우위를 점하는데 필요한 시간 확보, ②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로 압축됨.
- 졸업유예의 선택은 재학 중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입학 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자금 대출금액이 많은 학생들은 상환을 위한 일명 '문지마 취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무엇보다도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순수 졸업유예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
-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서울소재대학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업경쟁우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또한 복수전공 이수자들이 상대적으로 졸업유예 선택에 취업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사유들의 영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졸업유예자 범주 설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임.
- 연령 수준이 낮은 자연/공학계열 전공자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 사유보다는 취업경쟁우위 확보의 사유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데 우선이 된 집단으로 밝혀짐.

앞의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하여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양적·질적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료를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제기된 대학 졸업유예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동시에 드러나지 않은 원인과 실태에 관한 사실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술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 검토 후 대학생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의 내용이 한 눈에 집약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 및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졸업유예 관련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실증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문조사의 기술통계 분석과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와 함께 분석·제시함으로써 결과 해석의 현실 밀착도와 구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졸업유예자의 특성

(1) 배경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졸업유예자는 총 1,002명이다. 졸업유예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졸업학점 및 학점이외 논문이나 어학점수 제출,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한 ‘졸업요건 충족자’이고, 다른 하나는 졸업학점은 충족된 상태이나 그 외 요건들은 채우지 못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은 ‘졸업요건 미충족자’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졸업요건 충족자가 50.9%이고, 졸업요건 미충족자가 49.1%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본 틀이 존재하지 않는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 졸업유예자의 표본을 구성하기 위하여 대학소재지와 성별로 할당표집(5:5)을 하였고, 수집된 결과 남성(45.7%)보다는 여성(54.3%)의 비율이 다소 높고, 서울지역 소재 대학(46.9%)보다 서울 이외지역 소재 대학(53.1%)의 비율이 다소 높게 구성되었다. 할당표집의 준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53.7%)이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자연/공학계열(34.7%), 기타계열(11.6%)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평균 연령은 24.1세이고, 절반에 가까운 49.0%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400만원 미만 수준에 해당된다. 또 국·공립대학에 소속된 졸업유예자의 비율은 25.0%이고, 사립대학에 소속된 이들은 75.1%이다. 소속된 대학에 편입한 경험이 있는 졸업유예자는 6.0% 수준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대학 및 전공의 특성에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졸업유예자들이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생활 경험과 졸업유예상태와 관련한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휴학경험의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자들이 경험률(69.1%)이 졸업요건 충족자(61.6%)보다 높고 평균 휴학학기도 평균 0.2학기 정도 길다. 반면, 학자금 대출 경험에 있어서는 졸업요건 충족자의 대출경험률(41.4%)이 졸업요건 미충족자(35.2%)보다 높으며, 평균 졸업유예기간의 경우도 0.2학기 정도 더 길다.

표 V-7 졸업유예자 배경 특성

(단위: 명, %, 만원, 학기)

구분			전체	졸업유예 유형		χ^2 -test or t-test
				졸업요건 충족	졸업요건 미충족	
전체			1,002(100.0)	510(50.9)	492(49.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458(45.7)	236(46.3)	222(45.1)	0.13
		여성	544(54.3)	274(53.7)	270(54.9)	
	연령	24세 이하	654(65.3)	334(65.5)	320(65.0)	0.02
		25세 이상	348(34.7)	176(34.5)	172(35.0)	
		평균(편차)	24.1(1.7)	24.1(1.6)	24.1(1.7)	
	부모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58(5.8)	23(4.5)	35(7.1)	5.56
		150~300만원 미만	271(27.1)	143(28.0)	128(26.0)	
		300~400만원 미만	219(21.9)	106(20.8)	113(23.0)	
		400~500만원 미만	169(16.9)	92(18.0)	77(15.7)	
		500~800만원 미만	198(19.8)	105(20.6)	93(18.9)	
		800만원 이상	87(8.7)	41(8.0)	46(9.3)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 소재지	서울	470(46.9)	237(46.5)	233(47.4)	4.82
		경기/인천	144(14.4)	74(14.5)	70(14.2)	
		충청권	120(12.0)	57(11.2)	63(12.8)	
		전라권	66(6.6)	31(6.1)	35(7.1)	
		경상권	169(16.9)	97(19.0)	72(14.6)	
		제주/강원	33(3.3)	14(2.7)	19(3.9)	
	설립주체	국·공립	250(25.0)	127(24.9)	123(25.0)	0.00
		사립	752(75.1)	383(75.1)	369(75.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38(53.7)	269(52.7)	269(54.7)	2.17
		자연/공학계열	348(34.7)	187(36.7)	161(32.7)	
		기타계열	116(11.6)	54(10.6)	62(12.6)	
대학 생활 경험 특성	휴학경험	해당	60(6.0)	29(5.7)	31(6.3)	0.17
		비해당	942(94.0)	481(94.3)	461(93.7)	
		없음	348(34.7)	196(38.4)	152(30.9)	6.28*
	복수전공	있음	654(65.3)	314(61.6)	340(69.1)	
		휴학 학기 평균(편차)	1.6(1.6)	1.5(1.5)	1.7(1.7)	
	학자금 대출경험	이수	265(26.5)	135(26.5)	130(26.4)	0.00
		비이수	737(73.6)	375(73.5)	362(73.6)	
		없음	618(61.7)	299(58.6)	319(64.8)	4.09*
	졸업유예 직전 학기 등록금 평균(편차)	있음	384(38.3)	211(41.4)	173(35.2)	
		대출금 총액 평균(편차)	456.8(891.4)	496.1(973.9)	416.1(795.9)	
졸업유예 상태 특성	졸업유예 학기	졸업유예	324.7(108.1)	320.8(110.9)	328.8(105.1)	-1.18
		첫 번째 학기	504(74.5)	272(73.1)	232(76.1)	
		두 번째 학기 이상	173(25.6)	100(26.9)	73(23.9)	
		평균(편차)	0.9(0.9)	1(0.9)	0.8(0.9)	2.83**

** p<.01, * p<.05

이들 특성 이외 졸업유예자의 대학생활 경험 특성을 살펴보면, 복수전공 이수자는 26.5%이고, 이들이 졸업유예학기 직전 학기에 지불한 평균 등록금은 324.7만원이며, 응답자의 74.5%가 2016년 1학기 현재 첫 번째 졸업유예학기를 보내고 있다.

(2) 심리·정서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대학 및 전공특성 그리고 대학생활 경험 및 졸업유예 상태와 같은 객관적인 배경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심리·정서 특성을 5가지(자존감²²⁾, 진로성숙도²³⁾, 자기비하²⁴⁾, 불안감²⁵⁾, 긍정미래관²⁶⁾)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섯 가지 심리·정서 특성

22) 자존감 측정 11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7$, 부정적으로 기술된 내용 역산하여 총점 산출.

(①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②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③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④나는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⑤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⑥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⑦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⑧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⑨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⑩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⑪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23) 진로성숙도 측정 8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2$

(①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②내 성격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③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다. ④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⑤내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한다. ⑥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⑦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고 싶다. ⑧희망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24) 자기-비하 측정 9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91$

(①내 자신의 결정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②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③정말로 힘들 때,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④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건디거나 참기 어렵다. ⑤기분이 처질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거라고 느낀다. ⑥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⑦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⑧고통을 겪을 때,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⑨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25) 불안감 측정 12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93$

(①선배들이 취업 안되는 것을 보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 ②선배들의 취업여부와 어느 곳에 취업되었는지에 따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달라진다. ③SNS에 도대 친구가 뭐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급격하게 우울해진다. ④자꾸 나와 주변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⑤나 스스로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⑥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⑦‘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 ⑧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⑨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가 된다. ⑩실패하는 것이 불안하고, 무언가 하고 있을 때 불안감이 해소된다. ⑪어딘가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⑫대학생활 내내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정작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내가 왜 이렇게 한 게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6) 긍정미래관 측정 9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7$

(①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②일이 잘 안될 때는 항상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③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④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⑤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⑥내게 있어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⑦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⑧내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⑨내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 긍정미래관만 원 개발 척도를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측정 후 긍정의 응답 항목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였고, 이를 제외한 4가지 특성들은 5점의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졸업유예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정서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진로성숙도를 제외한 4가지 특성에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존감이나 긍정미래관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은 반면, 자기-비하와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에서는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에 비해 높다. 특히 불안감과 긍정미래관에서 평균 차이가 다른 특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성향이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들은 현재의 졸업유예 상태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걱정과 막연한 불안감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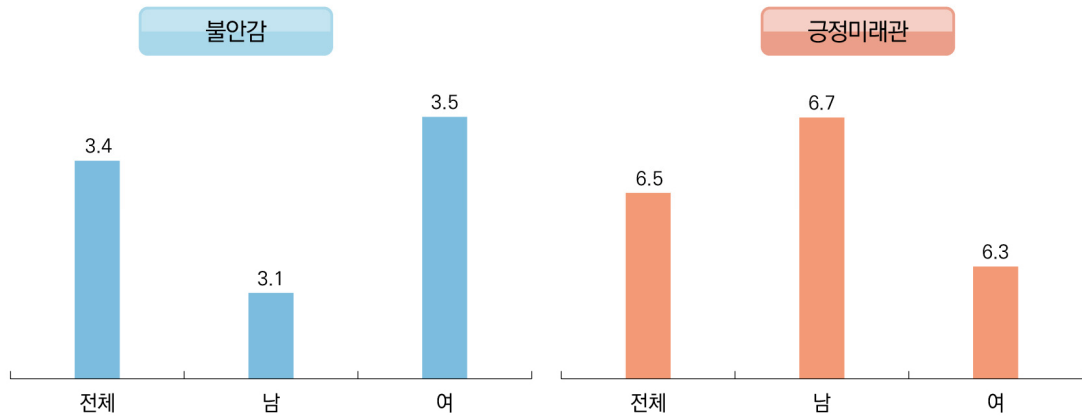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심리·정서 특성의 확연한 차이는 노동시장의 여건 등 졸업유예를 발생시키는 외부 환경의 요건에 의해 여학생들이 더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졸업유예자의 부정적인 심리·정서를 완화하는 지원의 우선 대상은 여학생들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8 졸업유예자의 5가지 심리·정서 특성: 성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t-test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자존감	3.1 (0.5)	3.1 (0.5)	3.0 (0.6)	2.35*
진로성숙도	3.6 (0.6)	3.6 (0.5)	3.6 (0.5)	-1.44
자기-비하	3.1 (0.8)	3.0 (0.7)	3.2 (0.8)	-3.63***
불안감	3.4 (0.8)	3.1 (0.8)	3.5 (0.8)	-8.21***
긍정미래관 ^{주)}	6.5 (2.8)	6.7 (2.7)	6.3 (2.8)	17.67*

주) 긍정미래관만 5점 리커트 척도가 아닌 '예', '아니오'로 측정. 제시된 값은 '예' 9개 측정항목 중 응답 항목의 평균 개수임.
*** $p<.001$, ** $p<.01$, * $p<.05$



【그림 V-5】 성별 불안감 및 긍정미래관 비교

성별에 이어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긍정미래관의 평균 점수는 낮고, 자기-비하와 불안감의 점수는 높다. 특히 월평균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졸업유예자가 가장 취약한 심리·정서 상태를 보이는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성은 긍정미래관이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영향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겪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며, 졸업유예를 선택한 이들의 현재 상황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없이 좌절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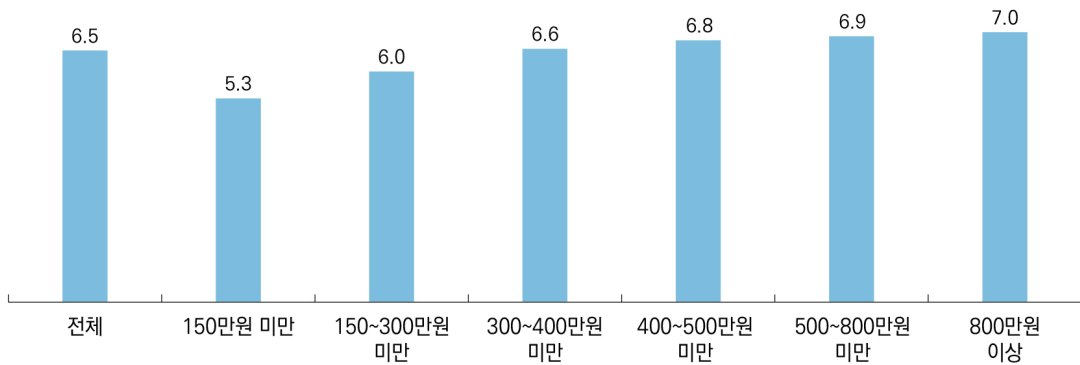
표 V-9 졸업유예자의 5가지 심리·정서 특성: 부모 월소득수준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GLM-test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자존감	3.1 (0.5)	2.9 (0.6)	3.0 (0.5)	3.1 (0.5)	3.2 (0.5)	3.1 (0.5)	3.2 (0.5)	2.35*
진로성숙도	3.6 (0.6)	3.5 (0.6)	3.6 (0.6)	3.6 (0.5)	3.7 (0.5)	3.6 (0.5)	3.8 (0.7)	-1.44
자기-비하	3.1 (0.8)	3.2 (0.9)	3.1 (0.8)	3.1 (0.8)	3.0 (0.7)	3.1 (0.8)	2.9 (0.9)	-3.63***
불안감	3.4 (0.8)	3.5 (0.8)	3.4 (0.8)	3.4 (0.8)	3.4 (0.8)	3.3 (0.8)	3.2 (0.9)	-8.21***
긍정미래관 ^{주)}	6.5 (2.8)	5.3 (2.9)	6.0 (3.0)	6.6 (2.7)	6.8 (2.7)	6.9 (2.5)	7.0 (2.5)	17.67*

주) 긍정미래관만 5점 리커트 척도가 아닌 '예', '아니오'로 측정. 제시된 값은 '예' 9개 측정항목 중 응답 항목의 평균 개수임.

*** p<.001, ** p<.01, * p<.05



【그림 V-6】 부모소득수준별 긍정미래관 비교

2) 졸업유예 선택 사유 및 과정

(1) 졸업유예 선택의 사유

졸업유예를 선택한 졸업유예자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자들이 어떠한 사유로 졸업시기를 미루는 선택을 했는지, 그 사유를 살펴보았다.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에 앞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졸업을 해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와 한정적 일자리에 다수의 경쟁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의 점유, 그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 그리고 청년 백수의 상태에 놓이는 것에서 잠시 비켜나 있고자 하는 등의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우선 졸업유예자들은 졸업유예가 취업난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아무래도 큰 문제가 취업이니까...”(졸업유예자 A2)

“취업이 아니면 유예를 할 이유가 없어요.”(졸업유예자 A4)

“바로 졸업을 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바로 취업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 졸업 유예를 해요.”(졸업유예자 C2)

졸업해도 취업 자체가 되지 않으니, 좁은 취업문을 뚫고자 졸업유예라는 졸업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명 ‘스펙’이라고 불리는 취업 요건들을 채우고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졸업유예를 선택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획득해 놓으려는 것이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스펙이 높아야지 합격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 게 …(중략)… 제가 이번에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OOOO 같은 경우는 자격증 몇 개 이상 쌓으면 (그것을 서류) 합격점으로 해서 아예 수치적으로만 계산 하는 데가 있고, 또 OOOO 같은 경우에도 학점 위주로 봐서 학점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그런 게 실제로도 (합격자) 스펙 비교를 해 보니까 나와서… 고스펙일수록 취업이 잘 된다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펙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졸업유예자 A5)

“취업하기 위해서 나 자신만의 스펙 쌓으려고… 그리고 대학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 인재들도 그에 따르게 맞춰야 되고.”(졸업유예자 A2)

높은 수준의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기준과 더불어 취업경쟁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재학 상태인데, 졸업유예를 선택한 졸업유예자의 대부분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상태에서의 취업지원이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고 믿는다. 즉 기업에서 기 졸업자보다는 졸업예정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재학생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졸업예정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턴 선발의 경우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는 대학생보다 아니 졸업생보다 재학생을 더 많이 뽑기 때문에…”(졸업유예자 A2)

“그냥 속된 말로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금 기업에서도 졸업예정자랑 졸업자를 이렇게 따지면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토익이라든지, 그 입사 조건 이걸 맞춰서 가고 싶을 때 방법이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졸업을 하기에는 졸업예정자 그런 거에서 걸리는 편이라서 졸업 유예를 해서 나도 조금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졸업유예자 C5)

“저는 일단 취업 준비할 때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곳이라도 더 지원을 많이 하려고 일단은 그게 가장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거 같아요.”(졸업유예자 B5)

졸업예정자를 기업이 선호한다는 것과 더불어 졸업유예자들이 재학생 상태로 남고자 하는 데에는 졸업자보다 재학생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지원이나 스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졸업유예를 통해 학교에 남는 것이 큰 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 캠퍼스 밖에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다.

“학교를 벗어나면... 학교에 있는게 이득되는게 아니라, 학교 밖에 패널티가 너무 커서.”(졸업유예자 A4)

“유예를 하더라도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졸업을 해버리면 학교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도 하는 것도 그렇고 ...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다르고, 만약에 다른 시설 같은 것 쓰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거든요”(졸업유예자 B1)

“아무래도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 취업 준비를 혼자 해야 되니까. 취업 일자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는 게 자기가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면 문자라도,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가보면 그런 거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졸업한 사람은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아무래도 자기 혼자서 공부해야 되니까 스터디 같은 것도 알아서 찾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졸업유예자 B3)

또 다른 한편으로, 졸업유예를 통해 재학생 상태를 연장하고자 하는 데에는 졸업 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일명 ‘백수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대학생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대학 재학생은 단순히 학생신분의 유지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대학생이라는 상태의 유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한 단어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졸업한 상태에서는 동일한 취업준비 활동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사유가 재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보다도 더 졸업유예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게 더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백수, 일단 졸업을 했는데 직업이 없다면 그러면 백수 이렇게 이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생으로 여겨지는 것이 마음 안정이 되는 거죠.”(졸업유예자 B5)

“근데 그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도 이미 아니까 졸업을 했는데 취업 못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그런 인식들이 받기 싫은 거죠 내가 그걸 만든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미 그런 분위기이니까.”(졸업유예자 B2)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나서 그냥 취준생이라고 누가 물어 봤을 때 말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진짜 학생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누가 물어 봤을 때 솔직히 백수인 거잖아요, 취준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학생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니까.”(졸업유예자 C2)

“제 주위에 봤을 때 느끼는 게 백수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재는 뭐 하는 애일까 생각을 하는데, 졸업유예니까... 학생인데 그래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재 지금 뭐할 건지 자기가 생각하는가 보다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졸업 유예생이고 백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보는 시각이 완전히 확 달라지거든요.”(졸업유예자 B1)

“그거에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졸업유예생 C2)

이상과 같이 졸업유예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파악된 복합적인 졸업유예 선택사유를 각 사유별로 졸업유예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내용을 여섯 가지 범주의 총 17개 항목으로 문항을 구조화하여 반영한 후 각각의 사유가 졸업유예 선택 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5점 척도(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5.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로 측정하였다.

<표 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향 정도의 평균 점수가 높은 5가지 사유만 보더라도 졸업유예의 선택은 취업난이라는 구조적인 상황 하에서 부족한 일자리, 재학생으로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확보, 졸업유예를 쉽게 선택하는 주변의 풍조, 그리고 졸업 후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0 졸업유에 선택 사유: 각 사유별 선택 시 영향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는 편	보통	영향 미친 편	매우 많은 영향 미침	평균
취업 경쟁 구조 및 스펙	졸업해도 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 없기 때문	3.0	6.5	21.3	40.7	28.5	3.85
	취업경쟁에 유리한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2.8	7.2	30.4	41.9	17.7	3.64
	입사지원 자격에 필요한 기본 스펙을 채우기 위해	2.4	6.7	26.1	45.0	19.8	3.73
	공시 등 목표시험 합격에 필요 시간 확보 위해	7.8	10.6	25.0	34.9	21.8	3.52
기회 확보	인턴, 공모전 등 재학생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졸업생보다 많기 때문	3.6	11.4	28.9	37.7	18.4	3.56
	졸업 후 취업정보, 학교시설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	5.1	11.9	30.1	37.8	15.1	3.46
	재학생상태에서 지원이 졸업생보다 유리할 것 같아서	2.7	9.6	22.4	37.9	27.4	3.78
경제적 부담	재학생으로 학교에 있을 때 취업준비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	6.2	16.0	35.2	31.3	11.3	3.26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을 미르고 싶어서	17.1	21.9	30.1	23.4	7.6	2.83
주변 풍조	졸업 전 1~2년 정도 더 시간 투자해도 될 것 같아서	2.9	8.0	25.7	45.9	17.5	3.67
	‘칼 졸업’ 보다는 주변 선배나 친구들이 졸업유예를 거의 다 하는 분위기라서	6.8	14.7	29.2	35.9	13.4	3.34
부모 및 주변 기대	부모님이나 교수님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8.3	18.5	33.9	28.0	11.3	3.16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곳에 취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4.7	10.2	28.1	39.6	17.4	3.55
	내가 노력한 성과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3.7	9.3	30.5	41.1	15.4	3.55
소속감	졸업하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한 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6.1	15.1	27.0	35.6	16.2	3.41
	‘요즘 뭐하나?’는 질문에 ‘학교 다니다.’는 말로 답할 수 있는 편리함과 안도감 때문에	6.5	14.2	25.0	39.0	15.3	3.42
	청년 백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4.2	9.5	21.0	40.9	24.5	3.72

졸업유예자 20%이상, 즉 5명 중 1명 이상의 졸업유예 선택 시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유들을 살펴보면, 5점 척도로 측정된 각 사유의 평균 영향정도 점수가 높은 항목들과 한 항목(‘공시 등 목표시험 합격에 필요 시간 확보를 위해’)을 제외하고 대체로 겹친다.

평균 영향정도 점수가 높은 5가지 항목은 ‘취업해도 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3.85점), ‘재학생상태에서 지원이 졸업생보다 유리할 것 같아서(3.78점), ‘입사지원 자격에 필요한 기본 스펙을 채우기 위해(3.73점), ‘청년 백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3.72점), ‘졸업 전 1~2년 정도 더 시간 투자해도 될 것 같아서(3.67점)’이다.

이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어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부족, 공시 등 목표시험 합격에 필요한 시간 확보라는 취업경쟁과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필요한 시간 자원의 확보 이고, 다른 하나는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유리할 것 같거나 청년 백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의 사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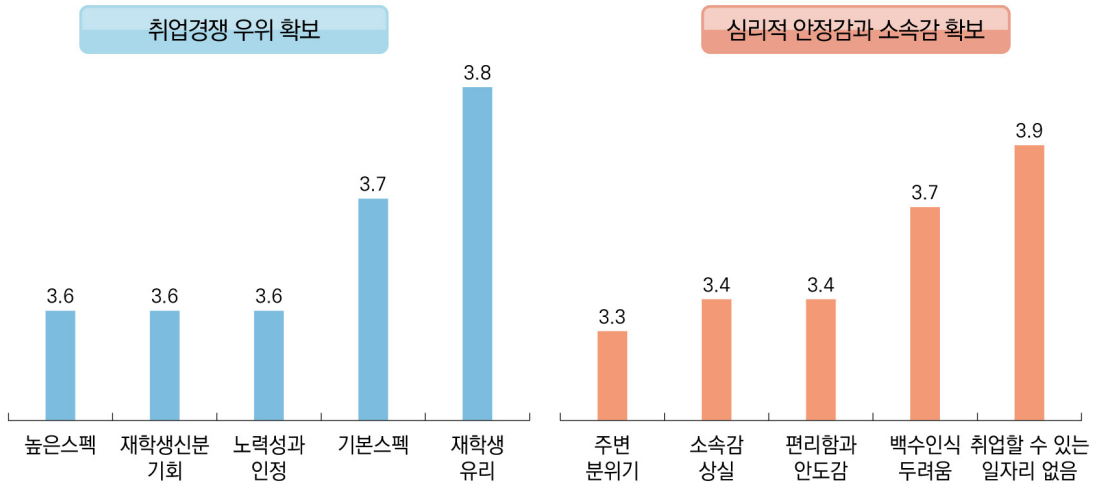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주된 사유가 통계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7개 항목의 졸업유예 선택 사유에 대한 요인 도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요인과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한 요인이 추출되었다²⁷⁾.

각 요인으로 묶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우선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이 유리할 것 같다는 인식과 입사지원에 필요한 기본 스펙을 채우거나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높은 스펙을 쌓는다는거나, 재학생 신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자신의 노력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27) 주성분 분석 반복 회전(Verimax) 결과 아래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신뢰도가 0.6보다 낮은 요인 3은 졸업유예의 주된 선택 사유로 사용하지 않음.

구분	요인			신뢰도
	1	2	3	
취업경쟁 유리한 높은 스펙 쌓기 위해	.836			.718
입사지원 자격에 필요한 기본 스펙 채우기 위해	.784			
인턴, 공모전 등 재학생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 확보	.595			
재학생 지원이 졸업생보다 유리할 것 같아서	.568			
내가 노력한 성과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562			
‘요즘 뭐하냐?’ 질문에 ‘학교 다니다.’로 답하는 편리함과 안도감		.749		.781
졸업하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한순간에 없어지기 때문		.743		
청년 백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738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없기 때문		.580		
‘칼 졸업’보다는 주변선배, 친구들이 거의 다 하는 분위기		.519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을 미루고 싶어서			.837	.451
재학생으로 학교에 있을 때 취업준비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서			.663	

수 있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취업경쟁우위 확보'라는 졸업유예 사유로 수렴됨을 알 수 있다.



【그림 V-7】 졸업유예선택의 주된 사유: 하위 측정 항목 값 비교

또한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백수라고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졸업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상태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와중에 주변에 선배가 친구들도 졸업유예를 하는 이들이 많아 졸업유예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적은 상황이 졸업유예를 결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졸업유예자들은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와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사유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취업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유에 무게 중심이 더 실리는 졸업유예자들이 있고, 그보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이 더 우선시 되어 졸업유예를 선택한 이들도 있다.

이에 <표 V-11>에서는 졸업유예자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주된 사유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은 취업경쟁우위의 확보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 사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공통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들 두 가지 사유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취업경쟁우위 확보의

사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4세 이하 집단이 25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 졸업유예자 특성별 주된 졸업유예 사유 비교 : 차이 검증

(단위: 점)

구분			취업경쟁우위 확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	
			평균 (편차)	t-test/ GLM-test	평균 (편차)	t-test/ GLM-test
전체			18.3 (3.6)		17.7 (3.9)	
사회 ·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7.6 (3.4)	-5.52***	16.8 (3.7)	-7.12***
		여성	18.8 (3.6)		18.5 (3.9)	
	연령	24세 이하	18.5 (3.6)	2.69**	17.8 (3.9)	1.07
		25세 이상	17.8 (3.6)		17.6 (4.0)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 소재지	서울	-3.33***	18.1 (3.9)	-3.00**
			서울 이외		17.4 (3.9)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0.57**	18.2 (3.9)	-0.58**
			자연/공학계열		17.2 (3.8)	
대학 생활 경험 특성	휴학 경험	있음	18.3 (3.6)	0.85	17.9 (4.0)	2.22*
		없음	18.1 (3.5)		17.4 (3.8)	
	복수 전공	이수	18.9 (3.6)	3.29**	18.2 (3.9)	2.17*
		비이수	18.0 (3.6)		17.6 (3.9)	
졸업 유예 상태 특성	졸업유예 유형	졸업요건 충족	18.6 (3.4)	3.45***	18.0 (3.9)	1.84
		졸업요건 미충족	17.9 (3.7)		17.5 (3.9)	

*** p<.001, ** p<.01, * p<.05

대학 소재지나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두 가지 주된 졸업유예 사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대학 소재지의 경우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취업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한 영향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한 이들이 복수전공을 하지 않은 졸업유예자 집단에 비해 취업경쟁의 우위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기 위한 영향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평균 점수가

더 높고, 휴학경험이 있는 이들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기 위한 영향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 중 휴학이나 복수전공으로 인해 졸업시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졸업유예를 통해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이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한 졸업유예자들이 취업경쟁의 우위를 위해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졸업요건 미충족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요건 충족자들의 경우, 취업여건이 마련된다면 바로 졸업유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취업난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막혀버린 채 대학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졸업유예 선택의 과정

① 선택과정에서의 권유 및 추천인

취업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확보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기 위한 선택으로써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유 이외 인적 영향은 없는 것인가?

앞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주변의 많은 선배나 친구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캠퍼스의 풍조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하나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 살펴볼 수 있도록 졸업유예를 선택 시, 권유하거나 추천했던 사람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V-12 졸업유예 선택 시 권유 및 추천인 유무

(단위: 명, %)

구분		전체	있었음	없었음	χ^2 -test
전체		1,002(100.0)	372(37.1) 372(100.0)	630(62.9) 630(100.0)	
졸업유예 유형	졸업요건 충족자	510(50.9)	208(55.9)	302(47.9)	5.96*
	졸업요건 미충족자	492(49.1)	164(44.1)	328(52.1)	

* $p < .05$

<표 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의 37.1%가 졸업유예 선택 시, 졸업유예를 권유하거나 추천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 및 추천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졸업유예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졸업요건 충족자(55.9%)가 졸업요건 미충족자(44.1%)에 비해 11.8%p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추천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졸업유예를 권유하거나 추천한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 친구(44.6%)와 선배(29.8%)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부모(9.7%)나 주변지인(6.5%) 또는 교수(5.7%), 형제·자매(3.2%)의 순으로 많다. 그러나 졸업유예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대학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졸업유예의 선택과정에 있어 주변인의 영향은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표 V-13>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V-13 졸업유예 선택 시 권유 및 추천인 유형

(단위: 명, %)

구분			친구	선배	교수	부모	형제· 자매	주변지인	χ^2 -test
전체			166(44.6)	111(29.8)	21(5.7)	36(9.7)	12(3.2)	24(6.5)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60(40.8)	56(38.1)	11(7.5)	12(8.2)	4(2.7)	3(2.0)	15.98*
		여성	106(47.1)	55(24.4)	10(4.4)	24(10.7)	8(3.6)	21(9.3)	
	부모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5(22.7)	7(31.8)	1(4.5)	2(9.1)	1(4.5)	5(22.7)	60.0***
		150~300만원 미만	51(54.8)	21(22.6)	5(5.4)	8(8.6)	2(2.2)	5(5.4)	
		300~400만원 미만	32(40.0)	30(37.5)	3(3.8)	8(10.0)	2(2.5)	5(6.3)	
		400~500만원 미만	25(39.1)	25(39.1)	6(9.4)	5(7.8)	1(1.6)	2(3.1)	
		500~800만원 미만	44(54.3)	21(25.9)	6(7.4)	6(7.4)	2(2.5)	2(2.5)	
		800만원 이상	9(28.1)	7(21.9)	7(21.9)	4(12.5)	5(15.6)	—	
대학 특성	대학 소재지	서울	93(50.0)	48(25.8)	7(3.8)	16(8.6)	11(5.9)	10(5.4)	16.21*
		서울 이외	73(39.2)	63(33.9)	14(7.5)	20(10.8)	1(0.5)	14(7.5)	

*** p<.001, * p<.05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졸업유예를 권유하거나 추천한 사람은 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남성의 경우 선배가 차지하는 비율(38.1%)이 여성(24.4%)에 비해 14%p 가량 높고, 여성은 부모(10.7%)나 주변지인(9.3%)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본수가 적어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의 경우 친구와 주변지인의 비율(22.7%)이 같고,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보일 정도로 교수(21.9%)와 부모(12.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들이 졸업유예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교수와 부모의 의견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대학과 가족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친구나 선배 또는 교수와 부모가 아닌 주변 지인의 의견이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졸업유예 선택 시, 권유나 추천했던 사람에 대해 본 연구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는 단순히 졸업유예자 주변의 인적 영향이나 캠퍼스의 풍조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대학의 제도 또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학과 단위 또는 학년단위로 졸업유예를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즉 콜로키움과 자문회의를 통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학에서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 등이 학과 평가 또는 그에 기초한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면서 일부 대학의 학과에서는 재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유예를 권하거나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 사례가 대학졸업유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발견되었다.

“(졸업유예) 승인 과정의 하나인데... 악용이 되더라고요. 학과장의 싸인을 받아 오라고 하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 (중략) ... 학생들 유예를 하면 유예 후에 연간 계획서를 기술을 해서 학과장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정원을 줄여야 되니까 학과 평가의 기준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이에요. 그러면 학생을 자기 있을 때 당시에 그 학과에 재학생으로만 유예로만 유도를 하면 학과가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승인 기준이... 학생들이 제출 한 취업 기술서랑 뭘 하겠다 취업을 위해서 읽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승인인 거죠.” (대학담당자 E5)

이와 같은 사례들은 졸업유예 선택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에서 취업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과 단위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② 선택 시, 시간 활용에 대한 계획

졸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추천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 선택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졸업유예 선택 시, 시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졸업유예자의 64.1%가 졸업유예 선택 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며, 그 비율은 졸업요건 충족자(54.7%)가 미충족자(45.3%)에 비해 졸업유예 기간의 시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졸업유예 기간의 시간 활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계획하였는가?

표 V-14 졸업유예 선택 시 구체적 계획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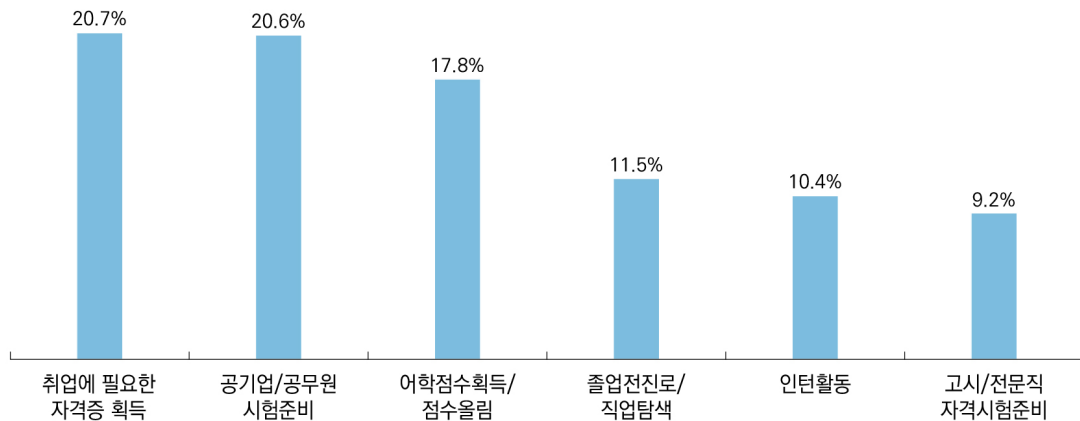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있었음	없었음	χ^2 -test
전체		1,002(100.0)	642(64.1)	360(35.9)	
졸업유예 유형	졸업요건 충족자	510(50.9)	351(54.7)	159(44.2)	10.19**
	졸업요건 미충족자	492(49.1)	291(45.3)	201(55.8)	

** p<.01

[그림 V-8]에는 졸업유예 시, 졸업유예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 중 여섯 가지를 응답비율 순서로 제시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20.7%)의 계획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고,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2순위 계획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는 어학점수(17.8%), 졸업 전 진로/직업 탐색(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전 진로 및 직업탐색을 제외하면 상위 6순위를 차지한 내용은 모두 취업준비를 위한 사항들이다.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아니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준비로 졸업유예기간을 활용하겠다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나, 졸업 후 취업을 앞 둔 시점에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본격적인 취업준비가 아닌 진로 및 직업탐색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림 V-8】 졸업유예 기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 1순위 응답 기준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취업현실에 다가갈수록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졸업 후 빠른 취업을 한 친구들의 부정적인 취업 경험담 속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졸업유예학기를 통해 얻은 시간을 졸업 전 마지막 진로 및 직업탐색의 시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현실의 직업세계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진로 선택의 시점이 4학년, 또는 졸업유예의 기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저는 어문계열이라서 취업문이 더 좁은데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간 것도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가야 될 거 같다 해서 이제 간 건데, 그때만 해도 목표가 불확실했어요, 지금도 불확실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되게 큰 거 같아요.”(졸업유예자 C2)

“처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과를 갔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가 보면 이 전공, 여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좁고, 조금 오래 있을 수 있는 직장이 아니고, 연봉은 어떻게 이런 걸 정작 알게 되면서 좀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이러면서 알다 보니까 1, 2년이 지나가고, 4학년 때는 확실히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 문이 더 좁아진 거 같아요. 생각할 시간도 4년은 좀 짧다고 생각을 해요.”(졸업유예자 C5)

“일단 유예를 함으로써 좀 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빨리 취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개네들이 1, 2년 차가 돼서 같이 술을 마시고 하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때려 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더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졸업유예자 B1)

이와 같은 진로 및 직업탐색을 포함하여 졸업유예기간의 활용 계획을 졸업유예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대학 특성, 그리고 졸업유예 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와는 다른 졸업유예자 집단 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V-1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V-15 졸업유예 기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1순위^{주)}

(단위: 명, %)

구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어학점수 획득/ 점수올림	인턴 활동	공기업/ 공무원 시험준비	고시/ 전문직 자격 시험준비	졸업전 진로/ 직업탐색	χ^2 -test
전체			133(20.7)	114(17.8)	67(10.4)	132(20.6)	59(9.2)	74(11.5)	
사회· 인구 학적 특성	부모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8(21.1)	6(15.8)	8(21.1)	3(7.9)	6(15.8)	4(10.5)	65.95**
		150~300만원 미만	41(23.8)	22(12.8)	13(7.6)	48(27.9)	18(10.5)	18(10.5)	
		300~400만원 미만	38(26.2)	24(16.6)	15(10.3)	27(18.6)	10(6.9)	15(10.3)	
		400~500만원 미만	17(15.2)	20(17.9)	8(7.1)	28(25.0)	9(8.0)	16(14.3)	
		500~800만원 미만	22(17.7)	34(27.4)	14(11.3)	16(12.9)	8(6.5)	17(13.7)	
		800만원 이상	7(13.7)	8(15.7)	9(17.6)	10(19.6)	8(15.7)	4(7.8)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 소재지	서울	58(19.5)	53(17.8)	40(13.5)	48(16.2)	36(12.1)	35(11.8)	16.5*
		서울 이외	75(21.7)	61(17.7)	27(7.8)	84(24.3)	23(6.7)	39(11.3)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64(18.3)	51(14.6)	40(11.4)	81(23.1)	42(12)	40(11.4)	40.31***
		자연/공학계열	58(26.6)	48(22.0)	19(8.7)	39(17.9)	11(5.0)	20(9.2)	
		기타계열	11(14.9)	15(20.3)	8(10.8)	12(16.2)	6(8.1)	14(18.9)	
졸업 유예 상태 특성	졸업유 예학기	첫 번째 학기	84(24.1)	64(18.3)	41(11.7)	55(15.8)	28(8.0)	42(12.0)	18.8*
		두 번째 학기 이상	20(17.2)	15(12.9)	8(6.9)	37(31.9)	11(9.5)	17(14.7)	

*** p<.001, ** p<.01, * p<.05

주) 1순위 응답 빈도 상위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먼저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율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자격증 취득 또는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로 양분되는 경향은 전체수준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의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해당 소득계층의 표본수가 적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저소득층의 경우 자격증취득과 인턴활동으로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비율(21.1%)이 동일하고, 다른 소득계층에서 20% 전후의 비율을 보이는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의 비율은 7.9%에 불과하다. 이는 공기업/공무원시험의 준비가 장기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업준비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갖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졸업유예자들은 수험생활을 목적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과 서울 이외 지역 대학 간의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계획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턴활동이다. 서울지역 대학의 졸업유예자의 경우 13.5%가 졸업유예 기간을 인턴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반면, 서울 이외 지역 대학의 졸업유예자의 경우 7.8%만이 인턴활동의 계획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이외 지역의 졸업유예자의 24.3%는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로 시간을 활용할 계획을 갖는 반면, 서울지역 대학 졸업유예자는 16.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전공자들이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23.1%)에 시간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고, 자연/공학계열은 자격증 취득(26.6%), 어학점수(22.0%)에 시간 활용비율이 높고, 기타계열은 어학점수(20.3%)와 졸업 전 진로/직업탐색(18.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졸업유예 상태별로는 졸업유예 첫 번째 학기에 해당하는 졸업유예자들은 자격증 취득(24.1%)과 어학점수(18.3%)에 시간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고, 두 번째 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졸업유예자들은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31.9%)로 집중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명 ‘공시족’으로 불리는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로 졸업유예 시간을 활용하는 이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낮고, 서울 이외 지역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이며, 두 학기 이상 졸업유예를 신청한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3) 졸업유예 유형 및 주된 사유의 결정 요인

(1) 졸업유예 유형의 결정요인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졸업유예자의 특성과 졸업유예의 사유 등 졸업유예 선택 시점의 실태를 살펴본데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의 유형과 졸업유예 사유와 관련한 정책과제 도출의 실증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V-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의 유형, 즉 졸업학점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졸업시기를 연기한 가장 좁은 의미의 순수 졸업유예자의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표 V-16 졸업유예 유형 결정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06 (0.15)	1.07 (0.16)
	연령	0.03 (0.05)	1.03 (0.05)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07 (0.05)	1.08 (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07 (0.15)	0.93 (0.14)
	설립주체(국·공립)	-0.10 (0.18)	0.91 (0.17)
	전공계열(인문·사회)	-0.22 (0.15)	0.81 (0.12)
	전공계열(기타)	-0.31 (0.22)	0.73 (0.16)
	편입여부(편입)	-0.24 (0.28)	0.79 (0.22)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13 (0.04)***	0.88 (0.04)**
	복수전공(이수)	-0.03 (0.15)	0.97 (0.15)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5 (0.02)**	1.05 (0.03)*
	log직전학기 등록금	-0.23 (0.15)	0.80 (0.12)
졸업유예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11 (0.10)	1.12 (0.11)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0.37 (0.20)*	1.44 (0.28)+
대학 소재지별 청년실업률 ²⁸⁾		0.05 (0.04)	1.05 (0.05)
상수		-0.30 (1.50)	0.74 (1.12)
N		1,002	
LR chi ²		34.35**	
Pseudo R ²		0.02	
Log likelihood		-677.20	

*** p<.001, ** p<.01, * p<.05, +p<.1

2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시도*연령별(15세~29세) 실업률, 2016년 1/4분기 자료(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 2016년 9월 12일 검색 및 자료 인출)를 실태조사 자료에 병합하여 분석하였고, 광역시도지역 실업률 집계가 되지 않는 세종시는 충남지역으로 재편하여 분석(이하표 동일).

분석 결과, 대학 재학 중 총 휴학학기(-)와 총 학자금 대출금액(+) 그리고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 운영 여부(+)가 졸업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학 중 휴학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유예를 할 가능성이 낮고, 학자금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속 대학에 졸업유예 제도가 운영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유예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의 선택이 재학 중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입학 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전체 시간 하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난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금액이 많은 학생들이 상환을 위한 일명 ‘문지마 취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를 위해 졸업시기를 조절하는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속 대학에서의 졸업유예제도의 운영이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기를 미루는 순수 졸업유예자 증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졸업유예 주된 사유 각각의 영향요인

졸업유예 유형의 결정요인에 이어,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두 가지 주된 졸업유예 사유(취업경쟁 우위 확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의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사유에는 남성(-), 서울지역 대학(+), 기타전공계열(-), 복수전공(+),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를 위한 사유에는 남성(-), 서울지역 대학(+), 총 휴학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경쟁우위 또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낮고,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서울지역 이의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취업경쟁 우위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의 사유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기타계열 전공자는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에 비해 취업경쟁우위를 확보 사유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낮고, 복수전공자들은 비전공자들에 비해 취업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다. 또한 소속 대학에서 졸

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경쟁 우위를 위한 졸업유예 선택 경향성이 높다.

표 V-17 졸업유예 주된 사유 각각의 영향요인: Multiple Regression Model

변수		취업경쟁우위 확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1.05 (0.25)***	-1.68 (0.27)***
	연령	-0.07 (0.08)	0.02 (0.09)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00 (0.08)	-0.12 (0.09)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52 (0.26)**	0.48 (0.28) ⁺
	설립주체(국·공립)	-0.13 (0.31)	-0.15 (0.33)
	전공계열(인문·사회)	-0.09 (0.26)	0.43 (0.29)
	전공계열(기타)	-1.18 (0.38)***	-0.23 (0.42)
	편입여부(편입)	0.13 (0.47)	-0.46 (0.52)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03 (0.08)	0.14 (0.08) ⁺
	복수전공(이수)	0.57 (0.26)**	0.22 (0.29)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5 (0.04)	0.05 (0.04)
	log직전학기 등록금	-0.07 (0.23)	-0.03 (0.25)
졸업유예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02 (0.17)	0.24 (0.18)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0.71 (0.33)**	0.13 (0.36)
대학 소재지별 청년실업률		0.11 (0.08)	0.09 (0.08)
상수		18.67 (2.46)***	16.37 (2.68)***
N		1,002	1,002
F		4.75***	5.41***
Adj. R ²		0.05	0.06

*** p<.001, ** p<.01, p<.05, ⁺p<.1

(3) 취업경쟁우위 확보 사유 우선 집단 결정요인

졸업유예 주된 사유 각각의 영향요인에 이어, 두 가지 주된 사유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취업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사유의 평균 점수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를 위한 사유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취업경쟁우위 확보의 점수가 더 높은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연령(-)과 전공계열(-)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경쟁우위 확보 사유가 졸업유예를 결정하는데 우선이 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인문/사회계열이나 기타계열 전공자들은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에 비해서도 취업경쟁우위 우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 V-18 취업경쟁우위 확보 사유 우선 집단 결정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23 (0.15)	1.26 (0.18)
	연령	-0.11 (0.05)**	0.89 (0.04)*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06 (0.05)	1.07 (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11 (0.15)	1.12 (0.17)
	설립주체(국·공립)	-0.09 (0.18)	0.91 (0.16)
	전공계열(인문·사회)	-0.36 (0.15)**	0.70 (0.11)*
	전공계열(기타)	-0.59 (0.23)***	0.56 (0.13)*
	편입여부(편입)	0.03 (0.28)	1.03 (0.29)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02 (0.04)	0.98 (0.04)
	복수전공(이수)	0.17 (0.15)	1.19 (0.18)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2 (0.02)	1.02 (0.02)
	log직전학기 등록금	-0.12 (0.13)	0.89 (0.12)
졸업유예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09 (0.11)	0.92 (0.1)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0.24 (0.20)	1.27 (0.25)
대학 소재지별 청년실업률		-0.00 (0.04)	1.00 (0.04)
상수		2.87 (1.45)**	17.60 (25.46)*
N		1,002	
LR chi ²		24.33*	
Pseudo R ²		0.02	
Log likelihood		-673.1	

*** p<.001, ** p<.01, * p<.05

3.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담 실태

주요 발견 (Main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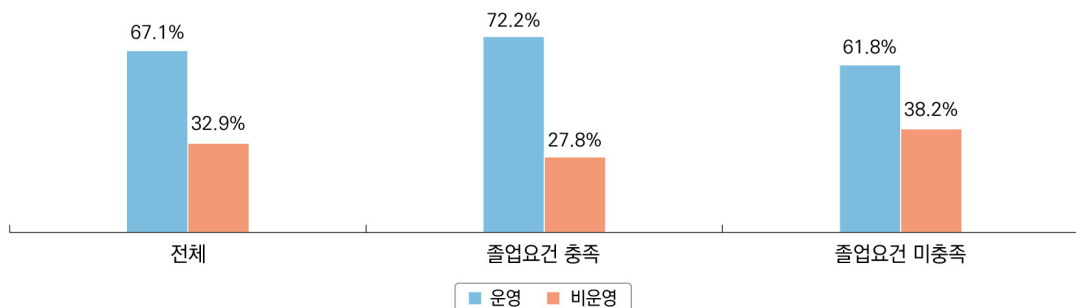
- 의무수강제도와 비용부과, 제도 폐지 등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함.
- 의무수강 이수자의 53.8%가 학점이 없는 Pass/Fail 또는 사이버 강의로 학점을 이수.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서 의무수강의 영향력은 3.5점, 도움정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4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음.
- 졸업유예학기에 납부하는 총비용은 졸업유예자 1인 평균 23.7만원, 52.8%가 부모님지원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대학이 부과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가계의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 졸업유예 선택 시, 부과비용을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서울지역의 등록금수준이 높은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임.

1) 의무수강 실태 및 필요성 인식

(1)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졸업유예를 선택한 이들의 특성과 졸업유예 선택의 사유,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권유하거나 추천한 사람들에 관한 실태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자의 설문 응답 내용을 통하여 이들이 소속된 대학에서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졸업유예제도의 운영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졸업유예자의 67.1%가 소속된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V-9】 졸업유예 유형별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 중에는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운영하던 제도를 폐지한 대학들도 존재한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3~4학년 재학생과 대학담당자 집단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추가학점제’와 같이 졸업유예제도를 없애는 대신 재학상태를 유지하려면 학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로 대체되거나, 대체 제도 없이 운영하던 제도를 폐지한 사례이다. 이들 사례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운영하던 졸업유예 제도를 비용부과가 수반되는 대체 제도로 전환하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졸업유예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저희학교가 딱 그 사례예요.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유예를 한다는 게 일종의 편법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토익점수를 제출 안한다든가. 얼마 전에 그거를 없앴어요. 졸업을 하려면 영어점수가 필요한데, 그 영어점수를 안 내면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안내고도 졸업이 유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추가학점제’라고 해서 졸업학점을 다 채웠는데 졸업하기 싫으면 무조건 수업을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말이 많았어요. 반발이 많았는데... 졸업을 안 하려면 일종의 돈을 주고 학점을 사는 거죠. 필요가 없음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는 선배들보다는 유예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취업이 안되면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에 아무래도 유예 선택을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3~4학년 재학생 H3)

“2011년부터 유예 제도를 하다가 2014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2015년 2월 졸업자부터는 제도를 폐지 했어요. 그때는 학점 당 5만원씩 받아서 다시 돌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자가 자꾸 늘어 나더라고요. 그게 그런 제도를 해서 늘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재학생 수가 늘어나잖아요. 대학의 평가 지표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반영 비율도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2015년 2월 졸업자들은 그 제도를 폐지 했어요. 규정에도 삽입을 해서 대학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폐지 할 수도 있다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폐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자를 보니까 사실 그게 큰 변동이 없어요.”(대학담당자 E5)

한편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를 졸업유예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졸업요건 충족자들이 속한 대학에서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비율(72.2%)이 졸업요건 미충족자 집단(61.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졸업유예자 유형에 따른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9 졸업유예 유형별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유예 유형		χ^2 -test
			졸업요건 충족	졸업요건 미충족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운영	672(67.1)	368(72.2)	304(61.8)	12.19***
	비운영	330(32.9)	142(27.8)	188(38.2)	

*** $p < .001$

졸업유예자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를 대학 설립주체와 대학소재지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국·공립대(69.2%)가 사립대학(66.4%)에 비해 제도 운영의 비율이 다소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대학소재지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라권(81.8%)과 경상권(75.1%)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비율이 60% 전 후의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V-20 소속 대학 특성별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및 허용 학기

(단위: 명, %, 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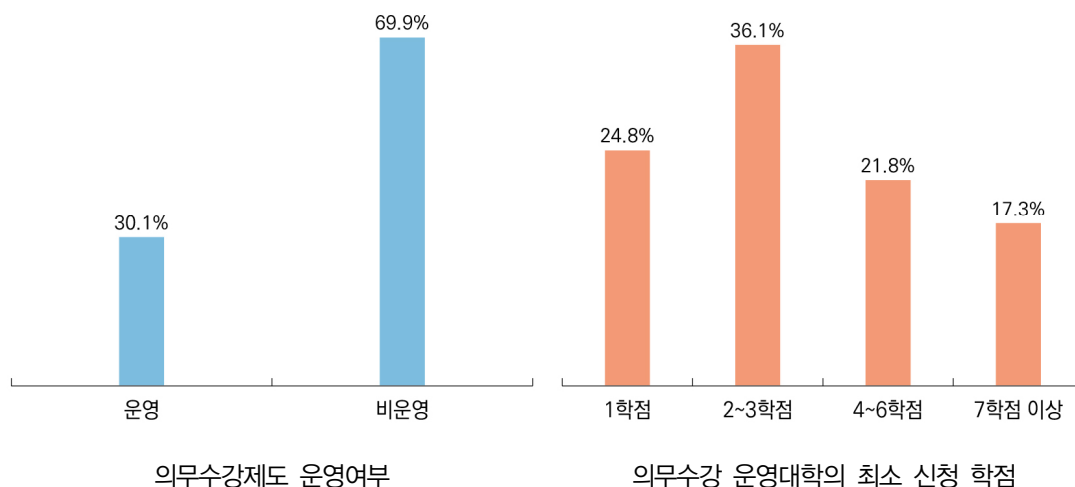
구분		전체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			운영 여부 χ^2 -test	허용 학기 t-test
			운영	허용 학기	비운영		
전체		1,002(100.0)	672(67.1)	2.9(1.5)	330(32.9)	0.69	-0.20
설립주체	국·공립	250(25)	173(69.2)	2.8(1.4)	77(30.8)		
	사립	752(75.1)	499(66.4)	2.9(1.5)	253(33.6)	16.13**	-0.06
소재지	서울	470(46.9)	297(63.2)	3.0(1.6)	173(36.8)		
	경기/인천	144(14.4)	96(66.7)	2.6(1.3)	48(33.3)		
	충청권	120(12.0)	79(65.8)	3.0(1.7)	41(34.2)		
	전라권	66(6.6)	54(81.8)	3.1(1.5)	12(18.2)		
	경상권	169(16.9)	127(75.1)	2.7(1.2)	42(24.9)		
제주/강원		33(3.3)	19(57.6)	2.4(0.9)	14(42.4)		

** $p < .01$

(2) 의무수강 실태 및 인식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제도 운영 대학이 졸업유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수강제도를 운영여부 및 최소 의무수강 학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림 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속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졸업유예자의 30.1%가 소속 대학에서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졸업유예 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는 최소 학점은 2~3학점(36.1%), 1학점(24.8%), 4~6학점(21.8%), 7학점 이상(17.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V-10】 의무수강제도 운영여부 및 신청 최소 학점 분포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학점 이수를 위해 졸업유예자들은 어떠한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속 대학에서 의무수강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시, 수강 신청한 과목 모두를 조사하였다.

<표 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Pass or Fail로 학점이 없는 강의(25.7%)를 신청하였거나 사이버로 운영되는 강의(28.1%)를 신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졸업요건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V-21 졸업유예자 수강 과목: 복수응답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졸업유예 유형	
		졸업요건 충족	졸업요건 미충족
1)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취업지원 관련 강의	17.1	24.4	6.9
2) 이미 수강했던 강의 중 학점이 낮았던 과목 재수강	22.4	24.4	19.5
3) Pass/Fail로 학점이 없는 강의	25.7	26.0	25.3
4) 사이버로 운영되는 강의	28.1	27.6	28.7
5) 전공과는 상관없이 관심 있었던 교양 강의	18.6	17.1	20.7
6) 취업 희망 분야 관련 전공 강의	14.8	10.6	20.7
7) 졸업요건 인증 필수 이수 과목	18.6	11.4	28.7
8) 기타	0.5	0.0	1.1

다만, 졸업유예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졸업요건 충족자의 경우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취업지원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비율(24.4%)이 졸업요건 미충족자(6.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졸업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졸업요건 인증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을 신청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학점이 낮았던 과목의 재수강이나 취업 희망분야와 관련한 전공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와 취업준비와의 연계성을 갖는 수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심 있던 교양강의를 수강하는 비율도 있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졸업유예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이들이 학점이 없거나 사이버 강의에 집중된다는 것은 의무수강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들이 졸업유예자들 대상 의무수강의 상당비율을 사이버 또는 학점이 없는 강의로 운영하는 데에는 이들 방식이 학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재학생으로서의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점 등록과 취업난 속에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등록도 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는 재학생의 존재를 대학의 학사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졸업유예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 학사 사이에서 하나의 절충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갖는 고민의 과정과 흔적이 포착되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부담을 들여 가면서도 의무 수강 제도를 만든 이유가 저희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운영 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중략)...당연히 재학생이면 수업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휴학 하든지 자퇴 하든지 수료하든 졸업하든 뭘 해야 되는데 재학생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재학생은......(중략)...의무 수강 제도는 도입을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안 들어도 되도록 졸업 연기라고 그러는데 전용 인터넷 강의 가상 강좌를 운영을 해요. 이것도 1학점 짜리이고 이것도 네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형태가 다른데요. 어떤 교수님들은 출석만 열심히 체크하면 되더라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졸업 연기자 전용 강의이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나중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런 차원의 수업들을 개설을 해 놓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이라든지... 어떤 교수님은 출석만 잘 해도 1학점을 PASS/FAIL로 해서 준다든지, 어떤 과목은 진짜 불려서 시험 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지만 어떤 교수는 과제 두 번 내고 리포트 한번 내면된다 이런 교수님들도 있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 안 나와도 되도록 만들었고 돈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대학담당자 E4)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강의이던 상관없이 의무수강을 하는 졸업유예 당사자들은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수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의무수강제도가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등교육의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졸업유예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학의 장치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소속 대학에서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는 졸업유예자들에게 의무수강제도가 졸업유예 선택을 하는데 있어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5점 척도(1.전혀 영향 없음~5. 매우 큰 영향 있음)로 측정하였다.

먼저 <표 V-22>에 제시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데 있어 장벽으로써 의무수강제도에 대한 영향력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보통(3.0점)보다 높은 수준인 3.5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제가 필요한 정도와 본인에게 의무수강제도가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낮은 2.4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졸업유예자들이 의무수강제도에 대해 필요하거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는 낮지만,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장벽으로써는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22 의무수강제도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영향력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제의 필요 정도	본인에게 의무수강제도의 도움 정도
전체	202 (100.0)	202 (100.0)	202 (100.0)
전혀 영향/필요/도움 없음	6 (3.0)	37 (18.3)	39 (19.3)
영향/필요/도움 없는 편	26 (12.9)	63 (31.2)	69 (34.2)
보통	58 (28.7)	70 (34.7)	68 (33.7)
영향/필요/도움 있는 편	83 (41.1)	31 (15.3)	24 (11.9)
매우 큰 영향/필요/도움 있음	29 (14.4)	1 (0.5)	2 (1.0)
평균(편차)	3.5 (0.9)	2.4 (0.9)	2.4 (0.9)

2) 비용부과 실태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1) 졸업유예 신청 시 비용부과 실태

졸업유예와 관련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데에는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한다. 앞서 제Ⅱ장에서 의무수강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모호함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자들의 비용 부담의 수준과 실태,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V-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졸업유예자의 51.0%가 소속대학에서 졸업유예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비용부과의 여부는 소속대학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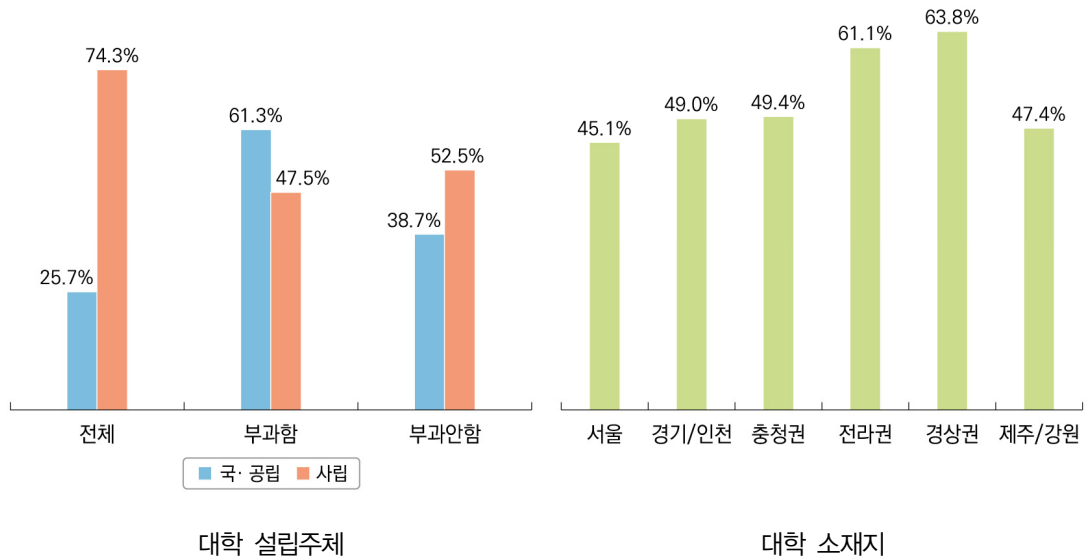
표 V-23 대학 특성별 졸업유예 시 비용부과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비용부과 여부		χ^2 -test
			부과함	부과안함	
전체		672(100.0)	343(100.0)	329(100.0)	
			343(51.0)	329(49.0)	
설립주체	국·공립	173(25.7)	106(61.3)	67(38.7)	9.76**
	사립	499(74.3)	237(47.5)	262(52.5)	
소재지	서울	297(44.2)	134(45.1)	163(54.9)	14.97*
	경기/인천	96(14.3)	47(49.0)	49(51.0)	
	충청권	79(11.8)	39(49.4)	40(50.6)	
	전라권	54(8.0)	33(61.1)	21(38.9)	
	경상권	127(18.9)	81(63.8)	46(36.2)	
	제주/강원	19(2.8)	9(47.4)	10(52.6)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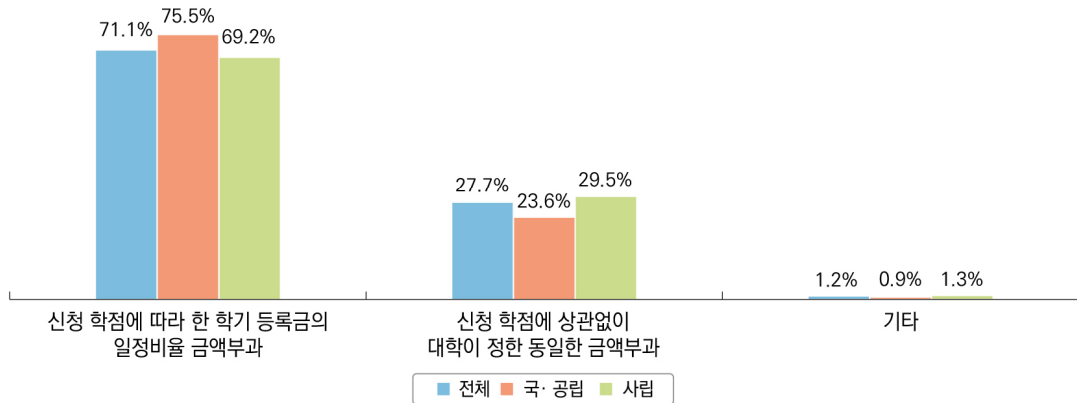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에 소속된 졸업유예자들이 비용을 부과한다고 응답한 비율(61.3%)이 사립대 소속자들의 응답 비율(47.5%)보다 높고, 경상권(63.8%) 및 전라권(61.1%) 소재 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이 비용 부과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상권과 전라권 소재 대학들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비율이 높다는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대체로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졸업유예자들이 비용부과 응답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서울지역 소재의 대학들의 졸업유예제도 폐지가 빠르게 이루어진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V-11】 졸업유예 시 비용부과 여부: 대학 설립주체 및 소재지별 비교

졸업유예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졸업유예제도가 이루어지는 대학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가? 앞서 제Ⅱ장에서 졸업유예제와 관련한 대학의 규정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무수강제도의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졸업유예자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비용을 부담하는 졸업유예자의 71.1%가 신청학점에 따라 한 학기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응답 비율에 있어 대학 설립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높고, 신청학점에 상관없이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동일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은 사립대학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림 V-12】 졸업유예 신청 시 부과 비용의 산정 기준: 소속 대학의 설립주체별 비교

(2)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및 비용 마련 방법

대체로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 학기의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면, 실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표 V-24>와 같이 살펴보았다.

2016년 1학기에 졸업유예를 신청한 졸업유예자들은 평균 23.3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국·공립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은 이보다 낮은 19.8만원, 사립대학 졸업유예자들은 이보다 많은 24.5만원을 대학에 지불하였다. 부담 금액을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비용을 부담한 졸업유예자의 30.6%가 10만원~30만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23.0%가 50~100만원 미만, 20.1%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의 설립주체에 따라 나누어 비교해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45.3%가 10~30만원 미만의 비용, 29.2%가 30~5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29.1%가 50~100만원 미만, 24.1%가 10~30만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24

소속 대학의 설립주체별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2016년 1학기 기준

(단위: 명, %, 만원)

구분			전체	대학 설립주체		χ^2 -test/ t-test
				국·공립	사립	
전체			343(100.0)	106(100.0)	237(100.0)	
				106(30.9)	237(69.1)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10만원 미만	빈도(비율)	23(6.7)	3.0(2.8)	20.0(8.4)	37.59***
		평균(편차)	4.4(2.7)	3.7(2.3)	4.5(2.8)	
	10~30만원 미만	빈도(비율)	105(30.6)	48.0(45.3)	57.0(24.1)	
		평균(편차)	15.9(5.0)	16.3(4.8)	15.6(5.3)	
	30~50만원 미만	빈도(비율)	67.0(19.5)	31.0(29.2)	36.0(15.2)	
		평균(편차)	32.7(4.3)	32.5(4.2)	32.8(4.5)	
	50~100만원 미만	빈도(비율)	79.0(23.0)	10.0(9.4)	69.0(29.1)	
		평균(편차)	60.9(11.4)	60.9(13.3)	60.9(11.2)	
	100만원 이상	빈도(비율)	69.0(20.1)	14.0(13.2)	55.0(23.2)	
		평균(편차)	202.0(124.2)	170.4(50.6)	210.0(135.9)	
전체 평균(편차)			23.3(61.0)	19.8(41.5)	24.5(66.2)	-1.07

*** p<.001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여부나 대학의 설립주체 이외 졸업유예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부담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 하나는 의무수강제도의 실시여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업유예 신청 학생들에게 졸업유예학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의무수강제도인데, 이 때 학점 이수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대학들이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의무수강제도와 그에 따른 수업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졸업유예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제 I 장과 제 II 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속대학의 의무수강제도 운영 여부에 따른 비용 부담을 <표 V-25>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은 한 학기 평균 62.6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은 약 1/3 수준인 22.1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39.8%의 졸업유예자들이 10~30만원 미만, 20.4%가 30~5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졸업유

예자의 32.2%가 50~100만원 미만의 비용을, 23.1%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이 최근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도입하거나 개정 실시하는 의무수강제도가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25 의무수강제도 운영 여부별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2016년 1학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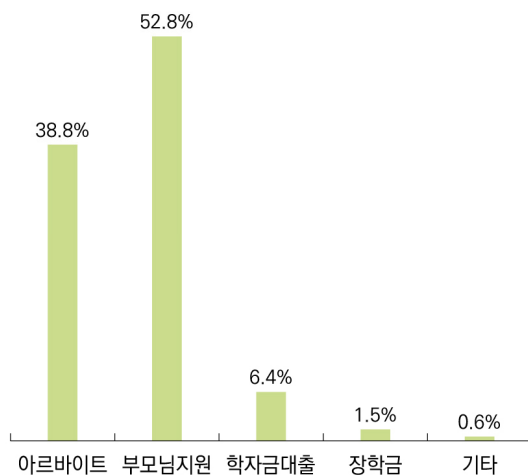
(단위: 명, %, 만원)

구분			전체	의무수강제도 운영 여부		χ^2 -test or t-test
				운영함	운영안함	
전체			343(100.0)	147(100.0)	196(100.0)	
				147(42.9)	196(57.1)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	10만원 미만	빈도(비율)	23(6.7)	12(8.2)	11(5.6)	23.68***
		평균(편차)	4.4(2.7)	4.1(2.6)	4.8(3.0)	
	10~30만원 미만	빈도(비율)	105(30.6)	27(18.4)	78(39.8)	
		평균(편차)	15.9(5.0)	15.7(4.4)	16.0(5.3)	
	30~50만원 미만	빈도(비율)	67(19.5)	27(18.4)	40(20.4)	
		평균(편차)	32.7(4.3)	33.2(4.5)	32.4(4.2)	
	50~100만원 미만	빈도(비율)	79(23.0)	47(32.0)	32(16.3)	
		평균(편차)	60.9(11.4)	60.6(10.9)	61.3(12.2)	
	100만원 이상	빈도(비율)	69(20.1)	34(23.1)	35(17.9)	
		평균(편차)	202.0(124.2)	246.4(141)	158.8(87.4)	
전체 평균(편차)			23.3(61.0)	62.6(103.3)	22.1(48.5)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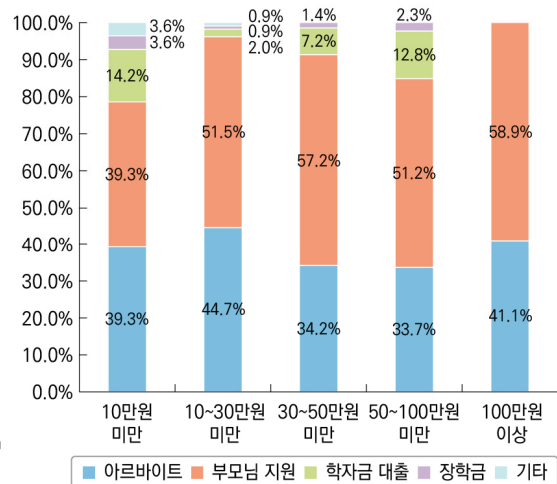
*** p<.001

졸업유예를 선택함으로써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면, 졸업유예자들은 그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거나 조달하는가? [그림 V-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의 절반 이상인 52.8%가 부모님의 지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8.8%이고, 부담하는 금액 수준이 높아질수록 본인 아르바이트로 지불하는 비율은 30만원을 기점으로 다소 낮아진다. 또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학자금 대출(6.4%)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거나 장학금(1.5%)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본인의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용부과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졸업유예가 취업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의 학생들 중 부모님이 졸업유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졸업유예라는 것이 아예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비용 마련의 주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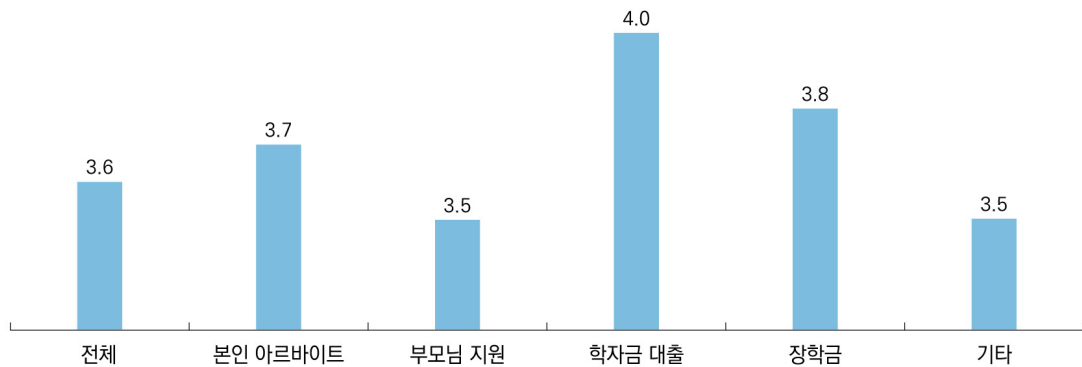


비용 부담 금액 수준

【그림 V-13】 졸업유예 비용 부담 금액 및 비용 마련의 주된 방법

부과되는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졸업유예자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는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V-14]와 같이, 졸업유예 비용의 마련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5점 척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됨)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4.0점)로 부과 비용을 충당한 졸업유예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담을 느끼고, 장학금(3.8점)이나 본인 아르바이트(3.7점)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졸업유예자들도 전체 평균(3.6점)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님의 지원(3.5점)하는 졸업유예자들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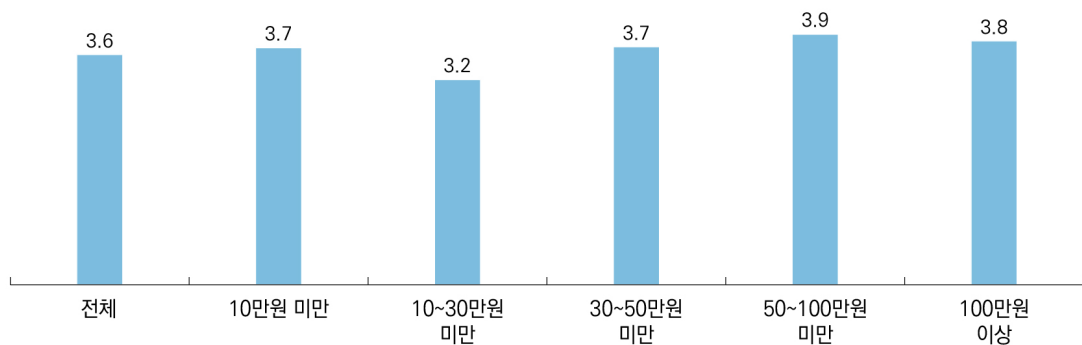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 신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문제가 졸업유예자 집단 내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체감되지 않으며, 그 체감의 차이는 비용을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선에서 마련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마련하는지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과 비용이 증액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졸업유예자들은 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거나 체감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림 V-14】 졸업유예 비용 마련 방법에 따른 부과 금액의 경제적 부담 정도

(3) 비용부과의 영향력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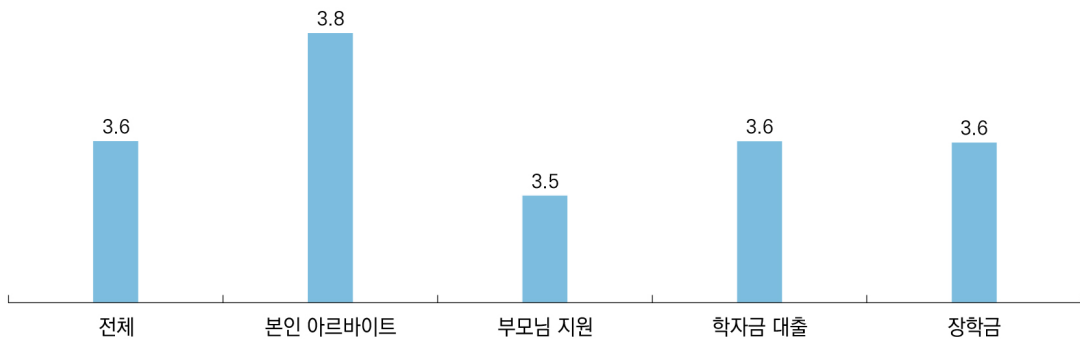
의무수강제도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과연 졸업유예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으로써 영향력이 있는가를 5점 척도(1. 전혀 영향 없음~5. 매우 큰 영향 있음)로 측정하여 부담금액 수준과 비용 마련의 방법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V-15】 부담 금액 수준별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비용 부과의 영향력 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은 전체 평균 3.6점 수준으로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써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부담 금액 수준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10~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는 졸업유예자들이 가장 낮은 점수(3.2점)로 비용부과의 영향력을 평가하였으며, 50~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는 이들이 가장 높은 점수(3.9점)로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비용 마련 방법에 따른 비용 부과 영향력 평가는 달라지는가?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비용을 마련하는 졸업유예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3.8 점)로,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들이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써 비용부과의 영향력을 가장 낮은 점수(3.5점)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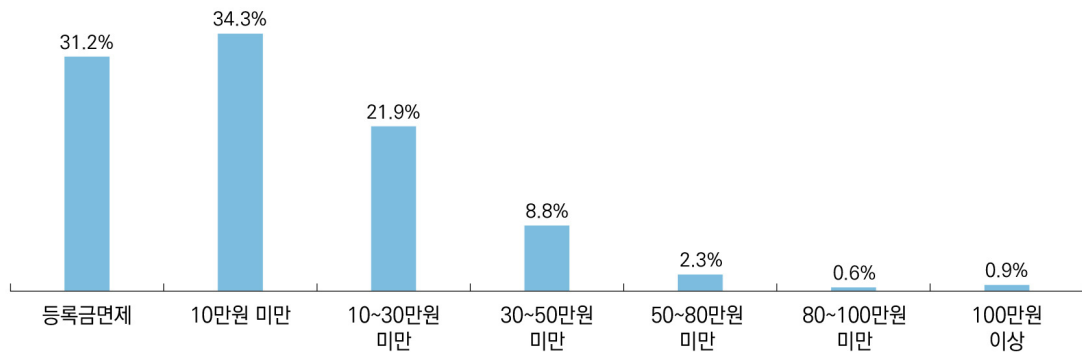
【그림 V-16】 비용 마련 방법별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비용 부과 영향력 평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비용부과가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영향력은 있지만, 어차피 졸업유예를 통해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비용부과의 여부나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금액이 많더라도 졸업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감당해서라도 졸업유예를 선택한다는 것이며, 그 경우 졸업유예 신청 시 부과되는 비용은 장벽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돈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보다는 어떻게 보면 졸업 유예라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내서라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몇 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돈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도 가격이 더 높아도 저는 유예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 낼 거 같아요.”(졸업유예자 C5)

“최소 몇 학점 들어야 되고 비용도 얼마 내야 된다면 아마도...육 하면서 돈 내겠죠.”(졸업
유예자 A4)

비용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졸업유예자들은 어느 정도의 비용 부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림 V-17]에서는 졸업유예자가 생각하는 적정 비용 수준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 비용을 지불한 졸업유예자의 34.3%가 10만원 미만 수준, 31.2%가 면제, 그리고 21.9%가 10~30만원 미만의 금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답하여 전체의 87.4%가 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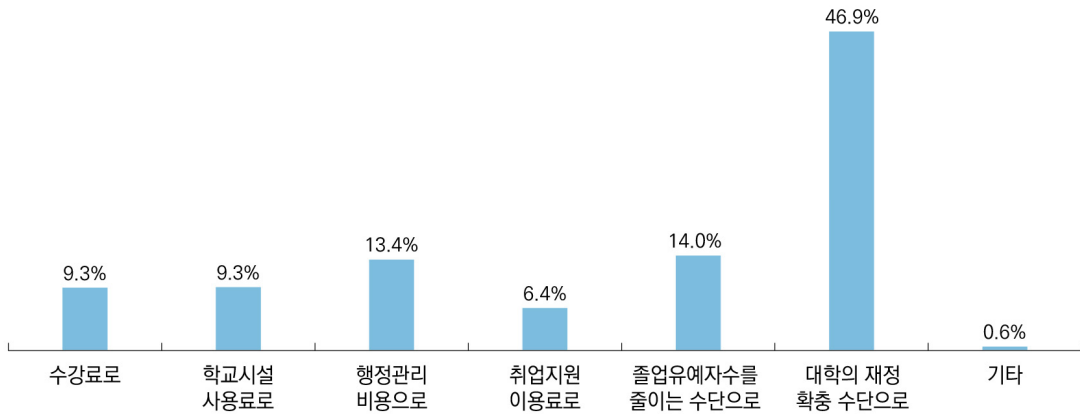


【그림 V-17】 졸업유예 신청 시 부담 금액별 적정 비용에 대한 인식

적지 않은 비중의 졸업유예자들이 졸업유예학기의 비용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65.7%가 10만원 미만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수의 졸업유예자들이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써 졸업유예 신청 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림 V-18]에 제시된 졸업유예 비용 부과 사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졸업유예 비용을 부담한 졸업유예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대학이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이유가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졸업유예자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4.0%에 불과하며, 졸업유예자에 대한 ‘행정관리 비용’(13.4%)이나 학교 시설 사용료(9.3%), 또는 수강료(9.3%),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료(6.4%)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또한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의 응답 비율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서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60.9%가 최소 3학점 이하의 학점에 대한 의무 이수를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졸업유예자 수가 많을수록 행정비용은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학이 재정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졸업유예 신청자에 대한 비용을 부과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의 졸업유예자들이 비용 부과에 대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간의 인식 차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V-18】 졸업유예 신청 시 비용부과 사유에 대한 인식

3) 비용부과 유용성 평가 및 경제적 부담수준의 영향 요인

(1) 비용부과 유용성 평가의 영향 요인

대학에서 졸업유예자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무수강제도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방안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만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 바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학이 졸업유예자 증가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방식임과 동시에 졸업유예의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비용부과가 졸업유예를 완화시키는 장치로써 어느 정도 유용한가를 판단 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형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V-26>에는 졸업유예자들이 졸업유예 선택을 완화시키는 장벽으로써 비용부과의 유용성에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V-26

비용 부과 유용성 평가 영향 요인: Ordered Logit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53 (0.25)**	0.58 (0.14)*
	연령	0.09 (0.08)	1.09 (0.09)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07 (0.09)	1.06 (0.09)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60 (0.26)**	1.82 (0.46)*
	설립주체(국·공립)	0.40 (0.33)	1.49 (0.48)
	전공계열(인문·사회)	-0.15 (0.27)	0.86 (0.23)
	전공계열(기타)	-0.28 (0.41)	0.75 (0.31)
	편입여부(편입)	-0.58 (0.39)	0.55 (0.21)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14 (0.08) ⁺	0.87 (0.07) ⁺
	복수전공(이수)	-0.11 (0.27)	0.89 (0.24)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5 (0.04)	0.95 (0.04)
	log직전학기 등록금	0.83 (0.37)*	2.28 (0.84)*
졸업유예상태 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16 (0.16)	1.17 (0.18)
의무수강 제도운영 특성	의무수강제도(운영)	0.21 (0.32)	1.22 (0.39)
	의무수강 최소 학점	-0.00 (0.05)	0.99 (0.05)
비용부담 특성	log졸업유예 신청 시 납부 총 금액	-0.10 (0.11)	0.91 (0.10)
	비용 마련방법(본인)	0.42 (0.24) ⁺	1.52 (0.37) ⁺
	비용 산정기준(동일금액)	-0.37 (0.25)	0.69 (0.17)
	경제적 부담 수준 (1.전혀~5.매우부담)	2.11 (0.18)***	8.25 (1.46)***
Constant cut1		8.45 (2.88)***	8.45 (2.87)
Constant cut2		11.20 (2.92)***	11.19 (2.91)
Constant cut3		13.53 (2.94)***	13.53 (2.94)
Constant cut4		16.71 (2.98)***	16.71 (2.98)
N		343	
Log Likelihood		-336.0	
Log Likelihood χ^2		257.3***	
Pseudo R ²		0.28	

*** p<.001, ** p<.01, * p<.05, + p<.1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남성(-), 서울지역 대학(+), 졸업유예 직전 학기 등록금(+), 경제적 부담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용부과를 졸업유예 선택을 망설이는 장벽으로써 영향을 덜 받으나, 서울지역 대학은 서울 이외 지역 학생들에 비해 장벽으로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직전학기 등록금의 수준이 높을수록 졸업유예 비용을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 부과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이들이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여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유예를 선택할 때 부과비용을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졸업유예 비용이 증액될 경우 가장 일차적으로 졸업유예 집단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시사한다.

(2) 경제적 부담 수준의 영향 요인

졸업유예 비용 부과에 따른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졸업유예 비용에 대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V-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 인문계열 전공(+), 기타계열 전공(+), 직전학기 등록금(+), 의무수강제도(+), 의무수강 최소 학점 (-), 졸업유예 시 납부 총 금액(+)이다.

앞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졸업유예자들은 졸업유예 비용 부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낮다. 따라서 부모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졸업유예 비용으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는 졸업유예자 집단 내에서 체감하는 온도차가 있어 당사자 자발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역 대학 졸업유예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졸업유예자 수가 많은 인문/사회계열이나 기타계열 전공자들이 경제적 부담 수준이 자연/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것은 앞서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전공자들이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 또는 고시/전문직시험 준비를 하는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을 경우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V-27

졸업유예 비용의 경제적 부담 수준 영향 요인: Ordered Logit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10 (0.24)	0.90 (0.21)
	연령	-0.13 (0.08)*	0.87 (0.07) ⁺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44 (0.08)***	0.64 (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53 (0.24)**	1.70 (0.41)*
	설립주체(국·공립)	-0.02 (0.28)	0.98 (0.27)
	전공계열(인문·사회)	0.57 (0.25)**	1.76 (0.43)*
	전공계열(기타)	0.71 (0.39)*	2.03 (0.79) ⁺
	편입여부(편입)	-0.26 (0.40)	0.76 (0.31)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12 (0.08)	1.12 (0.08)
	복수전공(이수)	-0.10 (0.26)	0.90 (0.23)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0 (0.04)	0.99 (0.04)
	log직전학기 등록금	0.82 (0.24)***	2.27 (0.54)**
졸업유예상태 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21 (0.17)	1.23 (0.21)
의무수강 제도운영 특성	의무수강제도(운영)	0.91 (0.30)***	2.48 (0.76)**
	의무수강 최소 학점	-0.12 (0.05)**	0.88 (0.04)*
비용부담 특성	log졸업유예 신청 시 납부 총 금액	0.57 (0.11)***	1.77 (0.18)***
	비용 마련방법(본인)	0.02 (0.23)	1.02 (0.23)
	비용 산정기준(동일금액)	-0.25 (0.24)	0.77 (0.18)
Constant cut1		-1.62 (2.45)	-6.43 (2.45)
Constant cut2		0.57 (2.44)	-4.23 (2.44)
Constant cut3		2.65 (2.44)	-2.14 (2.45)
Constant cut4		5.10 (2.45)	0.28 (2.45)
N		343	
Log Likelihood		-397.7	
Log Likelihood χ^2		109.9***	
Pseudo R ²		0.12	

*** p<.001, ** p<.01, * p<.05, + p<.1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서 기술통계분석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의무수강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경제적 부담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의무수강제도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무수강 최소 학점이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낮다는 것은 대학의 의무수강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수가 많다는 것은 대체로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비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많은 금액을 졸업유예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졸업유예자들이 경제적 부담의 수준을 인식할 때 의무수강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및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주요 발견 (Main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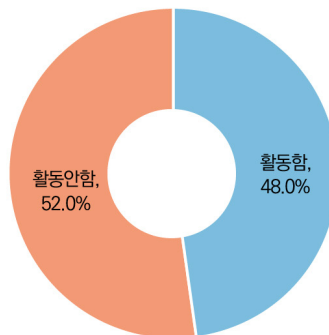
- 졸업유예자의 52.0%가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공채시험이나 인턴활동, 자격증취득, 진로 및 직업탐색을 계획하고 유예한 이들의 구직활동 경험률이 높음. 구직자들은 졸업유예학기 구직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현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경쟁자들 속에서의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인지하게 되고 탈락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감 상실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함.
- 구직 의지가 있는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필요한데, 연령수준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중 자격증취득이나 인턴활동을 목적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였으나, 졸업유예학기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수준이 높은 이들이 1차 정책목표(target) 집단이 될 수 있음.
- 졸업유예학기에 졸업유예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2순위)을 제외하고는 계획한 점수와 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대한 불안과 초조함(1순위), 지연된 졸업으로 경쟁자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따른 불이익 걱정(3순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4순위), 부모·친지의 불편한 시선(5순위) 등 심리·정서적 문제로 압축됨.
- 졸업유예자의 35.0%는 졸업유예학기의 연장 계획이 있으며, 평균 2.3학기 정도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서울소재대학 남학생들이 졸업유예학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자금대출금액이 많고 경제적 부담수준이 높은 국·공립대학 남자 졸업유예자들이 졸업유예학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1)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

(1)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

졸업유예 신청 시, 의무수강과 그에 따른 비용부과 실태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학기의 생활을 구직활동과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졸업유예 기간의 연장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졸업유예가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노동시장 이행 시기를 조절함과 동시에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졸업유예학기에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활동들은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유예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림 V-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0%가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고, 52.0%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9】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여부를 졸업유예 기간 활용계획이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계획별 활동 여부를 <표 V-28>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표 V-28 졸업유예 기간 활용 유 계획자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유예학기 구직 활동		χ^2 -test
			활동함	활동안함	
전체		642(100.0)	324(50.5)	318(49.5)	
졸업유예 기간 활용 계획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133(100.0)	77(57.9)	56(42.1)	47.43***
	어학점수 획득/점수 올리기	114(100.0)	57(50.0)	57(50.0)	
	인턴활동	67(100.0)	45(67.2)	22(32.8)	
	기업의 입사시험 준비	36(100.0)	29(80.5)	7(19.5)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	132(100.0)	48(36.4)	84(63.6)	
	고시/전문직자격시험 준비	59(100.0)	19(32.2)	40(67.8)	
	대학원 진학 준비	15(100.0)	5(33.3)	10(66.7)	
	졸업 전 마지막 진로/직업 탐색	74(100.0)	41(55.4)	33(44.6)	
	기타	12(100.0)	3(25.0)	9(75.0)	

*** $p < .001$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학기에 일명 ‘공시족’으로 불리는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자를 비롯하여 고시/전문직자격시험 준비를 할 계획이었던 졸업유예자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기업의 입사준비나 인턴 활동,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어학점수 등의 취업에 필요한 요건들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는 졸업유예자들은 졸업유예학기가 곧 구직활동 기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졸업 전 마지막으로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간을 졸업유예학기를 통해서 갖고자 했던 이들도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낮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구직활동 여부에 이어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이 어떠한 곳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으며, 자주 이용하는 곳이 졸업유예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V-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취업사이트와 카페이다.

표 V-29 졸업유예 유형별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 1순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유예 유형		χ^2 -test
			졸업요건 충족	졸업요건 미충족	
전체		481(100.0)	284(59.0)	197(41.0)	
			284(100.0)	197(100.0)	
일자리 정보 얻는 곳	학교 취업정보 또는 지원센터	60(12.5)	36(12.7)	24(12.2)	15.61*
	취업사이트, 카페 등	185(38.5)	111(39.1)	74(37.6)	
	기업정보제공 유료서비스	10(2.1)	10(3.5)	—	
	취업한 친구, 선후배 정보	41(8.5)	17(6.0)	24(12.2)	
	공공취업알선기관의 홈페이지	64(13.3)	35(12.3)	29(14.7)	
	민간취업알선기관의 홈페이지	49(10.2)	33(11.6)	16(8.1)	
	기업 등 취업 처 홈페이지	71(14.8)	42(14.8)	29(14.7)	
	기타	1(0.2)	—	1(0.5)	

*** $p < .001$, ** $p < .01$, * $p < .05$

이는 졸업유예 유형과는 상관없이 취업사이트나 카페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높다는 것은 타인의 주관적인 경험정보에 대한 의존 경향과 그곳을 통해 공유되는 비객관적 정보를 확인된 사실 정보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경험 정보가 취업카페가 아닌 곳에서는 얻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있어 졸업유예 유형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취업한 친구나 선후배의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다. 전반적으로 표본수가 적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은 미충족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요건 충족자에 비해 취업한 친구나 선후배의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 두 배정도 높다.

(2) 구직활동의 어려움과 비구직 사유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여부와 일자리 정보를 얻는 곳을 살펴본데 이어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표 V-30>과 <표 V-31>과 같이 가장 1순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항들 중 응답

비율이 높은 상위 5가지 사항을 졸업유예 유형과 주된 사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졸업유예 유형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상위 5가지의 어려움을 비교해보면, 졸업학점과 학점 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졸업유예자와 졸업학점 이외 요건을 채우지 않은 미충족자가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사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졸업유예 유형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1순위 응답

어려움 순위	졸업요건 충족	졸업요건 미충족
1순위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16.2%)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점 (15.7%)
2순위	탈락한 경우, 내가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15.1%)	탈락한 경우, 내가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14.2%)
3순위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점 (14.4%)	모집 요건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13.7%)
4순위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점(12.3%)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점(11.7%)
5순위	모집 요건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10.2%)	구인업체 채용기준에 내가 해당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점(10.2%)

전체적으로 상위 5순위로 응답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자기 탐색의 부족과 같은 개인의 문제가 뒤 쉼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졸업유예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대체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즉 청년층이 입직할 수 있는 일자리의 자체의 부족과 질 낮은 일자리, 경쟁심화에 따른 선발 기준의 모호성의 사유 등으로 구성되며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반면, 졸업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자기탐색의 부족의 사유로 분류될 수 있는 사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성되며 상위 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V-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유예자들은 취업지원을 시도하지만 서류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계속 탈락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는데 따른 어려움(16.2%)이 있다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했으며, 탈락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15.1%)이 2순위의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점(14.4%)인데, 이 어려움은 졸업요건 미충족자 집단에서는 1순위의 응답률(15.7%)을 보인 사항이다. 그 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점과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이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한다.

표 V-31 주된 졸업유예 사유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1순위 응답

어려움 순위	취업경쟁우위 확보 >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	취업경쟁우위 확보 <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
1순위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14.8%)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점(16.5%)
2순위	탈락한 경우, 내가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14.4%)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15.4%)
3순위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점(12.9%)	탈락한 경우, 내가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15.1%)
4순위	모집 요건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12.4%)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점(12.1%)
5순위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점(12.0%)	모집 요건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11.0%)

졸업유예학기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주된 졸업유예 사유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사유의 점수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를 위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사유의 점수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응답비율에 따른 순위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상위 5가지의 어려움을 구성하는 내용은 같다. 다만, 취업경쟁 우위 확보의 점수가 더 높은 집단의 경우, 앞서 살펴본 졸업요건 충족자와 같은 응답 패턴과 유사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확보의 점수가 더 높은 집단의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자의 응답과 유사하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나서는 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접하게 되는 현실의 상황과 정보, 그로 인한 진로 변경에 대한 고민과 방황의 시간들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구직과정이 취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정작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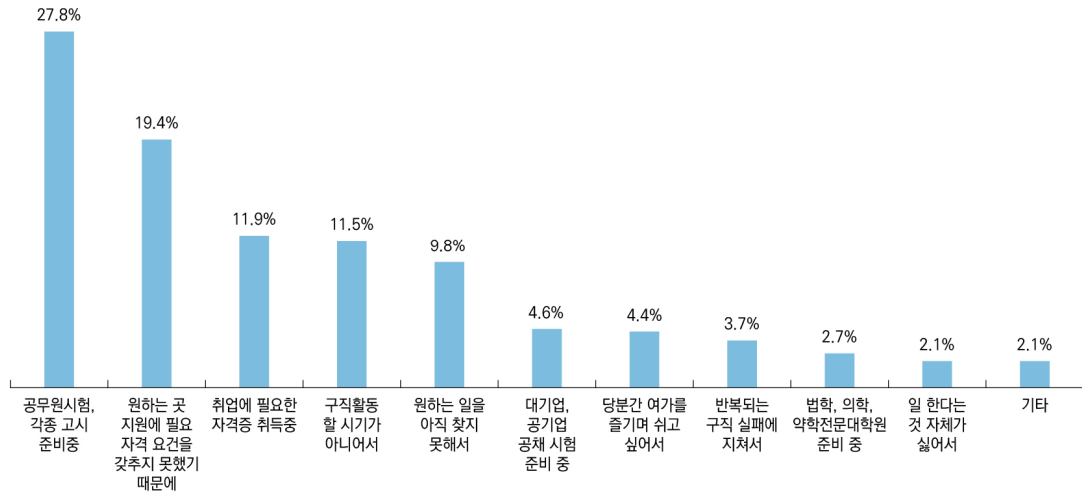
스스로에 대한 자기 탐색과 현실 직업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 탐색, 그리고 취업경쟁자들과 비교해 본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진로를 바꿨거든요. 제가 원래 사기업 준비하면서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일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업 유예가 된 건데...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한동안 술만 마시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한테 안 맞는 길인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혼자 방향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크게 겪는 사람 많다고 봅니다.”(졸업유예자 A3)

“저는 두 번 했으니까 유예를 첫 번째 학기에는 자격증이라든 토익 이런 거 다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지방대이다 보니까 서류가 안 돼요, 이 기업에.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하는 데가 ○○○였는데 그래서 ○○○계열사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근데 이전에 했었을 때는 서류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래 가지고... 다음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죠.”(졸업유예자 C3)

“근데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직무 적성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일단 당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사립대이다 보니까 선배들 같은 경우에 좋은 데로 취업을 못 했어요. 다른 (좋은) 학교다니는 친구는 다양하게 취업을 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미리 듣고 그런 정보력 차이가 꽤나 심한 거 같더라고요” (졸업유예자 C4)

한편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의 비구직 사유를 살펴보면, 공무원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이라는 사유(27.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19.4%)이 가장 높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11.9%)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거나(11.5%), 원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해서(9.8%)와 같은 사유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V-20】 졸업유예기간 비구직 사유: 1순위 응답

(3) 구직활동 여부의 결정 요인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에 나서는 이들은 적절한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시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졸업유예자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유예자들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의 의지가 있는 졸업유예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앞서 졸업유예자들의 구직활동 여부와 비구직 사유 등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특성을 갖는 졸업유예자들이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는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해야하는 일차적 목표 집단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연령(+),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 인문/사회계열 전공(+), 편입(-), 졸업요건 충족자(+), 졸업유예학기 자격증 취득 계획(+), 졸업유예학기 인턴활동 계획(+), 경제적 부담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 중 소속 대학에 편입한 졸업유예자들은 상대적으로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 외 영향요인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표 V-32 졸업유예학기 구직 활동여부 영향 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28 (0.35)	1.32 (0.46)
	연령	0.26 (0.12)*	1.29 (0.16)*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38 (0.12)**	1.45 (0.18)**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01 (0.35)	0.98 (0.34)
	설립주체(국·공립)	0.35 (0.41)	1.41 (0.58)
	전공계열(인문·사회)	0.66 (0.36) ⁺	1.92 (0.69) ⁺
	전공계열(기타)	-0.49 (0.59)	0.61 (0.36)
	편입여부(편입)	-0.96 (0.56) ⁺	0.38 (0.21) ⁺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16 (0.12)	0.85 (0.09)
	복수전공(이수)	0.37 (0.37)	1.45 (0.53)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8 (0.06)	1.07 (0.06)
	log직전학기 등록금	-0.20 (0.41)	0.81 (0.34)
졸업유예상태 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49 (0.26) ⁺	1.63 (0.42) ⁺
	졸업유예 주된 사유 (취업경쟁우위확보)	0.33 (0.32)	1.38 (0.44)
	졸업요건 충족자	0.84 (0.32)**	2.31 (0.73)**
	졸업유예학기 활동계획 (자격증취득)	0.93 (0.45)*	2.52 (1.12)*
	졸업유예학기 활동계획 (어학점수)	0.58 (0.46)	1.79 (0.82)
	졸업유예학기 활동계획(인턴)	1.26 (0.56)*	3.54 (1.98)*
	졸업유예학기 활동계획(졸업전진로탐색)	0.76 (0.48)	2.14 (1.02)
졸업유예제도운영 특성	log졸업유예신청시납부총금액	0.16 (0.16)	1.17 (0.18)
	경제적부담수준	0.49 (0.19)*	1.63 (0.31)*
의무수강 제도운영 특성	의무수강제도(운영)	0.74 (0.45)	2.09 (0.94)
	의무수강 최소 학점	-0.06 (0.07)	0.94 (0.07)
상수		-11.10 (4.04)***	0.00 (0.00)***
N		235	
Log Likelihood		-133.1	
Log Likelihood χ^2		57.62***	
Pseudo R ²		0.18	

*** p<.001, ** p<.01, * p<.05, +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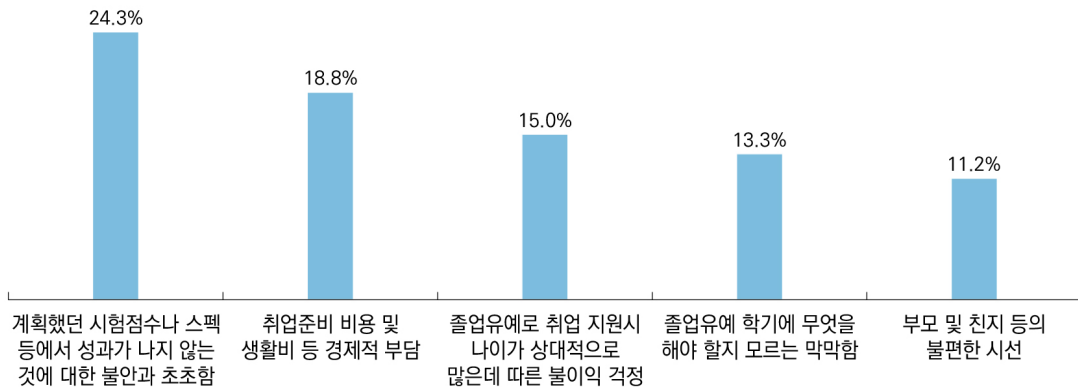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보다는 졸업요건 충족자가, 졸업유예학기에 시험 준비를 계획한 이들보다는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활동을 계획한 유예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졸업유예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졸업요건 충족자들이 졸업유예학기에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활동을 계획하고 졸업유예를 했다면, 졸업유예 학기에 구직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 적지 않음이 반영된 결과이며, 동시에 졸업유예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졸업유예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구직활동과 더불어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의 활동들로 일상이 구성되는 졸업유예학기의 생활 속에서 졸업유예자 다수가 느끼는 어려움을 응답 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위 5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학기의 어려움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24.3%)을 보인 것은 ‘계획했던 시험점수나 스펙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다. 그 외, ‘취업준비 비용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18.8%)이 2순위, ‘졸업유예로 취업지원 시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따른 불이익 걱정’(15.0%)이 3순위, ‘졸업유예학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13.3%)이 4순위, ‘부모 및 친지 등의 불편한 시선’(11.2%)이 5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V-21】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이와 같은 어려움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는데, 특히 계획한 일정대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 간의 노력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점수가) 작년에 1월에서 12월까지 집중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2월까지 미루기 시작하면 그 뒤 스케줄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시간은 없는데 밀리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나한테 좌절감도 너무 심하고 비용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졸업유예자 A4)

여기에 서울에서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유예자들은 적지 않은 취업준비 비용과 생활비의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출신 지역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저는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서울에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해소되는데 서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온갖 정보와... 너무 그 차이가 너무 있어요.”(졸업유예자 A4)

또한 졸업유예로 취업지원 시, 연령이 많은데 따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졸업유예학기 생활에서 갖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 이러한 걱정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졸업유예학기를 보내는 남학생들도 기업의 채용·선발 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이들을 선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가 봤을 땐 요즘 동향을 보면 보통 나이가 고정 된 회사들이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나이에 따라 차별 두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어리면 그냥 일단 무조건 좋긴 좋아요. 그건 맞는데 ...실력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어린 게 좋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여러 가지 준비된 게 갖춰지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더 스펙이라든가 실력을 쌓아서 나이가 좀 들어도 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린데 실력도 있으면 좋겠죠.”(졸업유예자 A1)

“저는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 같은 경우 26살이 마지노선이라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인사 담당자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26살 넘어가면 편입하는 언니들이나 졸업 휴학 맞아서 그렇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기업 써도 안 되니까, 공기업 (준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공기업밖에 지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졸업유예자 A4)

이들 사례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나 부모 및 친지의 불편한 시선 등 졸업유예자들이 인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종합해 볼 때, 졸업유예학기의 어려움은 다른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심리·정서적인 초조함과 압박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졸업유예학기의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내용들은 졸업유예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졸업유예자의 배경 특성별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어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을 <표 V-33>에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시험점수나 스펙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하나,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령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21.0%)보다는 여성(27.0%)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에서는 25세 이상(21.8%)보다 24세 이하(25.5%)가, 졸업요건 미충족자(21.7%)보다는 졸업요건 충족자(26.7%)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각 특성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사항도 있다. 예컨대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 및 친지 등의 불편한 시선’을 졸업유예학기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9.2%)에 비해 남성(13.5%)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연령대에서도 차이를 보여 24세 이하 연령대(9.5%)보다 25세 이상 연령대(14.4%)에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어려움의 사항은 ‘졸업유예로 취업 지원 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따른 불이익 걱정’이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4세 이하(13.0%)에 비해 25세 이상(18.7%) 연령대의 비율이 높다.

한편, 재학 중 휴학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졸업유예학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휴학 유경험자(15.4%)가 무경험자(9.2%)에 비해 해당 비율이 높고, 졸업유예 미충족자(17.3%)도 충족자(9.4%)에 비해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학 중 졸업시기를 지연시키는 휴학 유경험자들이 졸업을 앞 둔 시점에서 또 다시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졸업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V-33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어려움: 배경 특성별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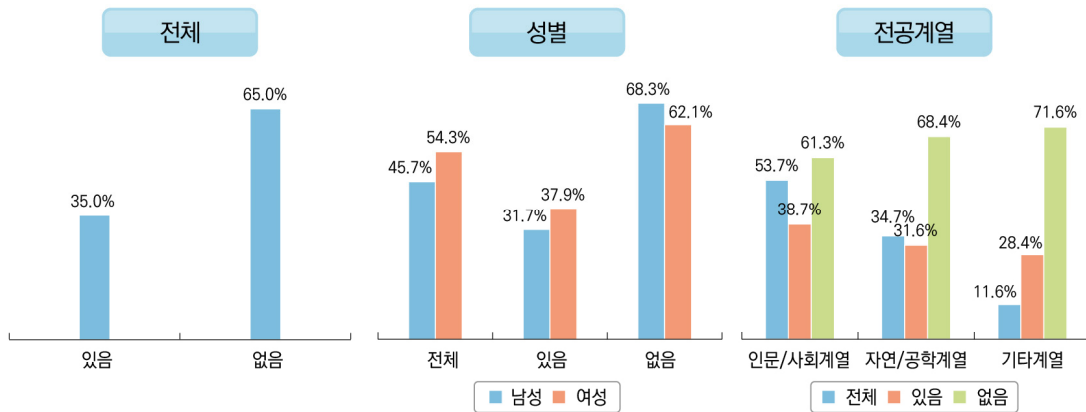
구분			전체 평균(편차)	생활의 어려움 상위 5가지					χ^2 -test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획 했던 시험점수나 스펙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취업준비 비용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졸업유예로 취업 지원 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따른 불이익 걱정	졸업유예 학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부모 및 친지 등의 불편한 시선	
전체			1,002(100.0)	243(24.3)	188(18.8)	150(15.0)	133(13.3)	112(11.2)	
사회 ·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58(45.7)	96(21.0)	93(20.3)	64(14.0)	56(12.2)	62(13.5)	21.09**
		여성	544(54.3)	147(27.0)	95(17.5)	86(15.8)	77(14.2)	50(9.2)	
	연령	24세 이하	654(65.3)	167(25.5)	131(20.0)	85(13.0)	90(13.8)	62(9.5)	20.17**
		25세 이상	348(34.7)	76(21.8)	57(16.4)	65(18.7)	43(12.4)	50(14.4)	
대학 생활 경험 특성	휴학 경험	있음	654(65.3)	154(23.5)	129(19.7)	101(15.4)	101(15.4)	66(10.1)	22.62**
		없음	348(34.7)	89(25.6)	59(17.0)	49(14.1)	32(9.2)	46(13.2)	
졸업 유예 상태 특성	졸업 유예 유형	졸업요건 충족	510(50.9)	136(26.7)	93(18.2)	78(15.3)	48(9.4)	52(10.2)	20.03*
		졸업요건 미충족	492(49.1)	107(21.7)	95(19.3)	72(14.6)	85(17.3)	60(12.2)	

** $p < .01$, * $p < .05$

3)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1)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졸업유예학기의 구직활동과 생활의 어려움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유예자들이 적지 않은 심리·정서적 압박감 등의 어려움이 있는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졸업유예자의 배경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표 V-34>와 같이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V-22】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졸업유예자의 35.0%가 졸업유예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으며, 65.0%는 연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성별 및 전공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34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배경 특성별 차이

(단위: 명, %)

구분		전체 평균(편차)	연장 계획		χ^2 -test
			있음	없음	
전체		1,002(100.0)	351(35.0)	651(65.0)	
			351(100.0)	651(100.0)	
성별	남성	458(45.7)	145(31.7)	313(68.3)	4.21*
	여성	544(54.3)	206(37.9)	338(62.1)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538(53.7)	208(38.7)	330(61.3)	7.12*
	자연/공학계열	348(34.7)	110(31.6)	238(68.4)	
	기타계열	116(11.6)	33(28.4)	83(71.6)	

*** p<.001, ** p<.01, *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1.7%) 보다는 여성(37.9%)이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갖는 비율이 높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38.7%) 졸업유예자들이 평균(35.0%)보다 높은 비율로 연장계획을 갖는다.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는 취업으로 귀결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채시험에 합격까지의 시간 확보, 취업준비에 필요한 전문도서의 이용과 같이 분명한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졸업유예학기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상태 인지로 연장하려는 이들도 있다.

“일단 하반기에 공채 시험 도전해 보고... 되면 올해까지만 하고 안 되면 내년까지 연장이 해야 될 것 같아요.”(졸업유예자 A2)

“제가 상반기 때 써서 몇 개 붙었다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라서 하반기 9월에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한 번 연장하고, 저는 유예하는 목적 자체가도서관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전공 서적 같은 것을 구하기 쉽지 않아요. 바깥에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 이용이 안 되면 취업 준비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책이 없다는 게. 그래서 하게 된 건데 다음 학기까지만 하고 취업 되면 그만 해야죠.”(졸업유예자 A1)

“그냥... 부족한 감만 느끼고 그래서... 더 졸업 유예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할 생각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졸업유예자 B4)

이와는 달리, 졸업유예학기를 연장할 계획이 없는 이들은 졸업유예를 통해 연장된 재학생 기간이 취업 지원 시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특히 채용·선발의 과정에서 졸업유예의 상태를 취업준비상태로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면접전형을 통해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제보한다.

“저는 솔직히 유예한 이유가 약간 좀 시선이 달라서 한 건데... (기업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오히려 면접 올라가니까 그 동안 뭐 했어요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구나 싶어서 저는 졸업하려고요.”(졸업유예자 B1)

(2) 졸업유예기간 연장 학기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에 이어, 연장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가를 <표 V-35>와 같이 살펴보았다.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자는 평균 2.3학기 정도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연장 기간은 첫 번째 졸업유예학기를 보내는 졸업유예자와 두 번째 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35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학기

(단위: 명, %, 학기)

구분		전체 평균(편차)	연장 계획 학기			χ^2 -test/ t-test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이상	
전체		303(100.0) 2.3(1.2)	71(23.4)	157(51.8)	75(24.8)	
현재 졸업유예 학기	첫 번째 학기	185(72.5) 2.2(1.1)	42(22.7)	106(57.3)	37(20.0)	20.91***/ -4.5***
	두 번째 학기 이상	70(27.5) 2.9(1.6)	12(17.1)	24(34.3)	34(48.6)	

***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첫 번째 졸업유예 학기에 해당하는 졸업유예자들은 평균 2.2학기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두 학기 이상 졸업유예학기를 보내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은 이보다 더 긴 평균 2.9학기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재 첫 번째 졸업유예 학기를 보내는 이들의 57.3%가 앞으로 두 학기 더 연장할 것을 희망하는데 반해, 두 번째 학기 이상의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이들의 경우, 48.6%가 앞으로 세 학기 이상 더 연장할 것을 희망하는데 따른 결과이다.

(3)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유무 및 연장 기간 결정요인

앞서 졸업유예자의 35.0%가 졸업유예기간의 연장 계획을 갖고 있고, 연장 계획이 있는 이들은 평균 두 학기 이상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들이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그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졸업유예자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졸업유예 기간 또한 연장된다면, 누적되는 규모는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졸업유예자들의 졸업유예기간의 연장 계획과 연장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졸업유예자 규모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와 연장기간의 결정요인을 실증모델로 분석하였다.

먼저 <표 V-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의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분석하였다.

표 V-36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 유무 결정요인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65 (0.35) ⁺	1.91 (0.66) ⁺
	연령	0.15 (0.12)	1.16 (0.13)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08 (0.12)	0.92 (0.11)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69 (0.36) ⁺	1.98 (0.71) ⁺
	설립주체(국·공립)	0.85 (0.40) [*]	2.32 (0.92) [*]
	전공계열(인문·사회)	0.52 (0.36)	1.69 (0.61)
	전공계열(기타)	0.80 (0.58)	2.22 (1.28)
	편입여부(편입)	-0.20 (0.55)	0.81 (0.44)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17 (0.11)	1.18 (0.13)
	복수전공(이수)	0.14 (0.36)	1.14 (0.41)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9 (0.06)	1.09 (0.06)
	log직전학기 등록금	0.19 (0.32)	1.21 (0.38)
졸업유예상태 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19 (0.21)	0.82 (0.17)
의무수강 제도운영 특성	의무수강제도(운영)	-0.38 (0.44)	0.68 (0.30)
	의무수강 최소 학점	0.10 (0.07)	1.10 (0.08)
졸업유예제도운영 특성	log졸업유예신청시납부총금액	-0.09 (0.16)	0.91 (0.15)
	비용마련방법(본인)	-0.60 (0.33) ⁺	0.55 (0.18) ⁺
	비용산정기준(동일금액부과)	0.81 (0.35) [*]	2.25 (0.79) [*]
	경제적부담수준	0.19 (0.19)	1.20 (0.23)
졸업유예기간 활용계획	공기업/공무원 시험준비	-0.13 (0.43)	0.87 (0.37)
	고시/전문직자격준비	-0.06 (0.59)	0.94 (0.56)
	졸업전진로탐색	-0.44 (0.46)	0.64 (0.29)
상수		-6.93 (3.42) [*]	0.00 (0.00) [*]
N		235	
Log Likelihood		-133.4	
Log Likelihood χ^2		38.37 [*]	
Pseudo R ²		0.13	

* p<.05, ⁺ p<.1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성별(+), 서울지역 대학(+), 국·공립대학(+), 졸업유예비용 본인이 마련(-), 졸업유예비용 정액부과(+)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서울지역 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이 타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유예자에 비해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 소속자들이, 그리고 졸업유예에 따른 비용을 등록금 대비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이 졸업유예기간 연장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졸업유예비용을 본인이 마련하는 졸업유예자들은 기간 연장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을 앞두고 졸업유예를 선택하였다면, 그들 중 서울지역 소재 대학 또는 국·공립대 남학생들이 부모님의 지원으로 졸업유예학기를 생활하고, 대학에서의 정액으로 비용을 부과할 때 상대적으로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졸업유예학기 생활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마련하면서 취업준비를 해야 할 경우, 장기간의 졸업유예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졸업유예기간의 연장 계획 유무에 이어 다음에서는 희망하는 연장 기간, 즉 졸업유예학기 연장 학기수의 결정요인을 카운트 모델(Count Model)²⁹⁾로 분석하였다.

<표 V-37>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졸업유예기간 연장 희망 학기의 수에는 남성(+), 국·공립대학(+), 인문/사회계열(+), 총 학자금 대출금(+), 졸업유예비용 동일금액 부과(+), 경제적 부담 수준(+)³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희망하는 연장학기의 수가 많고,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의 졸업유예자가, 그리고 자연/공학계열 전공자 보다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희망하는 연장학기가 더 많다. 또한 재학 학기 중 대출한 학자금 대출금이 많을수록 희망하는 연장학기 수가 많고,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로 졸업유예학기의 비용을 부과하는 대학 보다는 일정한 정액을 부과하는 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이 연장 희망학기 수가 더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공립대학의 남성 졸업유예자들이 재학기간 중 대출한 학자금 총액이 많은 이들이 졸업 시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졸업유예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졸업유예기간 연장 학기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29) 종속변수가 자연 수, 방문 횟수 등 0을 포함하는 양의 정수(non-negative integer)일 경우, 상당수 관측 값이 0, 1, 2 에 집중 분포되어 그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지거나(skewed to the right), 이분산성(heteroskedastic)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OLS보다는 포아송(Poisson) 또는 Negative Binomial Model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우석진, 2013; p.140). 졸업유예 연장 희망학기 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종속변수의 포아송 분포함수를 가정하는 카운트 모델로 분석하였음.

결과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이들은 졸업유예를 한 이상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장기간 졸업유예 희망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졸업유예학기의 비용부과 금액이 증가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그 비용이 졸업유예기간을 단축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표 V-37 졸업유예기간 연장 희망 학기 수 결정요인: Count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0.43 (0.18)**
	연령	0.04 (0.06)
	부모 월평균 소득 수준	-0.01 (0.06)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소재지(서울)	0.23 (0.18)
	설립주체(국·공립)	0.58 (0.19)***
	전공계열(인문·사회)	0.39 (0.18)**
	전공계열(기타)	0.47 (0.29)
	편입여부(편입)	-0.19 (0.29)
대학생활경험 특성	총 휴학 학기	0.06 (0.05)
	복수전공(이수)	0.10 (0.17)
	log총 학자금 대출금	0.08 (0.03)***
	log직전학기 등록금	0.03 (0.15)
졸업유예상태 특성	총 졸업유예 학기	0.03 (0.09)
의무수강 제도운영 특성	의무수강제도(운영)	-0.27 (0.23)
	의무수강 최소 학점	0.04 (0.03)
졸업유예제도운영특성	log졸업유예신청시납부총금액	-0.04 (0.08)
	비용마련방법(본인)	-0.20 (0.17)
	비용산정기준(동일금액부과)	0.43 (0.17)**
	경제적부담수준	0.18 (0.10)*
졸업유예기간 활용계획	공기업/공무원 시험준비	0.11 (0.21)
	고시/전문직자격준비	0.22 (0.27)
	졸업전진로탐색	-0.24 (0.24)
상수	-3.10	(1.70)*
N	235	
Log Likelihood	-287.0	
Log Likelihood χ^2	60.18***	
Pseudo R ²	0.10	

*** p<.001, ** p<.01, * p<.05

5.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차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기업에 대한 졸업유예자들의 인식과 기업인사담당자들과의 인식 차는 상당하며, 모호한 채용 전형의 기준과 불완전 정보, 지나치게 계량화된 평가기준, 전형방식과 취지에 대한 오인과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스펙 쌓기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함.
- 재학생 상태의 인정과 연장이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사규정의 틀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정책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의 노력은 상당하나, 기본 원칙과 취지에 대한 이해와 상호 입장을 고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학 내 제도적 통로가 전무하여 인식의 차이만 커지고 있는 상황임.
-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자들 간의 인식 차는 없으며, 졸업유예자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3~4학년 재학생들의 공감과 이해수준은 매우 높아, 일부 언론에서 도서관 이용 등과 같은 시설 사용에서의 갈등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확인함.

1) 기업관련 인식 및 기업 인사담당자들과의 인식 차

(1) 기업관련 졸업유예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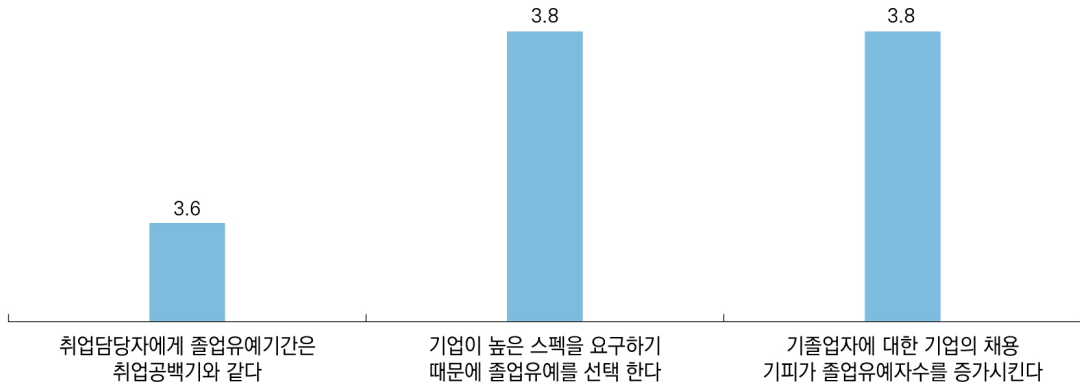
앞서 제Ⅱ장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의 하나로 졸업유예와 관련한 주체들, 즉 졸업유예 당사자, 대학, 기업, 그리고 졸업유예자들과 함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간에 졸업유예의 원인과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가 이제까지 졸업유예를 주제로 한 언론보도 속에 존재함을 논의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졸업유예 현상을 둘러싼 이해 주체들이 연계된 사회·구조 속에서 졸업유예의 원인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졸업유예 당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과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졸업유예자들이 기업, 대학,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에 대한 각 이해 주체들이 갖는 시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졸업유예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인식차를 확인하고, 그 차이가 졸업유예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졸 신규 졸업자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에 대해 졸업유예자들이 갖는 대표적인 인식 세 가지를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여

동의정도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졸업유예자의 배경 특성에 따라 동의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림 V-2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졸업유예자들은 ‘동의 한다(4.0점)’에 가까운 의견을 보인다.



【그림 V-23】 기업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

각 내용별로 살펴보면, ‘기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피가 졸업유예자수를 증가 시킨다’는 사항에 3.8점의 수준으로 동의하며, 같은 수준으로 ‘기업이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 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한다. ‘취업담당자에게 졸업유예기간은 취업공백기와 같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보다 다소 낮은 3.6점의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업관련 인식 수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졸업유예자의 배경 특성별로 나누어 차이를 검증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만을 <표 V-38>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졸업유예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38 기업관련 졸업유예자 인식: 배경 특성별 차이

(단위: 평균 점)

구분			기업 관련 사항					
			취업담당자에게 졸업유예기간은 취업공백기와 같다		기업이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 한다		기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피가 졸업유예자수를 증가시킨다	
			평균(편차)	t-test or GLM-test	평균(편차)	t-test or GLM-test	평균(편차)	t-test or GLM-test
전체			3.6(0.9)		3.8(0.9)		3.8(1.0)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3.4(0.9)	-4.57***	3.6(0.9)	-5.29***	3.5(1.0)	-7.74***
		여성	3.7(0.8)		3.9(0.8)		4.0(0.9)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 소재지	서울	3.6(0.9)	0.73	3.8(0.9)	1.13	3.9(1.0)	2.16*
		서울 이외	3.6(0.9)		3.8(0.9)		3.7(1.0)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3.6(0.9)	-0.03	3.8(0.9)	-0.05	3.9(0.9)	-0.19***
		자연/공학계열	3.6(0.9)		3.7(0.9)		3.6(1.0)	
		기타계열	3.5(0.8)		3.8(0.8)		3.6(1.0)	
대학 생활 경험 특성	복수 전공	이수	3.6(0.9)	0.61	3.9(0.8)	2.11*	3.9(0.9)	2.57*
		비이수	3.6(0.9)		3.8(0.9)		3.7(1.0)	

*** p<.001, ** p<.01, * p<.05

대학소재지와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세 가지 사항 중 ‘기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피가 졸업유예자수를 증가 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지역 대학의 졸업유예자들(3.9점)이 서울 이외 지역 대학의 졸업유예자들(3.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다. 또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3.9점)이 자연/공학계열(3.6점)이나 기타계열(3.6점) 전공자들보다 이 사항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수전공 이수 여부에 따라서는 세 가지 사항 중 두 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업이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 한다’와 ‘기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피가 졸업유예자수를 증가 시킨다’는 사항 모두에서 복수 전공 이수자(3.9점)가 비이수자(3.8점)에 비해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수전공 이수가 취업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기업 인사담당자와 인식 차

‘기업’에 대한 졸업유예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기업에서 신규 대졸자들을 선발·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 졸업자에 대한 배제나 높은 스펙을 기업이 요구한다거나 취업공백이 없는 이들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기업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① ‘취업담당자에게 졸업유예기간은 취업공백기와 같다’에 대한 인식 차

졸업유예자	VS	기업 인사담당자
취업담당자에게 졸업유예기간은 취업공백기로 인식		졸업유예기간도 졸업 후 1~2년의 취업공백기 유무 자체는 문제아님.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

졸업유예자들이 5점의 동의 수준 중 3.6점으로 동의한 ‘취업담당자에게 졸업유예기간은 취업공백기와 같다’의 사항에 대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선발·채용 시 수업연한에서 1~2년 정도 졸업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의 초점은 재학생인 졸업예정자라면 입사 후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있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지원자가 몇 학기가 재학하고 있는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유예기간은... 저희는 크게 이슈가 되는 거 아니에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1)

“2월에 졸업을 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업무를 할 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학교 평계로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대기업 인사담당자 D1, D2)

졸업유예를 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여 1~2년의 취업공백기가 있을 경우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눈에 띄게 졸업시기가 늦어진 경우라면, 면접과정에서 졸업이 늦어진 사유를 질문하기 마련인데, 그 경우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졸업이 몇 년 늦어졌는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냈는지에 초점을 둔다.

“질문도 비슷해요. 왜 졸업이 늦어졌나요? 졸업을 이때 했는데 1년 동안 뭘 했나요?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보는 거지 그 (취업공백기) 1년을 가지고 안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2)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사항이 있으면 보통 4년 군대 하면 6년 안에 졸업 해야 하는데 직장 경험도 없이 7년~8년 이상 걸렸다고 하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당연히. …(중략)… (취업공백기가) 2~3년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배낭여행을 했든 아니면 뭘 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경험을 해서 어쨌든 잘 하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극복이 되고 당사자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졸업 한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자기가 충실하게 생활을 했다 이런 부분만 어필을 하면(됩니다).”(공기업 인사담당자 D4)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에서 취업공백기에 대해 평가자가 질문을 하면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나, 지원자가 이를 큰 결격사유로 오인하여 당황한다거나 본인 스스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제보한다. 다시 말해, 취업전형의 평가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취업공백기의 유무나 그 기간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공백기 질문은) 내 기준에 빈틈이 생겼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냥 여행을 하고 싶어서 여행을 했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어학연수를 가서 딱히 공인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혹시나 너무 해이하게 산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계획성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략) …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취업공백기에 뭘 했냐고 (지원자가)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면접관이 어학 수 간 거냐고? 다시 질문하고 (지원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배낭여행 하고 싶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갔다 오고, … 차라리 그걸 (면접관이) 오히려 좋게 봐주셨어요.” (대기업 인사담당자 D2)

“(취업공백기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지심으로 본인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공
기업 인사담당자 D3)

“(그 질문에) 당황해서... (면접 전형들) 잘 마무리 못 하기도 하고...”(대기업 인사담당자 D1)

이처럼 1~2년의 취업공백기가 지원자의 취업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취업공백기는 이와 다르게 구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장시간 수험생활을 한 후 대기업에 지원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였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졸업 후 어떠한 일 경험도 없이 취업준비기간만 길어진 지원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에는 조직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별 거 진짜 아닌데 물론 25살에 취업을 해야 하는 보통의 나이인데 서른 살까지 아무 것도 못 하고 많이 떨어졌든 어찌 되었든 5년에 텀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일을 할 사람도 불편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어도 떨어졌을 거다라고... 그럴 때는 아예 서류부터(탈락). 2~3년도 괜찮지만 5년 되고 텀이 너무 길어 버렸어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1)

“장기 재수생. 3년 이상은 무리가 있어요. 대학원 졸업자가 아닌 이상.”(대기업 인사담당자 D2, 공기업 인사담당자D3, D4)

“장기간 준비 한 친구들이 지원은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잘 안 뽑아요 부담스러워요. 일 시키기 그렇고. 나이 차가 있잖아요. 경력직 아닌 이상. 그런 분을 뽑아 봤는데 그 분들이 적응을 못 해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1, D2)

결국,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할 경우 발생하는 취업공백기를 갖지 않으려고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라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채용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졸업유예기간 정도인 1~2년의 취업공백기 그 자체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취업공백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취업공백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며,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험생활 이외 어떠한 경험도 없는 5년 이상의 공백기로, 이는 채용 후 직무 적응과 연령 차이에 따른 다른 구성원들과의 생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기업의 높은 스펙 요구로 졸업유예를 선택’에 대한 인식 차

졸업유예자	VS	기업 인사담당자
기업의 급격한 취업전형과 요건의 변화, 불명확한 선발 기준이 경쟁상황에서 스펙 경쟁을 조장함.		인재선발의 방향과 전형의 의도를 오인한 학생들의 과잉 반응. 충실한 대학생활만으로도 충분함.

졸업유예자들이 5점의 동의 수준 중 3.8점으로 동의한 ‘기업이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 한다’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뽑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자들이 많아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지원자의 스펙이 높아진 것이지 기업이 높은 스펙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다시 말해, 채용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점수를 높이고 요건을 추가하게 되고 지원자 대부분이 그 요건들을 채워 높은 수준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한정 되어 있는데 워낙 잘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뽑으려고 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건이 점점 높아진 것은 맞는 거 같아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1)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토익이 600만 맞으면 되었다 했던 게 이제는 700, 800 이제는 기본이 800이 넘어야 하거든요.”(공기업 인사담당자 D3)

“지원자가 많아서 특히 여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학도 토익이나 이런 부분도 없애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800점만 넘으면 자격을 주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0명 뽑아도 만 명 이상 오는데 토익은 만점이 상당히 다 떨어져요 사무직은. 거의 요즘 워낙 잘 하다 보니까...(중략)... 대부분 800점 수준 이상이면 다 통과를 하고 필기에서 그거를 거르는 형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공기업 인사담당자 D4)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지, 기업에서 높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2)

그러나 졸업유예자를 비롯하여 3~4학년 재학생들은 채용 전형의 변화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건의 변화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스펙이 추가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요건을 채우거나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졸업시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제도 때문에, 즉 대학 입학할 때와 졸업할 시기 ‘나’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변화에서 파생되는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며, 변화의 기준을 기업이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전에는 스펙~, 스펙~ 토익 고득점 이했는데, 요즘 갑자기 스펙타파. NCS를 보겠다 이려고, 적성을 보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변화) 그 중간에 끼어서 더 헤매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이 스펙만 쌓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나는 급한데.”(3~4학년 재학생 F4)

“그래서 유예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NCS 같은 경우도 인턴이나 경력자가 유리한 체제일 수 밖에 없어서 관련 직무 경험이 너무 중요해져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인턴이나 졸업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비슷한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졸업하기 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3~4학년 재학생 F3)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거죠. 갑자기.”(3~4학년 재학생 F5)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학생에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학생들이 지레 겁을 먹고 스펙으로 해결하려는 과잉 반응이며 전형 의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NCS로 가면서 뽑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 한 거 아니냐, 지금 대학 졸업 예정자 보다 다른 회사 경험이 있거나 우리가 알바를 중간에 쉬고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요구 하는 거는 아니구요. 먼저 학생들은 자기가 진출 하고 싶은 어디로 가고 싶은 꿈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000가 되겠다 그러면 000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어떤 관련된 과목을 이수할 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 동아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쉬어서 하면 충분히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데서 직무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반영되고 그렇지 않는고 충분히 대학 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레 겁먹고 있는 것 같아요.”(공기업 인사담당자 D4)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작 기업이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의 스펙이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기업입장에서 선발 시 중요한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직무와 조직생활에 적응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각 단계에서 잘 선별해 내는 것이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뽑을 때는 애가 일을 잘 할 거 같은지가 먼저 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은 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뻘뻘하게 이력서를 채웠냐가 아니라 애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회사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협동이라든지 인성 기본적인.”(대기업 인사담당자 D1, D2)

“해 보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협동을 아는 친구가 있고 지극히 개인 쪽인 거 ... 달리기를 가정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하죠. 만약에 1등만 너희 여섯 명이 결승선에 통과를 해야 돼. 1등만 뭔가의 상이 있어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죽어서 뛰어야죠 뛰어서 제가 1등 해야죠, 어떤 친구는 일렬로 어깨 동무를 해서 뛰어야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성도 나타나고.”(대기업 인사담당자 D1)

“토론 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토론 면접 하는 게 말 잘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발표 하는 것도 있으니깐. 그게 경청. 듣는 부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 자세한 거는 중요하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반론을 하든지어서 발언 하려고 하면 앞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짚막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듣는 사람은 그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딴 짓 하고 가다가 자기 차례 오면 엉뚱한 소리 아까 이야기 한 거 이 사람 의견에 찬성을 한다는 것도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거를 보면 다 대부분이 70%는 잘 하는데 20~30%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공기업 인사담당자 D4)

“그러니까 자기 스펙을 만드는 거랑 회사 생활 내에서 일을 하는 능력이랑은 완전 별개 인 거 같아요. 서류만 봤을 때는 애는 퍼펙트인데 일을 하면 애는 사회성 결여이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2)

졸업유예자들은 채용전형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이 각 단계별 선발·채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우위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지원자들의 스펙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불명확한 전형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당락의 기준이 명확한 공기업 쪽으로 취업지원자들이 몰리는 것인데, 그나마 나은 공기업의 기준도 양적으로 점수

환산 기준을 맞추려면 그에 해당하는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채용단계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안 해 주는데, 우리나라 기업 전체적인 문제예요. 채용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된 기업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대기업 쪽 아니고는. 기업에서 채용을 실행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면접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실제로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졸업유예자 A2)

“기준이 없는게... 공기업이랑 사기업을 나눠서 보면, 확실히 사기업은 명확하지 않아요, 공기업은 대부분 그게 명확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원 자격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란게... 영어 토익 850점 이상 만점 처리해서 다 시험을 보게 해준단가, 전공시험이나... 아니면 요즘 NCS평가를 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고. 제가 OO이랑 OOOOOO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격증마다 점수가 환산돼서 합격자 점수 몇 점 이상, 몇 점 이하 탈락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사기업은 자소서 위주로 평가하겠다 하니까 기준이 모호하고 ... 합격시킨 기준이 뭐지? 추측만 하고...”(졸업유예자 A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취업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졸업유예자들과 재학생들이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불완전한 정보와 불충분한 이해로 인하여 변화의 내용이 모두 스펙으로 전환되어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조차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잉 스펙을 쌓기 위해 수많은 취업 희망자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비용은 상상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비용이 실제 필요한 직무능력과 인성함양으로 집중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③ ‘기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기피로 졸업유예자수 증가’에 대한 인식 차

졸업유예자	VS	기업 인사담당자
• 취업 지원 시, 졸업예정자(재학생)가 기 졸업자보다 유리		• 졸업예정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오해. 졸업여부가 아닌 연령 차이에 대한 인식이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앞서 취업공백기와 관련한 인식 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에서 졸업 후 지원하는 기 졸업자에 대한 기피는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한 졸업유예자들은 5점의

동의 수준 중 3.8점으로 기 졸업자에 대한 채용기피가 있다고 인식한다.

졸업유예 선택사유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재학생이 취업에서 졸업생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원자가 이미 졸업한 상태인지, 아니면 졸업예정 상태인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앞서 취업공백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재학상태에 있는 졸업예정자가 취업 지원에 있어 졸업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 있잖아요. 신입 사원 때 무조건 졸업 예정자가 유리하다.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대기업 인사담당자 D1)

“저희는 정말 졸업 유예 또는 졸업자 이런 부분은 일체 영향을 안 미칩니다. 면접에 있어서 애가 졸업 하고 3년 지났네~ 몇 년 지났네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공기업 인사담당자 D4)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는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직무 경험이 있는 기 졸업자들이 유리한 면도 있기도 하지만, 앞서 취업공백기와 관련된 사항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대졸 신입 평균 연령을 크게 상회하는 30세 이상의 기 졸업자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이유가 졸업여부에 있지 않고, 연령차로 인한 조직생활에의 적응과 기존 구성원들의 비선호에 따른 결과이다.

“저희도 조금 경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종은 처음에 들어오면 현장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중략)…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일도 있고... 전기 분야 직업도 있고... 곡괭이 들고 하는 작업도 있고... 그런 일 때문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실망하고 나가는데... (채용형) 인턴 제도가 있고 나서는 그렇게 적응 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 하기 때문에...”(공기업 인사담당자 D3)

“전반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NCS 도입 한 이후에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간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조금 1,2년 다른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졸업 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알바를 했던 뭘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면접을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보통 25.3세인데 30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과연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같이 조직에 융합을 이뤄 가면서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퀘스천마크를 다니까 30세 이상은 약간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공기업 인사담당자 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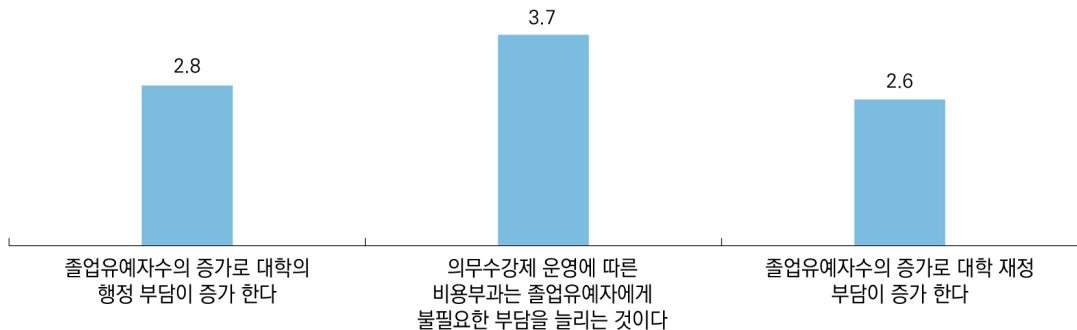
“나이가 많으면...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윗사람이 나보다 어린데 불편하죠.”(대기업 인사담당자 D1, D2)

2) 대학관련 인식 및 대학 졸업유예담당자들과의 인식 차

(1) 대학관련 졸업유예자의 인식

기업관련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졸업유예의 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대학’과 관련한 사항 세 가지를 앞의 ‘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졸업유예자 배경 특성에 따라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림 V-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사항 중 ‘의무수강제 운영에 따른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는 졸업유예자 입장의 내용에만 3.7점으로 동의하는 반면, 대학의 입장을 기술한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와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 재정 부담이 증가 한다’에 대해서는 보통(3.0점)보다 낮은 2.8점과 2.6점의 수준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4】 대학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

이를 졸업유예자의 배경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V-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 및 전공, 졸업유예제도 운영, 그리고 졸업유예자의 상태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는 ‘의무수강제 운영에 따른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의 내용에 대해 서울지역 대학 졸업유예자들의 동의 수준(3.9점)이 서울 이외 지역(3.6점)보다 높고,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 재정 부담이 증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 이외 지역(2.7점)의 졸업유예자들의 동의 수준이 서울 지역(2.5점)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의 설립주체와 졸업유예학기에 따라서도 동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 대학(2.8점)의 졸업유예자들이 사립대학(2.6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동의하고, 두 번째 학기 이상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졸업유예자들(2.8점)이 첫 번째 학기의 졸업유예자들(2.6점)보다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의무수강제 운영에 따른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의 내용에 대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3.8점)가 자연/공학계열(3.7점)이나 기타계열(3.6점)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동의하였다. 또한 비용부과여부 및 방식에 따라서는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의 행정 부담이 증가 한다’는 내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졸업유예자들(2.9점)의 동의 정도가 어떠한 방식이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이들(2.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자수 증가에 따라 대학이 감당하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부담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에 대한 졸업유예 당사자들의 이해 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구성 주체로서 학생들이 졸업유예와 관련한 일련의 대학 행정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데에서 빚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39 대학관련 졸업유예자 인식: 대학특성 및 제도운영 특성별 차이

(단위: 평균 점)

구분			대학 관련 사항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의 행정 부담이 증가 한다		의무수강제 운영에 따른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 재정 부담이 증가 한다	
			평균(편차)	t-test/ GLM-test	평균(편차)	t-test/ GLM-test	평균(편차)	t-test/ GLM-test
전체			2.8(1.0)		3.7(1.0)		2.6(1.0)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 소재지	서울	2.8(1.1)	-1.25	3.9(1.0)	3.49***	2.5(1.0)	-2.93**
		서울 이외	2.8(1.0)		3.6(1.0)		2.7(1.0)	
	설립 주체	국·공립	2.9(1.0)	1.65	3.7(1.0)	-1.01	2.8(1.0)	2.81**
		사립	2.8(1.0)		3.8(1.0)		2.6(1.0)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2.8(1.0)	0.05	3.8(1.0)	-0.09*	2.6(1.0)	0.08
		자연/공학계열	2.7(1.0)		3.7(1.0)		2.7(1.1)	
		기타계열	3(1.0)		3.6(1.0)		2.7(1.0)	
대학 졸업 유예 제도 특성	비용 부과 여부 및 방식	비용 없음	2.9(1.0)	-0.11*	3.7(1.0)	0.06	2.7(1.0)	-0.01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 비율 부과	2.7(1.1)		3.8(1.0)		2.6(1.1)	
		신청 학점 상관없이 대학이 정한동일 금액 부과	2.7(1.0)		3.7(0.9)		2.7(1.0)	
졸업 유예 상태 특성	졸업 유예 학기	첫 번째 학기	2.7(1.0)	-1.79	3.8(1.0)	1.63	2.6(1.0)	-2.3*
		두 번째 학기 이상	2.9(1.1)		3.6(1.0)		2.8(1.0)	

*** p<.001, ** p<.01, * p<.05

(2) 대학 졸업유예담당자와 인식 차

‘대학’에 대한 졸업유예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대학에서 졸업유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사담당자들은 대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행정 및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고, 학사운영 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을 재학생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등록은 필요한 사항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대학관련 세 가지 각 사항별로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대학 담당자의 의견을 통해 졸업유예자와의 인식 차를 살펴보았다.

①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의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차

졸업유예자	VS	대학 담당자
• 대학의 행정 부담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		• 재학생수 증가로 대학평가지표에 영향 • 졸업사정, 학사지원 서비스 업무 증가

수료자가 아닌, 재학생으로 분류되는 졸업유예자수가 증가는 대학들로 하여금 평가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게 한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사립대학의 경우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립대에 비해 전임교원 확보율에 민감하지 않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규모와 연계되는 재학생 충원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졸업유예자수의 증가가 불리하고 후자의 경우 졸업유예자수의 증가가 유리하다.

앞서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존에 무비용으로 운영해오던 졸업유예제도를 비용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데에는 대학 평가지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학생수로 간주되는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인해 유리한 지표와 불리한 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대학담당자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청취할 수 있었다.

“(졸업유예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재학생 수가 늘어나잖아요. 대학의 평가 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반영 비율도 (다른 지표와) 거의 비슷하고 ...”(대학담당자 E5)

“그것에 반해서 재학생 충원율이 있어요. 대학 평가에는 재학생 충원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 탈락 학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졸업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재학생으로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학생 충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신청 하는데 있어서도 ... 사립 대학들은 아마 교수들의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립대는 재학생이 늘어나는 게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는 오히려 상승효과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대학담당자 E3)

“아까도 사립대 얘기가 나왔지만 사립대 평가할 때 교원 확보율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교원 확보율은 일단 한번 충원 했을 때 그 분들을 해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갈수록 대학 살림이 어려워지는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든가 재학생 충원율도 좋지만 교원 확보율을 생각 해 보면 사실은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 해가야 되는데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대학담당자 E4)

대학평가 지표 이외,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는 대학의 직접적인 행정업무에 부담을 가져온다. 졸업유예제도 운영에 따른 학사관리의 과정과 단계가 추가되고, 졸업사정과 같이 졸업과 관련한 학사업무, 그리고 졸업유예자 등록과 강의 수강과 관련된 학사운영 및 관리, 그리고 학사일정 안내 등 학생지원서비스의 업무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물론 대학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졸업유예자수가 몇 십 명에서 천 명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사업무가 가중되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업무는 해당자 수의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재학생이나 졸업유예자 당사자들은 인식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다.

“졸업 연기를 한 학생들은 졸업 사정을 할 때, 졸업자 확정 할 때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졸업 연기한 학생들은 이미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 했을 때 내가 당장 취업 해서 졸업장 들고 가야 된다 하면, 졸업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 모레 졸업이라도 어떻게든 총장님한테 다시 내서라도 어떻게든 해 줘야 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졸업 연기를 무조건 해야 된단든지 와 가지고 울며불며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면 상황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부탁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 졸업자 확정이 자꾸자꾸 늦어져요. 확정 지어 놓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졸업 연기 자체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출발 한 게 전체 대학의 제도를 흔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 하면서 애로점이라고 할까 그래요.”(대학담당자 E4)

“우리 학교도 똑같아요. 수강 신청 기간, 성적 기간, 등록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문자로 보내줘요. 처음에는 그것을 한 번 더 서비스 해 준다는 면에서 공지 사항 통해서만 하다가 문자를 한번 보내 주니까 졸업유예자들도 졸업 유예 수강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등록 기간이 일반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에 잊어버릴 까봐 문자를 보내 줘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 등록 기간을 문자로 또 보내줬어요. 이번에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는 그 일반 학생들 등록금 문자 그 날짜에 이 학생들도 하는 건 줄 알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문자를 안 보내줬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대학담당자 E3)

② ‘의무수강제 운영에 따른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에 대한 인식 차

졸업유예자	VS	대학 담당자
• 의무수강제 운영 및 비용부과는 불필요한 부담		• 불필요한 부담이 아닌, 학사제도 안에서 재학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담

졸업유예자들은 의무수강을 전제로 한 졸업유예 승인과 의무 강의 수강에 따른 비용부과가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이들이 졸업유예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의 수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에 대해 대학담당자들은 대학의 학사제도 상 보았을 때, ‘재학생’ 상태로 남기 위해서는 등록과 수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졸업유예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등록도 수강도 하지 않고 재학생 상태에 있고 싶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찌 되었든 아무것도 안하고 재학생 유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학사라는 학교 제도라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대학담당자 E1, E4, E5)

“학생들이 원하는 게 거의 다 돈 안 내고 수업도 안 듣고 재학생이고 싶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학사 제도를 무시 하는 말이에요. 애들은 모르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하는 건데...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전부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재학생이 수업을 안 듣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대학담당자 E1)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업유예제도가 고등교육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IMF외환위기로 대졸 신규 졸업자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지원의 일환으로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대학담당자들도 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졸업유예제도가 재학생들의 요구와 지원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학점등록의 금액도 학점등록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졸업유예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에 따라 불거지는 대학 비난의 여론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유예 제도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제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재학생으로 남게 해 달라 이런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마치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대학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인해서 취업률이나 이런데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 (중략) ... 원래 학점 등록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취업 관련 교과 항목을 더 오픈해 주고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나와 있는 등록금 학점 등록을 하는 거에 50%도 안 되게 아주 저렴하게 해 주면서 재학생 (상태를) 유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1년으로 제한을 했더니 1년 초과해서 또 해 달라고 해요. 저는 ... 대학이 마치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속된 말로 꼬셔서 등록금을 벌겠다 이런 쪽으로 언론이...”(대학담당자 E5)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 신청자 의무수강과 비용을 부과하는 또 다른 사유는 초과학점 등록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기 등록과 강의 수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 학점 수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초과학점 등록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초과 학기자들하고 그런데 졸업유예생들한테는 등록금을 안 받게 되면 초과 학기생들하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우리가 봤을 때 초과 학기생들은

3학점을 내고도 3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내는데 본인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졸업하기 싫다고 해서 수강 신청을 해 놔는데 그 학생한테는 등록금을 안 받고 그냥 듣게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그래서 이거는 학기 초과자들하고 졸업 유예를 해 가지고 다니는 애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누구는 돈을 안 내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어떤 학생은 돈을 내야지만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이거는 좀 그렇다. 다른 대학들도 제도를 바꿔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대학담당자 E3)

이와 같은 대학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의무수강을 전제로 한 졸업유예 신청과 그에 따른 비용부과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행정 부담에 대한 대가라거나 대학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로 해석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며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이 설명하기 보다는 졸업유예자의 의무수강과 학점 등록에 따른 비용부과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제도 틀에서 재학생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무분별한 제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과단위 또는 학년단위로 졸업유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무수강과 비용부과에 대한 졸업유예 당사자들과 대학담당자와의 인식 차는 학사제도 운영의 원칙과 규정 속에서 재학생 신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부재하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의 구성원들 간의 오해와 갈등의 소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③ ‘졸업유예자수 증가로 대학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차

졸업유예자	VS	대학 담당자
• 대학의 재정 부담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		• 학사운영, 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원충원에 따른 비용 등 재정 부담 증가

앞서 대학관련 사항에 대한 졸업유예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들은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대학에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항에 대해 대학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데 동의하는 점수(2.8점)보다도 더 낮은 점수(2.6점)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대학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학사구조와 원칙 하에서 의무수강을 전제한다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강좌 수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가 증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의 경우가 강좌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의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는데, 그 원인은 국립대학 강사의 임금수준이 사립대학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 우리는 재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고 B+까지 밖에 못 주게 규정되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개정을 했어요. 학생들이 요구가 있어 가지고 A제로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재수강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재수강을 많이 할 거고요. ... (중략) ... 우리도 시간 강사 때문에 국립 대학교도 굉장히 그 예산에 압박을 받거든요. 되도록이면 강좌를 줄이려고 하는데 재수강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시간 강사를 그만큼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강사료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대학담당자 E3)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높은 대학의 전임교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좌를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는 수료생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이나 도서관 등의 시설 사용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 대학이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원들의 임금 비용이 얼마나 센데 그 수업을 듣는 것도... 사실 수료생들한테 충분히 제공 하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 이용도 사실상 비용이 발생 하는 거고...” (대학담당자 E1)

“교원은 일단 한번 충원 했을 때 그 분들을 해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갈수록 대학 살림이 어려워지는데 부담이 되거든요.” (대학담당자 E4)

이와 같은 대학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며, 그 발생의 중심은 학사제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강의수강으로 인한 전임교원과

시간 강사의 인건비로 집중되며, 사이버 강의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경우 운영비용 등의 비용은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등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실태조사 분석에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들이 대학 밖에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등록비용과 학점등록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졸업유예 당사자 각 개인 수준에서는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졸업유예 신청 시 부과되는 금액 그 이상으로 졸업유예자들에 대한 대학의 서비스는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에 대한 졸업유예자들과 대학담당자들과의 인식 차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상호 간의 입장과 이해를 공유하는 대학 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다.

3) 재학생관련 인식 및 3~4학년 재학생들과의 인식 차

(1) 재학생관련 졸업유예자의 인식

앞서 제Ⅱ장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대학에서는 증가하는 졸업유예자로 인한 학사운영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졸업유예 신청 시,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자들에게 도서관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비용 부과 의 근거로 대학의 설명하는 내용은 장시간·장기간 도서관을 점유하고 있는 졸업유예자들 때문에 재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유예자들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도서관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40>은 졸업유예자들이 하루 중 활동 시간을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도서관 이용 시간만을 발췌하여 졸업유예학기 시간 활용계획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 전체 하루 평균 학교 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2시간에 불과하며, 장시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각종 시험 준비 졸업유예자들의 이용시간도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이다. 가장 장시간 학교 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시/전문직자격 시험 준비자들의 경우도 2.7시간이며, 이들과 더불어 장시간 활용할 것 같았던 공기업/공무원시험 준비자들의 경우는 학교 밖 도서관의 이용 시간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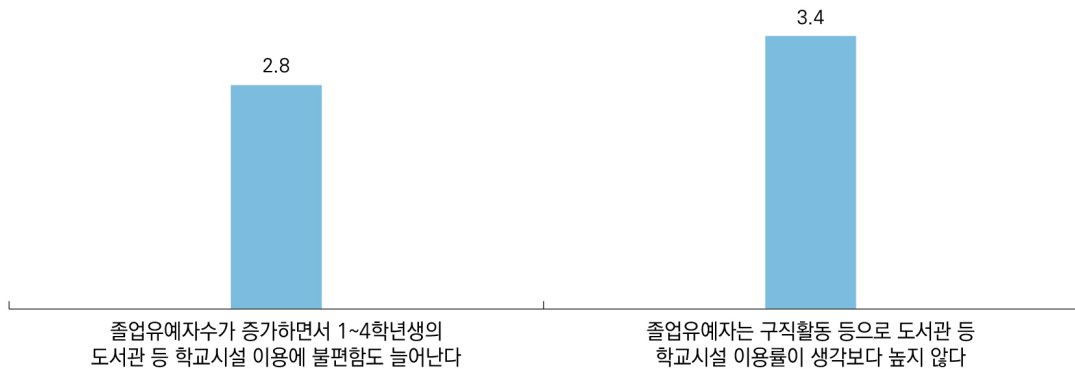
표 V-40

졸업유에 학기 시간 활용 계획별 도서관 이용 시간: 대학 안과 밖 비교

(단위: 평균 시간)

구분	전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어학점수 획득/ 점수올림	인턴 활동	공기업/ 공무원 시험준비	고시/ 전문직자격 시험준비	졸업전 진로/ 직업탐색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학교 안	2.2(2.8)	2.4(2.9)	2.0(2.4)	1.7(2.0)	2.1(3.3)	2.7(3.6)	2.1(2.3)
학교 밖	1.7(2.9)	1.1(2.1)	1.1(2.0)	1.2(1.9)	2.7(3.7)	2.6(4.0)	1.2(2.0)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본다면, 대학이 재학생들의 이용 불편이나 피해 성토 때문에 졸업유에 자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논리적 근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대학의 도서관 수용 여력과 환경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대학들이 비용 부과를 하는 일반적인 사실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림 V-25】 재학생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수준

졸업유예자들도 이와 같은 결과와 같은 선상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림 V-25]에 제시된 재학생관련 두 가지 사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서 1~4학년생의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에 불편함도 늘어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수준이 보통 수준(3.0)보다 낮은 2.8점, ‘졸업유예자는 구직활동 등으로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내용에 보통수준보다 높은 3.4점의 동의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동의 수준이 졸업유예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배경 특성 중 대학설립주체에 따라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서 1~4학년생의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에 불편함도 늘어난다'는 사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차이는 국·공립대학의 졸업유예자들의 동의 수준(3.0점)이 사립대학 졸업유예자들의 동의 수준(2.7점)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인한 재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등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피해는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V-41 같은 대학 재학생관련 졸업유예자 인식: 대학특성별 차이

(단위: 평균 점)

구분			같은 대학 재학생 관련 사항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서 1~4학년생의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함도 늘어난다		졸업유예자는 구직활동 등으로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평균(편차)	t-test or GLM-test	평균(편차)	t-test or GLM-test
전체			2.8(1.0)		3.4(1.0)	
대학 특성	설립주체	국·공립	3.0(1.0)	3.07**	3.3(0.9)	-1.50
		사립	2.7(1.1)		3.4(1.0)	

** p<.01

(2) 3~4학년 재학생과 인식 차

졸업유예자		3~4학년 재학생
졸업유예자수 증가로 인한 재학생의 불편함은 늘어나지 않음.	=	졸업유예자수 증가로 인한 재학생의 불편함이나 피해는 체감되지 않음.

대학담당자들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하면서 도서관등을 사용해야 하는 재학생들이 시험기간에 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제까지 졸업유예 문제와 관련하여 장시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화석선배’로 인해 재학생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에 대해 졸업유예자들은 앞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담당자의 인식이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재학생들의 불편함이 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졸업유예자들과 함께 취업준비를 하는 학년인 3~4학년 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까지 졸업유예와 관련한 언론보도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재학생들의 목소리와 의견은 청취하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졸업유예자에 대해 3~4학년 재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를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3~4학년 재학생들은 대학 내 졸업유예자수의 증가로 인한 시설이용의 불편함을 체감하지 못하며, 졸업유예자들이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고시공부를 하는 일명 ‘고시생’들이 자리를 독점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고, 시험기간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졸업유예자수 증가에 따른 문제라고 보기에는 휴학생이나 졸업자도 많기 때문에 졸업유예자수 증가에 따른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학교에 졸업유예자 수가 많아지면서 다른 재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혀요.”(3~4학년 재학생 G1, G2)

“시험기간에 도서관 자리... 붙박이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3~4학년 재학생 F4)

“불만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시험기간에. 열람실에 사석화 해 놓고... 교재 이렇게 놓고. 독서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석화 문제가 있어서 항상 시험기간에는 꼭 치위라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예보다 휴학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유예생 문제는 딱히 아닌 것 같아요.”(3~4학년 재학생 F3)

3~4학년 재학생들은 졸업유예자들을 학교에 잘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만나면 그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과 취업 준비 방법, 지원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자소서 같은 거를 태어나서 처음 써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고 그랬는데...(졸업유예)선배들한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도 좀 잡히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도움을 받은 거는 좀 컸던 것 같아요.”(3~4학년 재학생 G3)

“일단 저희가 취직을 안 해봤으니까.... 직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정보라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예하신 분들은 (주변에) 아는 분들이나 취직한 분들을 통해서 이런 직무는 어떠어떠하다는 그런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3~4학년 재학생 G5)

이와 같은 3~4학년 재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학담당자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대학 내 졸업유예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편함은 체감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도서관 사용에서 불거지는 불편함은 단지 졸업유예자수 증가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결국 졸업유예자와 3~4학년 재학생 간의 인식 차는 존재하지 않고,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대학담당자들과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VI 장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

1.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논의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설정
3. 정책 추진과제의 도출

제 VI 장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

1.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논의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제Ⅱ장부터 제Ⅴ장까지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기반하고, 실증분석의 토대 위에 연계성 있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설정을 위하여 각 장의 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①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 및 층위 확대와 중간 경계 상태, ②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는 의무수강제와 비용부과, ③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위험한 심리·정서 상태)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 개입 점을 발견하고 논의함.

1) 주요 결과의 요약

앞선 장들에서 이루어진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졸업유예 현상과 졸업유예자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수단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먼저 제Ⅱ장부터 제Ⅴ장까지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근거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각 장의 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표 VI-1>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발견된 주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국정감사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졸업유예 현상과 그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들이 고찰되었다. 고찰된 내용을 통하여 졸업유예자의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분석·집필하였음.

개념과 범주를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시기만을 연기한 이들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범주와 복수전공자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4학년시기에 휴학한 휴학생들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졸업유예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관련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졸업유예 현상을 이해하고,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즉 취업난의 상황 하에서 노동시장 진입의 보다 유리한 시점을 개인이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로서 졸업유예를 바라보는 경제학적 관점과 대학졸업 시점까지 정교하게 표준화된 사회에서 자란 청년세대가 졸업 후 제도적 무중력 상태에 놓이는 것에 대한 공포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다른 이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의 회피로 졸업유예를 설명하는 사회·심리적 관점이 본 연구의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는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통해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와 쟁점을 세 가지, 즉 졸업유예자 규모의 확대,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갈등, 그리고 졸업유예 당사자와 이해 주체들 간의 인식 및 시각차로 압축하여 도출하였다.

졸업유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헌자료들도 검토되고 분석되었다. 그 자료중 하나가 국정감사자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의 학칙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대학 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국 194개 일반대학의 학칙을 수집하고 졸업유예와 관련된 규정들을 발췌하여 내용들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이 학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형태로 운영하는 만큼 사용하는 용어와 내용이 제각각인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졸업유예 현상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서구 선진국가나 우리와 고등교육체계가 유사한 인접 국가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되었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의 영향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학평가지표와 졸업유예자수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10년~201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추정된 졸업유예자 규모는 작게는 2만 7천여명, 많게는 10만 4천여명 정도로 적지 않으며, 청년실업률과 졸업유예자

규모가 시계열적으로 같은 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건 하에서, 대학입학 시점의 대학선택의 자율의지, 그리고 졸업 전 분명한 취업목표만이 졸업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졸업유예 경험이 취업 후 월 소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함으로써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성과를 기대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대학 단위로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2015년 졸업유예 현황자료로 수집된 98개 대학의 졸업유예자수와 졸업유예 1인당 납부비용을 분석한 결과, 졸업유예자수는 취업률이 낮고 전임교원충원률이 높은 대규모 대학에서 많이 발생하고, 서울수도권지역의 의무수강제도 운영 대학이 1인당 납부 비용이 가장 많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2차 자료 분석만으로는 졸업유예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파악된 실태자료가 전문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 대상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졸업유예 원인과 실태를 좀 더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인사담당자, 대학담당자, 3~4학년재학생을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1,002명의 졸업유예자와 총 38명의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이 취업준비로 수렴되는 졸업유예자들의 심리·정서 상태의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여학생들의 부정적 심리·정서와 소득수준에 따라 높아지는 긍정미래관을 통해 저소득층 졸업유예자들의 좌절 심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 졸업유예자 특성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졸업유예학기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면 모두 심리·정서 문제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졸업유예의 선택은 단일 사유가 아닌, 취업경쟁우위와 심리적 안정감·소속감으로 압축되는 다양한 사유의 복합적 영향으로 이루어지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휴학기간 포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선택되고,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순수 졸업유예자의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지의 여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졸업유예자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근 대학들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는 효과는 없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의 폐지는 단지 재학생으로 간주되던 졸업유예자를 수료자의 위치로 옮겨 놓았으며 학점 없는 강의로 이수되는 도구적 강의 수강은 대학이 재정 충당을 위해 졸업유예자 대상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는다는 오해의 빌미가 되었다. 또 졸업유예자들에게 의무수강제도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데 있어 장벽으로써 인식되는 수준은 보통이지만, 도움도 되지 않고 필요성도 낮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졸업유예학기에 졸업유예자들이 납부하는 1인당 비용은 평균 23.7만원이고, 절반 이상이 부모의 지원을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대학이 부과하는 비용이 가계의 교육비로 그대로 전가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졸업유예학기의 비용부과 금액이 늘어난다면, 서울지역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 재학 저소득층 여학생이 가장 먼저 졸업유예비 선택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써 비용부과의 영향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택하는 졸업유예학기의 생활의 내용은 취업준비로 수렴된다. 졸업유예자 절반 정도는 구직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탐색과 현실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취업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본격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구직활동에 나서는 졸업유예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자신감 상실이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은 앞서 언급된 부정적 심리·정서특성과 연계된다. 졸업유예자들의 3명 중 1명 정도는 졸업유예학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며, 이들은 평균 2.3학기 정도 연장을 희망하는데, 부모의 지원을 받는 서울지역 대학 남학생이 연장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학자금대출금이 많고 경제적 부담수준이 높은 국립대 남성 졸업유예자들이 장기간 졸업유예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졸업유예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졸업유예 당사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그리고 대학의 담당자들 간의 인식 차는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모호한 채용 기준, 불완전한 정보, 전형 방식과 취지에 대한 오해 등이 졸업유예 당사자와 기업 인사담당자의 인식 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이며, 학사규정의 기본 원칙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견 수렴의 부재가 졸업유예 학생과 대학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자 간의 갈등이나 인식 차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3~4학년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현실로 졸업유예자들을 바라보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1 주요결과의 요약

분석 자료		주요 결과
문헌 자료 분석	문헌고찰	• 졸업시기만 연기한 졸업요건 충족자가 가장 좁은 범주의 졸업유예자, 가장 넓게는 복수전공자 및 취업준비로 4학년 휴학생까지 포함될 수 있음. • 취업난 속에서 개인의 전략적 선택, 심리적 안정감의 선택으로 졸업유예 설명 • 졸업유예 관련 이슈는 ①규모 확대, ②제도 변화, ③이해 주체들 간의 시각 차
	대학 학칙 수집·분석	• 194개 일반 대학, 각기 다른 용어와 내용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해외사례 수집·분석	•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와 유사한 졸업유예 현상 발견, 대만에서 졸업유예자수 집계 및 규모 감소를 위한 정부 및 대학차원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
2차 자료 분석	GOMS 원자료 분석	• 졸업유예자 규모 적게는 2만7천 여 명, 많게는 10만4천 여 명으로 추정 • 청년실업률과 졸업유예자 규모는 시계열적 같은 변화 추이 • 대학선택의 자율의지와 분명한 취업목표만이 졸업유예 선택의 가능성을 낮춤. • 졸업유예 유경험자들이 졸업 후 월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교육부 자료 분석	• 졸업생취업률이 낮고, 전임교원충원률이 높은 대규모 대학 졸업유예 많이 발생. • 서울·수도권지역의 의무수강제도 운영 대학, 1인당 평균 납부 금액 가장 많음.
설문 조사 및 FGI 자료 분석	졸업유예자 특성 및 졸업유예 사유	• 여학생 부정적 심리·정서, 저소득층 좌절 심리 매우 높은 수준임. • 휴학기간 포함 졸업까지 소요기간 고려 전략적으로 졸업유예 선택 •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은 졸업요건충족자의 졸업유예와 밀접한 관련 있음. • 졸업유예사유는 취업경쟁우위와 심리적 안정감·소속감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 단, 복수전공자, 자연/이공계열 전공자 취업경쟁우위 사유로 선택 가능성 높음.
	의무수강 및 비용부과 실태	•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전환은 졸업유예자 감소 효과 미미, 사회적 비용 증대 • 의무수강자 절반이상 학점 없는 강의 신청으로 교육기능 없는 도구적 학점 이수 • 졸업유예 선택 장벽으로써 의무수강 영향력 보통수준, 도움정도나 필요성은 낮음. • 1인당 납부비용 평균 23.7만원, 절반 이상이 부모가 비용 총당으로 부담 전가 • 서울지역 등록금 높은 사립대학의 저소득 여학생이 부과 비용 장벽인식 집단
	졸업유예 학기 생활	• 졸업유예자 절반정도가 구직 활동,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 현실 직업세계 인식, 경쟁자들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 인식, 자신감 상실이 가장 큰 어려움. • 연령수준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활동 목적의 졸업 유예자가 구직 가능활동 가능성 높음. • 졸업유예학기 생활의 주요 어려움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압축됨. • 졸업유예자 35%가 졸업유예기간 연장 유계획, 평균 2.3학기 연장 희망 • 부모지원 받는 서울소재대학 남학생 연장 가능성 높으며, 특히 학자금대출금 많고 경제적 부담 수준 높은 국립대 남학생 졸업유예기간 장기화 가능성 높음.
	이해 주체간 인식 차	• 모호한 채용전형의 기준, 불완전 정보, 전형방식과 취지에 대한 오인과 오해로 불필요한 과잉 스펙 쌓기와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 학사규정의 기본 원칙 준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 부재가 갈등 양산 •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3~4학년생과 졸업유예자 사이의 갈등이나 인식 차 없음.

2) 정책 시사점 및 개입 점의 발견

각 장에서 분석 내용의 요약에 이어 여기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 즉 ① 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 및 층위 확대와 중간 경계 상태, ②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는 의무수강제와 비용부과, ③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위험한 심리·정서 상태로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개입 점을 발견하고 논의하였다.

(1) 졸업유예자 집단 규모 및 층위 확대와 중간 경계 상태

정책 시사점		정책 개입 점	
1	• 졸업유예 형태와 층위는 다양하고 확대된 상태, 가장 소극적 범주로 설정하더라도 규모가 작지 않으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정책 개입 필요 • 졸업유예자는 재학여부 기준 비경제활동자, 상태 내용 기준 구직자로 비경제활동과 실업 상태의 경계에 있음.	→	1 • 졸업유예자 집단 전체 및 다양한 상태의 하위집단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규모 파악과 함께 졸업유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 졸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와 기존 정책에서 누락된 취업지원 대상자 파악 및 기존 정책 보완

첫 번째 정책 시사점은 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와 성격과 관련한 사항이다. 그 간 졸업유예 현상과 관련된 문제는 빠르게 증가한 졸업유예자의 수가 어느 정도 덩어리로의 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의 규모가 급증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졸업유예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층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졸업유예자가 다양한 형태와 층위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정책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령 졸업시기를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졸업을 미루는 이들은 모두 졸업유예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졸업학점을 이수하였는지, 학점 이외 요건을 채웠는지, 초과등록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큰 덩어리의

취업유예자 집단은 다시 여러 갈래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며, 어떠한 기준과 범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이들 하위집단 중 일부는 정책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기준과 범주를 설정하더라도 취업유예자의 규모와 확대되는 층위는 더 이상 정책의 개입 없이 관망하고만 있을 수 없을 만큼 작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유예 현상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여건이 급속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취업난에 봉착한 취업예정자들이 마지막 대안이자 출구로서 취업유예를 선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누적되는 취업유예자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취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5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채창균, 2016.10.15)³⁰⁾, 이는 4년제 대졸자가 취업유예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가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대학과 가계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과 행정적 비용 그리고 청년세대가 갖는 심리·사회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취업유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산출된 최소한의 금액의 몇 배에 달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취업유예자의 규모와 그 층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실업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적용해 볼 때, 비경제활동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과 실업상태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뒤 섞여 있는 취업유예자 집단과 그 하위집단의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과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가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취업유예자 집단의 규모와 성격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에 대응하는 정책 개입의 시작 점은 취업유예자 집단 전체의 규모와 더불어 상태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으며, 구축된 자료와 더불어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전반적으로 취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악화되는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 기존 정책에서 누락된 정책지원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30) ‘취업유예로 인한 노동시장 이행 지체 기간’ × ‘4년제 대졸 중소기업 초임(실질임금)’ × ‘중소기업의 미충원 대졸 인원 수’ 의 방식으로 산출(채창균, 2016.10.15., p.4 각주3)).

(2)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는 의무수강제와 비용부과

정책 시사점	정책 개입 점
2 • 졸업유예제도 운영이 졸업유예자수 증가의 요인임 분명하나, 그에 대응한 대학의 제도 폐지나 의무수강 및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킴. • 부가된 비용은 부모에게 전가되고, 취업 경쟁에 필요한 ‘시간 자원 확보의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선별기제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층 간 격차의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 • 형태로는 학점이수의 의무수강제도이나, 정상적인 강의 수강이나 학점이수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약화된 교육기능과 행정 부담 가중의 문제가 수반됨.	2 • 졸업유예자수를 줄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개선 • 비학업 사유로 졸업유예자는 불필요한 학점이수를 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수료상태에서 차별 없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 • 졸업유예학기 의무수강 및 비용부과 일괄적용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시스템 개선 • 대학이 학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책정·부과하고 있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증액 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 마련

두 번째 정책 시사점은 졸업유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대학이 학칙 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졸업유예제도는 앞서 논의한 졸업유예자의 규모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졸업유예제도의 운영은 졸업요건을 모두 채우고도 학교에 남는 졸업유예자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졸업유예제도의 폐지나 의무수강제도 및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의 행정부담 학생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 대학과 학생 간의 갈등의 소지 제공 등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졸업유예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 제도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학생으로 간주되었던 졸업유예자들은 고스란히 수료자로 옮겨갈 뿐이다. 학사규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재학생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이자 부담으로서의 의무수강은 대체로 3학점 미만으로 운영되며, 학점 등록을 한 졸업유예자들의 수강 신청은 학점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이버로 운영되는 강의로 집중된다.

이에 더하여 졸업유예학기 등록과 수강에 따른 비용부과는 부모의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졸업유예 선택,

특히 ‘공시족’ 등의 장기간 필요한 취업준비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다. 결국 졸업시기를 유예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한 시간 자원을 갖는다는 것이며, 그 시간의 확보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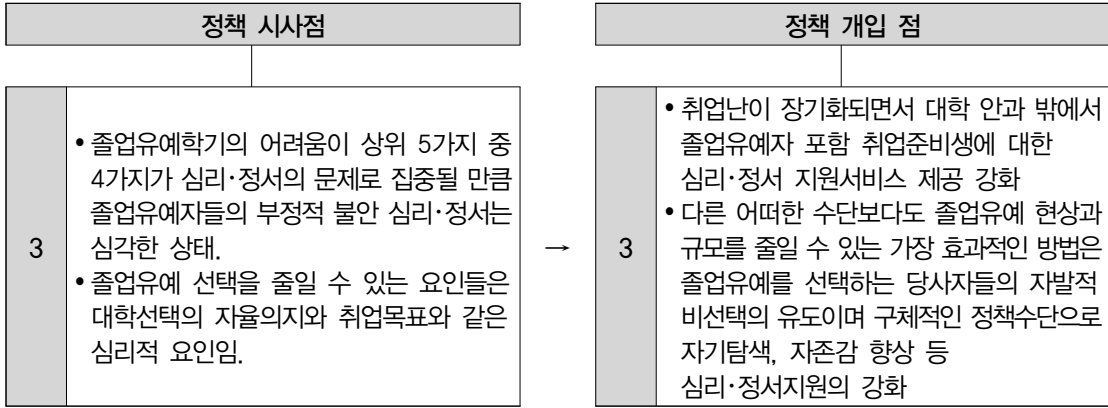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이 졸업유예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의 절대 금액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비용부과 금액이 크던 작던 시간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선택의 가능성에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부과가 ‘취업준비시간’이라는 자원을 갖는데 선별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졸업 전 졸업유예 유경험자들이 졸업 후 월평균 소득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가 더 높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이 될 뿐이며, 우리사회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의무수강제와 비용부과인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졸업유예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다수에게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써 의미가 없다. 대학입장에서는 학사 기준의 틀에서 재학생을 인정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행정적인 부담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대학재정확충의 수단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대졸 청년 실업률에 편입될 수 있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과 비경제활동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지표에서 감추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가계의 교육비용의 증가와 졸업유예기간 소요되는 스펙 쌓기의 비용,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산성,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세대 등이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졸업유예자수의 증가와 대학평가의 영향 하에서 대학이 취해온 졸업유예 제도 관련 대응과 조치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제도의 부작용만을 키워왔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개입은 우선적으로 졸업유예자수를 줄이고 동시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의무수강과 비용부과가 졸업유예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이며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용부과가 무분별하게 증액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졸업유예학기의 학점 이수가 의미 있는 교육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안한 심리·정서 상태



세 번째 정책 시사점은 졸업유예자의 심리·정서 상태와 관련된 사항이다. 졸업유예학기의 생활에서 졸업유예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 상위 5개를 선별해 보았을 때, 취업준비 비용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이 모두 심리·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압축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난의 상황에 졸업시기까지 연기하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졸업유예자를 위한 지원의 무게 중심이 ‘수업도 듣지 않고,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그저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학에 재학생 상태로 있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학생들의 막무가내 요구를 들어준다거나, 취업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구직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스킬’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청년정책으로 수립되어 시행되는 내용들은 대체로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고용정책,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취업지원에 집중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건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이고, 더 좁아지는 문과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던 졸업유예자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상처받는다. 다른 한 편에서는 졸업유예학기에 계획했던 성과가 나지 않음에 불안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증폭되는 일상을 보낸다. 이러한 상태는 여학생,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졸업유예자들에게 지금, 오늘, 현재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은 단지 취업정보와 스킬에 있지 않으며, 이들의 마음을 돌보아 상처받은 마음에서 회복될 수 있게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졸업유예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성격의 지원은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단한다.

그러나 졸업유예자들의 심리·정서를 돌보는 지원은 단순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시기를 연기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큰 규모로 형성되고 있는 취업준비자 집단, 더 나아가서는 청년세대 집단의 심리·정서를 돌보는 일이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의 기본이라는 관점의 견지가 필요하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졸업유예 선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자율의지와 취업목표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수에 대응하고자 대학들이 취한 졸업유예제도의 폐지나 의무수강제도 및 비용부과 등의 조치들이 그다지 효과 없이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갖는 것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개입 점에 대한 판단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졸업유예자수를 줄이고자 했다면 취업경쟁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과 반복된 실패로 낮아지는 자존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스스로에 대한 부족한 자기탐색 및 진로직업탐색의 기회 제공을 강화하면서 졸업유예제도의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또 다른 결과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조직은 대체로 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물리적인 공간과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내용과 운영 방식의 질적 수준,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담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졸업유예자들에 초점을 두어 제공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료자들을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 심리·정서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대학 캠퍼스 안의 공간과 조직만을 고려해서는 실효성을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의 여건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졸업유예자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은 캠퍼스 안과 밖을 모두 고려하고, 오히려 캠퍼스 밖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접근과 개입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설정

1) 정책 목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취업유예자수 및 취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
------------------	------------------------------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예 현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부가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다양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취업유예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는 대응책의 마련과 문제 접근의 기본적인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어렵다. 또한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과 내용이 취지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추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예 현상에 대응하고 취업유예를 선택하는 취업유예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 첫 단계로 앞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어떠한 방식과 지점에서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논의하였다. 그와 같은 내용들에 이어 여기에서는 발견된 정책개입 점을 고려하여 취업유예 현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즉 그 지향점으로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취업유예자의 수는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커지고 있는 취업유예자 집단의 규모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 졸업과 취업 사이에서 마지막 출구 전략으로써 선택되는 취업유예 현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유예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유예를 선택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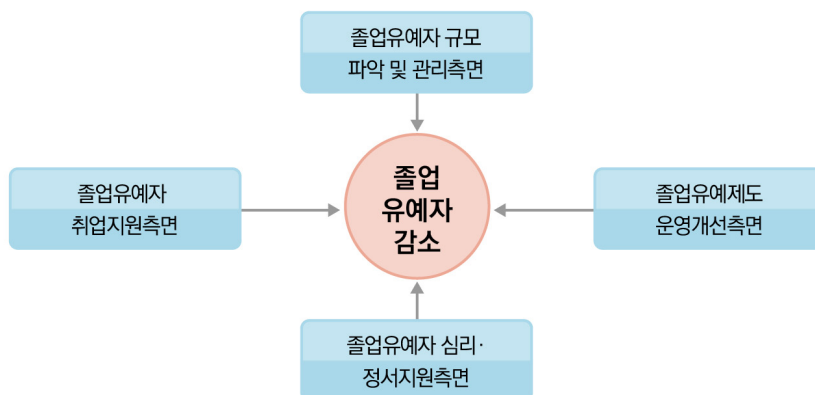
졸업유예자수를 줄이고자 대학들이 취했던 방식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출구를 막아버린다거나 부담을 부여하여 선택의 장벽을 세우는 방식이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이 효과는 없이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입의 기본 방향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되, 그 방식은 졸업유예자의 오늘과 내일을 모두 고려하여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발적 졸업유예 비선택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졸업유예자가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졸업유예 당사자가 직접 지불하는 금전, 시간, 심리적 스트레스 비용,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감수하는 행정 및 재정의 비용 등을 포괄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아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압축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수 및 졸업유예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 목표

앞서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향과 전략 목표를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그림 VI-1】 정책 추진의 네 가지 방향

(1)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 측면

정책 추진 방향1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의 단계적·입체적 접근
• 전략 목표1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첫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이다. 본 연구가 시작된 배경이자 졸업유예 현상에 대한 정책 개입의 첫 단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며, 그 파악이 단순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에 있지 않고 다양한 상태와 층위로 확대되고 있는 하위집단의 구성 규모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정책 시사점과 개입 점의 발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구분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자로 가늠할 수 있는 졸업유예자의 규모는 달라진다. 범주의 구분의 준거를 차지하더라도 졸업유예자 집단에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자 등이 뒤 섞여 있고, 그 경계에 놓인 이들도 적지 않아 이들의 하위집단의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존 정책 대상에서 누락된 이들을 파악하는 것 또한 정책수요 집단 파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졸업유예자 집단의 규모와 하위집단 구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대학의 행정통계에서 집계되어야하고,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서도 규모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졸업유예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수집 및 집계의 범위의 확대 조정과 신규 실태조사가 보완적인 방식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 측면

정책 추진 방향2	자율적 비선택의 방향으로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개선
• 전략 목표2	졸업유예제도 운영 시스템 개선 및 체계화

두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자율적 비선택의 방향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개선”이다. 단적으로 기존 대학의 대응 전략이 “Negative” 방식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방향을 선회하여 졸업유예자 스스로 학업목적을 갖지 않는 부문별한 졸업유예 선택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판단을 돕는 “Positive”방식으로서의 제도 개선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발견하고 확인한 주요 사항, 즉 졸업유예제도의 운영이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가장 좁은 범주의 졸업유예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졸업유예자수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조치들은 효과가 없으며, 단지 졸업유예자의 자율의지와 취업목표만이 졸업유예 선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라는 것을 반영하여 각 대학의 ‘0학점’ 등록 졸업유예제와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다수의 대학에서 ‘신청 공고 → 신청 등록’과 같이 단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졸업유예 신청 및 등록과정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졸업유예 신청과 결정의 과정에 단계적으로 졸업유예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의 출구를 마련하고,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기존에 없던 절차의 마련으로 정보제공과 진로상담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 등은 대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졸업유예제도 운영의 개선이 비단 학사제도 담당자의 선에서만 아닌, 대학이 갖는 연계 기능들이 모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은 현재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 중 졸업유예자수가 많은 대학들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내용은 추진과제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졸업유예자 취업지원 측면

정책 추진 방향3	졸업유예자 취업지원의 강화
• 전략 목표3	수료자 집중 취업지원 및 기존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세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졸업유예자 취업지원의 강화”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졸업유예자의 절반 정도는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으므로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지원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연령수준이 높은 인문/사회계열전공자 중 자격증취득이나 인턴활동을 목적의 졸업유예자, 그 중에서도 졸업유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은 졸업유예자들을 적극적 지원대상의 일차 목표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원은 이미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에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 조직의 기능과 연계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두 번째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가 실행된다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들이 줄고, 자발적으로 수료상태나 졸업 후 취업준비 상태를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제도를 폐지한 일부 대학에서는 수료 상태로 남는 학생들의 누적 규모가 당해 연도 재학생보다도 많은 경우가 포착된다. 수료 상태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일부 대학에서는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대학담당자들은 수료자를 집중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 바 있으며, 현재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3~4학년 재학생 대상 정책사업 중에는 오히려 수료자에게 초점이 옮겨가야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³¹⁾

이에 따라 현재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수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며, 3~4학년으로 한정한다거나 재학생에 집중된 사업이 있다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수료자를 포함한 졸업유예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집중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수료자수가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모색이 필요하다.

31) “2012년에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했어요, 재학생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주장을 했던 게 저희가 10억 정도 받았는데 수료자는 (대상에 포함)안 되는 거예요, 3,4학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료자... 저희가 따져볼 때 900명이 넘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는 하는 현장 실습 학기제를 운영 해 보는 거예요, ... (중략) ... 그 애들은 뭐냐 하면 그냥 수료 해 놓고 막막하게 여기 저기 지원서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수료생을 위한 출구가 없는 정책이 있어...”(대학 담당자 E5)

“너무 공감 하는 게... 졸업을 해서 나가는 8학기 재학생 전체 숫자 보다 수료자 숫자가 훨씬 많아요, ... 제가 봤을 때는 취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묶어서 수료생들도 모든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서 제도를 (운영)해야 지 3~4학년 재학생 특히 3학년들은 제가 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이미 다른 거에 바쁘고 진짜 취업에 관심이 있는 거는 4학년부터 이고, 이미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거는 수료생이거든요, 진짜 수업도 안 듣고 맨날 스펙 쌓고 지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애들을 묶어서 집중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대학 담당자 E1)

(4) 졸업유예자 심리·정서지원 측면

정책 추진 방향4	졸업유예자 심리·정서 지원의 확대·강화
• 전략 목표4	부정적 심리·정서 완화를 위한 캠퍼스 내·외 지원 서비스 확대

네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졸업유예자 심리·정서 지원의 강화”이다. 과거에 비해 재학생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생활을 돕는 상담을 비롯하여 진로상담과 취업 컨설팅 등 취업을 돕는 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유예자들의 불안감, 구직과정에서의 체감하는 취업의 높은 벽, 그리고 졸업유예학기에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의 초조함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준비되지 않은 실패자로 여기며 부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갖게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부모세대의 말 속에 녹아 있던 경제성장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념이었던 ‘능력주의(meritocracy)’ 기준은 일자리 부족으로 절대 다수가 치열한 취업경쟁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 즉 도시화 이후 태어나 인터넷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 20대 세대에서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로 들어가고자 넘치게 준비하는 과잉 스펙들로 무장한 취업지원자들은 능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의 소득 및 사회적 배경, 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non-cognitive) 요인들이 능력의 하나로 간주되어 취업경쟁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고,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라고 칭하는 자조적 계급용어를 만들어 낼만큼 세습자본주의 사회의 확대되는 불평등의 격차에 좌절한다(김지경, 2016, pp.179-182; 이원재, 2016, pp.66-84).

노동시장 구조와 확대되는 불평등의 격차라는 사회·구조적인 여건 하에서 취업에 집중되는 시기이자, 취업으로 수렴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의 심리·정서지원은 성공적인 취업지원의 전제조건이 될 만큼 중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 내 기본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졸업유예자들에게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간 형태, 즉 카페를 기반으로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의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취업준비에 집중하는 졸업유예자들이 대체로 캠퍼스 밖에 있거나 캠퍼스에 있더라도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만큼,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은 캠퍼스의 인프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캠퍼스 밖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추진과제의 도출

1)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1) 대학교육통계에 졸업유예 항목 추가 집계 및 공시

추진 과제1		대학교육통계에 졸업유예 항목 추가 집계 및 공시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고등교육기관 대상 보고통계의 형태로 수집·공표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 활용, 학생현황 영역에 졸업유예자수 및 수료자수 조사항목으로 추가 - 기존 조사 활용으로 추가예산 수반 없이 졸업유예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 확보 가능 - 항목 추가는 ①졸업유예 개념 및 범주 정의→②관계기관 의견수렴→③추가 항목 확정 및 지침 전달 →④매년 집계·공표의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대학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는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50호)」과 「교육정보 통계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23호)」에 근거하여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을 포함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7개

영역의 ①학교, ②학생, ③교직원, ④시설, ⑤행정, ⑥교육과정, ⑦연구의 80여개 사항의 내용을 집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담당부서로 제출하는 행정 보고통계로, 년 2회(4월 1일, 10월 1일)에 수집되어 이듬해 9월에 공표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2016.10.26.검색).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 대상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한다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발생하는 졸업유예자수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졸업유예제도의 운영과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졸업유예제도의 실제 운영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졸업유예제도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료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해야 자료의 질과 관련한 보고통계 자료의 질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졸업유예자수나 수료자수는 학생현황 영역에서 수집될 수 있는 항목인데, 현재 학생현황 영역의 조사 항목에는 네 가지 사항(①재적학생, ②입학자, ③졸업자(학위취득자), ④외국인 유학생)만이 포함되어 있어, 졸업유예제도 운영여부와 졸업유예자수, 그리고 수료자수를 추가할 경우 총 7개의 항목으로 늘어난다.

졸업유예자수를 집계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들을 학교급과 성별, 대학 설립주체별로 나누어 매년 수집·공표하고 있다.

Table 1: Higher Education Statistics (Higher Education Section)

- 高級中等學校概況表(103~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普通科概況表(103~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職業科(職業)科概況表(80~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綜合高中概況表(85~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專科學校概況表(103~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專修學校概況表(80~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完全中學概況表(87~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高級中等學校附屬中等學校(94~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高中概況表(80~102 學年度) (XLS) (XLS) (XLS) (XLS)

大學校院

- 大學校院概況表(80~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大學校院附屬中等學校(81~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近年大學校院附屬學生人數(80~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補習學校

- 國中、小補習校概況表(80~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境外及特殊族群

- 原住民族學生概況表(87~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大學外國學生及附屬學校學生人數(79~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新住民子女就讀國中、小人數統計(94~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近年來大學校院境外學生在臺留學(研)人數(95~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 特教學校概況表(97~104 學年度) (XLS) (XLS) (XLS) (XLS)

대만 교육부 통계국 온라인 DB 제공 화면

近年大學校院附屬學生人數(近年 대학고 졸업유예생 인원)

單位:人

學年度		學生總人數(학생 총 인원)				附屬學生人數(졸업유예생 총 인원)									
		計(합계)	公(공)	私(사)	軍(군)	公(공)	私(사)	軍(군)	男(남)	女(여)	日(일본) (국적)	台(대만) (국적)	港(홍콩) (국적)	澳(마카오) (국적)	其(기타) (국적)
2001	90	1,387,225	318,314	868,911	38,169	6,998	23,171	21,324	8,845	-	-	-	-	3,884	10,341
2002	91	1,240,292	337,682	902,610	35,479	8,101	27,378	24,790	10,689	-	-	-	-	31	-
2003	92	1,270,194	356,383	913,811	38,027	8,576	29,451	26,550	11,777	-	-	-	-	30	396
2004	93	1,285,867	369,889	915,978	40,849	9,306	31,543	28,194	12,655	-	-	-	-	507	613
2005	94	1,296,558	384,035	912,523	44,780	9,620	35,160	30,642	14,138	-	-	-	-	515	939
2006	95	1,313,993	400,029	913,964	46,807	10,777	36,120	31,641	15,256	-	-	-	-	482	970
2007	96	1,326,029	412,035	913,994	47,084	10,645	36,449	31,580	15,514	-	-	-	-	810	1,041
2008	97	1,337,455	422,736	914,717	47,127	11,472	35,655	31,153	15,976	-	-	-	-	1,171	1,285
2009	98	1,350,659	430,308	920,351	48,219	13,309	34,910	33,098	17,129	1,015	2,087	1,033	1,543	1,543	10,677
2010	99	1,343,093	436,216	906,877	53,262	15,572	37,690	34,488	18,473	2,095	2,473	1,939	1,690	1,690	11,101
2011	100	1,352,084	436,861	915,223	54,082	15,180	38,902	34,764	19,318	1,853	3,248	1,841	1,999	1,999	11,092
2012	101	1,355,290	437,026	918,264	55,571	14,482	41,089	35,537	20,304	1,546	4,328	1,489	2,466	2,466	11,205
2013	102	1,345,973	435,427	910,546	49,507	12,840	37,667	35,799	19,198	357	1,874	710	1,473	1,473	11,482
2014	103	1,330,449	434,655	895,794	49,784	12,795	36,989	35,277	19,507	501	1,841	770	1,423	1,423	11,363
2015	104	1,322,445	430,884	891,561	52,080	13,505	38,515	37,179	20,362	598	1,833	728	1,690	1,690	12,108

備註:

1. 99學年度起實施畢業生人數統計, 97學年度以前之附屬學生人數, 則列入最高年級。
2. 附屬學生係指畢業生人數統計, 延誤畢業生之學生數, 其資料係以每年之10月15日。
3. 101學年度起實施附屬學生人數統計, 附屬學生人數之方式, 係指附屬學校學生人數統計, 乃於102學年度全面實施, 故附屬學生人數統計資料, 自102學年度起, 則列入最高年級。

資料來源: 教育部資料系統及學科系統, 統計局統計資料, 統計局統計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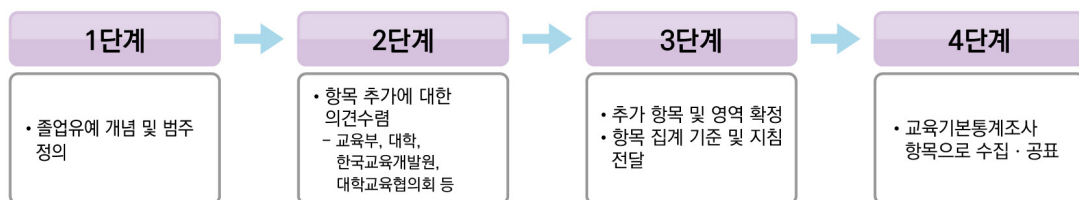
대만 대학 졸업유예자수 공식 통계표

출처: 대만교육부 통계국(<http://depart.moe.edu.tw/ED4500/cp.aspx?n=1B58E0B736635285&s=D04C74553DB60CAD>, 2016.06.30. 검색)

【그림 VI-2】 대만교육부 졸업유예자수 집계 온라인 DB 및 공식 통계표

그러나 졸업유예자수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라는 목적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같은 수준에서 단순히 수업연한 초과자수를 파악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①졸업유예제도 실제 운영여부, ②졸업유예자수, ③수료자수가 조사항목으로 추가되어 집계·공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추진과제는 기존의 조사에 항목만 추가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졸업유예 대응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림 V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유예의 개념 및 범주의 명확한 설정부터 자료 수집 및 공표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VI-3】 대학교육통계에 졸업유예 항목 추가 추진 단계

(2) 주기적(연간) 졸업유예 실태조사 실시

추진 과제2		주기적(연간) 졸업유예 실태조사 실시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보고통계로 수집되는 졸업유예자수는 졸업유예자 전체 규모나 대학 특성별 차이는 파악 가능하나, 다양한 층위의 하위집단 및 정책 개발의 기초정보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각 대학별 졸업유예자수가 집계 되면, 이를 표집 틀(sampling frame)로 사용하여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확률표집의 실태조사 가능 • 현재 졸업유예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최소 2억~3억 정도의 예산 소요 예측됨.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행정보고통계로 수집·집계되는 졸업유예자수는 전체 졸업유예자의 규모나 대학 특성별 차이를 살펴볼 수는 있으나,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 졸업유예자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단위의 대응이 아닌 졸업유예자 개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그 자료만으로는 수립되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실태조사를 통한 졸업유예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중요하다.

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실태조사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각 대학별 졸업유예자수가 집계된다면, 이를 표본 추출의 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 표집으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 연간 대학졸업자의 3~4%(1만 8천여명)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2016년 실사 용역금액(10억5천7백만원)³²⁾임을 고려해 볼 때, 표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연간 최소 2억~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기존 청년층 조사통계에 졸업유예 관련 항목 추가 반영

추진 과제3		기존 청년층 조사통계에 졸업유예 경험 문항 추가 반영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교육기본통계조사’와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존의 조사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졸업유예 경험 관련 문항 세 가지(①졸업유예 경험 유무, ②경험시기, ③총 졸업유예 학기수)를 추가함. - 기존 조사 활용으로 예산 수반 없으며, 졸업유예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정책 마련에 중요 정보 제공 가능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32) 나라장터 확정계약번호 00168162700, 「2016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5GOMS)」 계약정보
(http://www.g2b.go.kr:8067/contract/contDetail.jsp?Union_number=2016060077673, 2016.10.26.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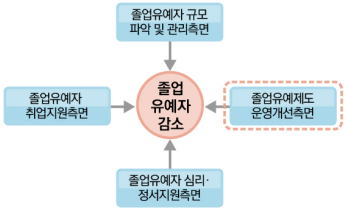
기본 행정통계의 구축과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 실태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기초자료가 구축되고 확보되기까지는 기존의 자료들을 보완하여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수와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졸업유예자 전체집단과 하위집단을 제한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통계청에서 수집·공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15세~29세의 청년층의 고용정책수립과 지원의 가장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사는 대표성을 갖는 대규모 조사이고, 졸업유예자의 실태 중 취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유예 경험과 관련된 항목들이 이 조사에 추가된다면, 졸업유예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사의 성격상 많은 항목의 추가는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편입한 경험을 묻는 문항의 구성과 동일하게, 세 가지 항목(①졸업유예 경험 유무, ②경험시기, ③총 졸업유예 학기 수)을 편입할 경험 바로 뒤에 추가한다면 조사항목이 늘어나는데 따른 응답자의 부담은 그다지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졸업유예제도 운영 시스템 개선 및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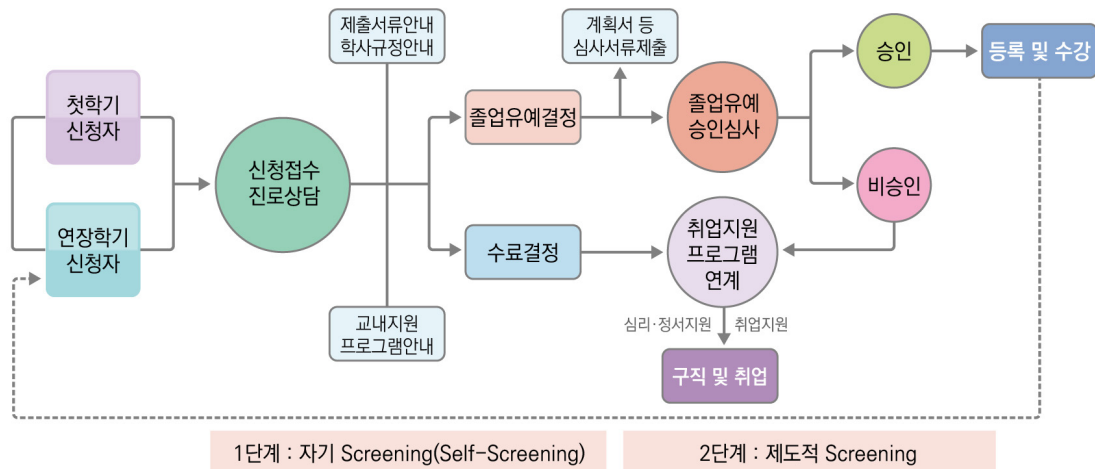
(1) 졸업유예 신청 및 승인 시스템 개선

추진 과제4		졸업유예 신청 및 승인 시스템 개선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신청→등록’의 단선적 현행 제도 운영을 제도 안에서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졸업유예학기 계획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졸업유예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 및 승인과정 운영 체계 마련 방식으로 제도 운영 개선 • 대학은 승인 기준을 학칙으로 규정, 대학의 여건에 맞추어 ‘승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마련 • 수료자 및 비승인자 취업지원센터 및 상담센터와 연계 서비스 제공, 최종 졸업유예 신청자 강의 수강 및 학사관리 강화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기업, 기업단체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 ()

각 대학마다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졸업유예제도는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는 있으나, 대체로 졸업유예신청에 관한 공고 후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진다. 일부 대학에서 학과장의 서명을 얻는 절차적 승인을 거쳐 학사담당자들이 접수를 받는 과정으로 졸업유예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졸업유예 승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과정 또는 단계가 학과통폐합 또는 정원조정과 같은 대학 내 구조조정에 악용하는 사례가 포착되기도 있음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현행 ‘신청→등록’의 단선적 과정으로 졸업유예가 결정되는 운영 구조는 졸업유예 당사자로 하여금 과연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절차 안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주변의 풍조나 분위기 또는 막연한 이유로 무분별하게 선택하는 졸업유예에 대한 제어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청과 동시에 졸업유예 상태가 되는 ‘신청→등록’의 단선적인 제도 운영 구조에서는 졸업유예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졸업유예제도의 운영 방식을 [그림 VI-4]와 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VI-4】 졸업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시스템 체계화

제안하는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구체적인 계획하에 졸업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와야 한다. 셋째, 수료 또는 졸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대학 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사제도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진로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접수·상담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졸업유예를 결정하였다면, 졸업유예학기의 학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은 승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졸업유예학기의 학업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 번 졸업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의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대학은 승인의 기준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단과대학 또는 학과단위 등 대학의 여건에 맞추어 “승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에 한시적으로 졸업유예제도의 도입이 증가하였던 일본의 사립대학들 중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몇몇 대학의 「졸업연기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졸업유예를 승인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승인 또는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VI-2 일본 대학의 졸업유예 승인가준 예시

일본 중앙대학 졸업연기제도	일본 센슈대학 졸업연기제도
• 졸업유예 심사에서 ‘불허’가 되는 경우? – ‘대학생으로 남고 싶다’거나, ‘졸업예정자로 구직활동을 위해’ 등의 모라토리엄 지향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 시 학업계획을 확인하기 바람.	• 졸업유예 정의 – 졸업연기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란 진로 및 진학 준비, 자격취득 등을 말한다. – 교무과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이 적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함. – 적격한 신청은 승인하고 부적격한 신청은 비승인함. – 졸업연기의 허가는 학부장회 및 각 학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함.

출처: 일본 중앙대학교 卒業延期制度に関するQ&A.
<https://www2.chuo-u.ac.jp/law/portal/keijiban/gakuseki/sotugyouenkiQ&A.pdf>(2016.08.11.인출)

출처: 일본 센슈대학 「졸업연기의 취급에 관한 내규」.
 콜로키움(II) 발표 자료 중 별도 비공개
 참고자료(강영배, 2016.04.27.)

수료를 결정하였거나 졸업유예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같이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상담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이들을 위한 집중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졸업유예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은 등록과 강의를 수강하고, 대학은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강의 수강과 학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졸업유예운영제도의 개선은 졸업유예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의 “2015년 졸업유예 현황” 자료를 기초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대학의 평균 졸업유예자수를 산출해 보면 한 해 평균 277.5명이지만, 그 편차는 매우 큰데, 가장 적은 대학은 2명, 가장 많은 대학은 1,746명에 이른다. 따라서 졸업유예자수가 많이 발생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이들 대학의 제도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제안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체계로의 개선은 대학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조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접수·상담단계에서 전담인력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인력 활용에 대한 예산은 추가 소요될 수 있다.

(2) 졸업유예학기 비용 산정 및 학내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과제5		졸업유예학기 비용 산정 및 학내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국회에서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관련 비용부과 및 산정 근거, 학칙변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부재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됨. - 발의된 법안들 중 하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제안된 법안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두 개의 법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박경미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13호 및 14호에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할 것을 제안함.		<pre> graph TD A[졸업유예제도 규모 파악 및 관리속면] --> B((졸업 유예자 감소)) C[졸업유예제도 운영개선속면] --> B D[졸업유예자 학내·정서지원속면] --> B E[졸업유예자 취업지원속면] --> B </pre>			
■ 정책 제안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신청만하면 자동적으로 재학생 상태를 연장할 수 있었던 과거의 졸업유예방식에서 졸업유예 신청 시, 최소학점 이상 수강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수업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을 변경하자 학생들과 대학 간 갈등의 심화가 본격화 되었다.

국회에서는 비용부과로 전환된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비용부과 뿐만 아니라 의무수강제도 또한 대학이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대가로 학생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2587,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16.10.05.)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등록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졸업유예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은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동법 개정안(의안 번호: 2415,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2016.09.22.)도 발의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졸업유예자를 대상의 의무수강제나 비용부과는 아니지만,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학칙 개정안 제출이나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308,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6.06.17.)도 발의된 바 있다. 얼핏 보면 이 법의 내용은 졸업유예와 그다지 관련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졸업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대학과 학생들 간의 인식 차가 확대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데에는 대학이 기본적으로 졸업유예제도의 운영 방식이 갑작스럽게 비용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졸업유예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사업무담당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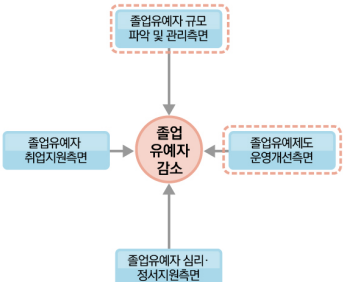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세 가지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법안은 문제제기의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사규정의 기본 원칙 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제외하고,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은 하위 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각호의 내용이 있으므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개정보다는 하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학교 규칙에 포함되고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일부 사항(13호 및 14호)의 내용을 발의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의 13호인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로 제시된 사항을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금액 및 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김경수의원 대표 발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14호의 학칙개정절차를 ‘학칙개정 및 학칙 개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기와 방법’으로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다.

표 VI-3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1.~12. 생략)	(1.~12. 생략)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금액 및 비용 산정의 기준
14. 학칙개정절차	14. 학칙개정절차 및 학칙 개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기와 방법
이하 생략	이하 생략

(3) 재학생 인정 범주 조정 및 '0'학점 등록자 재학생에서 제외 일원화

추진 과제6		재학생 인정 범주 조정 및 '0'학점 등록자 재학생에서 제외 일원화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재학생 상태를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와 '재학생충원율'을 개선해야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일부 대학에서 일정한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면 재학생 상태가 연장되는 '0'학점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재학생수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대학 보조금 산정 시, 졸업유예자수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졸업유예 대응 대학의 방안과 성과를 대학평가의 보조지표로 포함하여 성과에 따른 보조금을 배분(performance funding)을 하고 있음. •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재학생으로 편입되고 산정되는 '0'학점 등록 졸업유예자수를 재학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부터 정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학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학점과 학점 외 요건을 충족한 졸업요건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수강은 하지 않고, 부과되는 일정한 금액의 등록금을 납입하면 재학생 상태가 되는 '0'학점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유예자 또는 졸업학점 이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요자들에게 추가적인 학점 등록을 강요하는 의무수강제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어 그에 대응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지만, 학점을 등록하지 않아 최소한의 수강도 하지 않으면서 등록만하면 재학생으로 편입되는 이들의 문제는 재학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오인하는 학생들과 '재학생충원율'을 개선해야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 파악도 쉽지 않다.

졸업유예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만 정부는 재학생수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대학 보조금 산정 시, 졸업유예자수를 재학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졸업유예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수립과 성과를 2014년 대학평가의 보조지표로 포함시키고 성과에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performance funding)을 취하고 있다(대만입법원, 2013.06.19., p.87-88). 이미 졸업유예자수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통계를 집계하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대학 단위에서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만과 우리의 정책 여건의 수준은 같지 않기 때문에 대만이 취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앞서 '추진과제 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학별 졸업유예자수의 편차가 너무 크고, 제도 운영의 방식이 대학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가지표로 졸업유예자수 감소를 위한 대학의 조치와 성과를 포함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재학생으로 편입되고 산정되는 '0'학점 등록 졸업유예자수를 재학생에서 제외하는 것부터 정비해 나아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제는 대학의 학생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재학생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범주에 영향을 미치므로 '추진과제1.'과 같이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하나,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

3) 수료자 집중 취업지원 및 기존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1) 수료자에 대한 차별·배제 없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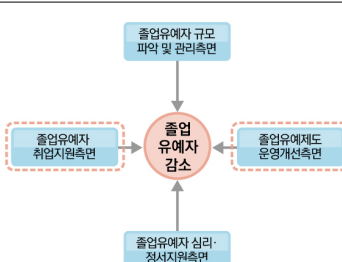
추진 과제7		수료자에 대한 차별·배제 없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표면적으로 수료자가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턴활동의 알선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 모집 시 재학생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포착됨. • 당해 년도 재학생보다 누적 수료자수가 많은 오늘의 대학의 현실을 주시해 볼 때, 재학생 중심의 서비스의 제공에서 필요 수요 중심의 시각으로 접근, 수료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대상은 대체로 15세~34세 연령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턴활동의 알선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 등의 경우 재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료자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험이 적지 않음이 포착되고 있다.

재학생 중심의 대학의 행정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나, 앞서 정책추진의 네 가지 방향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당해 연도 1~4학년 재학생수보다 누적 수료자가 더 많은 것이 현재의 대학 상황이다. 이를 주시해 볼 때,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준비에 뛰어드는 수료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면, 재학생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데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초과학점 등록을 해서라도 재학생 상태를 연장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추진과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취업지원업무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학내 교직원들이 수료자에 대한 시각을 재학여부 중심에서 서비스 필요 수료의 관점에서의 전환과 시각의 확대가 요구되는 과제이다.

(2)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강화 및 집중 지원프로그램 제공

추진 과제8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강화 및 집중 지원프로그램 제공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이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졸업유예자 적극적 연계 • 특히 ‘인문계특화과정’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령수준 높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중 인턴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유예를 신청한 이들을 일차 목표(target) 집단으로 설정, 적극 참여 유도 • 졸업유예자수가 많은 대학의 경우, 학내별도 집중 지원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의 지원 사업 수가 적지 않으므로 기존 프로그램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것부터 우선 실시			 <pre>graph TD; A[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측면] --> C((졸업 유예자 감소)); B[졸업유예제도 운영개선측면] --> C; D[졸업유예자 심리·정서지원측면] --> C; E[졸업유예자 취업지원측면] --> C</pre>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학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20대 청년세대에 고학력자는 급증하였으나, 기업은 필요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들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여 신규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정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갖추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그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이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를 선발하면, 대학에서 또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실무교육과정을 300시간 내외 이수하고, 참여기업에 취업연계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문계특화과정’으로 600시간 내외의 실무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과정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존에 도입되어 지원되고 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범주를 대학졸업자 또는 예정자로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 2016.10.12.검색)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사가 있는 졸업유예자들, 그 중에서도 수료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연령수준이 높은 인문인문/사회계열전공자 중 자격증취득이나 인턴활동을 목적의 졸업유예자들이 졸업유예학기에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아카데미’사업을 대학 내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들이 인문계특화과정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표 VI-4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개요

사업 내용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창직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 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
운영 구조	기업·사업주 단체, 대학 및 민간우수훈련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취업희망 청년들을 교육하고 참여기업에 취업을 연계시키는 구조로 운영
교육과정 유형	일반과정, 창직과정, 인문계 특화과정(장기과정, 단기과정)
교육과정 내용	- 일반과정 : 산업·업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전공과 연계하여 연수과정을 설계·운영 함으로써 전공분야 등으로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 - 창직과정 : 대학 졸업(예정)자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등에서 창조적인 활동 (300시간 내외)을 통해 취업·창업·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프로그램 제공 - 인문계(장기) : 졸업(예정)자 대상 인문계 친화직종 중심의 통합연수프로그램 (교육+현장실습+멘토링, 600시간 내외) 제공을 통해 인문계 등 비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취업 역량 강화 - 인문계(단기) : 대학 재학생(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대상 기초예비과정 (교육+현장체험, 200시간 이내)을 통해 다양한 직무이해와 기초직무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교육생 선발 기준	- 대학졸업예정자(교육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자) - 졸업자(모집 당시 만 34세까지로 미취업자에 한함) - 대학 재학생(4년제) 2~3학년, (2,3년제) 1학년 2학기~)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http://www.myjobacademy.kr>, 2016.10.12. 검색)

수료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의 경우, 학내에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정부의 지원 사업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기존의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참여 유도를 강화하는 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추진과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료가 있는 이들과의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기업의 선발·채용기준 명시 및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과제9		기업의 선발·채용기준 명시 및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			
■ 주요 내용 - 표준이력서 사용의 의무화와 선발·채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불충분한 정보 모호한 정보에서 비롯되는 오인과 오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관계 법률 개정 필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의 사용 권장과 제8조에 채용기준 명시 내용을 추가 - 기존 권장 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학교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기업의 채용 전형의 기준과 선발 정보는 졸업유예자들에게 필요 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의 스펙 쌓기 경쟁,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과잉 스펙 쌓기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요건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및 노력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기업이 선발과 채용과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인의 역량과 능력 이외 부모의 배경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이력서의 사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권장해오고 있는 표준이력서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16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감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이정미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10.11.).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1쪽)

<필수>

한글

한자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지소등록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 마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5. 3



표준이력서 양식

고용노동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http://www.moel.go.kr/view.jsp?cate=7&sec=4&smenu=2&mode=view&seq=1468827926410&page=1&state=A&bbs_cd=105, 2016.10.20.인출)

【그림 VI-5】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 및 관련 업무 매뉴얼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이력서 사용의 의무화와 선발·채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불충분한 정보 그리고 모호한 정보에서 비롯되는 오인과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과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의 내용을 권장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5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구인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사용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채용기준의 고지) ①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과 명확한 채용기준 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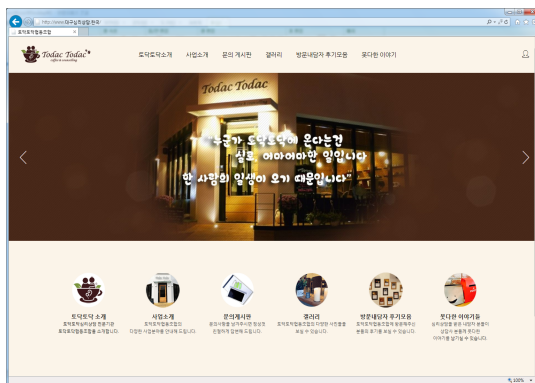
4) 부정적 심리·정서 해소를 위한 캠퍼스 내·외 지원 서비스 확대

(1) 캠퍼스 밖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연계 심리·정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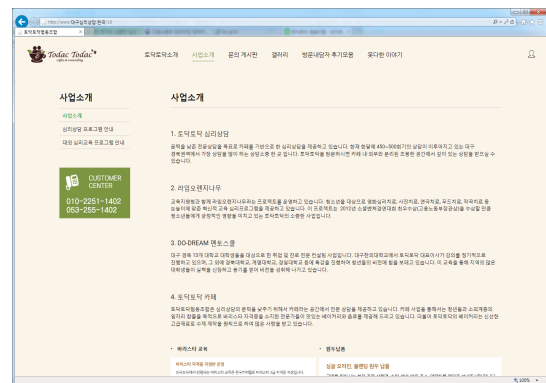
추진 과제10		캠퍼스 밖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연계 심리·정서 지원			
■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으로 수렴되는 일상 속에서 졸업유예자들이 갖는 심리·정서의 어려움은 심각하지만,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학내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움. -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페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토닥토닥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사례로 포착됨. - 사례와 같은 협동조합, 사회적 등을 연계한 캠퍼스 밖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의 지원 방식 마련					
■ 정책 제언 유형	법령 제·개정 ()	■ 관계 부처 및 위원회	교육부 (○)	■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대교협 (○)
	규정 제·개정 ()		고용노동부 (○)		기업, 기업단체 (○)
	기초 자료 확보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기존 제도·사업 보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
	신규 제도·사업 도입 (○)		청년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

대학의 여건과 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학업과 캠퍼스 생활을 돕기 위한 대학의 심리 및 진로상담센터는 학내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으로 수렴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졸업유예자들이 갖는 심리·정서의 어려움은 심각하지만,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졸업유예자들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카페를 기반으로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전문상담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토닥토닥협동조합’은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카페라는 공간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인 이곳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개의 사업과 전문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중 ‘DO-DREAM멘토스쿨’은 대구·경북지역 13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컨설팅 사업이고, 주요 상담프로그램으로 ‘DREAM-PROGRAM(꿈을 찾고 도전하기)’와 ‘I-PROGRAM(나를 알고 사랑하기)’ 등이 운영되고 있다(토닥토닥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대구심리상담.한국/20, 2016.10.25>. 검색).



첫 화면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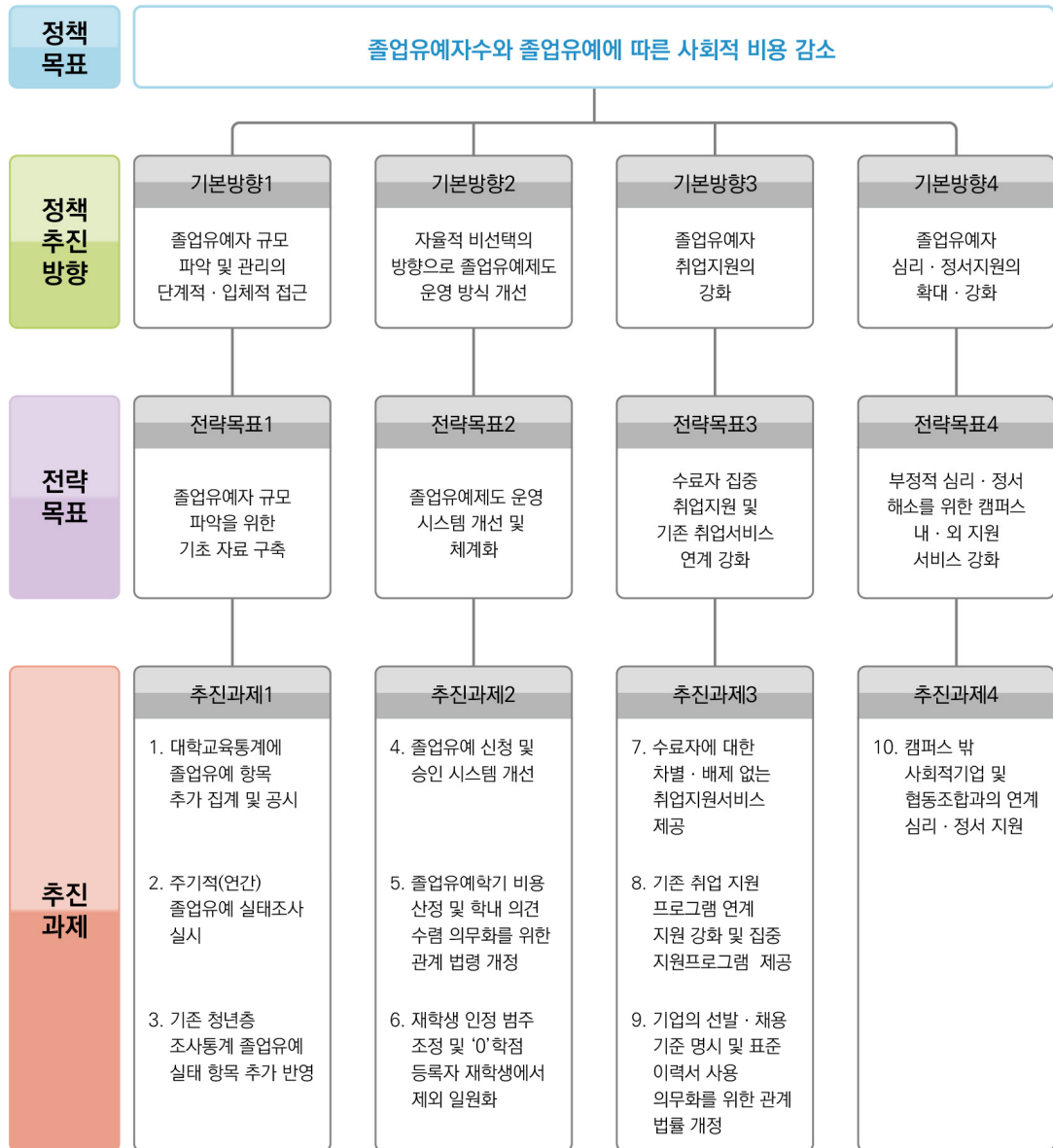
출처: 토닥토닥 홈페이지(<http://www.대구심리상담.한국>, 2016.10.20.검색)

〔그림 VI-6〕 토닥토닥협동조합 사례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개개인에 특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I-PROGRAM(나를 알고 사랑하기)' 프로그램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과정으로 시작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되,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토닥토닥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대구심리상담.한국/20>, 2016.10.25. 검색).

이와 같이 캠퍼스 밖에서 청년세대가 선호하고 그들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필요한 심리·정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유예자를 비롯하여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민간공모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역 대학들의 분포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졸업유예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방향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 실행을 위한 정책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정책 방안의 기본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VI-7]과 같다.



【그림 VI-7】 졸업유예 대응 및 졸업유예자 지원 방안의 기본 체계

표 VI-6 제안 정책추진과제 요약

추진 과제	정책 제안 유형	수반예산규모	추진일정	관계부처
	①법령 제·개정	①없음	①단기	①교육부
	②규정 제·개정	②소규모	②중기	②고용노동부
	③기초자료확보	③중규모	③장기	③기획재정부
	④기존 제도·사업 보안	④대규모		④통계청
	⑤신규 제도·사업 도입			⑤청년위원회

① 졸업유예자 규모 파악 및 관리의 단계적·입체적 접근

1. 대학교육통계에 졸업유예 항목 추가집계 및 공시	③,④	①	①	①,④
2. 주기적(연간) 졸업유예 실태조사 실시	③,⑤	③	②	①
3. 기존 청년층 조사통계에 졸업유예 실태 관련 내용 추가 반영	③,④	①	①	①,④

② 자율적 비선택의 방향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개선

4. 졸업유예 신청 및 승인 시스템 구축 및 개선	②,④,⑤	① & ②	①	①
5. 졸업유예학기 비용 산정 및 학내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①,②	①	①	①
6. 재학생 인정 범주 조정 및 '0'학점 등록자 재학생에서 제외 일원화	②	①	①	①

③ 졸업유예자 취업지원의 강화

7. 수료장에 대한 차별·배제 없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②,④	①	①	①,②,⑤
8.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강화 및 집중 지원프로그램 제공	②,④,⑤	①,②	①,②	①,②,⑤
9. 기업의 선발·채용 기준 명시 및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	①	①	①	②,⑤

④ 부정적 심리·정서 해소를 위한 캠퍼스 내·외 지원 서비스 강화

10. 캠퍼스 밖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연계 심리·정서 지원	⑤	③	①	①,②,③,⑤
--------------------------------------	---	---	---	---------

* 단기 정책 추진과제는 기존 정책의 개선·보완 등으로 1~2년 내에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중·장기 추진과제는 법률 개정, 후속 정책연구, 계획 수립 또는 정책 조정 등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경연·박숙경·이제경(2015). 대학생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34권 2호, pp. 31-51.
- 김지경(2015). 졸업유예 실태 및 졸업유예자 대상 학자금지원 수요 분석.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패널조사 유지관리조사 심층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장학재단.
- 김지경·정연순(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2016). 청년세대 삶의 인식과 행복도 영향 요인. 2016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179-21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훈(2014). 대학 졸업유예의 효과분석: A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6권 6호, pp. 3083-3092.
- 서혁(2015). 졸업유예 제도와 대학교육의 방향. *대학교육* 제189호, pp.79-83.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양정승(2014). 4년제 대졸자의 졸업유예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KRIVET Issue Brief 2014년 56호 (2014.07.3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15). 노동시장 상황과 대학생의 졸업유예 결정. 2015년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113-136.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엄기호·하지현(2015). *공부중독*. 경기: 위고.
- 우석진(2013).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서울: (주)지필미디어.
- 유기홍(2015).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 - 통계로 본 대학교육비*. 2015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①, 서울: 대한민국 국회
- 이원재(2016).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오늘의 불안을 이기는 내일의 경제학*. 서울: 어크로스.
- 이재성(2015). 4년제 대졸자의 초과등록 현황 및 노동시장 성과. *고용이슈* 2015년 3월호, pp.6-22.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조한혜정·엄기호 외(2016). *노오력의 배신*. 경기: (주)창비.
- 채창균(2016). 대학 졸업유예실태와 정책과제. KRIVET Issue Brief 2016년 108호(2016.10.1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armen Aina·Francesco Pastore(2012.4). *Delayed graduation and overeducation: A test of the Human Capital Model versus the Screening Hypothesis*. IZA DP No.6413,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in Bonn.
- Heckman,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 Li-Min Lin(2009). *Explore the Deferred Graduation Phenomena of College Students in Taiwan*. Graduate Institute of Public Financ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자료 및 기사]
- 고용노동부(201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https://www.moel.go.kr/view.jsp?cate=7&sec=4&smenu=2&mode=view&state=A&bbs_cd=105&idx=1468827926410&seq=1468827926410
- 강영배(2016.04.27.). 일본의 대학 졸업연기(유예) 제도. 콜로키움(Ⅱ) 발표 자료(비발간).
- _____(2016.04.27.). 일본 센슈대학 「졸업연기의 취급에 관한 내규」. 콜로키움(Ⅱ) 발표 자료 중 별도 참고자료(비공개).
- 경향신문(2013.12.11.). [‘졸업유예제’ 지방대 6년생의 눈물] 대학들 기준 없이 들쭉날쭉... 2000년대 초중반 도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2152235&code=950100
- _____(2015.01.05.). 졸업연기 조건 강화한 ‘대학의 이기주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52139445&code=940401
- 김경수(2016.09.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15). 의원원문.
- 대만 국립중앙대학교(2015). 104學年度起大學部延修生收取雜費說明會. <http://pdc.adm.ncu.edu.tw/postM/post/reg/reg1030505.pdf>
- 대만 自由時報(2012.08.13.)a. 100學年達5.4萬多人, 大專生延畢惡化, 台灣人才恐斷層. <http://news.ltn.com.tw/news/focus/paper/606851>
- _____(2012.08.13.)b. 延畢延遲就業小心反成求職絆腳石. <http://news.ltn.com.tw/news/focus/paper/606918>

- _____ (2013.06.01.) 每6人1延畢大學趕人紛出招.
<http://news.ltn.com.tw/news/life/paper/684242>
- 대만입법원(2013.06.19.). 立法院議案關係文書: 院總第 887 號政府提案第13333 號之1415, 教育部函送「大專校院大學生延修(畢)情形及因應策略分析」書面報告, 請查照案°.
- http://lci.ly.gov.tw/LyLCEW/agenda1/02/pdf/08/04/03/LCEWA01_080403_00027.pdf.
- 대학교육연구소(2014.03.30.). 졸업유예생은 정부와 사회가 제 역할 못해 발생한 문제. 논평 및 보도자료. <http://khei-khei.tistory.com/917>
- _____ (2015.02.02.). 졸업유예제 시행 대학 10교 중 7교 의무수강. 정보공개청구 자료.
<http://khei-khei.tistory.com/1265>
-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5.01.30.). 남고 싶은 학생, 돈 내라는 학교. 2015년 학교별 졸업유예제도 점검결과 보고서. <https://20slab.naeilshot.co.kr/archives/2513>
- 매일경제뉴스(2015.09.14.). ‘졸업유예’ 불가피하다? 아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88314>
- 머니투데이(2015.01.02.). 졸업유예? 취업 때 서류만 봐도 공백기 나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211120587776&outlink=1>
- _____ (2015.01.05.).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 유지 ‘0학점 등록제’ 폐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514000716796&outlink=1>
- 박경미(2016.06.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08). 의원원문.
- 배진한(2015.06.22.). 청년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 자료집, pp.3-47. http://www.esdc.go.kr/bbs/data/view.do?menu_idx=2045&bbs_mst_idx=BM0000000188&data_idx=BD0000000100&tabCnt=
- 부산일보(2016.01.31.). 추가 등록금에 도서관 자릿값까지... 서러운 졸업유예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01000094#none>
- 승대시보(2015.08.04.). 졸업유예, 학생들은 원하고 대학은 피하고.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1>
- 일본 공명당 공명신문(公明新聞)(2010.08.13.). マニフェストの現場に行く: 増える「就職留年」「新卒」の要件緩和を未就職者にも門戸広げよ.
http://www.komei.or.jp/dews/datail/20100813_3033
- 일본 아사히신문(2010.03.31.). 新卒になりたくて…希望留年 大学側も支援の制度.

- <http://www.asahi.com/edu/university/shushoku/TKY201003310319.html>
- 일본 아사히신문·카와이학원(2012). 2012年度調査結果報告. <http://www.asahi.com/edu/hiraku/hiraku2012/>
- 안민석·반값등록금국민본부·21C 한국대학생연합·대학교발자(2015.09.02.).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및 청원 제출. 보도자료.
- 안민석(2015.09.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705). 의원원문.
- _____(2016.10.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87). 의원원문.
- _____(2015.03.22.).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보도자료.
- _____(2014.04.04.). 취업준비생들 두 번 올리는 일선 대학들, 졸업유예 대가로 비용 청구. 보도자료.
- 유기홍(2015.09.05.). 미취업 불이익 피해 졸업 유예 대학생 2만 5천여 명, 2014년 전국대학 졸업유예 수강비수입 56억 원. 국정감사보도자료.
- 유스라인(2015.01.05.). 대학, ‘졸업유예제’ 폐지...대학평가 교수 1인당 학생 수 고려.
-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
- 이데일리(2016.01.06.). 대학생 절반 취업난에 “졸업 미룰 생각 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2850326612515096>
- _____(2015.03.23.). 대학내 ‘화석선배’ 학교 떠날 수 없는 이유는?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731846609306272&DCD=A00703&OutLnkChk=Y>
- 이정미(2016.10.11.). 공기업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해야. 국정감사보도자료.
- <http://justice551.tistory.com/360>
- 일본인사부(2010.08.02.). 希望留年制度. <https://jinjibu.jp/keyword/detl/290/>
- 일본인사부 온라인자료. 新卒採用. <http://hr-recruit.jp/articles/about>
- 일본 중앙대학교 온라인문서(2016.08.11). 卒業延期制度に関する Q&A.
- <https://www2.chuo-u.ac.jp/law/portal/keijiban/gakuseki/sotugyouenkiQ&A.pdf>
- 주간동아(2016.03.30.). 머물면 이태백, 나가면 이퇴백. <http://weekly.donga.com/Print?cid=529544>
- 중국 동북전력대학교포털(2016.04.08.). [投你所好] 第七十一期：你听说过“延期毕业”吗？申请延期毕业的人越来越多，你觉得是什么原因呢？. <http://54shine.nedu.edu.cn/index.php>

- ?m=content&c=index&a=show&catid=10&id=9718
- 중국국제방송(2016.03.21.). 中国延期毕业大学生' 研究生增多 媒体:是就业缓冲(1).
<http://news.china.com/domestic/945/20160321/22208145.html>
- 정재룡(2015.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705) 검토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A5J009B0R2B1A7A5Q9Q4Q5V1B5D8
- 통계청(2015.07.23.).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p.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7513
- 파이낸셜뉴스(2015.09.11.) "취준생 졸업유예 이유있었네"...기업 58% 공백기 긴 지원자 꺼려.
<http://www.fnnews.com/news/201509110841440504>
- 한국경제(2016.01.21.). 취업 불리할까봐 졸업 미뤘더니...'반전' 결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12659g&intype=1>
- 헤럴드경제(2016.03.10.). [내'일' 없는 長학생①] "대학생활 길게는 10년...갈 데도 없어요" 학교 못떠나는 졸업생.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310000129>
- The Local de(2014.07.28.). Germany's students fail to graduate in time.
<http://www.thelocal.de/20140728/germanys-students-fail-to-graduate-in-time>.
- The Atlantic(2015.06.11.). Forcing Students to Graduate 'On Time'.
<http://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5/06/denmark-pushes-college-students-graduate/395666/>
- _____ (2016.02.17.). The Elusive Goal of On-Time Graduation.
<http://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6/02/is-there-a-way-to-help-college-students-graduate-on-time/463041/>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http://www.myjobacademy.kr/>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대만국립중앙대학교(National Central University). <http://pdc.adm.ncu.edu.tw/>

대만교육부 <http://www.edu.tw>

대만교육부통계국 <http://depart.moe.edu.tw/ED4500/Default.aspx>

대만입법원 <http://lis.ly.gov.tw/lglawc/lglawkm>

대학교육연구소 <http://http://khei-khei.tistory.com/>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안민석의원실 <http://www.osan21.or.kr>

전국 일반대학(194개) 홈페이지 각 사이트

중앙일보 2015년 대학종합평가 사이트. <http://univ.joongang.co.kr/university/totalRankingReport.asp>

토닥토닥 협동조합 <http://www.대구심리상담.한국/>

통계청 <http://www.kostst.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main/subIndex/671.do>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http://survey.keis.or.kr/>

일본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

大学設置基準 -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참고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50호, 2014.3.24.)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23호, 2014.1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본 대학설치기준(大学設置基準)

일본 학교기본법(学校基本法)

.....

부 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조사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졸업 유예자를 대상으로 졸업유예의 원인 및 선택과정, 졸업유예 기간의 생활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책 지원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향후 졸업유예자에 대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 주신 세부 조사결과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주 소 세종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락 처 김지경 연구위원 (전화) 044-415-2212

조사 기관 : 입소스주식회사
담당연구원 : 사회여론조사본부 신상욱 이사
연 락 처 : (T) 02-6464-5131 (F) 02-6464-5100

I. 배경 문항

SQ1) 귀하는 2016년 1학기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하였지만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졸업연기, 졸업유보, 졸업연장, 연한 초과, 미졸업 초과학기 등록)자 입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중단

SQ1-1) 귀하의 현재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학점 외 졸업요건(졸업시험, 논문, 영어점수, 자격증, 봉사활동시간 등)을 채웠지만 졸업시기를 연기한 상태
2.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학점 외 졸업요건(졸업시험, 논문, 영어점수, 자격증, 봉사활동 시간 등)을 채우지 않은 상태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SQ3-1) 귀하는 군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SQ4) 귀하의 소속 대학은 어디입니까?

_____ 대학교

SQ4-1) 귀하가 소속된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4-2) 귀하가 소속된 대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국·공립(법인포함) 2. 사립

SQ4-3) 귀하는 소속 대학에 언제 입학 또는 편입학했습니까? 입학연도 또는 편입한 연도 및 학년을 적어주십시오.

입학연도 년 , 편입연도 년 ()학년 편입

SQ5) 귀하의 주 전공계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인문계열(어문계, 인문계) 2. 사회계열(법정계, 상경제, 사회계) 3. 교육계열(사범계)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이학계, 가정계, 농학계, 수산·해양, 수의학계)
6. 예체능계열(예술계, 체육계) 7. 의학계열(의·치·한의학·약학계열포함)
8. 기타계열(융합학과 및 계열포함)

SQ6) 귀하는 대학 입학 후 군복무를 제외한 이유로 휴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 SQ7)로 이동

SQ6-1) 귀하가 휴학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취업관련 시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2. 어학연수를 위해
3. 봉사활동을 위해
4. 공모전 준비를 위해
5.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6.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7.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8. 해외여행을 위해
9. 기업 주력 대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0.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SQ6-2) 귀하가 휴학했던 기간은 총 몇 학기입니까? 총 학기

SQ7) 귀하는 복수전공을 했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SQ7-1) 복수전공자의 수업연한은 총 몇 학기입니까? 총 학기

SQ8) 귀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 SQ9)로 이동

SQ8-1) 귀하가 받은 학자금 대출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귀하가 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총액과 총액 중 상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환한 금액이 없다면 '0'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대출 여부	대출금 총액	상환한 금액
1) 한국장학재단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1. 있다 2. 없다	만원	만원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1. 있다 2. 없다	만원	만원
3)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1. 있다 2. 없다	만원	만원
4) 한국장학재단 외 학자금 대출	1. 있다 2. 없다	만원	만원

SQ8-2) 귀하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는 총 몇 학기입니까? 총 학기

SQ9) 귀하가 졸업유예를 신청하기 직전 학기의 등록금은 얼마였습니까? 만원

SQ10) 현재 귀하 부모님의 대략적인 월평균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 150만원 미만 2. 15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500만원 미만 5. 500~800만원 미만 6. 800만원 이상

II. 졸업유예 사유 및 목적

문1) 귀하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구분	전혀 미치지 않았다	미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미친 편이다	매우 많이 미쳤다
1)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1	2	3	4	5
2) 취업경쟁에 유리한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1	2	3	4	5
3) 입사지원 자격에 필요한 기본 스펙을 채우기 위해	1	2	3	4	5
4) 공시 등 목표 시험 합격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	2	3	4	5
5) 인턴, 공모전 등 재학생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졸업생보다 많기 때문에	1	2	3	4	5
6) 졸업 후에는 취업정보, 학교시설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1	2	3	4	5
7) 재학생으로 학교에 있을 때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1	2	3	4	5
8) 재학생 상태에서 입사 지원하는 것이 졸업생보다 유리할 것 같아서	1	2	3	4	5
9) 졸업 전 1~2년 정도 더 시간 투자해도 될 것 같아서	1	2	3	4	5
10) '칼졸업' 보다는 주변 선배나 친구들이 졸업유예를 거의 다 하는 분위기라서	1	2	3	4	5
11) 부모님이나 교수님들이 졸업 후 첫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1	2	3	4	5
12)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1	2	3	4	5
13) 졸업하면 '나'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한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1	2	3	4	5
14) '요즘 뭐하냐?'는 질문에 '학교 다닌다'는 말로 답할 수 있는 편리함과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1	2	3	4	5
15) 청년 백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1	2	3	4	5
16) 내가 노력한 성과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1	2	3	4	5
17)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을 미루고 싶어서	1	2	3	4	5

문2) 귀하는 졸업유예를 선택할 때 졸업유예 기간(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문3)으로 이동

문2-1)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자만) 그럼, 귀하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획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 2. 필요 어학점수 획득 또는 점수 올리기 |
| 3. 인턴 활동 | 4. 기업의 입사시험 준비 |
| 5. 공기업, 공무원(7·9급, 경찰, 소방, 교사 등) 시험 준비 | 6. 고시, 전문직 자격시험 준비 |
| 7. 대학원 진학 준비 | 8. 졸업 전 마지막으로 진로 및 직업탐색 |
|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

문3) 귀하가 졸업유예를 선택할 때, 졸업유예를 권유하거나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4)로 이동

문2-1) 귀하의 졸업유예를 가장 강하게 권유하거나 추천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1. 친구 2. 선배 3. 교수 4. 부모 5. 형제·자매 6. 주변 지인
7.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4) 귀하는 대학 재학 중 다음 단계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년 미만 2. 1년~2년 미만 3. 2년~3년 미만 4. 3년 이상

문5) 귀하가 졸업유예 학기를 지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어려운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취업준비 비용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
- 도서관 등 교내 시설 이용의 불편함
- 교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의 배제 또는 후순위
- 학내 동기 및 후배들의 불편한 시선
- 부모 및 친지 등의 불편한 시선
- 계획했던 시험점수나 스펙쌓기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 졸업유예가 취업 지원 시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 졸업유예로, 취업지원 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 졸업유예 학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III.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

문1) 귀하가 속한 대학은 공식적으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4)로 이동

문1-1) 귀하가 속한 대학에서 졸업유예를 허용하는 학기는 총 몇 학기입니까? 총 학기

문1-2) 귀하는 현재 몇 학기째 졸업유예 상태입니까? 총 학기

문2) 귀하가 속한 대학은 졸업유예 신청시 의무적으로 학점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수강제도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2-7)로 이동

문2-1) 의무수강 해야 하는 최소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학점

문2-2) 귀하가 이번 학기(2016년 1학기)에 신청한 학점은 몇 학점입니까? 학점

문2-3) 귀하는 이번학기에 다음 중 어떠한 강의를 수강했습니까? 다음 중 수강한 과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졸업유예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취업지원관련 강의
2. 이미 수강했던 강의 중 학점이 낮았던 과목 재수강
3. Pass/Fail로 학점이 없는 강의
4. 사이버로 운영되는 강의
5. 전공과는 상관없이 관심이 있었던 교양 강의
6.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되는 그 분야의 전공 강의
7. 졸업요건으로 필요한 인증 필수 이수 과목
8.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2-4) 귀하는 의무수강제도가 졸업유예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으로써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는 편	보통	영향 있는 편	매우 큰 영향 있음
1	2	3	4	5

문2-5) 귀하는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
1	2	3	4	5

문2-6) 귀하는 의무수강제도가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는 편	보통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1	2	3	4	5

문2-7) 귀하가 속한 대학의 경우, 졸업유예자가 희망하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9. 모름다

문3) 귀하가 속한 대학은 졸업유예 신청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 문3-7)로 이동

문3-1) 귀하가 이번 학기(2016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시, 학교에 낸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총 만원

문3-2) 귀하는 이번 학기(2016년 1학기)의 졸업유예 신청 비용을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습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마련한 방법을 기준으로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본인 아르바이트로
2. 부모님의 지원으로
3. 학자금 대출로
4. 장학금으로
5. 지인에게 빌려서
6.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3-3) 귀하가 속한 대학에서 졸업유예 신청시 부과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신청 학점에 따라 한 학기 등록금의 일정 비율 금액 부과
2.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대학이 정한 동일한 금액 부과
3.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3-4) 귀하는 등록금 부과 졸업유예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으로써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는 편	보통	영향 있는 편	매우 큰 영향 있음
1	2	3	4	5

문3-5) 귀하는 졸업유예학기의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됩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는 편	보통	부담되는 편	매우 부담됨
1	2	3	4	5

문3-6) 귀하가 속한 대학이 졸업유예 신청 시 비용을 부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수강료로 쓰기 위해
2. 학교시설 사용료로 쓰기 위해
3. 행정관리 비용으로 쓰기 위해
4. 취업지원 콘텐츠 이용료로 쓰기 위해
5.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6. 대학의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 7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3-7) 귀하는 대학이 졸업유예자에게 부과하는 한 학기 비용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등록금 면제
2. 10만원 미만
3. 10만원~30만원 미만
4. 30만원~50만원 미만
5. 50만원~80만원 미만
6. 80만원~100만원 미만
7. 100만원 이상

문4) 귀하가 속한 대학은 졸업유예자에게 졸업유예 신청 시 부과 비용과는 별도로 도서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문5)로 이동

문4-1) 그럼, 졸업유예자에 대한 도서관 이용료 부과 방식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예치금만 부과 ()만원)
2. 예치금 없이 1개월 이용료 부과 ()만원)
3. 예치금 ()만원) + 1개월 이용료 ()만원) 부과
4.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5) 귀하가 속한 대학은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문6)으로 이동

문5-1) 졸업유예자가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최대한도는 얼마입니까? 만원

문6) 귀하가 속한 대학은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분	제한 여부	우선 지원 여부
1) 도서관 이외 학교 시설 이용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2)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행사 참여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3) 기숙사 신청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4)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문7) 귀하가 속한 대학은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는 이번 학기(2016년 1학기) 아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학 제공 여부	본인 이용 경험 여부
1) 구직자 취업알선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2) 외국어 교육 지원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3) 해외취업지원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4) 취업지원 멘토링, 상담서비스, 인적성검사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5) 취업 인턴제 발굴 및 연계 지원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6) 면접훈련 교육,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7) IT, 컴퓨터 관련 교육 지원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8) 자격증 취득 지원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9)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참여 지원	1. 제공 2. 미제공 3. 모른다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IV. 현재 생활

문1) 다음은 취업 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는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하였습니까?

항목	준비하지 않음	현재 준비중	이미 준비함
1) 외국어 회화 능력	1	2	3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점수획득	1	2	3
3) 어학연수 경험	1	2	3
4) 면접훈련 교육, 컨설팅, 학습모임(스터디) 참여	1	2	3
5)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이수	1	2	3
6) 공모전 참여 경험	1	2	3
7) 자격증 취득	1	2	3
8)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에 참여	1	2	3
9)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	1	2	3
10) 공기업, 공무원(7·9급, 경찰, 소방, 교사 등)시험 준비	1	2	3
11) 고시, 전문직 자격시험 준비	1	2	3

문2) 귀하는 이번 학기(2016년 1학기) 졸업유예 기간동안 학교 안과 밖에서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를 다음의 활동에 사용하십니까? 평일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시간
1) 학교 안에서	1-1) 도서관 이용	시간
	1-2) 강의 수강	시간
	1-3) 스터디모임 참여	시간
	1-4) 교내 아르바이트	시간
2) 학교 밖에서	2-1) 외부 도서관 이용	시간
	2-2) 강의 수강	시간
	2-3) 스터디모임 참여	시간
	2-4) 아르바이트	시간
	2-5) 인턴활동	시간

문3) 귀하는 이번학기에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구직활동이란? : 구직사이트에 등록, 입사원서나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말함

☑ 1. 예 2. 아니오 → 문3-6)으로 이동

문3-1) (구직활동을 한 응답자만) 귀하가 한 구직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취업알선사이트에 구직 등록
2. 입사시험 응시, 입사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
3. 희망하는 취업처의 모집 공고 검색 및 모니터링
4.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정보 및 일자리 소개 부탁
5.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3-2) (구직활동을 한 응답자만)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점
2. 학점, 영어점수, 자격증, 인턴경험 등 모집 요건에 내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3.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4. 취업 지원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5.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 일자리라는 점
6. 구직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7. 구인업체의 채용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8. 구인업체의 채용기준에 내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9.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내가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10.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3-3) **(구직활동을 한 응답자만)** 귀하가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주 활용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1. 학교 취업정보 또는 지원센터 | 2. 취업사이트, 카페 등 |
| 3. 기업정보제공 유틸서비스 | 4. 취업한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정보 |
| 5. 공공취업알선기관의 홈페이지 | 6. 민간취업알선기관의 홈페이지 |
| 7. 기업 등 취업처의 홈페이지 | 8.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문3-4) **(구직활동을 한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를 3가지만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5조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 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자산규모 300억 이상) 대기업 이하(자산규모 5조원)의 기업으로, 대기업수준의 세계화, 경영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자본금, 종업원, 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1. 대기업 | 5.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2. 중견기업 |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
|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7. (재단, 사단) 법인단체 |
| 4. 정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인) | 8. 본인운영 사업체(창업 포함) |
|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

문3-5) **(구직활동을 한 응답자만)**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고려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1. 적성 | 5. 부모님의 기대 |
| 2.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6. 근무환경 |
| 3. 보수 | 7. 고용안정성 |
| 4. 사회적 인지도나 이미지 | 8. 근로시간 |
|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



응답 후 문4)로 가십시오.

문3-6)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만)**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1. 원하는 곳 지원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
| 2. 반복되는 구직 실패에 지쳐서 |
| 3. 구직실패 때문은 아니지만 당분간 여가를 즐기며 쉬고 싶어서 |
| 4. 내가 원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해서 |
| 5. 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
| 6.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준비 중이어서 |
| 7. 공무원시험, 각종 고시 준비 중이어서 |
| 8. 대기업, 공기업 공채시험 준비 중이어서 |
| 9. 법학전론, 의학, 약학전문대학원 준비 중이어서 |
| 10. 구직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어서 |
| 11.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문4) 귀하는 다음 학기에도 졸업유예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1. 예 2. 아니오 → 문4-3)으로 이동

문4-1) 귀하가 다음 학기에 졸업유예를 연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문4-2) 귀하가 계획하고 있는 졸업유예기간은 향후 총 몇 학기 입니까?

1. 총 학기

2. 졸업유예 허용 기간만큼 계속

문4-3) 귀하가 다음 학기에 졸업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V. 심리·정서 특성

문1) 귀하는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1	2	3	4	5
4)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1	2	3	4	5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1	2	3	4	5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문2) 다음의 각 항목이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예	아니오
1)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1	0
2) 일이 잘 안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	0
3)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0
4) 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0
5)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0
6) 나에게 있어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1	0
7)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0
8) 내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1	0
9) 내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	0

문3) 귀하의 진로에 대한 생각, 느낌,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 내 성격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다	1	2	3	4	5
4)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5) 내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한다	1	2	3	4	5
6)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1	2	3	4	5
7)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고 싶다	1	2	3	4	5
8) 희망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1	2	3	4	5

문4)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1	2	3	4	5
3) 정말로 힘들 때,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5) 기분이 저질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낀다	1	2	3	4	5
6)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1	2	3	4	5
7) 내가 성실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고통을 겪을 때,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9)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문5)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느끼는 정도를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배들이 취업 안되는 것을 보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	1	2	3	4	5
2) 선배들의 취업여부와 어느 곳에 취업되었는지에 따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달라진다	1	2	3	4	5
3) SNS에 또래 친구가 뭐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급격하게 우울해진다	1	2	3	4	5
4) 자꾸 나와 주변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5) 나 스스로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7)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	1	2	3	4	5
8)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9)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가 된다	1	2	3	4	5
10) 원다는 것이 불안하고, 무언가 하고 있을 때 불안감이 해소된다	1	2	3	4	5
11)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1	2	3	4	5
12) 대학생할 내내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정작 자기소개서를 쓸때면 '내가 왜 이렇게 한 게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	2	3	4	5

VI. 주체 간 시각차 인식 및 지원 욕구

문1)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졸업유예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1~4학년생의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에 불편함도 늘어난다	1	2	3	4	5
2) 기업의 취업담당자에게 졸업유예기간은 취업공백기와 같이 인식된다	1	2	3	4	5
3) 졸업유예자 수의 증가로 대학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1	2	3	4	5
4) 졸업유예자는 구직활동 등으로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률이 생각 보다 높지 않다	1	2	3	4	5
5)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제 운영에 따른 비용부과는 졸업유예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1	2	3	4	5
6) 기업이 취업시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한다	1	2	3	4	5
7) 졸업유예자 수의 증가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1	2	3	4	5
8) 기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회가 졸업유예자 수를 증가시 킨다	1	2	3	4	5

문2) 귀하에게 현재 필요한 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1. 취업과 연계된 일 경험
2.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알선 제공
3. 교내 취업지원 컨설팅 서비스
4. 나에 대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5. 졸업유예 비용의 감액
6. 불안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7. 취업준비 비용의 감액
8.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3) 귀하가 졸업유예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b s t r a c t

This study examines college students' graduation delay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fundamental reasons why and how they choose to put off their graduation from diverse viewpoints and secur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which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graduation delay.

For this, a theoretical framework needed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phenomenon and problem of graduation dela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as established, and the concept and range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were set. After that, the number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graduation delay were estimated. In awareness of the fact that there are not enough data to analyze current graduation delays in detail, furthermore, this study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focus-group interview against the parties concerned with graduation delay as well as the students putting off their gradu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then, this study discovered policy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and derived related policie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obtained herein are as follows: i) expansion of the size of a group of the colleg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its stratum, state of intermediate border; ii) requirements to take courses for the semester during which graduation is slated to be put off with no selection barrier for graduation delay, charge; iii) a dangerous mental and emotional state under no one's care.

Then, this study developed a plan to respond to graduation delay and support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under the following procedures: 'Policy goals - Policy direction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olicy goals - Strategic goals according to the policy directions -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goals.' This study has taken 'Decrease in social cos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graduation delay' as policy goals and proposed four policy directions: i) Analysis on the number of the colleg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and staged and dimensional approach; ii) improvement of the graduation delay system-operating method in an autonomous non-selection way; iii) more support on the employment of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iv)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mental and emotional supports for the students putting off graduation. Then, it suggested four strategic goals for each direction and a total of 10 projects.

Keywords: College Student, Graduation Delay, Student Putting off Graduation, Current Status, Policie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최용환·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김한별·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최홍일·신현옥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이윤주·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성윤숙·유성렬·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해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유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자·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자·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학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11-0(93330)



연구보고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